

2007년도

#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농식품 세계일류! 농촌 Global Top 10!”

# 목 차

제 1 편

2006년도 농업·농촌동향

제1장 ▶ 경제동향 .....	3
제1절 국내의 경제동향 .....	3
1. 국내 경제동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권오복, 연구원 류상모) .....	3
가. 경제성장 .....	3
나. 물가와 금리 .....	7
다. 고용과 임금 .....	9
라. 경상수지 .....	10
2. 해외 경제동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권오복, 연구원 류상모) .....	12
가. 경제성장 .....	12
나. 고용 및 물가 .....	13
다. 교역 및 경상수지 .....	13
라. 국제금리 및 환율 .....	13
제2절 농촌 경제동향 .....	15
1. 농업구조(통계기획팀 서기관 임신태) .....	15
가.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	15
나. 농경지 .....	16
2. 농가경제(통계기획팀 서기관 임신태) .....	19
가. 소득 동향 .....	19
나. 가계지출 동향 .....	23
다. 처분가능소득 및 잉여 .....	25
라. 농가자산 동향 .....	26
마. 농가부채 동향 .....	26

바. 전업농가/겸업농가의 주요지표 .....	27
사. 주부업별 지표 .....	28
아.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	29
자.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	29
차.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	30
카. 지역별 주요지표 .....	31
3.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농협경제연구소 연구원 김태성) .....	32
가. 개    황 .....	32
나.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	32
다.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	35
라. 농촌임료금 .....	35
4. 농림업 부가가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권오복, 연구원 류상모) ..	37
5. 농업생산성(통계기획팀 서기관 임신태) .....	37
제2장 ▶ 국내 농산물 수급동향 .....	39
제1절 국내 주요농산물 수급동향 .....	39
1. 식량작물(식량정책과 사무관 박선우) .....	39
2. 원예·특용작물 .....	42
가. 채소류(채소특작과 행정사무관 조용범) .....	42
나. 과실류(과수화훼과 농업사무관 김기주) .....	43
다. 화훼류(과수화훼과 기술서기관 김대경) .....	43
라. 특용작물(채소특작과 행정사무관 서호석) .....	44
마. 인삼류(채소특작과 행정사무관 이종광) .....	45
3. 축산물과 사료작물 .....	46
가. 축산물 .....	46
(축산경영과 농업사무관 박홍식, 행정사무관 이성주, 농업사무관 조정래, 행정사무관 강민철)	
나. 사료작물 .....	49
(축산경영과 농업사무관 권동태, 축산자원순환과 농업사무관 전익성)	

제2절 식품 수급동향 .....	52
1. 식품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	52
가. 식품비 지출구조의 변화 .....	52
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액 비교 .....	53
다. 식품영양소 수요구조의 변화 .....	54
2. 식품 수요 현황(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계임) .....	56
가. 1인당 식품공급 현황 .....	56
나. 자급률 수준 .....	59
다. 식품 및 영양공급량의 국제비교 .....	60
3. 식품가공산업 현황(식품산업과 농업사무관 전한영) .....	63
가. 산업구조 .....	63
나. 생산동향 .....	65
다. 수출입동향 .....	66
제3절 농산물 교역동향 .....	68
1. 농식품 수출입동향(식품산업과 행정사무관 이경일, 장동욱) .....	68
가. 수출동향 .....	68
나. 수입동향 .....	71
2. 농산물 남북교역동향(농업협상과 행정서기관 김재철) .....	74
가. 농산물 교역규모 .....	74
나. 농산물 교역동향 .....	74
제3장 ▶ 국제 농업동향 .....	77
제1절 국제 곡물수급과 가격동향(식량정책과 행정사무관 박희수) .....	77
1. 국제곡물 수급동향 .....	77
가. 개  요 .....	77
나. 쌀 .....	77
다. 밀 .....	77
라. 옥수수 .....	77
마. 대  두 .....	78

2. 국제곡물 가격동향 .....	79
가. 쌀 값 동향 .....	79
나. 밀 값 동향 .....	79
다. 옥수수 값 동향 .....	80
라. 대두 값 동향 .....	80
제2절 주요국가의 농업동향 및 양자간 통상협력 .....	81
1. 주요국가의 농업동향 .....	81
가. 미 국(통상협력과 수의사무관 장재홍) .....	81
나. 중 국(통상협력과 농업주사 오동진) .....	86
다. 일 본(통상협력과 농업주사 오동진) .....	89
라.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통상협력과 농업사무관 김영태) .....	92
2. 양자간 농업통상협력 .....	97
가. 미 국(통상협력과 수의사무관 장재홍) .....	98
나. 일 본(통상협력과 농업주사 오동진) .....	99
다. 중 국(통상협력과 농업주사 오동진) .....	100
라. 캐나다(통상협력과 수의사무관 장재홍) .....	101
마. 유럽연합(통상협력과 농업사무관 김영태) .....	102
바. 중남미 국가(통상협력과 수의주사 김 규) .....	103
아. 아시아아프리카 국가(통상협력과 주무관 이미자) .....	105
제3절 농업관련 국제기구 활동 .....	106
1. WTO 활동(농업협상과 사무관 최봉순) .....	106
2. OECD 활동(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이선복) .....	111
가. OECD 농업분야 활동 개요 .....	111
나. OECD 세계농업전망 .....	112
다. OECD 회원국 농정평가 .....	113
라. 농업위원회 및 관련작업반 활동 .....	115
3. FAO 활동(국제협력과 주무관 강승규) .....	116
가. 개 요 .....	116
나. 주요활동 .....	118

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118
4. ASEAN+ 3 농림장관회의(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박경희)	120
5. 기타 농업관련 국제기구(국제협력과 주무관 강승규)	123
가. 세계식량계획(WFP)	123
나.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124
다.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125
6. 농업·환경·무역 연계 논의동향(국제협력과 농업사무관 한철수)	125
가. OECD 농업환경 합동작업반	126
나. WTO 무역환경위원회 회의	127
다. 다자간 국제환경협약 논의	128
7. WTO/SPS협정 이행관련 논의동향(통상협력과 수의사무관 허송무)	129
8. 국제농업협력사업(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이은정)	132

제 2 편

2006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제1장 ▶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정추진기반 강화	137
제1절 농업·농촌 종합대책	137
1.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 및 조정 추진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송남근)	137
제2절 2006년도 예산 중점투자분야 및 재원확보	138
1.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예산규모(재정팀 서기관 이정형)	138
2. 농특세 운용(재정팀 사무관 최태열)	140
제3절 농림사업 평가 및 투융자 효율성 제고	141
1. 농업·농촌 투융자 현황(정책평가팀 기술서기관 손영규)	141
2. 농업투융자 사업의 평가 실시	143
가. 농림사업 성과평가 실시(정책평가팀 농업사무관 김상경)	143

나. 농림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정책평가팀 시설사무관 강경만) .....	144
다.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평가(정책평가팀 기술서기관 이득섭) .....	144
제4절 농림행정 쇄신·조직개편 및 법령제도 개선 .....	146
1. 농림행정 규제완화(행정법무팀 서기관 황인용) .....	146
2. 농정조직의 개편(혁신인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규익) .....	147
가. 대국민서비스 강화 및 국정검역인력 증원 추진 .....	147
나. 주요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농림조직 개편 추진 .....	148
다.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2007년 농림부 소요정원 협의 추진 ..	148
3. 농림분야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행정법무팀 사무관 박은엽) .....	149
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 .....	150
나.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 .....	151
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152
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	152
4. 농가유형별 맞춤형농정 추진(정책조정과 행정사무관 안창근) .....	154
제5절 농업관련기관 개혁 .....	155
1. 농업협동조합 .....	155
가.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 추진 .....	155
(협동조합과 기술서기관 박순연)	
나. 일선조합 구조조정 추진(협동조합과 행정사무관 이정길) .....	158
2. 한국농촌공사(농촌정책과 사무관 이원희) .....	159
가. 중장기발전전략 재정립 및 실행체계 구축 .....	159
나. 고객만족경영 강화로 사랑받는 공기업상 구현 .....	159
다. 경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	160
3. 농수산물유통공사(aT)(유통정책과 사무관 정영환) .....	161
4. 한국마사회(축산정책과 행정사무관 주원철) .....	163
제6절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활동상황 .....	167
1. 농어업특위의 현황(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송남근) .....	167
2. 2006년도 농어업특위 운영현황(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송남근) .....	169

가. 본위원회 .....	169
나. 분과위원회 .....	170
다. 소위원회 .....	170
라. 지역농어업특위 .....	172
마. 은퇴자를 위한 전원마을 조성 심의위원회 .....	173
제2장 ▶ 2006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	175
제1절 친환경농업 적극 추진 .....	175
1. 친환경농업의 기반 마련 .....	175
(친환경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장명철, 농업사무관 이상집)	
2. 고부가가치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로확대 .....	176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사무관 윤승우, 농업사무관 이상집)	
3. 토양개량사업 추진(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사무관 조정래) .....	177
4. 사료·녹비작물 재배확대 .....	178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사무관 조정래, 축산자원순환과 농업사무관 전익성)	
5.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구축(축산자원순환과 행정사무관 이동홍) .....	178
가. 가축분뇨의 자원화 .....	178
제2절 고품질·안전농축산물 공급 .....	180
1. 우수농산물(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생산기반 조성 ···	180
(소비안전과 농업사무관 조동근)	
2. 축산물위생·안전성 수준 제고(축산물위생과 수의사무관 이기중) .....	181
가. 축산물위생관리 제도개선 .....	181
나.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를 위한 HACCP 제도 추진 .....	182
다.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	183
라. 축산물 수거검사 실시 .....	184
마. 국내 축산물의 잔류물질 검사 .....	184
3. 농산물 안전성 제고 및 표시관리 강화 .....	185
가. 농산물 안전성 제고(소비안전과 농업사무관 고경봉) .....	185
나. GMO·원산지 표시관리 강화(소비안전과 사무관 김일상) .....	186



4. 가축방역·검역 강화(가축방역과 수의사무관 조옥현) .....	187
제3절 농업구조의 체질개선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 .....	189
1. 농업구조의 체질개선(농산경영과 기술서기관 김기훈) .....	189
가. 영농규모화 사업 촉진 .....	189
나.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	190
2. 농업생산기반 정비 지속 추진 .....	191
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시설관리과 시설사무관 박재수) .....	191
나. 받기반정비사업(시설관리과 기술서기관 전경구) .....	192
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시설관리과 시설사무관 박재수) .....	194
라. 배수개선사업(시설관리과 기술서기관 전경구) .....	195
마. 수리시설개보수사업(시설관리과 시설사무관 김동권) .....	196
바. 농업용수 개발사업(기반정비과 기술서기관 이성홍) .....	196
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기반정비과 사무관 박종훈) .....	197
아.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시설관리과 시설사무관 김동권) .....	199
3. 농업전문인력 육성 .....	199
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경영인력과 기술서기관 양주필) .....	199
나. 농업법인 육성(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유미선) .....	201
다. 신지식 농업인 육성(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이호재) .....	206
라. 농업인 교육훈련(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김휴현) .....	207
마. 여성농업인 육성(여성정책과 사무관 신우식) .....	211
바. 농업벤처 육성(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유미선) .....	218
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김휴현) .....	220
제4절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	222
1. 농업관측제도 기능 강화(통계기획팀 행정사무관 황영현) .....	222
2. 마케팅지향형 산지유통혁신 .....	225
가. 공동마케팅조직 등 산지유통주체 육성(유통정책과 농업사무관 이광하) .....	225
나.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속 추진(유통정책과 농업사무관 변상문) .....	227
3. 농산물 물류혁신 및 도매시장 운영효율화 .....	229
(유통정책과 농업사무관 변상문, 행정사무관 임채록)	

4. 축산물시장 차별화 .....	230
(축산물위생과 서기관 신대식, 서기관 이학주, 수의사무관 김대균)	
제5절 농·축산물 수출확대 및 수입관리 .....	232
1. 농·축산물 수출확대 대책	
(식품산업과 행정사무관 이경일, 행정사무관 장동욱) .....	
가. 수출여건 및 수출현황 .....	232
나. 고품질·안전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조성 .....	233
다. 한류를 활용한 공격적 마케팅 전개 .....	233
라.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수출증대효과 극대화 .....	234
2. 수입관리 대책 .....	235
가. 시장접근물량의 적절한 수입관리 추진 .....	235
나. 관련법상 탄력관세의 적극 활용 .....	236
다. 원산지표시제 실시 및 단속강화(농업협상과 행정서기관 김재철) ..	236
라. 동·식물 검역기능 강화(통상협력과 수의사무관 허송무) .....	236
제6절 생산자 주도의 수급조절 강화 .....	237
1. 쌀 협상비준에 따른 쌀산업 국내대책 추진 .....	237
가. 쌀산업발전대책 추진(식량정책과 사무관 박선우) .....	237
나. 공공비축제 도입 및 정착(식량정책과 행정사무관 한성권) .....	238
다. RPC 경영혁신(소득관리과 농업사무관 장대수) .....	239
라. 고품질쌀 생산·유통촉진(식량정책과 사무관 박선우) .....	240
마.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식량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선우) .....	241
2. 채소·과실류 수급조절능력 강화 .....	243
가. 채소류(채소특작과 행정사무관 조용범) .....	243
나. 과일류(과수화훼과 농업사무관 김기주) .....	244
3. 양돈·양계 수급안정 지원 및 소비홍보 추진 .....	245
(축산경영과 행정사무관 강민철, 농업사무관 조정래)	
4. 가축개량 활성화(축산정책과 농업사무관 서재호) .....	246
5. 우유수급 안정대책(축산경영과 행정사무관 이성주) .....	249

제7절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추진 .....	251
1.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확충 .....	251
가.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소득정책과 사무관 하종수) .....	251
나. 친환경농업 직불제(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사무관 이상집) .....	253
다. 쌀생산조정제 시행(농산경영과 농업사무관 백영현) .....	255
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본사업 시행(농지과 사무관 이영식) .....	256
마.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실시(정주지원과 시설사무관 김현수) .....	257
2. 금융부담 경감과 경영위험 관리강화 .....	259
가. 농업인부채경감대책 추진(협동조합과 서기관 이용섭) .....	259
나.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협동조합과 농업사무관 서준한) .....	263
다. 가축공제 운영 내실화(축산정책과 농업사무관 서재호) .....	265
라. 재해지원 현실화 추진 실적(농산경영과 농업사무관 장영국) .....	266
제8절 다양한 농외소득원 확충 .....	267
1.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	267
(농촌지역개발과 행정사무관 이영길, 사무관 전영미)	
2. 농공단지 조성사업(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최호종) .....	270
3. 향토산업 육성(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최호종) .....	271
4.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농촌지역개발과 사무관 전영미) .....	272
5.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생활지도관 조은희) .....	273
제9절 농촌활력증진 및 생활여건 개선 .....	274
1. 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계획수립 추진 ...	274
(농촌정책과 행정사무관 엄기훈)	
가. 수립배경 .....	274
나. 추진내용 및 성과 .....	275
2. 농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	277
가.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농촌지역개발과 시설사무관 이행우) .....	277
나. 전원마을조성 사업(정주지원과 시설사무관 박종민) .....	278
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정주지원과 농업사무관 이재식) .....	279
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농촌지역개발과 시설사무관 한준희) .....	280

4. 농촌의 교육·의료 등 생활여건 개선 .....	282
가. 복지지원 개선(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정아름) .....	282
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지원(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김낙신) .....	283
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김낙신) ..	283
라.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김낙신) .....	285
마. 농촌 노인 복지 지원 강화(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김낙신) .....	285
바.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도입(여성정책과 행정사무관 이상목) .....	286
5. 농업·농촌정보화의 확대 추진 .....	287
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기획팀 전산사무관 문광규) ..	287
나. 농업·농촌 정보컨텐츠 확충(정보화기획팀 행정사무관 강신복) .....	288
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화(정보화기획팀 행정사무관 강신복) .....	289
제10절 농정제도개혁 .....	290
1. 농지제도 개선(농지과 사무관 송태복) .....	290
2. 농지은행 본격 시행(농지과 사무관 이영식) .....	292
3.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구조정책과 농업사무관 이연숙) .....	293
가. 추진배경 .....	293
나. 기본 정책방향 .....	294
다. 시범사업 추진현황 .....	294
제11절 WTO/DDA 농업협상 등 대외협력에 적극 대응 .....	296
1. WTO/DDA 농업협상 추진(농업협상과 사무관 최봉순) .....	296
가. 세부원칙 협상 등에 대해 적극 대응 .....	296
나. DDA 농업협상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농업협상 추진체계 강화 ..	298
2. FTA 농업협상 추진 .....	298
가. 한·미 FTA 협상대응(자유무역협정과 행정서기관 박수진) .....	298
나. 한·아세안 FTA 협상 대응(자유무역협정과 행정사무관 피계림) ..	301
다.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과 행정사무관 이용직) .....	302
라. 한·인도 CEPA 협상(자유무역협정과 수의서기관 전종민) .....	303
3. 남북농업 협력추진(구조정책과 농업사무관 이연숙) .....	304

가. 정 부 .....	305
나. 민 간 .....	305

제 3 편

2007년도 농정시책

제1장 ▶ 2007년도 농정방향 .....	309
제1절 2007년도 농정목표(재정기획관실 정책기획팀 행정사무관 윤원습) .....	309
제2절 2007년도 농정시책방향 .....	310
(재정기획관실 정책기획팀 행정사무관 윤원습)	
1. 농업·농촌 종합대책 보완 및 맞춤형 농정 추진체계 정립 .....	310
2. 농가유형별 특성에 맞는 직불제 개편 .....	311
3. 식품산업육성 및 신성장 동력 발굴 .....	311
4. 농축산물 우수브랜드 육성 .....	312
5. 농식품 안전성 및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 .....	312
6. 농촌 삶의 질 향상 및 도농교류 촉진 .....	313
제3절 2007년도 농림부문 예산 확보(재정팀 서기관 이정형) .....	314
1. 2007년 농림예산 편성방향 .....	314
2. 2007년 농림예산 규모 .....	315
제4절 농정 추진체계 개선 .....	316
1. 농소정협력사업 추진체계 개선(여성정책과 행정사무관 이상목) .....	316
2. 농림사업 투융자 평가 및 효율성 제고 .....	317
가.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317
나. 농림사업 성과평가 추진(정책평가팀 농업사무관 김상경) .....	320
다.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평가 시책(정책평가팀 기술서기관 이득섭) .....	323
3. 농림행정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	324
가. 농림행정 제도개선(혁신인사기획관실 농업사무관 김철순) .....	324

나. 농림행정 규제완화(행정법무팀 서기관 황인용) .....	325
4. 농림조직 및 직제개편 추진(혁신인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규익) .....	327
5.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활동(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송남근) ..	328
제2장 ▶ 2007년도 주요농정 시책 .....	330
제1절 쌀산업 구조개편 .....	330
1. 새로운 양정제도의 정착(식량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선우) .....	330
가. 공공비축제(식량정책과 행정사무관 한성권) .....	331
나.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소득정책과 사무관 하종수) .....	331
2. 쌀 전업농 육성(농산경영과 기술서기관 김기훈) .....	332
3. 쌀종합처리장(RPC) 경영혁신(소득관리과 농업사무관 장대수) .....	334
가. RPC 경쟁체제 도입 .....	334
나.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	334
다. 쌀 수탁판매사업 추진 .....	335
라.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	335
4.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농산경영과 농업사무관 성신상) .....	336
제2절 농업전문인력 양성 .....	338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경영인력과 농업서기관 양주필) .....	338
2. 제2차 농업경영체 활성화방안(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유미선) .....	339
가. 기본방향 .....	340
나. 세부추진방안 .....	340
3. 농업경영컨설팅 지원(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김휴현) .....	342
4. 농업벤처 육성(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유미선) .....	344
5. 농업교육체계 개편방안 추진(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김휴현) .....	344
6. 여성농업인 육성 .....	347
가.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촉진 .....	347
나.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	348
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	350

라. 여성농업인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여성정책과 사무관 신우식) ……	351
마.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기족 지원사업 도입(여성정책과 행정사무관 이상목) …	353
제3절 소비자 지향의 고품질·안전농산물 공급 ……	356
1. 농산물 안전성 제고 ……	356
가. 우수농산물관리(GAP)제도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조기 정착유도 …	356
(소비안전과 농업사무관 조동근)	
나.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로 부적합품 시장유통 방지 ……	357
(소비안전과 농업사무관 고경봉)	
다. 안전농산물 우대 및 농산물 표시 관리 강화 ……	357
(소비안전과 사무관 김일상)	
라.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소비자 정책참여 기회 확대 ……	358
(소비안전과 농업사무관 조동근)	
2. 축산물 위생·안전성 관리 강화(축산물위생과 수의사무관 이기중) ……	358
3.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축산물위생과 서기관 이학주) ……	359
4. 우수 축산물브랜드 육성추진(축산물위생과 서기관 신대식) ……	362
5. 가축개량 추진(축산정책과 사무관 서재호) ……	364
가. 한우개량 ……	364
나. 젓소개량 ……	364
다. 돼지개량 ……	365
라. 닭 개량 등 ……	365
6. 가축방역 시스템 개선(가축방역과 수의서기관 김태용) ……	366
7. 우유 수급안정 대책(축산경영과 행정사무관 이성주) ……	370
8. 친환경 농업 육성(친환경농업정책과 서기관 조백희) ……	371
제4절 선진국형 농산물 유통혁신 ……	373
1. 마케팅지향형 산지유통 혁신(유통정책과 농업사무관 이광하) ……	373
가. 공동마케팅조직 등 산지유통 주체 육성 ……	373
나.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한 우수브랜드 육성 ……	375

2. 소비지 물류혁신 및 도매시장 운영효율화 .....	377
(유통정책과 농업사무관 변상문, 행정사무관 임채록)	
3. 농식품 수출확대(식품산업과 행정사무관 이경일, 장동욱) .....	378
4.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친환경농업정책과 기술서기관 성신상) .....	380
제5절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장치 강화 .....	381
1. 직접지불제 확충 .....	381
가. 직접지불제 확충 방향(농업정책과 농업사무관 김영수) .....	381
나.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소득정책과 사무관 하종수) .....	382
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친환경정책과 농업사무관 안형덕) .....	383
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농지과 사무관 이영식) .....	383
마. 경관보전직불제(정주지원과 시설사무관 김현수) .....	384
2. 농외소득 기반 확대(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최호종) .....	385
가. 농공단지 조성사업 .....	385
3. 재난대비 경영안정장치 강화 .....	385
가.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협동조합과 사무관 서준한) .....	385
나. 재해농가 지원확충(농산경영과 사무관 장영국) .....	388
다. 가축공제 운영 내실화(축산정책과 축산사무관 서재호) .....	388
라. 농업인 안전공제 추진(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정아름) .....	389
4. 경영회생지원시스템 구축 .....	390
가. 농가부채 경감대책(협동조합과 서기관 이용섭) .....	390
나.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협동조합과 서기관 이용섭) .....	391
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추진(농지과 사무관 이영식) .....	392
5. 농업정책금융 지원제도 개선 .....	393
(협동조합과 행정사무관 이낙휘, 농업사무관 박정훈)	
가. 추진현황 .....	393
나. 추진계획 .....	395
제6절 농촌 복지 및 지역개발 본격 추진 .....	396
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추진 .....	396
(농촌정책과 행정사무관 엄기훈)	



2. 농촌지역개발사업 체계화(농촌정책과 기술서기관 김종구) .....	398
가. 도입 배경 및 의의 .....	398
나.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	398
다. 정책의 주요내용 .....	399
라. 정책추진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400
3.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시책 추진 .....	401
가. 도입(정주지원과 농업사무관 이재식) .....	401
나. 전원마을조성사업(정주지원과 시설사무관 박종민) .....	402
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정주지원과 행정사무관 이우곤) .....	403
라. 경관보전직불제(정주지원과 시설사무관 김현수) .....	404
4. 농촌형 복지대책 확충 .....	405
가. 사회안전망 확충(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정아름) .....	405
나. 보건·의료기반 확충(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김낙신) .....	406
다.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지원 .....	406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김낙신)	
라. 교육비 부담경감(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김낙신) .....	407
마. 취약농가 인력지원(여성정책과 행정사무관 이상목) .....	407
5.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	408
(농촌지역개발과 행정사무관 이영길, 사무관 전영미)	
6. 쾌적한 친환경적 농촌개발 .....	410
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농촌지역개발과 시설사무관 한준희) .....	410
나. 오지종합개발사업(농촌지역개발과 시설사무관 이행우) .....	411
다.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추진(농촌지역개발과 시설사무관 이행우) .....	412
라.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정주지원과 농업사무관 이재식) .....	413
7. 농촌자원의 산업화 .....	414
가. 농촌산업육성 방향(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이장의) .....	414
나. 신활력사업 추진(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김병준) .....	414
다. 향토산업육성 추진(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최호중) .....	415
8. 농업·농촌정보화의 확대 추진 .....	416
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기획팀 전산사무관 문광규) .....	416

나. 농업·농촌 정보컨텐츠 확충(정보화기획팀 행정사무관 강신복) ……	417
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화(정보화기획팀 행정사무관 강신복) ……	418
9. 농업생산기반 확충 ……	419
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시설관리과 시설사무관 박재수) ……	419
나. 받기반정비사업(시설관리과 기술서기관 전경구) ……	420
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시설관리과 시설사무관 박재수) ……	421
라. 배수개선 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	421
(시설관리과 시설사무관 김동권, 기술서기관 전경구)	
마. 농업용수 개발사업(기반정비과 기술서기관 이성홍) ……	422
바.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기반정비과 사무관 박종훈) ……	423
제7절 농정제도 개혁 ……	426
1. 농지제도 개선(농지과 행정사무관 송태복) ……	426
2. 농지은행 활성화 추진(농지과 사무관 이영식) ……	427
3. 협동조합 개혁 ……	428
가.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 추진 ……	428
(협동조합과 기술서기관 박순연)	
나. 일선조합 구조조정 추진(협동조합과 행정사무관 이정길) ……	429
4.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마무리 및 본사업 추진방안 수립 ……	430
(농업정책과 사무관 이연숙)	
5. 농가등록제 시범사업(정책조정과 행정사무관 안창근) ……	432
6. 농림정책 리모델링 추진(정책조정과 행정사무관 이시혜) ……	433
제8절 DDA·FTA 농업협상 대책 ……	433
1. WTO/DDA 농업협상분야(농업협상과 사무관 최봉순) ……	433
가. 세부원칙 협상 등에 적극 대응 ……	433
나.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 확보 추진 ……	434
2. FTA 농업협상 대책 ……	436
가. 한·미 FTA 협상분야(자유무역협정2과 서기관 박수진) ……	436
나. 한·EU FTA 협상분야(자유무역협정2과 행정사무관 임영조) ……	444
다. 한·아세안 FTA 협상분야(자유무역협정과 행정사무관 피계림) ……	446

라. 한·캐나다 FTA 협상분야(자유무역협정과 행정사무관 이용직) ……	448
마. 한·인도 CEPA 협상분야(자유무역협정과 수의서기관 전종민) ……	449
3. OECD 활동계획(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이선복) ……	450
4. FAO 활동(국제협력과 주무관 강승규) ……	452
5. ASEAN+ 3 농림장관회의(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박경희) ……	453
6. 기타 농업관련 국제기구(국제협력과 강승규 주무관) ……	455
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	455
나.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	455
7. 양자 농업협력약정 체결(통상협력과 기술서기관 김 철) ……	456
8. 남북농업 협력 활성화(구조정책과 농업사무관 이연숙) ……	457
가.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 ……	457
나. 남북 농업교류 및 지원현황 ……	458
다.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 방안 ……	462
제9절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마련(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송남근) ……	463

## 부    록

1.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	469
2. 한·미 FTA 농업부문 협상결과 ……	499

# 2006년도 농업·농촌동향

제1편 ●

제1장 경제동향

제2장 국내 농산물 수급동향

제3장 국제 농업동향

# 제 1 장 경제동향

## 제1절 국내외 경제동향

### 1. 국내 경제동향

#### 가. 경제성장

2006년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설비투자와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수출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5.0% 성장하였다. 농림어업과 건설업의 생산이 감소한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재화수출도 높은 증가를 나타내었다.

<표 1-1-1> 경제활동 부문별 경제성장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p
G D P		9.3	3.8	7	3.1	4.7	4.2	5.0
경제 활동 동 별	전 산 업	8.1	4.0	6.7	3.1	5.1	4.2	5.0
	농림어업	1.2	1.1	△3.5	△5.3	9.2	0.7	△2.6
	제 조 업	17.0	2.2	7.6	5.5	11.1	7.1	8.4
	서비스업	9.5	4.8	7.8	1.6	1.9	4.2	4.2
재 고 증 가 율		16.1	0.0	△0.2	△0.6	9.3	△0.1	△0.1
제조업평균기동율		78.6	75.3	78.4	78.3	80.4	79.8	81.1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1) 산업별 생산활동

2006년 농림어업은 2.6% 감소하였다. 이 중 농업은 생산이 부진하여 전년 대비 3.7% 감소하였다. 이는 벼, 채소류, 과실류 등 대부분의 작물 재배 면적이 감소하였고 축산업도 낙농 및 양돈이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어업은 해면어업과 해면양식의 호조로 전년 대비 5.8% 증가하였다. 광업은 연탄 및 모래·자갈 생산이 크게 증가하여 2.7% 증가하였다.

<표 1-1-2>

산업별 성장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sup>p</sup>				
				연간	1/4	2/4	3/4	4/4
농 립 어 업	△5.3	9.2	0.7	△2.6	△2.2	△0.7	△0.4	△0.6
광 업	0.9	2.7	△1.7	2.7	1.4	△7.9	0.8	5.9
제 조 업	5.5	11.1	7.1	8.4	0.8	1.6	2.2	1.0
전기 가스 수도사업	4.7	6.6	7.8	3.5	△0.3	0.7	0.6	△0.4
건 설 업	8.6	1.8	△0.1	△0.1	△0.2	△1.4	3.6	0.6
서 비 스 업 <sup>1)</sup>	1.6	1.9	3.4	4.2	1.1	0.7	0.9	1.2
도소매 음식숙박업	△2.8	△0.2	2.0	3.5	0.2	1.0	0.7	0.8
운수창고 및 통신업	4.8	7.0	4.8	4.7	0.8	1.0	1.3	1.3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2.1	1.4	4.0	3.6	1.3	0.1	0.8	1.3
국 내 총 생 산	3.1	4.7	4.2	5.0	6.3	5.1	4.8	4.0
국 민 총 소 득	1.9	3.9	0.7	2.3	△0.5	0.8	0.5	2.5

주 : 1) 수입세 포함, 금융귀속서비스는 제외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제조업은 작년에 이어 8.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산업용기계, 반도체 등 전기전자, 운수장비 등이 내수와 수출이 모두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전년 대비 3.5% 증가하는데 그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이는 산업용, 가정용 등 전 부문의 수요 부진으로 전기업의 증

가을(4.1%)이 전년보다 낮아지고 겨울철 기온 상승으로 가스 및 열공급업의 증가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전년대비 0.1% 감소하였다. 이는 토목건설의 경우 농림토목과 도시토목이 증가하였지만 도로, 철도, 항만이 증가하였고 건물건설의 경우 주거용과 상업용 건물 위주의 비주거용 건물건설의 감소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증가세가 확대되어 전년에 이어 4.2% 성장하였다.

### (2) 소비지출

비내구재의 지출이 저조하였으나 내구재와 준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에 대한 지출도 회복됨에 따라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4.2% 증가하였다. 정부소비도 물건비 지출 증가와 건강보험급여율 인상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하였다.

<표 1-1-3>

### 소 비 동 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sup>P</sup>				
				연간	1/4	2/4	3/4	4/4
소 비 지 출	△0.3	0.4	3.9	4.5	1.3	0.8	1.1	1.1
민간소비지출	△1.2	△0.3	3.6	4.2	5.2	4.1	4.0	3.7
정부소비지출	3.8	3.7	5.0	5.8	5.4	5.2	5.8	6.8

자료 : 한국은행

### (3) 저축 및 투자

2006년 총저축률은 전년대비 1.5% 포인트 하락한 31.4%를 기록하였다. 이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이 전년 대비 4.7% 증가한데 비해 최종소비지출은 전년대비 7.0%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민간총저축률은 전년대비 1.7% 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정부총저축률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10.4%이다.

2006년 총투자율은 29.9%로 전년보다 0.3% 포인트 하락하였다. 설비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가 부진하여 국내 총고정투자의 증가율이 국민 총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표 1-1-4> 총저축률 및 총투자율 추이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sup>p</sup>
총 저 축 률	32.8	34.9	32.9	31.4
민 간	21.1	24.6	22.7	21.0
일 반 정 부	11.6	10.2	10.1	10.4
총 투 자 율	30.1	30.4	30.2	29.9
민 간	24.1	24.4	24.6	24.5
일 반 정 부	6.0	6.0	5.6	5.4
투 자 재 원 자 립 도	109.0	114.7	109.2	105.0

자료 : 한국은행

총고정자본 형성은 설비투자의 큰 성장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3.2% 성장하는데 그쳤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2.4% 성장한 반면 건물건설은 1.0% 감소하였으며, 설비투자는 전기전자기기 및 정밀기기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 7.6% 성장하였다.

<표 1-1-5> 투자지출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sup>p</sup>				
				연간	1/4	2/4	3/4	4/4
총고정자본형성	4.0	2.1	2.4	3.2	△0.2	0.5	2.8	1.2
설 비 투 자	△1.2	3.8	5.7	7.6	△1.0	2.2	3.8	0.1
건 설 투 자	7.9	1.1	△0.2	△0.4	0.0	△0.9	2.0	1.9

자료 : 한국은행



## 나. 물가와 금리

### (1) 물 가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공업제품과 납입금, 시내버스 등 서비스 부문 물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의 출하증가로 농축산물 가격이 예년에 비해 하락하고 집세가 안정되어 연평균 2.2% 상승에 그쳤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2.0%의 증가율을 보였고 2/4분기와 3/4분기 중 서비스물가 안정으로 2.2~2.3%의 물가상승률을 보였다. 4/4분기 중에는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물가의 안정으로 2.2% 증가에 그쳤다. 부류별로는 생활물가지수가 전년대비 3.1% 상승하였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는 1.8% 상승해 전년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년에 비해 1.0% 상승하였다.

<표 1-1-6>

### 물 가 동 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sup>p</sup>				
				연간	1/4	2/4	3/4	4/4
소 비 자 물 가	2.8	3.6	2.8	2.2	2.0	2.3	2.5	2.2
농 축 수 산 물	6.2	8.9	1.9	△0.1	△0.1	△2.1	0.7	1.0
공 업 제 품	1.6	2.6	3.7	2.0	2.3	2.6	2.4	0.8
서 비 스	2.8	3.1	3.2	2.7	2.2	2.7	3.0	3.0
생 산 자 물 가	2.2	6.1	2.1	2.3	1.7	2.4	3.1	2.0
농 립 수 산 품	5.7	12.1	△3.7	△5.0	△6.7	△8.7	△4.9	0.6
공 산 품	1.8	7.5	3.1	2.9	2.4	3.5	4.1	1.8
전 력·수 도·가 스	3.0	0.9	1.2	7.3	5.5	6.8	9.0	7.7
서 비 스	3.0	2.8	1.3	1.8	1.7	1.9	1.9	1.9

주 : 연간은 연평균 기준 전년대비

자료 : 한국은행

수출물가는 전년대비 1.9% 하락하였다. 동, 니켈 등 비철금속소재 국제원자재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기기계 및 장치제품, 금속1차제품,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 등의 가격이 올랐으나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 하락, 관련제품 수출 국가간 경쟁심화 등으로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일반기계 및 장비제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품 등이 크게 내림세를 보인 데 기인한다.

수입물가는 전년대비 5.3% 상승하였다. 이는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자본재 및 소비재가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렸으나 동, 니켈, 아연 등 비철금속소재 국제원자재가격 및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원자재(7.5%)가 대폭 오른 데 기인한다.

<표 1-1-7> 수출입 물가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sup>p</sup>				
				연간	1/4	2/4	3/4	4/4
수 출 물 가	△2.2	6.2	△6.7	△1.9	△4.3	△0.7	0.0	△2.6
수 입 물 가	1.8	10.2	2.9	5.3	8.1	8.8	5.1	△0.4

단위 : 한국은행

(2) 금리

2006년 국고채 및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장기시장금리는 고유가와 경기회복 둔화 우려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와 원/달러 환율 변화에 의해 반등하였다. 단기금리인 CD 유통수익률은 전년의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표 1-1-8> 시중실세금리

(단위 : 연%)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회사채유통수익률(3년)	6.56	5.43	4.73	5.52	5.29
CD유통수익률(3개월)	4.81	4.31	3.79	4.09	4.86
콜금리(1일)	4.18	3.97	3.63	3.76	4.60

자료 : 재경부

## 다. 고용과 임금

### (1) 고 용

2006년 경제활동인구는 2,397만 8천명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1.9%로 전년대비 0.1%p 하락하였다.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대비 증감율을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건설업이 증가한 반면,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농림어업은 감소하였다. 실업자는 82만 7천명으로 전년대비 6.8%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5%로 전년보다 0.2% 포인트 하락하였다.

<표 1-1-9>

### 고 용 동 향

(단위 : 천명,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증감율
경 제 활 동 인 구	22,957	23,417	23,743	23,978	1.0
경제활동참가율	61.4	62.1	62.0	61.9	△0.1p
취 업 자	22,140	22,557	22,856	23,151	1.3
농 립 업	1,877	1,825	1,815	1,785	△1.7
제 조 업	4,205	4,290	4,234	4,167	△1.3
사회간접자본 및 기 타 서 비 스	15,967	16,427	16,789	17,181	2.3
건 설 업	1,816	1,820	1,814	1,835	△0.3
실 업 자	818	860	887	827	△6.8
실 업 륜	3.6	3.7	3.7	3.5	△0.2p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 (2) 임 금

2006년도 근로자 명목임금(상용근로자 기준)은 연중 5.7% 올라 전년보다 증가세가 다소 약화되었다. 산업별로 부동산 및 임대업은 전년대비 9.3%, 보건사회복지사업은 8.9% 상승하여 높은 상승세를 유지였고, 건설업은 2005년 -0.3%에서 9.2%로 반전하여 크게 상승하였다. 제조업 노동생산성 지수는 전년대비 12.8% 증가하여 5년 연속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는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재화수출 상승세를 유지함으로써 산출량이 전년대비 10.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노동투입량은 전년대비 2.1%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 1-1-10> 임금상승률 및 노동생산성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연간	1/4	2/4	3/4	4/4
명 목 임 금	9.4	6.5	6.4	5.7	5.9	5.6	4.3	7.0
실 질 임 금	5.7	2.8	3.6	3.4	3.5	3.2	1.7	4.7
제 조 업 노 동 생 산 성 <sup>1)</sup>	4.8	10.8	8.1	12.8	11.5	14.4	13.2	12.7

주 : 1) 노동생산성 지수(산출량지수/노동투입량지수) 기준  
 자료 : 노동부, 산업자원부

### 라. 경상수지

<표 1-1-11> 경 상 수 지

(단위 : 억달러)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sup>p</sup>
경 상 수 지	80	54	120	282	150	61
상 품 수 지	135	148	220	376	327	292
수 출	1,515	1,634	1,973	2,577	2,890	3,318
수 입	1,380	1,486	1,753	2,201	2,563	3,026
서비스수지	△39	△82	△74	△81	△137	△188
소득수지	△12	4	3	11	△16	△5
경상이전수지	△4	△16	△29	△24	△25	△38

자료 : 한국은행

2006년 경상수지는 2005년에 비해 흑자규모가 89억달러 줄어든 6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상품수지는 전년에 이어 두 자리수의 수출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흑자폭이 2005년보다 35억달러 축소된 292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적자폭이 늘어나면서 적자규모가 2005년보다 더욱 확대된 188억달러를 기록하였다.

#### (1) 수 출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은 재화수출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4.8% 증가하여 전년보다 상승세가 증가되었다. 이중 재화 수출은 기계류와 정밀기기, 석유제품, 철강제품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승용차, 선박은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가전제품, 섬유류가 감소세를 지속하는 한편, 반도체의 증가세는 둔화되었다.

#### (2) 수 입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은 전년대비 18.4% 증가하였다. 재화수입은 원자재와 자본재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고 소비재의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반면 화공품, 철강재는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서비스 수입은 화물 및 여객운임 등의 지급과 내국인의 해외여행경비 지출이 늘어나 적자금액이 전년대비 51억 달러 증가한 188억 달러에 달하였다.

#### (3) 자본수지

2006년 자본수지는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가 유출초를 보였으나 기타투자수지가 큰 폭의 유입초를 나타냄에 따라 186억 달러의 순유입액을 나타냈다.

#### (4) 환 율

2006년도 원화의 대미달러화 환율은 976원이었던 3월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연말 929원까지 내려갔다. 1/4분기 중 970원대로 하락한 환율은 2/4분

기 940원대로 추가 하락하였다. 3/4분기 중 달러화 강세로 상승하였으나 4/4분기 외국인의 주식투자 자금 유입으로 다시 하락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권오복, 연구원 류상모)

## 2. 해외 경제동향

### 가. 경제성장

<표 1-1-12>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sup>p</sup>
세 계	2.3	3.0	2.7	4.1	3.5	4.0
선 진 국	0.9	1.6	1.9	3.3	2.5	3.1
미 국	0.5	1.9	2.7	3.9	3.2	3.3
일 본	0.4	△0.3	1.8	2.7	1.9	2.2
E U	1.6	0.9	0.8	1.8	1.5	2.8
개 도 국	4.1	4.8	6.7	7.6	7.5	7.9
한 국	3.8	7	3.1	4.7	4.2	5.0
중 국	7.3	8.3	10.0	10.1	10.4	10.7
중 남 미	0.7	△0.9	1.9	6.1	4.3	4.7

자료 : 한국은행

2006년 세계경제는 성장세를 지속하여 3/4분기 들어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2005년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냈다. 미국경제는 민간소비와 기업투자가 호조를 보이면서 3.3%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일본과 유로지역 경제의 회복이 본격화되었다. 중국은 사상최대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연평균 10%가 넘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 나. 고용 및 물가

2006년중 선진국의 고용사정은 회복기조를 유지하였다. 미국은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호조를 보이며 민간소비가 뒷받침되었다. 일본지역은 수출과 고용이 호조세를 유지한 반면, 소비·물가 관련 지표들이 약세를 보였다. 유로지역은 2/4분기부터 실업률이 7% 후반으로 내려가면서 고용환경이 다소 개선되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1/4분기와 3/4분기 중 유가상승에 따라 높은 상승세를 시현하였으며 2/4분기와 4/4분기 중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2/4분기 이후 2%대의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다.

### 다. 교역 및 경상수지

<표 1-1-13> 세계교역과 주요국 경상수지

(단위 : 십억달러)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sup>p</sup>
미 국	△393	△480	△541	△665	△792	△857
일 본	87	112	136	172	166	171
유 로 지 역	△19	50	37	44	△7	△14

자료 : 재정경제부

2005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8천6백억 달러로 만성적인 적자문제가 지속되었다. 일본은 수출과 수입이 각각 14.6%, 18.2% 증가해 흑자폭이 증가했으며 유로지역은 수출과 수입이 각각 11.2%, 13.2% 증가하였으나 적자가 증가하였다.

### 라. 국제금리 및 환율

2006년 미국 금리는 정책금리 인상으로 상반기에는 상승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다소 하락하였다. 일본은 제로금리 정책에서 벗어나 7월에 콜금리 목

표를 0.25% 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금리가 소폭 상승하였다. 유로지역은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연중 5회에 걸쳐 총 1.25% 인상하여 금리가 상승하였다.

<표1-1-14> **주요국 단기금리 추이<sup>1)</sup>**

(단위 :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미 국 <sup>2)</sup>	1.75	1.25	1.00	2.25	4.25	5.25
일 본 <sup>3)</sup>	0.10	0.10	0.10	0.10	0.10	0.40
유 로 지 역 <sup>4)</sup>	3.29	2.75	2.00	2.00	2.25	3.50

주 : 1) 기말기준 2)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 3) 기준대출이율  
4) 단기 공개시장조작 금리.

자료 : 재정경제부

2006년 미 달러화는 미국 경제의 성장둔화 전망, 주요국과의 금리격차 축소 등으로 주요 통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엔화에 대해서는 콜금리 목표 상향조정 이후 금리인상이 지연되면서 소폭 절상되었다.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표 1-1-15> **주요국 통화의 환율추이**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미 달 러 / 유 로	0.890	1.050	1.258	1.363	1.184	1.315
일 본 엔 / 미 달 러	131.5	118.8	107.0	103.1	117.8	118.9

자료 : 한국은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권오복, 연구원 류상모)



## 제2절 농촌 경제동향

### 1. 농업구조

#### 가.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2006년 12월 1일 현재 농가수는 1,245천가구로 전년의 1,273천가구보다 28천가구(2.2%) 감소하였으며, 농가인구는 3,304천명으로 전년의 3,434천명보다 129천명(3.8%)이 감소하였다.

가구원이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농가는 전체 농가의 63.0%인 785천가구로 전년의 796천가구(62.5%)보다 가구수는 11천 가구가 감소하였으나, 비중은 0.5%p 증가하였다. 가구원이 농업과 농업이외 일을 함께하는 겸업농가는 전체농가의 37.0%인 460천가구로 전년의 477천가구(37.5%)보다 17천가구가 감소하였다.

농가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연령층이 60대인 경영주가 33.0%(411천명), 70세 이상 경영주는 26.0%(323천명)에 이르며, 전체농가에서 60세이상 고령층의 경영주가 차지하는 비중(59.0%)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60세 미만 경영주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전체인구(48,297천명)중에서 농가인구(3,304천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6.8%로 전년(7.1%)보다 0.3%p 감소하였고, 고령화율을 나타내는 65세이상 농가인구 비중은 30.8%로 2005년 29.1%보다 높아져 전국(2005 : 9.1% → 2006 : 9.5%)에 비해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농가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1,607천명(48.6%), 여자가 1,697천명(51.4%)으로 여자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6>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구 분	단위	1995	2000	2004	2005	2006	2005대비		
							증감	증감률(%)	
농 가 호 수	천호	1,501	1,383	1,240	1,273	1,245	△28	△2.2	
농 가 인 구 (총인구비중)	천명 (%)	4,851 (10.9)	4,031 (8.6)	3,415 (7.1)	3,434 (7.1)	3,304 (6.8)	△129	△3.8	
호당농가인구	명	3.23	2.91	2.75	2.70	2.65	△0.05	△1.9	
연령별 농가 인 구	50세이상 (구성비)	천명 (%)	2,122 (43.7)	2,009 (49.9)	1,940 (56.9)	1,952 (56.8)	1,949 (59.0)	△3	△0.2
	50세미만 (구성비)	천명 (%)	2,729 (56.3)	2,022 (50.1)	1,475 (43.1)	1,482 (43.2)	1,355 (41.0)	△127	△8.6
성 별 농 가 인 구	남 자 (구성비)	천명 (%)	2,373 (48.9)	1,971 (48.9)	1,654 (48.4)	1,677 (48.8)	1,607 (48.6)	△69	△4.1
	여 자 (구성비)	천명 (%)	2,478 (51.1)	2,060 (51.1)	1,761 (51.6)	1,757 (51.2)	1,697 (51.4)	△60	△3.4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나. 농경지

농경지 면적은 도시화에 따라 건물건축, 공공시설 등 타용도 전환면적이 증가하여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말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24천ha 줄어든 1,800천ha로, 이 가운데 논면적은 1,084천ha로 전년에 비하여 21천ha 감소하였으며, 밭면적은 716천ha로 3천ha가 감소하였다.

경지면적의 변동요인을 살펴보면 건물·건축(9.8천ha), 공공시설(6.3천ha), 기타사유(12.0천ha)로 인하여 총 28.1천ha의 경지가 감소한 반면, 개간(4.2천ha), 복구 등(0.4천ha)으로 총 4.5천ha 경지가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23.6천ha가 감소하였다.

2006년의 경지이용면적은 1,860천ha로 전년보다 61천ha가 감소하였고, 경지이용률은 전년의 104.7%에서 102.0%으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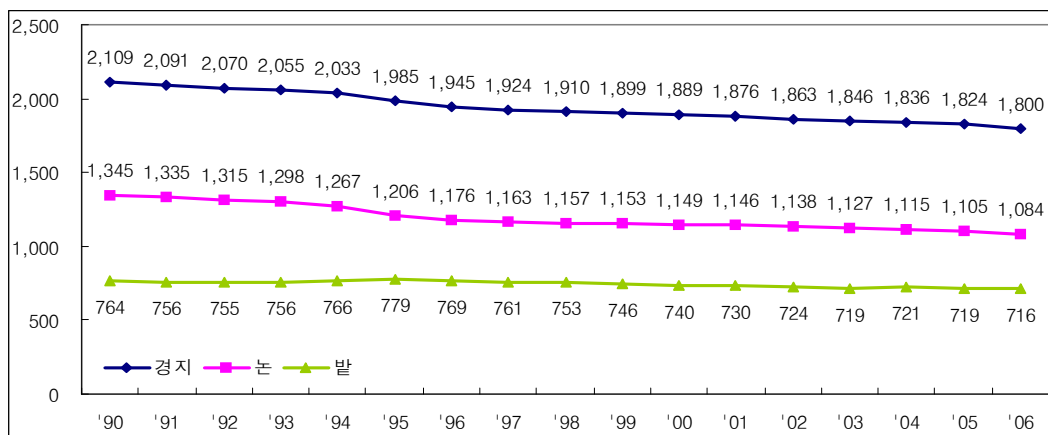
경지 이용면적 중 식량작물은 1,180천ha로 전년보다 54천ha 감소, 채소

(시설채소 포함)는 315천ha로 6천ha 감소, 과수(시설과수 포함)는 152천ha로 3천ha 감소하였다.

한편 휴경면적은 46.4천ha로 전년보다 2.2천ha 증가하였고, 전체 경기면적 중 휴경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1%p 증가한 2.5%로 나타났다.

<표 1-1-17> 경지면적 변동추이

(단위 : 천ha)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지면적통계

<표 1-1-18> 농경지 사유별 증감내역

(단위 : 천ha)

연도별	증 가				감 소				증 감 면 적
	계	개 간	간 척	복 구	계	건 물 건축	공 공 시설	기타	
1995	15.6	5.1	9.0	1.5	63.0	24.7	11.2	27.1	△47.4
1998	12.3	5.9	3.1	3.3	25.3	6.3	5.9	13.2	△13.0
1999	12.0	8.1	0.8	3.1	23.0	5.0	7.5	10.5	△11.0
2000	9.0	5.6	1.0	2.4	19.1	5.3	5.2	8.6	△10.1
2001	7.6	4.3	1.0	2.3	20.3	5.6	5.5	9.2	△12.7
2002	4.5	3.3	0.3	0.9	18.0	6.4	4.4	7.2	△13.5
2003	3.2	2.3	0.0	0.9	19.9	7.9	4.8	7.1	△16.6
2004	8.2	7.2	0.3	0.6	18.6	6.7	5.7	6.2	△10.4
2005	1.7	1.0	0.4	0.3	13.3	5.2	3.5	4.6	△11.6
2006	4.5	4.2	0.0	0.4	28.1	9.8	6.3	12.0	△23.6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지면적통계

<표 1-1-19>

**농경지 이용현황**

(단위 : 천ha)

구 분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2005대비	
							증감	증감률(%)
경지이용면적	2,197	2,098	1,936	1,941	1,921	1,860	△61	△3.2
식량작물	1,346	1,318	1,236	1,233	1,234	1,180	△54	△4.4
(미곡)	(1,056)	(1,072)	(1,016)	(1,001)	(980)	(955)	(△25)	(△2.6)
(맥류)	(90)	(68)	(65)	(63)	(61)	(58)	(△3)	(△4.9)
(두류 등)	(200)	(177)	(155)	(169)	(193)	(167)	(△26)	(△1.3)
경제작물	851	780	700	710	689	689	0	0
(채소)	(403)	(386)	(328)	(341)	(321)	(315)	(△6)	(△1.9)
(과수)	(174)	(173)	(163)	(157)	(155)	(152)	(△3)	(△1.9)
(기타) <sup>1)</sup>	(274)	(221)	(209)	(212)	(213)	(222)	(9)	(4.2)
경지면적	1,985	1,889	1,846	1,836	1,824	1,800	△24	△1.3
경지이용율(%)	108.1	110.5	103.9	105.2	104.7	102.0	△2.7	△2.6
(논)	(104.1)	(106.3)	(101.8)	(102.7)	(102.9)	(102.5)	(△0.4)	△0.4
(밭)	(114.7)	(116.9)	(107.3)	(109.0)	(107.3)	(101.2)	(△6.1)	△5.7

주 1) 특·약용작물, 병발, 관상수 심은 밭, 묘포, 기타를 뜻함.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지면적통계

<표 1-1-20>

**휴경면적**

(단위 : 천ha)

구 분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2005대비	
							증감	증감률(%)
휴경면적	64.6	16.8	46.4	47.8	44.2	46.4	2.2	5.0
논	33.5	4.3	25.8	26.7	24.1	20.3	△3.8	△15.8
밭	31.1	12.5	20.6	21.2	20.1	26.1	6.0	29.9
휴경율(%)	3.2	0.9	2.5	2.6	2.4	2.5	-	-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지면적통계

(통계기획팀 서기관 임신탉)

## 2. 농가경제

### 가. 소득 동향

#### (1) 농가소득

2006년도 농가의 평균소득은 연간 32,303천원으로서 전년(30,503천원)에 비해 5.9%(1,800천원) 증가하였다.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은 각각 2.3%, 1.5%씩 소폭 증가하였고,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은 각각 19.8%, 11.9%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다.

<표 1-1-21>

### 농 가 소 득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2	2003	2004	2005	2006	2005대비	
							증감	증감률(%)
농 가 소 득 <sup>1)</sup>	21,803	24,475	26,878	29,001	30,503	32,303	1,800	5.9
□경상소득	21,803	24,475	22,000	24,600	25,778	27,015	1,237	4.8
◦농업소득	10,469	11,274	10,572	12,050	11,815	12,092	277	2.3
◦농외소득	6,931	8,140	9,397	9,544	9,884	10,037	153	1.5
◦이전소득	4,403	5,060	2,031	3,006	4,078	4,886	808	19.8
□비경상소득 <sup>2)</sup>	-	-	4,878	4,401	4,725	5,289	564	11.9

주 1) 농가소득=경상소득(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2) 비경상소득은 우발적인 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등이 있다.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농업의존도)은 37.4%로 나타났으며, 전년에 비해 1.3%p 감소하였다.

<표 1-1-22>

농가소득 구성비

(단위 : %)

구 분	1995	2002	2003	2004	2005	2006
농 가 소 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 상 소 득	100.0	100.0	81.9	84.8	84.5	83.6
◦ 농 업 소 득	48.0	46.1	39.3	41.6	38.7	37.4
◦ 농 외 소 득	31.8	33.2	35.0	32.9	32.4	31.1
◦ 이 전 소 득	20.2	20.7	7.6	10.4	13.4	15.1
□ 비경상소득	-	-	18.1	15.2	15.5	16.4
< 일 본 >						
◦ 농 업 소 득	16.2	13.0	구)14.3 신)25.4	24.8	24.6	-

주 1) 농업의존도는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임.

2) 일본은 2003년 조사체계개편(경영주 부부 및 농업관련 세대원 중심으로 파악)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일본 농림수산성 농업경영통계

(2) 농업소득

농업총수입과 농업경영비가 모두 증가하였고 농업소득은 12,092천원으로 전년(11,815천원)에 비해 2.3%(277천원) 증가하였다.

<표 1-1-23>

농 업 소 득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2	2003	2004	2005	2006	2005대비	
							증감	증감률(%)
농 업 소 득 (농업소득률)	10,469 (65.4)	11,274 (56.5)	10,572 (44.8)	12,050 (45.3)	11,815 (44.6)	12,092 (44.3)	277 -	2.3 -
◦ 농업총수입	16,012	19,951	23,611	26,623	26,496	27,322	826	3.1
◦ 농업경영비	5,543	8,677	13,039	14,572	14,681	15,231	550	3.7

주 : 농업소득 = 농업총수입 - 농업경영비, 농업소득률 = (농업소득/농업총수입) × 100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농업총수입은 27,322천원으로 전년(26,496천원)에 비해 3.1%(826천원) 증가하였다. 미곡, 채소수입이 증가하고 축산과 과수는 전년수준에 그쳤다.

<표 1-1-24> **농업총수입**

(단위 : 천원, %)

구분	1995	2002	2003	2004	2005	2006	2005대비	
							증감	증감률(%)
<b>농업총수입</b>	16,012	19,951	23,611	26,623	26,496	27,322	826	3.1
◦미곡수입	5,450	7,471	8,049	8,653	7,264	7,578	314	4.3
◦축산수입	3,981	2,554	5,055	5,021	6,386	6,403	17	0.3
◦채소수입	3,386	5,100	5,721	6,538	6,388	6,758	370	5.8
◦과수수입	1,542	2,632	2,298	2,964	2,945	2,915	△30	△1.0
◦기타수입 <sup>1)</sup>	1,653	2,194	2,488	3,447	3,513	3,668	155	4.4

주 1) 서류, 두류, 맥류, 화훼, 잡곡수입 등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농업총수입 구조를 보면 미곡수입(27.7%), 채소(24.7%), 축산(23.4%), 과수(10.7%) 및 기타수입(13.4%)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25> **농업총수입 구성비**

(단위 : %)

	1995	2002	2003	2004	2005	2006
<b>농업총수입</b>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곡수입	34.0	37.4	34.1	32.5	27.4	27.7
◦축산수입	24.9	12.8	21.4	18.9	24.1	23.4
◦채소수입	21.1	25.6	24.2	24.6	24.1	24.7
◦과수수입	9.6	13.2	9.7	11.1	11.1	10.7
◦기타수입	10.4	11.0	10.6	12.9	13.3	13.4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표 1-1-27>

**농 외 소 득**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2	2003	2004	2005	2006	2005대비	
							증감	증감률(%)
농 외 소 득	6,931	8,140	9,397	9,544	9,884	10,037	153	1.5
◦겸 업 소 득	1,527 (22.0)	1,454 (17.9)	2,266 (24.1)	2,342 (24.5)	2,531 (25.6)	2,690 (26.8)	159	6.3
◦사 업 외 소 득	5,404 (78.0)	6,686 (82.1)	7,131 (75.9)	7,201 (75.5)	7,353 (74.4)	7,347 (73.2)	△6	△0.1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4)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이전소득은 19.8%, 비경상소득은 11.9% 증가하여 합계는 전년에 비해 1,372천원(15.6%) 증가한 10,175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1-1-28>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2	2003	2004	2005	2006	2005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4,403	5,060	6,909	7,407	8,803	10,175	1,372	15.6
◦이 전 소 득	-	-	2,031	3,006	4,078	4,886	808	19.8
◦비 경 상 소 득	-	-	4,878	4,401	4,725	5,289	564	11.9

주) 2003년부터 이전소득 중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등은 비경상소득으로 분리 신설됨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나. 가계지출 동향**

2006년 가계비는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합하여 28,461천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은 19,891천원으로 전년(19,378천원)에 비해 2.6%(513천원), 비소비지출은 8,571천원으로 전년(7,271천원)에 비해 17.9%(1,300천원) 증가하였다.

<표 1-1-29>

**가계비 지출**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2	2003	2004	2005	2006	2005대비	
							증감	증감률(%)
<b>가 계 비</b>	14,782	17,858	24,063	24,691	26,649	28,461	1,812	6.8
◦ 소비 지출	14,782	17,858	18,162	18,386	19,378	19,891	513	2.6
◦ 비 소비 지출 <sup>1)</sup>	-	-	5,901	6,305	7,271	8,571	1,300	17.9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도 (농업소득/가계비)	70.8	63.1	43.9	48.8	44.3	42.5	-	-
평균 소비 성향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 <sup>2)</sup> )	68.3	73.7	86.6	81.0	83.4	83.8	-	-

주 1) 2003년부터 조세, 사회보험 등으로 구성된 비소비지출이 분리 신설됨

2) 2003년부터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비소비지출

2003년 이전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조세·부담금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농가의 소비지출은 19,891천원으로 전년(19,378천원)에 비해 2.6%(513천원) 증가하였다. 이는 교양오락비(11.0%), 주거비(3.3%), 교통통신비(2.9%) 등 전반적으로 지출액이 증가하였다.

<표 1-1-30>

**소비 지출**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2	2003	2004	2005	2006	2005대비	
							증감	증감률(%)
<b>소 비 지 출<sup>1)</sup></b>	14,782	17,858	18,162	18,386	19,378	19,891	513	2.6
◦ 식 료 품 비	3,118	3,738	4,575	4,823	4,998	4,967	△31	△0.6
◦ 주 거 비	509	605	452	403	475	490	16	3.3
◦ 광 열 수 도 비	484	824	974	994	1,067	1,088	21	1.9
◦ 가 구 가 사 용 품 비	678	629	511	510	505	508	3	0.7
◦ 피 복 신 발 비	627	469	581	553	585	582	△3	△0.5
◦ 보 건 의 료 비	1,001	1,414	1,356	1,476	1,613	1,578	△35	△2.2
◦ 교 육 비	1,553	1,629	874	749	756	740	△16	△2.1
◦ 교 양 오 락 비	150	158	461	574	602	668	66	11.0
◦ 교 통 통 신 비	793	1,566	2,035	2,056	2,176	2,238	62	2.9
◦ 기 타 지 출 <sup>2)</sup>	5,869	6,826	6,342	6,249	6,601	7,032	431	6.5

주 1) 2002년도까지는 가계비 항목, 2003년부터 소비지출 항목

2) 기타지출은 감가상각비, 기타소비지출 등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농가의 비소비지출은 8,571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300천원(1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1> **비소비 지출**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2	2003	2004	2005	2006	2005대비	
							증감	증감률(%)
<b>비 소비 지 출<sup>1)</sup></b>	174	239	5,901	6,305	7,271	8,571	1,300	17.9
◦조세및부담금	174	239	294	299	396	431	35	9.0
◦공적연금납부금	-	-	319	339	345	370	25	7.2
◦사회보험납부금	-	-	375	358	326	308	△18	△5.6
◦기 타	-	-	4,913	5,309	6,204	7,461	1,257	20.3

주 1) 비소비지출은 2003년부터 분리·신설된 것으로 조세 및 부담금, 공적연금납부금, 사회보험납부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 다. 처분가능소득 및 잉여

농가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농가의 처분가능소득은 2006년 23,733천원이고,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농가 잉여금은 3,842천원으로 전년(3,854천원)에 비해 0.3%(12천원) 감소하였다.

이는 처분가능소득이 소폭(2.2%) 증가하였으나, 소비지출의 증가폭 2.6%로 더 컸기 때문이다.

<표 1-1-32> **가처분소득 / 잉여금**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2	2003	2004	2005	2006	2005대비	
							증감	증감률(%)
◦처분가능소득 <sup>1)</sup>	21,629	24,236	20,976	22,696	23,232	23,733	501	2.2
◦소 비 지 출 (분가지출)	14,782 (548)	17,858 (584)	18,162 -	18,386 -	19,378	19,891	513	2.6
◦잉 여 금 <sup>2)</sup>	6,299	5,794	2,815	4,309	3,854	3,842	△12	△0.3

주 1) 2003년부터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 - 비소비지출

2003년이전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 - 조세·부담금

2) 2003년부터 잉여금 = 처분가능소득 -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

2003년이전 잉여금 = 처분가능소득 - 가계비 - 분가지출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 라. 농가자산 동향

2006년말 현재 가구당 평균자산은 356,963천원으로 전년(298,178천원)에 비해 19.7%(58,785천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정자산은 토지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19.4% 증가하였고, 유동자산도 20.9% 증가하였다.

<표 1-1-33>

### 농 가 자 산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2	2003	2004	2005	2006	2005대비	
							증감	증감률(%)
농 가 자 산	158,171	170,465	204,527	243,665	298,178	356,963	58,785	19.7
고 정 자 산 <sup>1)</sup>	134,334 (84.9)	128,153 (75.2)	165,855 (81.1)	194,401 (79.8)	238,399 (80.0)	284,696 (79.8)	46,297 -	19.4 -
유 동 자 산 <sup>2)</sup>	23,837 (15.1)	42,312 (24.8)	38,672 (18.9)	49,264 (20.2)	59,779 (20.0)	72,267 (20.2)	12,488 -	20.9 -

주 : 1) 토지, 건축물 및 구축물, 기계·기구·비품, 대동·식물, 무형자산

2) 미처분농축산물, 미사용구입자재, 소동물 등의 재고자산 및 현금, 예금 등 당좌자산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 마. 농가부채 동향

농가부채는 2006년말 현재 가구당 28,161천원으로 전년(27,210천원)에 비해 3.5%(915천원) 증가하였다. 이 중 농업용부채는 소폭 감소(△1.7%)하였으나 농업용 이외부채는 증가(11.2%)하여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농가의 「단기상환능력」 평가지표인 당좌자산 대비 부채 비율(부채/당좌자산)은 42.2%으로 전년(50.1%)에 비해 7.9%p 개선되었다.

<표 1-1-34>

농 가 부 채

(단위 : 천원, %)

구 분	1995	2002	2003	2004	2005	2006	2005대비	
							증감	증감률(%)
농 가 부 채 (A)	9,163	19,898	26,619	26,892	27,210	28,161	951	3.5
◦농업용부채 (구 성 비)	6,351 (69.3)	11,642 (58.5)	17,455 (65.6)	16,961 (63.1)	16,315 (60.0)	16,042 (57.0)	△273 -	△1.7 -
◦농업용이외부채 <sup>1)</sup> (구 성 비)	2,812 (30.7)	8,256 (41.5)	9,164 (34.4)	9,931 (36.9)	10,895 (40.0)	12,118 (43.0)	1,223 -	11.2 -
당 좌 자 산 (B)	19,739	37,103	33,942	43,995	54,354	66,806	12,452	22.9
단기상환능력 <sup>2)</sup> [(A/B)×100]	46.4	53.6	78.4	61.1	50.1	42.2	-	△7.9%p

주 1) 농업용이외 부채는 가계용 + 겸업용 + 기타용 부채임

2) 당좌자산 대비 부채가 적을수록(수치가 적을수록) 상환능력이 개선됨을 의미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바. 전업농가/겸업농가의 주요지표

전·겸업별 농가소득은 전업농가보다 겸업농가의 소득이 높고, 제2종 겸업농가의 소득이 39,642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업농가의 소득은 제2종 겸업농가의 70.2% 수준이었다.

<표 1-1-35>

2006 전업농가/겸업농가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A)	전업농가 (B)	겸업농가		전국평균 대비		
			제1종(C)	제2종(D)	B/A	C/A	D/A
농 가 구 성 비 <sup>1)</sup>	100.0	63.0	12.1	24.9	-	-	-
농 가 소 득	32,303	27,844	36,772	39,642	86.2	113.8	122.7
가 계 지 출	26,649	24,823	30,529	35,191	87.2	107.3	123.6
자 산	356,963	349,733	373,695	364,398	98.0	104.7	102.1
부 채 (부채 / 자산)	28,161 (7.9)	25,278 (7.2)	41,440 (11.0)	28,015 (7.7)	89.8	147.2	99.5
					-	-	-

주 : 1) 2006년 농업기본통계 전·겸업별 농가의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평균 농가자산은 356,963천원이며 「제1종 겸업농가」의 자산이 373,695천원으로 가장 많고, 부채 또한 「제1종 겸업농가」가 가장 높은 41,440천원으로 나타났다.

### 사. 주·부업별 지표

주업농가 중 전문농가의 소득이 41,067천원으로 자급농가(24,031천원)의 1.7배 수준이고, 전문농가의 자산은 430,763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급농가는(218,006천원) 전문농가의 50.6%에 지나지 않았다. 자산대비 부채 비율도 대규모 경지규모(3ha 이상)를 보유한 전문농가가 가장 높았다.

#### ※ 주·부업농가 기준

- 주업농가 : 경지규모가 30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수입이 농업이외수입보다 많은 농가
- 전문농가 : 경지규모가 3h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 2,000만원 이상
- 부업농가 : 경지규모가 30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이외수입이 농업수입보다 많은 농가
- 자급농가 : 경지가 없거나, 30a 미만의 농가 중에서 연간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가

<표 1-1-36>

2006 주·부업별 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주 업 농 가		부업농가	자급농가
		전문농가	일반농가		
농 가 구 성 비 <sup>1)</sup>	100.0	18.8	46.0	17.3	17.9
농 가 소 득	32,303	41,067	20,626	38,799	24,031
가 계 지 출	28,461	31,206	20,547	35,632	26,850
자 산	356,963	430,763	279,352	401,616	218,006
부 채 (부채 / 자산)	28,161 (7.9)	50,371 (11.7)	10,877 (3.9)	28,252 (7.0)	10,912 (5.0)

주 : 1) 2006년 농업기본통계 주·부업별 농가의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 아.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영농형태별 농가소득은 축산농가가 48,245천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전작 농가는 18,208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논벼농가의 소득은 25,753천원으로 평균 농가소득(32,303천원)의 79.7% 수준이다.

농가자산은 축산농가의 자산이 508,882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화훼농가(463,465천원), 과수농가(414,662천원) 순서였다.

부채/자산비율은 화훼농가가 28.7%로 다른 농가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논벼 농가는 5.6%로 가장 낮았다.

<표 1-1-37> 2006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전작	축산
농 가 구 성 비 <sup>1)</sup>	100.0	51.3	11.2	21.0	3.0	0.8	6.3	5.9
농 가 소 득	32,303	25,753	33,467	26,279	40,319	34,378	18,208	48,245
가 계 지 출	28,461	23,894	27,066	27,357	25,278	28,592	20,227	30,589
자 산	356,963	364,398	414,662	261,955	296,605	463,465	211,748	508,882
부 채 (부채 / 자산)	28,161 (7.9)	20,393 (5.6)	34,040 (8.2)	31,881 (12.2)	27,586 (9.3)	133,085 (28.7)	18,176 (8.6)	45,004 (8.8)

주 : 1) 2006년 농업기본통계 영농형태별 농가의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 자.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농가소득은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비교적 높으며 특히 7.0~10.0ha, 10ha이상 농가의 소득은 5천만원 이상인 반면, 1.5ha미만은 3천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농가자산 또한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토지자산이 많아 상대적으로

자산규모도 크며, 부채/자산비율도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8> 2006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구분	평균	0.5ha 미만	0.5~1.0	1.0~1.5	1.5~2.0	2.0~3.0	3.0~5.0	5.0~7.0	7.0~10.0	10.0ha 이상
농가구성비 <sup>1)</sup>	100.0	39.1	26.1	12.7	7.5	6.5	4.4	1.3	0.7	0.5
농가소득	32,303	25,591	25,869	29,984	32,013	34,865	43,235	37,969	51,738	67,712
가계지출	28,461	25,216	28,821	26,573	26,086	28,184	33,903	31,903	36,019	38,794
자산	356,963	232,754	292,083	314,132	417,750	419,550	460,990	401,705	562,779	749,387
부채 (부채/자산)	28,161 (7.9)	15,578 (6.7)	22,315 (7.6)	18,234 (5.8)	22,832 (5.5)	35,708 (8.5)	42,559 (9.2)	46,160 (11.5)	83,526 (14.8)	88,656 (11.8)

주 : 1) 2006년 농업기본통계 경지규모별 농가의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 차.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농가소득은 40~50대 연령층의 소득이 4천만원이 넘는 수준으로 가장 높고, 70세이상 연령층의 소득은 21,768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농가자산은 연령별 특징이 뚜렷이 나타나는데, 30대는 5억원대, 40~50대는 4억원대, 60세이상은 3억원대 순서이다.

경영주의 연령층이 낮을수록 부채가 많은 경향을 보여 30~40대는 6천만원 이상이나 70세이상은 9백만원 이하로 경영주 연령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표 1-1-39> 2006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30~39	40~49	50~59	60~69	70세이상
농가구성비 <sup>1)</sup>	100.0	2.8	14.0	24.2	33.0	26.0
농가소득	32,303	38,739	45,577	42,703	32,041	21,768
가계지출	28,461	37,067	36,035	36,370	27,413	21,932
자 산	356,963	510,071	430,414	406,943	343,426	313,155
부 채 (부채 / 자산)	28,161 (7.9)	62,000 (12.2)	62,001 (14.4)	51,326 (12.6)	21,479 (6.3)	8,964 (2.9)

주 : 1) 2006년 농업기본통계 경영주연령별 농가의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카. 지역별 주요지표**

제주와 경기지역 농가소득이 4천 2백만원 수준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강원과 전남지역이 2천 8백만원 정도로 다른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자산은 토지가격이 높은 경기지역이 8억원으로 월등히 높고, 부채는 제주(48,342천원), 경기(39,570천원)지역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40> 2006 지역별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전 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가구성비 <sup>1)</sup>	100.0	10.9	6.2	7.0	13.0	9.6	15.6	16.5	12.3	2.9
농가소득	32,303	42,018	27,640	30,302	36,897	30,032	27,974	29,422	29,680	42,049
가계지출	28,461	38,967	23,674	25,665	32,454	24,727	23,206	23,765	29,166	36,459
자 산	356,963	804,583	321,003	292,857	412,278	246,970	212,029	263,447	266,137	415,270
부 채 (부채 / 자산)	28,161 (7.9)	39,570 (4.9)	29,706 (9.3)	20,855 (7.1)	23,813 (5.8)	22,414 (9.1)	28,847 (13.6)	21,171 (8.0)	35,258 (13.2)	48,342 (11.6)

주 : 1) 2006년 농업기본통계 지역별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통계기획팀 서기관 임신탉)

### 3.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 가. 개 황

2006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3.9로 전년에 비해 2.0% 상승하였으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7.6으로 전년대비 2.2%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농가교역조건지수는 전년보다 0.1%p 악화된 89.3%으로 나타났다.

<표 1-1-41>

#### 농가교역조건지수 동향

(2000=100)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농가판매가격지수(①)	110.7	119.8	116.4	111.7	113.9
농가구입가격지수(②)	109.6	114.7	120.3	125.0	127.6
농가교역조건지수(①/②×100)	101.0	104.4	96.8	89.4	89.3

자료 : 농협경제연구소

#### 나.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2006년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3.9로 청과물(7.5%)은 전년에 비해 올랐으나 곡물(△0.3%), 축산물(△2.9%)은 내려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2.0% 상승하였다.

##### (1) 곡 물

2006년도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0.8로 미곡(△1.3%), 잡곡(△0.6%), 두류(△18.1%) 등이 내려 전년에 비해 0.3% 하락하였다.

품목별로는 일반미(△0.7%), 참쌀(△12.5%), 콩(△20.3%), 팥(△12.8%) 등이 전년보다 하락하였다.

##### (2) 청과물

2006년도 청과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4.3으로 전년에 비해 채소류(12.1%)가 오르고 과일류(△1.2%)가 내려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7.5% 상

증하였다.

채소류의 경우 양배추(13.3%), 시금치(39.7%), 상추(24.3%) 등 엽채류는 전년보다 9.9% 상승한 반면에 무( $\Delta$ 29.4%) 등 근채류는 24.8% 하락하였다. 고추(30.9%), 양파(12.1%), 파(2.6%) 등 조미채류는 전년보다 13.5% 올랐으며 오이(23.3%), 참외(3.7%), 수박(6.2%), 딸기(86.9%) 등 과채류는 21.5% 올랐다.

과실류의 경우 배( $\Delta$ 14.3%), 감귤( $\Delta$ 32.1%), 참다래( $\Delta$ 1.5%) 등이 내려 전체적으로는 전년보다 1.2% 하락하였다.

### (3) 축산물

2006년도 축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49.6으로 한우암소( $\Delta$ 0.1), 한우수소( $\Delta$ 8.1%), 돼지( $\Delta$ 2.1%), 닭( $\Delta$ 17.6%), 계란( $\Delta$ 24.0%) 등이 내려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9% 하락하였다.

### (4) 기타농산물

특용작물·화훼·부산물 등 기타 농산물의 2006년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6.9로서 전년대비 9.7% 상승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땅콩(2.6%), 엽연초(8.7%) 등 특용작물은 전년에 비해 3.6% 올랐고 국화(45.9%), 장미(41.9%) 등 화훼류는 36.4% 올랐다.

&lt;표 1-1-42&gt;

##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2000=100)

구 분	가중치	지 수			전년대비 등락률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b>총 지 수</b>	<b>1000.0</b>	<b>116.4</b>	<b>111.7</b>	<b>113.9</b>	<b>△2.8</b>	<b>△4.0</b>	<b>2.0</b>
<b>곡 물</b>	<b>388.0</b>	<b>102.3</b>	<b>91.1</b>	<b>90.8</b>	<b>1.6</b>	<b>△10.9</b>	<b>△0.3</b>
미 곡	349.6	99.3	89.6	88.4	0.4	△9.8	△1.3
맥 류	10.4	104.0	102.8	103.1	0.0	△1.2	0.3
잡 곡	4.2	108.6	107.5	106.9	0.3	△1.0	△0.6
두 류	8.4	124.3	105.7	86.6	11.8	△15.0	△18.1
서 류	15.4	154.5	103.7	136.0	18.0	△32.9	31.1
<b>청 과 물</b>	<b>328.2</b>	<b>114.3</b>	<b>106.3</b>	<b>114.3</b>	<b>△10.5</b>	<b>△7.0</b>	<b>7.5</b>
채 소	207.2	118.8	110.1	123.4	△19.1	△7.3	12.1
(엽 채 류)	36.8	114.8	104.4	114.7	△42.3	△9.1	9.9
(근 채 류)	12.6	185.5	196.3	147.7	△26.2	5.8	△24.8
(조 미 채)	69.2	120.3	98.8	112.1	△6.6	△17.9	13.5
(과 채 류)	88.6	109.7	109.0	132.4	△11.9	△0.6	21.5
과 실	121.0	106.7	99.9	98.7	12.4	△6.4	△1.2
축 산 물	225.2	144.0	154.1	149.6	2.1	7.0	△2.9
가 축	196.5	148.9	159.5	154.9	1.4	7.1	△2.9
유 란	28.7	110.5	117.1	113.7	8.1	6.0	△2.9
<b>기타농산물</b>	<b>58.6</b>	<b>115.4</b>	<b>115.7</b>	<b>126.9</b>	<b>△3.9</b>	<b>0.3</b>	<b>9.7</b>
특 용 작 물	45.3	117.7	120.8	125.2	△2.2	2.6	3.6
화 휘	12.7	106.4	96.0	130.9	△11.1	△9.8	36.4
부 산 물	0.6	134.2	147.1	170.2	16.0	9.6	15.7

#### 다.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2006년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7.6으로 가계용품(3.6%), 농업용품(0.2%), 농촌임료금(1.1%)이 올라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2.2% 상승하였다.

##### (1) 가계용품

2006년도 가계용품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7.1로 광열수도(7.6%), 보건의료(2.7%), 교육(6.2%) 등이 올라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3.6% 상승하였다.

##### (2) 농업용품

2006년도 농업용품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9.5로 전년보다 0.2% 상승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약( $\Delta$ 5.7%), 배합사료( $\Delta$ 1.5%)는 전년보다 하락하였으나 종자(3.8%), 비료(16.0%), 농기구(2.8%), 영농광열(9.1%) 등은 상승하였다.

#### 라. 농촌임료금

2006년도 농촌임료금 구입가격지수는 122.3으로 전년보다 1.1% 상승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업노동임금은 남자노임(1.8%)과 여자노임(0.3%) 모두 상승하여 전년보다 1.1% 올랐으며 쌀도정료는 1.5% 하락하였다. 농기계 임차료는 경운기(3.3%), 콤바인(2.4%) 등이 올라 전년보다 1.4% 상승하였다.

<표 1-1-43>

농기구입가격지수 동향

(2000=100)

구 분	가중치	지 수			전년대비 등락률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총 지 수	1000.0	120.3	125.0	127.6	4.9	3.9	2.2
가 계 용 품	559.3	117.9	122.9	127.1	4.2	4.2	3.6
농 업 용 품	359.4	124.6	129.2	129.5	6.6	3.7	0.2
종 자	19.6	97.1	97.4	101.1	△0.7	0.3	3.8
비 료	34.2	111.2	127.0	147.3	11.0	14.2	16.0
농 약	39.8	100.6	95.1	89.7	0.3	△5.5	△5.7
농 기 구	93.3	101.0	105.8	108.8	0.4	4.8	2.8
영 농 광 열	28.0	125.6	146.3	159.6	15.3	16.5	9.1
가 축	45.8	202.1	213.5	199.0	△3.3	5.6	△6.8
사 료	63.4	134.5	125.7	123.8	21.3	△6.5	△1.5
영 농 자 채	35.3	122.9	132.4	123.9	19.3	7.7	△6.4
<b>농 촌 임 료 금</b>	<b>81.3</b>	<b>118.2</b>	<b>121.0</b>	<b>122.3</b>	<b>2.4</b>	<b>2.4</b>	<b>1.1</b>
농업노동임금	36.8	119.2	123.3	124.7	0.8	3.4	1.1
기 타 임 금	2.2	122.9	125.8	127.8	△0.2	2.4	1.6
도 정 료	7.4	117.2	120.5	118.7	4.1	2.8	△1.5
농기계임차료	34.9	117.1	118.4	120.1	4.2	1.1	1.4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원 김태성)

#### 4. 농림업 부가가치

2006년 농림어업 총부가가치는 2000년 가격 기준으로 24조 7,850억원 수준이며, 실질로는 전년대비 2.6% 감소하였다. 이중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3.7% 감소한 반면 어업부문은 5.8% 증가하였다.

농업 부가가치는 재배업과 축산업의 생산이 모두 부진하여 전년대비 3.7% 감소하였다. 이는 벼, 채소, 과실류 등 대부분의 작물의 생산이 감소하였으며 축산업도 낙농, 양돈 등의 생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어업 부가가치는 해면어업과 해면양식 확대로 전년대비 5.8% 증가하였다.

<표 1-1-44> 농림어업 부가가치 및 증감율

(단위 : 10억원, %, 2000년 기준가격)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sup>p</sup>
농 립 어 업	농 립 어 업	25,309	24,422	23,138	25,259	25,447	24,785
	농 업	21,483	20,763	19,543	21,634	21,751	20,946
실 질 증감율	농 립 어 업	1.1	△3.5	△5.3	9.2	0.7	△2.6
	농 업	1.1	△3.4	△5.9	10.7	0.5	△3.7
	재 배 업	1.8	△5.8	△6.2	10.8	0.3	△4.1
	축 산 업	△4.0	15.6	△4.1	10.3	1.9	△1.2
	임 업	△0.8	△1.8	△6.5	2.6	3.2	1.9
	어 업	0.4	△7.6	0.3	△2.6	0.2	5.8

자료 : 한국은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권오복, 연구원 류상모)

#### 5. 농업생산성

농가에서 영농작업에 투입한 주요 생산요소를 보면, 2006년 호당 노동시간은 1,409시간으로 전년대비 5.2% 감소하였으며, 농업자본액은 51,184천원으로 전년보다 2.9% 증가하였다. 또한 호당 경지면적은 1.45ha로 전년대비 1.4% 증가하였다.

<표 1-1-45>

농가호당 생산요소 투입량

(단위 : 시간, 천원, ha)

구 분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2005대비	
							증감	증감률(%)
영 농 시 간	1,376	1,253	1,516	1,530	1,487	1,409	△78	△5.2
농업자본액	21,323	31,425	45,019	48,118	49,721	51,184	1,463	2.9
호당경지면적	1.32	1.37	1.46	1.48	1.43	1.45	0.02	1.4

\* 호당경지면적 = 경지면적 / 농가수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06년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13,384원으로 전년 12,297원보다 8.8% 증가하였고, 자본생산성은 0.36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노동시간을 나타내는 노동집약도는 87시간으로 전년보다 6.5% 감소하였으나,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자본액을 나타내는 자본집약도는 3,186천원으로 1.5% 증가하였다.

<표 1-1-46>

농업생산성 지표

구 분	단위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2005대비	
								증감	증감률(%)
노동생산성 <sup>1)</sup>	원/시간	9,387	11,778	11,114	12,210	12,297	13,384	1,087	8.8
토지생산성 <sup>2)</sup>	천원/10a	954	1,051	1,026	1,138	1,141	1,161	20	1.8
자본생산성 <sup>3)</sup>	원/원	0.61	0.47	0.37	0.38	0.36	0.36	0	0
노동집약도 <sup>4)</sup>	시간/10a	102	89	92	93	93	87	△6	△6.5
자본집약도 <sup>5)</sup>	천원/10a	1,575	2,237	2,763	2,963	3,138	3,186	48	1.5

주 1) 노동생산성(농업부가가치/자영농업노동시간) : 투하된 노동력과 그 결과로써 얻은 생산량의 비율

2) 토지생산성(농업부가가치/경지면적) : 토지면적 단위당 생산량

3) 자본생산성(농업부가가치/농업자본액) : 투입된 자본에 대한 생산량

4) 노동집약도(자영농업노동시간/경지면적) : 일정 경지면적에 대해 투하된 노동량

5) 자본집약도(농업자본액/경지면적) : 일정 경지면적에 대해 투입된 농업자본액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통계기획팀 서기관 임신탉)



## 제 2 장 국내 농산물 수급동향

### 제1절 국내 주요농산물 수급동향

#### 1. 식량작물

2006년도의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2005년도의 1,234천ha보다 54천ha가 줄어든 1,180천ha 수준이며, 식량작물중 벼재배면적은 전년의 980천ha보다 25천ha가 줄어든 955천ha이었다. 이는 쌀 수급균형 회복을 위한 정부의 벼 적정생산 유도정책 실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경지이용면적중 식량작물 재배비율은 전년도 64.1%에서 63.3%로 소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벼와 맥류의 재배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맥류의 경우는 재고량의 증가추세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적정 재배면적 유도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3천ha 감소하였다.

전체곡물 생산량은 매년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6 양곡년도에는 총 5,434천톤이 생산되어 전년도 5,720천톤에 비해 286천톤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국내곡물생산량의 9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쌀의 생산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소비량은 2005년도 19,779천톤보다 157천톤이 줄어든 19,622천톤이며, 이는 가공용 옥수수 감소 및 국내산 쌀의 대북지원 감소(309천톤→181천톤)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쌀의 경우 국민식생활 변화 등에 따라 식용소비는 2005년보다 9천톤 수준 감소한 반면, 주정용 물량은 2005년도 보다 39천톤이 늘어난 171천톤을 공급하였다. 이와 같은 수입쌀 재고감축 노력으로 2006양곡년도말 국가전체 쌀 재고량은 837천톤 수준이며, 이는 FAO에서 권장하는 적정 재고량 수준이다.

<표 1-2-1> **주요작물의 경지이용면적 추이**

(단위 : 천ha, %)

연도	경지 이용 면적	식 량 작 물					채 소		과 실		기 타	
		소계	구성비	미곡	맥류	기타 품목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990	2,409	1,669	69.3	1,244	160	265	277	11.5	132	5.5	331	13.7
1995	2,197	1,346	61.3	1,056	90	200	322	14.7	172	7.8	357	16.2
1996	2,142	1,340	62.6	1,050	95	195	311	14.5	171	8.0	320	14.9
1997	2,097	1,314	62.7	1,052	70	192	285	13.6	174	8.3	324	15.4
1998	2,118	1,331	62.8	1,059	83	189	278	13.1	173	8.2	336	15.9
1999	2,116	1,325	62.6	1,066	77	182	289	13.7	171	8.1	331	15.6
2000	2,098	1,316	62.7	1,072	68	176	296	14.1	169	8.1	317	15.1
2003	1,936	1,234	63.7	1,016	65	153	245	12.3	159	8.2	298	15.4
2004	1,941	1,231	63.4	1,001	63	167	255	13.1	153	7.9	302	15.6
2005	1,921	1,232	64.1	980	61	191	240	12.5	150	7.8	300	15.6
2006	1,860	1,178	63.3	955	58	165	234	12.6	147	7.9	301	16.2

주 : 기타는 수원지, 기타작물임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

<표 1-2-2> **연도별 전체양곡 수급상황**

(단위 : 천톤)

양곡년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생 산	7,048	7,102	7,013	5,816	5,931	5,520	5,041	5,720	5,434
수 입	5,051	5,051	10,022	14,258	14,624	14,418	13,385	13,860	14,012
소 비	12,596	14,667	16,282	19,974	19,961	20,278	18,880	19,779	19,622
- 식량용	10,124	9,921	9,981	10,601	10,014	10,762	10,148	10,892	10,311
- 사료용	2,472	4,746	6,301	9,373	9,285	9,516	8,732	8,887	9,311
연 말 재 고	2,179	2,280	3,657	3,119	2,625	2,837	2,706	2,507	2,331
자급률(%)	56.0	48.4	43.1	29.1	29.7	27.8	26.8	29.4	28.0
(사료용 제외시)	(69.6)	(71.6)	(70.3)	(55.7)	(55.6)	(53.3)	(50.2)	(54.0)	(53.6)
1인당 연간 소비량(kg)	195.1	181.7	167.0	160.5	153.3	138.0	138.5	137.5	133.8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국

\* 곡물자급도는 생산/수요, 식량자급도는 생산/(소비-사료) 비율임

2006년도 전체 곡물자급도는 28.0%로 2005년보다 1.4% 감소되고 사료용을 제외하면 전년도 54.0%보다 0.4%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도 국민 1인당 양곡소비량은 2005년의 137.5kg에서 133.8kg으로 3.7kg이 줄어들었다.

곡종별로 보면 쌀이 전년도 80.7kg에서 1.9kg가 줄어든 78.8kg으로 나타났다으며, 보리쌀은 1.2kg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며, 그 외 품목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3>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추이

(단위 : kg)

양곡년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 류	기 타
1970	219.4	136.4	37.3	26.1	1.1	5.3	10.2	3.0
1980	195.1	132.4	13.8	29.4	3.1	8.0	6.3	2.1
1985	181.7	128.1	4.6	32.1	3.1	9.3	3.1	1.4
1990	167.0	119.6	1.6	29.8	2.7	8.3	3.3	1.7
1995	160.5	106.5	1.5	33.9	3.3	9.0	3.0	3.3
1997	157.9	102.4	1.7	33.7	3.7	9.3	3.6	3.5
1998	156.4	99.2	1.5	34.6	4.8	9.7	3.2	3.4
1999	156.9	96.9	1.5	35.8	5.8	9.9	3.8	3.2
2000	153.3	93.6	1.6	35.9	5.9	8.5	4.3	3.5
2001	145.5	88.9	1.7	34.4	6.3	8.2	2.5	3.5
2002	144.0	87.0	1.5	34.6	5.7	8.4	3.4	3.4
2003	138.0	83.2	1.0	32.7	6.2	8.0	3.2	3.7
2004	138.5	82.0	1.1	34.1	5.6	8.5	3.1	4.1
2005	137.5	80.7	1.2	33.2	4.9	9.3	4.2	4.0
2006	133.8	78.8	1.2	32.4	4.6	9.1	3.9	3.8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국

(식량정책과 사무관 박선우)

## 2. 원예·특용작물

### 가. 채소류

2006년 채소류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3% 감소한 292.3천ha이었고, 작황 호조로 생산량은 2005년보다 4.0% 증가한 9,994천톤이었다.

봄무·배추 재배면적은 38.9천ha로 전년에 비해 8.4%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도 지난해에 비해 13.3% 증가한 1,803천톤이었다. 고랭지무·배추는 재배면적이 9.5천ha로 전년대비 10.7% 증가하여 생산량도 353천톤으로 2005년보다 11.0%가 증가하였다. 가을무·배추의 재배면적은 2005년 대비 21.5% 증가한 24.1천ha였고, 생산량도 23.3%나 증가한 2,089천톤 이었다.

고추는 재배면적이 53.1천ha로 전년보다 13.4% 감소하였으며, 작황도 부진하여 생산량은 2005년 161천톤 보다 27.6%가 감소한 117천톤이 생산되었다. 마늘은 재배면적이 28.6천ha로 전년보다 10.0% 감소하여 생산량은 전년보다 11.6% 감소한 331천톤이 생산되었다. 양파는 2005년 대비 재배면적이 8.5% 감소한 15.3천ha가 재배되어, 생산량은 13.1% 감소된 890천톤이 생산되었다.

<표 1-2-4>

### 채소류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 분	1990	1995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요	계	8,697	10,670	11,502	10,054	10,520	10,971	10,730
	내 수	8,677	10,611	11,461	10,004	10,484	10,915	10,658
	수 출	20	59	41	50	36	56	72
공급	계	8,697	10,670	11,502	10,054	10,520	10,971	10,730
	생 산	8,677	10,586	11,282	9,796	10,068	10,468	9,994
	수 입	20	84	220	258	452	503	736
1인당 소비량(kg)	132.6	160.6	165.9	144.6	152.6	160.8	144.9	-

주 : 1인당소비량은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순식 기준)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행정사무관 조용범)

**나. 과실류**

2006년 과수재배면적은 총 152.2천ha로 전년에 비해 2.5천ha가 감소하였다. 2005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는 사과가 2.6천ha, 기타 품목이 1.7천ha가 증가하였으나, 그 외 과종은 배 1.1천ha, 포도 2.9천ha, 복숭아 1.6천ha 등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실 생산량은 2,504.1천톤으로 전년보다 89천톤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과를 제외한 주요 과종의 재배면적 감소, 남부지방 과수의 2005년 동절기 동해 피해 등으로 인한 생육불량에 기인한다.

과실가격은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과실 공급량의 감소, 과실 비대기 가뭄으로 인한 당도향상 등으로 소비가 원활하여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을 보였다.

<표 1-2-5>

**과실류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 분	1990	1995	2000	2001	2003	2004	2005	2006	
수요	내수	1,790.4	2,472.7	2,746.7	2,802.4	2,676.4	2,829.6	3,028.5	3,030.1
	수출	13.0	10.9	20.2	25.0	31.4	28.2	36.1	24.8
공급	생산	1,766.2	2,300.1	2,428.7	2,487.7	2,275.3	2,411.3	2,593.0	2,504.1
	수입	37.2	183.5	338.2	339.7	432.5	446.5	471.6	550.8
1인당 소비량(kg)	41.8	54.8	58.4	59.2	55.8	58.8	62.7	62.2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 농업사무관 김기주)

**다. 화훼류**

화훼류의 2006년도 재배면적은 7,688ha, 재배농가수는 12,440호로 2005년 대비 각각 3.3%씩 감소되었으며 이는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고유가, 환율하락 등의 원인으로 보인다.

생산액은 2005년도 대비 6.9%가 감소한 9,411억원으로 조사되었으며 1인당 연간 소비액은 약 20천원으로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

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화훼류의 무역수지면에서는 지난 1999년 이후 2005년까지 흑자가 확대되었으나 유가상승, 환율하락, 경쟁심화 등의 원인으로 2006년도 수출액은 40,414천\$로 전년도보다 22% 감소한 반면, 수입금액은 35,819천\$로 증가하여 흑자금액은 크게 감소한 4,595천\$로 나타났다.

주 수출품목은 절화류인 장미, 국화, 백합과 난류, 선인장으로, 주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난류는 일반적으로 연초에 수출되나 2006년의 경우 춘절이 빨라 수요물량이 2005년도 말에 수출됨에 따라 2005년 대비 2006년도 수출액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유가상승, 환율하락, 인건비 상승, 경쟁심화 등으로 절화류, 선인장 수출도 전반적으로 조금씩 하락하였다.

<표 1-2-6>

**화훼산업 현황**

구 분	1990	1995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재배농가(호)	8,945	12,509	12,994	13,080	13,466	13,575	13,596	13,159	12,859	12,440
재배면적(ha)	3,503	5,156	5,824	5,891	6,305	6,321	6,860	7,522	7,952	7,688
생산액(억원)	2,393	5,090	5,965	6,649	6,966	7,893	8,092	9,218	10,105	9,411
수출액(천\$)	1,443	6,363	19,751	28,888	31,849	32,121	45,276	48,527	52,142	40,414
수입액(천\$)	5,907	26,738	17,255	19,472	20,689	22,862	22,358	23,366	28,845	35,819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 기술서기관 김대경)

**라. 특용작물**

참깨 생산량은 199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산 생산량은 전년생산 대비 34% 감소한 15.5천톤, 2006년 자급률은 24%수준이다.

\* 생산량 : (1997) 33천톤 → (2000) 32 → (2005) 23.5 → (2006) 15.5

참깨 수입은 연간 약 70~80천톤 내외 수준이며 수입물량의 대부분 시장 접근물량 도입사업(추천대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을 통해 수입되어 국

내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땅콩생산량은 1998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산 생산량은 2005년산 대비 4% 감소한 6.4천톤이며, 2006년 자급률은 17%수준이다.

\* 생산량 : (1998) 14천톤 → (2000) 9 → (2005) 6.6 → (2006) 6.4

<표 1-2-7>

**특용작물 수급동향**

(단위 : 천톤)

구 분		참 개						땅 콩					
		1990	1995	2000	2003	2005	2006	1990	1995	2000	2003	2005	2006
수 요	계	57.8	88.9	101.6	112.2	100.6	107.6	44.2	29.7	42.9	44.3	40.8	39.1
	당년소비	56.8	86.3	94.6	104.6	90.7	98.0	40.1	25.1	41.0	43.8	39.9	38.2
	수 출	0.4	-	-	-	-	-	-	2.3	0.4	-	-	-
	차년이월	0.6	2.6	7.0	7.6	9.9	9.6	4.1	2.3	1.5	0.5	0.9	0.9
공 급	계	57.8	88.9	101.6	112.2	100.6	107.6	44.2	29.7	42.9	44.3	40.8	39.1
	전년이월	4.7	19.0	7.5	7.2	13.1	9.9	8.1	3.3	2.7	0.0	1.1	0.9
	생 산	38.1	27.9	24.1	23.8	20.9	23.5	28.7	16.8	12.4	11.2	8.3	6.6
	수 입	15.0	42.0	70.0	81.2	66.6	74.2	7.4	9.6	27.8	33.1	31.4	31.6
자급률(%)		67	26	30	23	14	23	72	30	23	26	19	21

\* 생산량은 전년도 실적 적용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생산은 전년도 생산량임)

(채소특작과 행정사무관 서호석)

**마. 인삼류**

고려인삼은 우리민족 고유의 특산품으로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수출 상품이며, 우리나라의 인삼가공기술은 세계 선두로서 해외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인삼의 재배면적은 1990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였으나, 1996년 홍삼전매

제 폐지 이후 재배면적이 지속, 증가추세이다. 2006년 인삼 전체 재배면적은 2005년에 비해 15.9% 증가한 16,405ha 이다.

인삼재배 농가수는 2006년 15,856호로 전체농가의 1.3%에 불과하나, 2006년도 인삼수출액은 8,906만불로서 전체 농축산물 수출의 2.6%를 차지하여, 인삼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전략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표 1-2-8>

### 인삼 생산동향

구 분	1990	1995	2000	2001	2003	2004	2005	2006
면 적	12,184ha	9,375	12,445	13,018	12,016	13,081	14,153	16,405
생 산 량	13,889톤	11,971	13,664	13,215	15,172	14,668	14,561	19,850
농 가 수	36,404호	23,172	23,011	19,310	18,106	13,797	15,793	15,856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행정사무관 이종광)

## 3. 축산물과 사료작물

### 가. 축산물

#### (1) 쇠고기

쇠고기 소비량은 2003년 말에 발생한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여파와 국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2004년과 2005년에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6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국내 소비량은 전년보다 4.1% 증가한 330천톤이었다.

소비량 중 수입산은 172천톤으로 전년보다 4.9% 증가하였고, 국내산 또한 158천톤으로 3.9% 증가하였다. 한편, 연간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6.8kg으로 전년보다 1.5% 증가하였다.



<표 1-2-9>

쇠고기 수급동향

구 분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 총 소 비 량	346	402	384	403	390	328	317	330
- 국 내 산	260	212	164	147	142	145	152	158
- 수 입 산	85	190	220	255	248	183	164	172
◦ 1인당 소비량(kg)	7.4	8.5	8.1	8.5	8.1	6.8	6.7	6.8

자료 : 농림부 축산국

산지 소값은 2003년 12월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2004년 5월 350만원(큰수소 기준) 까지 하락하였으나 쇠고기 소비 촉진 홍보 등 산지 소값 안정대책의 추진으로 소비가 회복되면서 2004년 6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5년 10월에는 536만원 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한미 FTA협상개시 발표에 따른 여파로 2006년 5월에는 394만원까지 하락하였다가 실제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 12월 455만원까지 상승하였다.

소 사육두수는 산지 소값이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2003년 3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03년에는 1,480천두, 2004년에는 1,666천두, 2005년에는 1,819천두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6년 사육두수는 2,020천두로 전년보다 11.1% 증가하였다.

한편, 한육우 사육가구수는 2005년 12월 192천호에서 2006년 12월 190천호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는 2005년 12월 9.5두에서 2006년 12월 10.6두로 규모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사육두수 증가는 가임암소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돼지고기

돼지고기의 2006년 총 소비량은 2005년 84만톤보다 4.3% 증가한 87만톤이며, 1인당 소비량은 2005년 17.8kg에서 2006년 18.1kg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한편, 돼지사육두수는 PMWS 등 소모성질환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2003

년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이후 고돈가 형성 지속으로 2005년 12월 8,962천두에서 2006년 12월에는 9,382천두로 4.7% 증가하였고, 2006년 12월 모돈수는 1,012천두로 2005년 12월 966천두보다 4.8% 증가하였다.

사육가구수는 2005년 12월 12.3천가구에서 2006년 12월 11.3천 가구로 8.1% 감소하였으나,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가 2005년 12월 729두에서 2006년 12월 830두로 증가하여 규모화 및 전업화가 진전되고 있다.

산지 돼지가격은 2005년 연간 평균가격이 253천원/100kg이었으나 2006년은 수입량 증가 등으로 248천원/100kg으로 다소 하락하였다.

### (3) 닭고기

2006년 닭고기 총 소비량은 41.7만톤으로 2005년에 비해 16.8% 증가하였고, 1인당 소비량은 8.6kg으로 전년도 7.5kg보다 14.7% 증가하였다. 닭고기 산지가격은 전년도보다 17.0% 상승하여 연평균 1,195원/kg이었으며, 2006년 12월 기준 전체 사육수수는 전년도보다 8.7% 증가한 119백만수였다.

전체 사육농가의 수는 2006년 12월에 3.6천호였으며, 호당 사육수수는 33,478수였다. 30,000수 이상 전업가구 수는 2005년보다 6.0% 증가한 1,530호였다.

(※ 2006년부터 3천수 이상 사육가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농가수 비교는 어려움)

### (4) 계란

계란의 2006년 총 소비량은 541천톤으로 2005년보다 4.4% 증가하였고, 1인당 소비량은 1.8% 증가한 11.2kg이었으며 산지 계란가격은 전년도보다 23.4% 하락한 807원/10개(특란기준)이었다.

### (5) 우유

2006년 원유 총 생산량은 2,176천톤으로 2005년 2,229천톤 대비 2.4%(53천톤) 감소하였다.

국내 유제품 소비량은 3,122천톤(치즈, 분유 등의 수입 유제품 포함)으로 2005년 3,079천톤 보다 1.4% 증가하였으며, 시유 소비량은 2005년 1,691천톤 보다 0.4% 감소한 1,684천톤이었다.

1인당 연간 유제품 소비량은 63.6kg으로 2005년 62.7kg보다 1.4% 증가하였고, 음용유 소비량은 34.9kg으로 2005년 35.0kg보다 0.3% 감소되었다. 이는 2004년 9월 이후 원유 기본가격 인상으로 인해 우유 소비가 위축된 반면 녹차·두유 등 대체음료의 소비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2006년도 국산원유(2,176천톤)중 유제품 가공에 직접 투입한량은 1,908천톤(백색시유 1,363, 가공시유 193, 기타 유제품 352)으로서 전년도 투입량(1,906천톤)과 거의 유사하고, 잉여량(분유 가공량)은 전년(323천톤)에 비해 17% 감소한 268천톤 수준이었다.

분유 재고량은 2005년도에 비해 53% 감소한 4.4천톤으로서 연초 분유재고 과다로 국산 유제품 거래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국산 분유소비가 늘었고 탈지분유용 용도별 가격을 국제가격 수준과 연동시켜 유업체의 분유수입 발주를 억제시킨 효과로 보인다.

우유 자급률은 국내 생산이 감소한 반면 수입량이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2.8%p 감소한 70.8%를 기록하였으며, 원유 생산비의 경우 배합사료 가격인상 등으로 전년(468원/kg)보다 2.4% 높아진 479원/kg로 조사되었다.

젖소 사육두수는 2006년 12월 464천두로 지난해 479천두 보다 3.1% 감소하였으며, 젖소 사육 농가수는 2005년 12월 8.9천호에서 2006년 12월 8.3천호로 6.7% 감소되었다.

낙농업의 전업화로 인해 가구당 사육두수는 2006년 12월 56.2두로 2005년 12월 53.7두 보다 4.7% 증가하였다.

(축산경영과 농업사무관 박홍식, 행정사무관 이성주, 농업사무관 조정래, 행정사무관 강민철)

#### 나. 사료작물

2006년에 가축용 사료의 총 수급량은 21,271천톤으로 전년(20,283천톤)보다 4.9%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농후사료(농가자급사료 포함)가 17,049천

톤, 조사료가 4,222천톤을 차지하였다. 농후사료 중 배합사료의 생산은 15,639천톤으로 전년보다 2.3% 증가하였다.

<표 1-2-10> 사료 수급 추이

(단위 : 천톤, %)

구 분	1990	1995	2000	2004	2005 (A)	2006 (B)	증감율 (B/A)
<b>합 계</b>	17,116	23,302	19,289	19,871	20,283	21,271	4.9
농 후 사 료	11,173	15,700	15,897	15,787	16,152	17,049	5.6
- 배 합 사 료	10,529	14,856	15,105	14,941	15,278	15,639	2.3
- 농가자급사료	644	844	792	846	874	1,356	55.1
조 사 료	6,003	7,763	3,392	4,084	4,131	4,222	2.2
- 사료작물 및 목초류	2,832	2,498	992	1,153	1,298	1,326	2.2
- 산야초, 볏짚등	3,171	5,265	2,400	2,931	2,833	2,896	2.2

주 : 조사료는 건물(乾物) 상태 기준임.

자료 : 농림부 축산국

축종별로는 한육우용 8.5%, 양계용 1.5%, 양돈용 0.1%씩 증가한 반면, 젖소용은 3.0% 감소하였다. 지난해에 비하여 한육우, 닭 사육두수가 증가하여 젖소의 사육두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전체 배합사료 생산량이 전년대비 1.5% 증가되었다. 특히, 말·오리 사육마리수의 증가로 기타 가축용 배합사료 생산량이 29.2% 증가하였다.

한편, 2004년도 7월 이후 옥수수 가격 및 환율 하락 등으로 2006년 6월까지의 배합사료 가격이 인하되었으나, 11월부터 옥수수 등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다소 인상되었다. 옥수수 등 사료용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축산업은 해외곡물가격, 해상운임 및 환율변동에 따라 국내 사료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료곡물의 국제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인상 압력을 흡수할 수 있는 국내기반이 취약하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표 1-2-11>

**배합사료 용도별 생산량**

(단위 : 천톤, %)

구 분	1990	1995	2000	2003	2004	2005 (A)	2006 (B)	증감율 (B/A)
합 계	10,529	14,856	15,105	15,436	14,941	15,278	15,693	1.5
양 계 용	3,274	3,766	3,867	3,907	3,836	4,203	4,267	1.5
양 돈 용	3,551	4,725	5,215	5,663	5,419	5,170	5,175	0.1
젖 소 용	1,790	2,905	1,891	1,774	1,632	1,587	1,539	△3.0
한육우용	1,667	3,681	3,340	2,926	3,045	3,293	3,574	8.5
기 타	247	589	792	1,179	1,009	881	1,138	29.2

자료 : 농림부 축산국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내 사료자원의 개발을 통해 사료자급도를 높이고 건전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초지개발과 사료작물의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신규로 32ha의 초지를 조성한 바 있다.

<표 1-2-12>

**초지조성 실적**

(단위 : ha, 천톤, %)

구 분	1995	1999	2000	2003	2004	2005 (A)	2006 (B)	증감율 (B/A)
신규조성면적	413	430	253	58	67	23	32	39.1
관 리 면 적	66,301	53,783	51,870	46,546	45,084	43,581	42,114	△1.1
목 초 생산량	462	371	364	343	315	308	294	△4.5

자료 : 농림부 축산국

2006년말 현재 초지 총 관리면적은 42천ha으로 294천톤(말린 무게 기준)의 목초를 생산하였고 전년보다 1.1% 감소하였다. 이는 환경문제로 인한 규제강화와 지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신규 초지조성은 어려운 반면, 레저·관광산업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리제외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고 있다.

(축산경영과 농업사무관 권동태, 축산자원순환과 농업사무관 전익성)

## 제2절 식품 수급동향

### 1. 식품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 가. 식품비 지출구조의 변화

1982~2006년간 연평균 식료품비 지출액의 증가율은 7.4%로 같은 기간 소비지출액 증가율 9.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표 1-2-13>. 식품류별로는 외식비(17.0%), 과일류(7.4%), 빵 및 과자류(7.2%), 차·음료주류(7.1%)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곡류 및 식빵(0.9%), 조미식품(3.2%)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식료품비 지출의 식품별 비중을 보면 외식비가

<표 1-2-13> 식품류별 월평균 소비지출액 추이(도시가구평균)

(단위 : 천원, %)

연도	소비 지출	식료품	곡류, 식빵	육류	낙농품	어패류	채소, 해조류	과실	조미 식품	빵, 과자류	차, 음료, 주류	기타 식품	외식
1982	248.9	101.6 (100)	35.1 (34.5)	11.5 (11.3)	4.5 (4.4)	8.0 (7.9)	12.2 (12.0)	6.5 (6.4)	8.3 (8.2)	4.2 (4.1)	4.5 (4.4)	0.3 (0.3)	6.0 (5.9)
1985	317.0	118.8 (100)	34.6 (29.1)	14.8 (12.5)	6.0 (5.1)	10.2 (8.6)	15.2 (12.8)	7.4 (6.2)	10.5 (8.8)	5.2 (4.4)	5.2 (4.4)	0.2 (0.2)	8.8 (7.4)
1990	685.6	220.8 (100)	44.8 (20.3)	26.1 (11.8)	12.0 (5.4)	21.0 (9.5)	24.8 (11.2)	15.6 (7.1)	11.7 (5.3)	8.2 (3.7)	8.2 (3.7)	2.6 (1.2)	44.8 (20.3)
1995	1,265.9	367.1 (100)	46.7 (12.7)	42.2 (11.5)	17.1 (4.7)	33.3 (9.1)	35.6 (9.7)	28.5 (7.8)	15.7 (4.3)	13.5 (3.7)	13.7 (3.7)	5.0 (1.4)	115.7 (31.5)
2000	1,632.3	447.0 (100)	56.7 (12.7)	45.0 (10.1)	19.3 (4.3)	32.1 (7.2)	35.6 (8.0)	27.3 (6.1)	15.1 (3.4)	17.3 (3.9)	16.4 (3.7)	6.2 (1.4)	176.0 (39.4)
2002	1,834.8	481.0 (100)	53.3 (11.1)	46.8 (9.7)	18.9 (3.9)	34.8 (7.2)	36.7 (7.6)	28.5 (5.9)	13.9 (2.9)	18.6 (3.9)	18.5 (3.9)	9.5 (2.0)	201.5 (41.9)
2003	1,922.9	509.6 (100)	44.5 (8.7)	40.9 (8.0)	19.9 (3.9)	31.8 (6.2)	40.1 (7.9)	28.2 (5.5)	14.2 (2.8)	22.3 (4.4)	21.3 (4.2)	13.4 (2.6)	233.2 (45.8)
2004	2,018.2	544.8 (100)	48.3 (8.9)	39.7 (7.3)	21.1 (3.9)	32.7 (6.0)	40.7 (7.5)	32.9 (6.0)	18.2 (3.3)	23.2 (4.3)	23.0 (4.2)	11.2 (2.0)	253.9 (46.6)
2005	2,091.9	551.6 (100)	45.8 (8.3)	42.4 (7.7)	22.7 (4.1)	32.5 (5.9)	40.5 (7.3)	34.1 (6.2)	17.7 (3.2)	23.1 (4.2)	22.5 (4.1)	14.3 (2.6)	255.9 (46.4)
2006	2,173.9	558.3 (100)	42.9 (7.7)	43.8 (7.8)	22.0 (3.9)	33.7 (6.0)	41.9 (7.5)	35.7 (6.4)	17.5 (3.1)	22.5 (4.0)	23.1 (4.1)	16.9 (3.0)	258.3 (46.3)
1982-2006	9.5	7.4	0.9	5.8	6.8	6.2	5.3	7.4	3.2	7.2	7.1	18.3	17.0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

1982년 5.9%에서 2006년 46.3%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곡류·식빵의 비중은 같은 기간 34.5%에서 7.7%로 감소하였다. 그밖에 2006년 식품류별 비중은 육류 7.8%, 어패류 6.0%, 채소·해조류 7.5%, 과실류 6.4%이다.

#### 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액 비교

2006년의 경우 소득계층별로 소비지출액을 비교하면,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출액은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식품류에 따라 증가정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2-14>. 중간소득계층(4~7분위) 근로자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정도가 큰 품목은 외식, 과실류, 육류, 어패류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정도가 작은 품목은 곡물, 채소·해조류, 조미식품 등이다.

<표 1-2-14>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액 비교(2006년도 도시가구 평균)

(단위 : 천원)

구 분	1~3분위		4~7분위		8~10분위	
소 비 지 출	1,377	(63.8)	2,095	(100)	3,181	(151.8)
식 료 품	393	(69.6)	565	(100)	735	(130.1)
곡류 및 식빵	36	(87.8)	41	(100)	47	(114.6)
육 류	30	(73.2)	41	(100)	54	(131.7)
낙 농 품	17	(73.9)	23	(100)	27	(117.4)
어 개 류	24	(77.4)	31	(100)	41	(132.3)
채소·해조류	34	(87.2)	39	(100)	47	(120.5)
과 실 류	23	(67.6)	34	(100)	48	(141.2)
조 미 식 품	14	(87.5)	16	(100)	19	(118.8)
빵 및 과자류	17	(68.0)	25	(100)	29	(116.0)
차·음료 및 주류	18	(75.0)	24	(100)	29	(120.8)
외 식	168	(60.9)	276	(100)	372	(134.8)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 다. 식품영양소 수요구조의 변화

식품 소비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식품영양소의 수요구조도 변화한다. 영양소별로 1인 1일당 에너지와 당질은 대체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단백질, 지방, 비타민C 등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섭취량은 에너지 2,016kcal, 단백질 75.8g, 지방 46.0g, 철분 13.6mg, 비타민C 98.2mg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2-15>.

<표 1-2-15> 1인 1일당(전국평균) 식품영양소별 섭취량 추이

	에너지 kcal	단백질 g	지방 g	칼슘 mg	철분 mg	비타민A (I.U./R.E)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나이아신 mg	비타민C mg
1980	2,052	67.2	21.8	598	13.5	1,688	1.13	1.08	19.1	87.9
1985	1,936	74.5	29.5	569	15.6	1,846	1.34	1.21	25.7	64.7
1990	1,868	78.9	28.9	517	22.7	1,662	1.15	1.27	21.6	81.2
1991	1,930	73.0	35.6	518	23.0	550	1.27	1.24	17.5	92.2
1992	1,875	74.2	34.5	538	22.9	535	1.22	1.22	17.4	102.5
1993	1,848	72.6	36.9	523	22.4	440	1.37	1.11	16.5	92.6
1994	1,770	71.9	35.9	556	22.0	411	1.12	1.19	16.6	93.5
1995	1,839	73.3	38.5	531	21.9	443	1.16	1.20	16.7	98.3
1998	1,985	74.2	41.5	511	12.5	625	1.35	1.09	15.7	123.1
2001	1,976	71.6	41.6	497	12.2	624	1.27	1.13	16.9	132.6
2005	2,016	75.8	46.0	553	13.6	782	1.30	1.20	17.1	98.2

주 1) 1991년부터 비타민A의 단위는 RE

2) 1998년도에는 식품성분표 제5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1996)을 이용함에 따라 쌀의 철 함량이 3.7mg/100g에서 0.5mg/100g으로 하향조정된 수치를 적용하여 환산함.

3) 1995년 이전에는 가구별 칭량법, 1998년도는 개인별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실시된 결과임.

4) 2001년도에는 식품성분표 제6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1)을 이용함.

5) 2005년도에는 식품성분표 제6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1)과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한국영양학회, 2005)을 이용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6년



평균 영양소 섭취량을 2005년 11월 개정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과 비교한 결과, 대부분 해당 영양소의 권장섭취수준과 유사했으나 칼슘섭취량은 권장량의 76.3%로 매우 낮았다. 철분의 경우 1995년까지 권장량을 초과하다가 1998년 미달수준을 보이게 된 것은 1998년 식품성분표 상에 쌀의 철분 함량이 하향 조정된 데 기인한다. 단백질(169.0%), 티아민(122.3%), 나이아신(121.5%)은 섭취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에너지는 98.4%수준을 나타내고 있다<표 1-2-16>.

<표 1-2-16> 영양소별 권장섭취 기준에 대한 섭취비율의 변화 추이

(단위 : %)

연도 영양소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8	2001	2005
에너지	92.4	90.4	91.1	87.7	87.5	93.1	90.0	88.6	94.5	94.8	98.4
단백질	100.9	96.9	110.4	107.7	118.2	118.1	117.9	116.7	117.8	127.0	169.0
칼슘	76.6	69.4	93.0	78.1	76.2	82.3	84.0	75.4	72.8	71.0	76.3
철	114.5	109.4	112.0	167.7	156.7	177.3	176.0	159.5	91.9**	95.2	126.3
비타민 A	95.9	108.7	81.2	53.6	77.2	84.3	67.7	67.2	95.6	95.4	121.9
티아민	202.3	128.1	122.9	95.2	99.3	120.7	140.1	108.8	126.3	119.8	122.3
리보플라빈	102.5	82.0	93.8	87.3	85.0	98.4	97.3	96.0	86.2	91.0	95.8
나이아신	137.7	161.1	182.1	127.8	133.5	126.7	120.6	119.8	110.8	119.4	121.5
비타민 C	137.4	141.0	125.0	98.8	119.7	175.8	175.6	185.4	234.0	197.1	106.6

주 1) 1995년까지는 가구별 칭량법, 1998년도부터는 개인별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조사된 결과임.

2) 1998년도에는 식품성분표 제5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1996)을 이용함에 따라 쌀의 철 함량이 3.7mg/100g에서 0.5mg/100g으로 하향조정된 수치를 적용하여 환산하였음.

3) 2001년도는 식품성분표 제6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1)을 이용하였음.

4) 2005년도는 새로 설정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 2005)에 근거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6년

섭취에너지의 영양소 구성비율은 2005년을 기준으로 당질 64.3%, 단백질 15.4%, 지방 20.3%로 나타났다. 당질의 에너지 구성비율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단백질의 에너지 구성비율은 1985년 이후 큰 변동이 없다. 반면 지방은 1990년대 접어들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5년도에는 1969년 최초로 국민영양조사가 실시된 이래 처음으로 지방에너지의 비율이 20%를 초과하였다.

## 2. 식품 수요 현황

### 가. 1인당 식품공급 현황

2005년에는 기후조건이 양호하고 자연재해가 적어 과실류와 어류, 해조류 등의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채소류의 경우는 수입김치의 증가에 영향을 받아 배추, 무 등의 생산량이 감소하여 식용공급량이 감소하였다. 서류는 생산량의 증가로 식용공급량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웰빙 지향, 소비자의 건강 선호 경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대비 2005년 품목별 공급량 변화는 <표 1-2-17>과 같다.

쌀 생산량은 단수 증가로 549천톤 증가하였으나, 대북지원량이 204천톤 증가하였고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되어 1인당 식용공급량이 88.6kg에서 84.7kg으로 4.4% 감소하였다. 밀 수입량은 전년대비 216천톤 증가하였으나, 사료용 소비량이 282천톤 증가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33.5kg에서 30.9kg으로 7.9% 감소하였다. 2005년 소비자의 감자와 고구마의 구입빈도는 2003년 대비 2배 정도 잦아졌으며, 별식으로 먹는 가구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감자와 고구마는 재배면적 증가로 1인당 공급량이 각각 41.2%, 29.2% 증가하였다. 설탕류는 생산 증가로 1인당 공급량이 21.14kg에서 21.26kg으로 0.6% 증가하였다.

<표 1-2-17>

품목별 1인당 연간 공급량

(단위 : kg, %)

품 목	2004(확정)	2005(잠정)	증가율(%)
곡 류	153.52	153.78	0.17
쌀	88.56	84.67	-4.39
보 리	1.48	1.10	-25.68
밀	33.52	30.88	-7.88
옥 수 수	26.79	33.88	26.47
기 타	3.18	3.25	2.20
서 류	12.49	17.19	37.63
감 자	8.79	12.41	41.18
고 구 마	3.70	4.78	29.19
설 탕 류	21.14	21.26	0.57
두 류	10.76	11.19	4.00
콩	8.46	9.01	6.50
팥	0.69	0.68	-1.45
기 타	1.61	1.50	-6.83
견 과 류	1.21	1.26	4.13
종 실 류	0.68	0.70	2.94
참 깨	0.35	0.36	2.86
기 타	0.33	0.33	0.00
채 소 류	156.80	144.89	-7.60
과 실 류	41.64	44.32	6.44
육 류	36.90	36.49	-1.11
쇠 고 기	6.60	6.35	-3.79
돼 지 고 기	17.28	16.84	-2.55
닭 고 기	5.18	5.77	11.39
부 산 물	7.85	7.53	-4.08
계 란 류	8.90	9.05	1.69
우 유 류	53.82	53.80	-0.04
우 유	52.59	52.73	0.27
어 패 류	41.06	38.45	-6.36
어 류	28.04	25.46	-9.20
패 류	13.02	12.99	-0.23
해 조 류	7.85	9.58	22.04
유 지 류	17.68	18.50	4.64
식 물 성	17.40	18.27	5.00
동 물 성	0.28	0.23	-17.86
주 류	71.49	69.71	-2.49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05년

채소류는 중국에서의 김치류 수입이 2005년에 58%까지 증가한 영향으로 배추, 무, 파의 생산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1인당 식용공급량이 160.8kg에서 144.9kg으로 7.6% 감소하였다. 배추와 무는 재배면적이 각각 전년대비 17%, 20%나 감소하였다. 과실은 대체로 작황이 좋아 생산량 증가로 1인당 식용공급량이 41.6kg에서 44.3kg으로 전년대비 6.4% 증가하였다. 다만 최근 상대적 가격하락으로 성목면적이 감소한 배의 생산량은 8.6천톤 감소하였다. 수입량의 경우 오렌지는 캘리포니아의 수확기 기상여건 악화로 줄었으나(31천톤 감소), 바나나(43.9천톤), 파인애플(5.4천톤), 참다래(3.7천톤), 포도(3.4천톤) 등이 증가하였다.

쇠고기는 2003년 미국 BSE 발병 이후 하락하였던 소비가 회복되면서 한우의 출하두수 증가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BSE가 발생했던 2003년 재고공급의 감소로(50천톤) 1인당 식용공급량은 2004년 6.6kg에서 2005년 6.4kg으로 3.8% 감소하였다. 돼지고기는 질병 피해, 2004년 폭염으로 인한 모돈의 생산성 저하와 가축 분뇨 처리 문제 등으로 농가의 폐업이 증가하면서 2005년 연평균 사육두수의 감소로 생산량은 전년대비 6.3% 하락하였다. 수요 증가와 출하두수 감소로 인한 산지가격 상승으로 수입량은 최고치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64.8천톤이 증가하였으나 총공급량의 감소로 1인당 식용공급량은 17.3kg에서 16.8kg으로 2.6% 감소하였다. 닭고기는 2003년 발생했던 AI(조류인플루엔자) 이후 소비가 회복되면서 사육수수의 증가로 생산량은 13천톤 증가하였으며, 국내 닭고기 가격의 강세로 수입량도 2004년 대비 26.7천톤 증가하였다. 닭고기의 1인당 식용공급량은 생산량과 수입량의 증가로 2004년 5.2kg에서 2005년 5.8kg으로 11.4% 증가하였다.

어패류는 양식생산이 증가하고 2005년에는 적조 등의 자연피해가 감소하여 생산량이 104천톤 증가한 반면,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던 횡감용 활어 수입이 감소하면서 261천톤 감소함에 따라 1인당 식용공급량은 6.4% 감소하였다. 해조류의 경우 양식의 주종을 이루는 다시마(86천톤)와 미역(24천톤)의 생산증가로 인해 1인당 식용공급량이 22.0% 증가하였다.

식물성 유지는 참기름의 생산량이 3.6천톤 증가하고, 기타식물성유의 수입 증가로 1인당 식용공급량이 17.4kg에서 18.3kg으로 5.0% 증가함.

◦ 동물성 유지는

식물성 유지류의 1인당 식용공급량은 참기름 생산과 옥배유·야자유·팜유·콩기름 수입 증가 등에 따라 전년대비 5% 증가하였다. 반면 동물성 유지류는 어유의 생산이 1.4천톤 증가하였으나, 우지의 수입이 8.3천톤 감소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은 17.9% 감소하였다.

나. 자급률 수준

주요 식품의 자급률 추이를 보면 곡류, 두류, 육류, 우유류, 과실류, 어패류, 유지류 등 대부분 식품의 자급률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1-2-18>. 곡류자급률은 1980~2005년간 53.3%에서 29.3%로, 두류는 40.1%에서 10.7%로, 어패류는 132.7%에서 64.3%, 유지류는 19.0%에서 2.8%로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우유류도 같은 기간 109.7%에서 72.8%로 하락하는 추세를 지속하여 왔다.

<표 1-2-18> 연도별 자급률 추이

구 분	1980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공급영양 자급률	칼로리	70.0	62.6	50.6	50.6	49.2	49.6	45.6	46.6	45.7
	단백질	75.2	67.8	57.2	52.8	51.9	50.4	47.4	46.9	47.3
	지방	64.2	30.3	26.8	21.4	20.3	20.4	19.2	18.6	18.4
물량기준 자급률	곡 류	53.3	43.8	30.0	30.8	32.2	31.0	28.1	27.6	29.3
	쌀	95.1	108.3	91.1	102.9	102.7	99.2	90.3	94.3	95.7
	두 류	40.1	24.5	11.7	8.2	9.2	8.8	8.2	8.0	10.7
	채 소 류	100.2	98.9	99.2	97.7	98.3	97.7	94.7	95.0	94.5
	과 실 류	98.6	102.5	93.2	88.7	88.9	89.1	85.0	85.2	85.6
	육 류	97.4	92.9	89.2	83.9	81.0	82.0	81.2	83.5	81.6
	쇠 고 기	93.0	53.6	50.8	53.2	42.3	36.6	36.3	44.2	48.1
	돼지고기	97.5	100.3	96.6	91.6	90.8	96.9	93.8	87.4	83.7
	닭 고 기	100.0	100.0	98.1	79.9	76.1	76.0	76.7	90.2	84.3
	계 란 류	100.0	100.0	99.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우 유 류	109.7	92.8	93.3	81.2	78.9	81.0	81.0	74.2	72.8
	어 패 류	132.7	121.7	100.4	87.7	77.9	63.8	61.7	55.7	64.3
유 지 류	19.0	8.0	4.8	3.2	2.4	3.5	2.4	2.2	2.8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05년

칼로리 자급률<sup>1)</sup>은 1970년 79.5%, 1990년 62.6%, 2005년 45.7% 수준으로 1970년 이후 대체로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 자급률은 1970년 80.1%에서 2005년 47.3%로 칼로리 자급률과 비슷한 감소 추세를 보인다. 반면 지방 자급률은 1980년까지만 하더라도 64.2%를 유지 하던 것이 1990년 30.3% 수준으로 급속하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수입자유화의 영향으로 육류 및 유지류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지방 자급률은 2005년 18.4% 수준에 불과하다. 2003년도 이후 칼로리 자급률 수준이 크게 하락한 이유는 쌀 생산 감소와 수입 증가에 의해 쌀의 물량기준 자급률이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 다. 식품 및 영양공급량의 국제비교

2005년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식품공급량(조식품기준)은 곡류(163.0kg), 두류(13.2kg), 채소류(165.0kg), 어패류(73.1kg)의 경우 비교적 많은 수준이다. 곡류 공급량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115.2kg)과 대만(순식품기준)(90.9kg) 그리고 파키스탄(137.0kg)에 비교하여도 많은 편이며, 미국과 유럽국가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편이다. 반면, 과일류(56.3kg), 육류(38.8kg), 계란류(10.5kg), 우유류(53.8kg) 및 유지류(18.5kg) 등은 적은 편이다<표 1-2-19>. 특히, 육류와 과일류의 공급수준은 유럽 국가들의 1/2~1/3수준이며, 우유류는 약 1/4에 불과하다. 유지류의 공급량은 파키스탄, 일본보다는 많지만 대만, 미국, 독일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

1) 1999년부터 “식품수급표”(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새로운 산정방식에 근거하여 공급영양소 자급률을 발표함. 새로운 산정방식은 1인 1일당 순식용 공급칼로리 중에서 국내산 공급칼로리의 비중으로 계산되며, 사료자급률을 육류에서 감안한다는 특징이 있음.

<표 1-2-19> 주요국별 1인 1년간 식품공급량 비교

(단위 : kg)

연 도	한 국	일 본	대 만	미 국	독 일	파키스탄
	2005	2003	2003	2003	2003	2003
곡 류	163.0	115.2	90.9	110.8	112.9	137.0
서 류	13.2	32.4	20.9	66.2	72.1	13.4
설 탕 류	14.5	28.6	23.4	70.7	45.3	27.2
두 류	12.9	13.4	27.7	13.4	8.7	8.3
채 소 류	165.0	104.6	112.3	123.5	90.5	30.5
과 실 류	56.3	54.8	143.3	113.5	113.2	30.8
육 류	38.8	43.5	76.2	123.4	84.7	12.0
계 란 류	10.5	19.1	18.3	14.6	78.4	2.1
우 유 류	53.8	65.8	22.8	261.6	116.9	154.1
어 패 류	73.1	66.2	40.0	21.1	21.2	2.2
유 지 류	18.5	16.5	25.1	32.6	91.9	16.8

주 : 1) 조식품 공급량 기준임.(단, 대만은 순식품 공급량 기준임)

2) 두류에는 중실류와 견과류, 어패류에는 해조류가 포함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05년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민 1인 1일당 공급 에너지는 대체로 점차 증가하여 왔다. 2005년도에는 3,014kcal로서 1980~2005년간 연평균 0.8%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독일 등 유럽국가의 1인 1일당 공급 에너지는 3,400kcal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높는데, 이는 주로 육류와 우유류 등 축산물과 유지류의 소비량이 많은데 기인한다<표 1-2-20>.

1인 1일당 단백질 공급량은 98.8g으로 일본의 91.5g, 대만의 96.3g과 비슷한 수준이며, 유럽 국가에 비해서도 영양 3요소 중 가장 차이가 적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1인 1일당 동물성 단백질의 소비는 적지만 간장, 된장 및 두부 등 식물성 고단백질 식품의 소비가 많은데 기인된다.

1인 1일당 지방질 공급량은 국민소득의 증대와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2005년도에는 88.6g으로 1985년의 51.8g에 비해 60% 이상 증

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방질 공급량은 유럽 국가의 50~60% 수준인데, 이는 축산물과 유지류의 공급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표 1-2-20> 주요국별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비교

연 도	한 국 <sup>1)</sup>	일 본 <sup>1)</sup>	대 만 <sup>1)</sup>	미 국	독 일	파키스탄
	2005	2003	2003	2003	2003	2003
에너지(kcal)	3,014	2,768	2,882	3,753	3,483	2,316
전 분 질(%)	56.0	46.3	41.9	28.6	31.2	53.5
설 탕(%)	7.4	9.8	8.2	17.5	12.7	11.4
동 물 성(%)	14.9	18.8	20.9	24.7	21.2	14.3
유 지 류(%)	15.1	13.9	21.0	19.3	20.9	16.6
기 타(%)	6.6	11.3	8.0	10.0	14.1	4.2
단 백 질(g)	98.8	91.5	96.3	115.0	100.3	58.8
동 물 성(g)	45.3	50.0	48.4	73.1	57.5	21.7
지 방 질(g)	88.6	86.2	124.6	155.0	141.9	69.6
유 지 류(g)	50.7	43.3	68.2	81.5	81.3	43.3
1인당GNP(\$)	14,193	33,701	13,752	37,565	29,347	568

주 : 1) 한국, 일본, 대만은 순식품 공급량 기준이며, 기타국은 조식품 공급량 기준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05년

그러나 지방질 공급량은 우리나라와 식생활이 비슷한 일본(86.2g)과 비슷한 수준이며, 대만을 제외한 동남아시아국가의 56~59g에 비하면 다소 많은 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계임)



### 3. 식품가공산업 현황

#### 가. 산업구조

식품가공산업은 2005년 생산액이 43조 6,434억원, 부가가치는 17조 7,667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제조업 전체에서 생산액은 5.1%, 부가가치는 5.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산액 기준으로 식료품과 음료품의 구성비는 각각 82%, 18%로 식료품 제조업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공식품 중 육가공(14.2%), 빵·과자·국수(14.0%), 곡물가공(13.1%), 유가공(12.9%), 알콜성음료(8.8%) 순으로 규모가 크다.

제조업의 총생산액은 851조 7,890억원으로 전년보다 7.2%로 높게 증가하였으며, 식품가공산업의 총생산액은 2004년 43조 520억원에서 2005년 43조 6,434억원으로 1.0%의 성장으로 다소 둔화된 모습이었다.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식생활의 간편화, 도시화, 핵가족화, 여성취업 인구의 증가 등에 따른 식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가공식품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식품가공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식품가공산업의 생산액은 1990년에 비해 3.3배 규모로 성장하였다.

식품가공산업은 외형적 성장과 병행하여 기업의 대형화,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체당 생산액이 1990년 21억 6천만원에서 54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2.5배나 성장하였다. 특히 규모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부문은 유가공, 비알콜성음료, 식용유지, 알콜성음료, 곡물가공, 육가공 등으로 나타났다.

<표 1-2-21> 식품가공산업 분류별 출하액, 부가가치, 사업체수 연도별 비교

분류별	연도별		생산액(10억원)		부가가치(10억원)		사업체수(개)	
	1990	2005	1990	2005	1990	2005	1990	2005
제조업(전체)	177,309	851,789	70,925	312,792	97,144	117,205		
음식료업	13,104	43,643	5,194	17,767	6,055	8,084		
◦식료품	10,352	36,576	3,857	13,222	5,557	7,641		
- 육가공	872	6,191	255	1,694	407	777		
- 유가공	1,519	5,614	447	2,393	113	117		
- 수산가공	1,420	3,118	567	1,165	1,804	1,878		
- 과채가공	342	1,440	134	623	487	739		
- 곡물가공	810	5,735	242	1,487	824	786		
- 식용유지	646	1,255	275	316	76	92		
- 빵과자국수	2,411	5,933	1,074	2,944	760	1,448		
- 식품첨가물	687	2,740	297	1,144	317	500		
- 기타식료품	1,645	4,551	566	1,845	769	1,304		
◦음료품	2,752	7,067	1,337	4,156	498	443		
- 알콜성음료	1,450	3,819	714	2,443	244	192		
- 비알콜성음료	1,302	3,248	623	1,713	254	251		

주 : 사료가공분야 및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체 제외

자료 : 통계청, “1990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2.

“2005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2006년

생산액당 부가가치로 나타낸 부가가치율은 식품가공산업 평균으로 볼 때 1990년의 39.6%보다 1.1% 증가한 40.7%로 나타났다. 곡물가공, 유가공, 과채가공, 기타식료품산업 부문에서는 부가가치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것은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이들 부문에서 제품의 고급화, 차별화가 촉진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나. 생산동향

2005년도 음식료품 생산은 0.3% 증가하여 2004년도의 8.7% 증가에 비해 침체된 모습을 보였다.

부문별 동향을 보면 육가공품은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한 13.7%를 나타냈는데, 이는 식생활 패턴변화로 육류 소비가 이전보다 다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도 육가공업계는 원유생산량이 전년대비 2.4% 감소되었고, 우유 총소비는 1.4% 증가하여 국민 1인당 우유소비량이 63.6kg으로 상승하였다. 지난해보다는 약간 정도 우유 소비량이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인 우유소비량은 정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위해 구조적인 수급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에서는 우유생산조정 및 소비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과채가공산업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김치가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전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고 특히, SARS이후 해외의 김치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일본의 김치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가족 및 서구화의 진행에 따른 수요감소의 원인을 상품김치나 단체급식 공급 등으로 충당한데 기인하고 있다.

김치시장은 7,000억원의 시장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1인당 소비량은 1995년 35kg에서 2005년 25kg 수준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소비가 감소되고 있지만 김치는 2001년 7월 5일 제24차 Codex총회(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나라 전통김치에 근거한 국제식품규격으로 최종 확정됨으로써 자연적인 젯산발효식품으로서 세계 각국의 절임류와 차별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고, 김치의 국제적인 상품가치가 크게 향상되어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류시장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발전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왔으며, 간장의 시장규모는 1,470억원, 고추장 2,500억원으로 보고 있다. 간장이나 된장을 직접 담가 먹지 않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용 소비증가가 뚜렷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고추장은 국제식품규

격 5단계를 통과하였으며, 된장의 경우는 품질 기준의 재설정을 준비 하는 등 국제화를 통해 세계적인 식품으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 증으로 앞으로 많은 수출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 음료시장은 소비자의 세분화에 따라 전문성을 띤 음료의 등장과 소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05년 음료시장은 전년에 비해 비알콜성음료의 경우 8.2%의 감소를 보였으며, 알콜성음료는 11% 감소하였다.

두유와 스포츠음료, 미과즙음료, 전통음료, 먹는샘물, 차류, 기능성음료 등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비알콜성 음료는 소비자의 입맛을 유혹함에 따라 계속 그 규모가 증가·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다. 수출입동향

2006년도 가공식품 수입은 수산·육가공품을 중심으로 국내 소비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15.2% 증가한 80억4천2백만불이었고 수출액은 곡물가공류의 수출증가로 전년에 비해 1.4% 증가한 24억 1천 3백만불이었다. 무역역조 현상은 2004년도 35억 1천 1백만불에서 2005년도에는 45억 6천 2백만불로 전년보다 23% 증가하였다.

<표 1-2-22>

#### 가공식품의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구 분	1991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년대비
수 입	2,266	4,342	4,546	5,193	5,734	5,890	6,975	8,042	15.2
수 출	1,813	2,099	1,982	2,020	2,064	2,379	2,413	2,381	△1.3
무역수지	-453	-2,243	-2,564	-3,173	-3,670	-3,511	-4,562	-5,561	18.0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 연도

2006년도 품목군별 수입구조를 보면 수산가공품(26.6%), 육가공(22.6%), 기타식료품(16.2%), 과채가공(9.8%)순으로 수산가공품과 육가공품이 전체 수입량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수출은 수산가공품이 37.0%로서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식료품(18.9%), 빵·과자·국수(10.8%) 및 알콜성음료(7.7%) 등의 순이고 가공식품 중에서 수출이 수입보다 큰 품목은 비알콜성음료로서 전년보다 약간 많은 3천 6백만불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나머지 품목군은 모두 적자를 기록하였다. 무역적자 품목군은 육가공(31.5%), 수산가공(22.2%), 기타 식료품(11.4%), 과채가공(11.2%)순이다.

<표 1-2-23> 품목군별 가공식품의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구 분	수 입		수 출		무역수지	
	2005	2006	2005	2006	2005	2006
유 가 공	310	322	37	41	△273	△281
육 가 공	1,508	1,819	46	34	△1,462	△1,785
수 산 가 공	1,837	2,139	965	882	△872	△1,257
과 채 가 공	665	785	161	151	△504	△634
식 용 유 지	570	589	13	13	△557	△576
곡 물 가 공	132	175	111	132	△21	△43
빵·과자·국수	345	374	276	258	△69	△116
식품첨가물	182	193	148	162	△34	△31
기 타 식 료 품	904	1,097	403	449	△501	△648
알 콜 성 음 료	481	513	183	187	△298	△326
비알콜성음료	41	36	70	72	29	36
계	6,975	8,042	2,379	2,381	△4,562	△5,661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 연도

(식품산업과 농업사무관 전한영)

## 제3절 농산물 교역동향

### 1. 농식품 수출입동향

#### 가. 수출동향

2006년도 농식품 수출액은 일본의 PLS 시행(2006년 5월) 등 수입국의 안전성 강화, 고유가, 환율하락, AI 발생(2006년 11월) 등 수출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한 2,304백만불을 달성하였다. 신선농식품은 전년 동기대비 12.0% 감소한 535.5백만불에 그쳤으며, 가공농식품은 9.6% 증가한 1,769백만불을 달성하였다.

부류별 수출동향을 보면, 채소류는 주 수출국인 일본의 포지티브리스트 제도(PLS) 시행(2006년 5월 29일)에 따른 안전성 위반을 우려한 일본 바이어들의 신선채소 수입량 축소, 유가상승 및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 연초 한국산 파프리카 잔류농약 검출에 따른 전수검사 실시(2006년 1월 30일), 일본 자국산 채소류 수급안정 등으로 전년대비 3.5% 감소하였다.

김치는 주 수입국인 일본은 김치 기생충알 과동(2005년 10월)으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성 불신, 환율하락,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24.4% 감소하였고, 인삼은 대만, 중국의 수요증가와 베트남, 싱가포르, 프랑스, 스페인 등 신규시장 마케팅강화에 힘입어 전년대비 7.4% 증가하였다. 특히, 홍삼은 환율하락과 2005년 하반기 수출가격 상승에 대비한 수입상의 일시적 수입물량 확대에 따른 재고부담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 수출시장인 대만, 중국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7.1% 증가하였다.

화훼류는 유가상승 및 엔화하락으로 선인장(15.8% 증가)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부진하여 22.5%로 급감하였으며, 과실류는 2006년 들어 미국·일본·중국산과의 품질 및 가격경쟁 심화로 전년대비 18.6% 감소하였으며, 특히 사과는 국내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 및 수출원가 상승에 따른 주 수출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 열세로 대폭감소(67.9%) 하였다.

돼지고기는 저가 부산물 중심의 태국 수출이 대폭 증가한 반면, 상반기까지 수출호조를 보이던 러시아 시장이 하반기에는 대 러시아 최대 수출업

체의 휴업으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전년대비 30.4% 감소하였으며, 가금육은 대일 신선냉장 닭고기 수출호조로 증가세였으나 AI의 여파로 전년대비 10.5% 감소하였다. 다만 가열제품인 삼계탕은 대만, 홍콩 등에 한류의 영향으로 지속적 수출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림부산물은 간밤 가공공장의 중국이전 및 수출원가 상승, 일본 내 채고 증가, 송이버섯 작황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 감소 추세로 전년대비 17.3% 감소하였으며, 가공식품은 설탕, 라면, 껌 등에서 주류, 커피류, 소스류 등으로 다양화하여 전년대비 11.4%증가함으로써 전체 농식품 수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표 1-2-24>

**2006 농식품 수출실적**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 분	2003	2004	2005(A)		2006(B)		증감률(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b>농식품 합계</b>	<b>1,859.8</b>	<b>2,085.0</b>	<b>1,481.5</b>	<b>2,221.5</b>	<b>1,433.5</b>	<b>2,304.4</b>	<b>△3.2</b>	<b>3.7</b>
◦ 신선농림축산물	509.3	550.9	220.8	608.2	184.0	535.5	△16.6	△12.0
- 채 소	100.6	127.0	56.7	138.5	46.3	133.6	△18.2	△3.5
- 김 치	93.2	102.7	32.3	93.0	25.6	70.3	△20.7	△24.4
- 인 삼	66.6	89.2	2.1	82.5	1.9	88.6	△9.5	7.4
- 화 훼	45.3	48.5	10.0	52.1	8.1	40.4	△19.0	△22.5
- 과 실	70.5	85.7	80.6	120.9	65.6	98.4	△18.6	△18.6
- 돼지고기	31.3	27.3	14.7	34.3	12.2	23.9	△17.0	△30.3
- 가금육(닭, 오리)	5.7	3.5	3.1	9.5	3.2	8.5	3.2	△10.5
- 산림부산물	96.1	67.0	21.3	77.4	21.1	71.8	△0.9	△7.2
◦ 가공농림축산물	1,350.5	1,534.1	1,260.7	1,613.3	1,249.5	1,768.9	△0.9	9.6
- 가공식품	1,269.6	1,437.2	1,189.9	1,540.7	1,188.1	1,716.7	△0.2	11.4
- 목 재 류	80.9	96.9	70.8	72.6	61.4	52.2	△13.3	△28.1

자료 : 농림부, 2006년도 농식품 수출입동향, 2006

주요 국가별 수출동향을 보면, 일본수출은 엔화대비 원화가치의 급상승, 일본의 안전성강화로 김치, 채소 등 신선농식품 수출이 부진하여 전년대비 8.7%(62.2백만불) 감소하였고, 미국은 원화가치 상승 등 수출악재로 인해 면류, 연초류가 감소하였으나 채소류, 김치, 과자류 등의 수출호조로 전년 대비 0.8%(2.1백만불) 증가하였다.

<표 1-2-25> 2006년 국가별 농식품 수출실적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3	2004	2005 (A)	2006 (B)	증감률 (B/A)	주요수출품목
농식품 계	1,859.8 (100.0)	2,085.0 (100.0)	2,221.5 (100.0)	2,304.4 (100.0)	3.7	
일 본	657.5 (35.4)	728.6 (34.9)	713.3 (32.1)	651.1 (28.3)	△8.7	소주, 김치, 파프리카, 라면, 밥, 백합, 장미, 송이버섯, 홍삼조제품
미 국	223.2 (12.0)	284.7 (13.7)	280.3 (12.6)	282.4 (12.3)	0.7	권련, 라면, 배, 비스킷, 곡류조제품, 소주, 국수, 물, 혼합조미료, 된장
중 국	166.1 (8.9)	213.7 (10.2)	231.2 (10.4)	259.5 (11.3)	12.2	자당, 밥, 라면, 커피조제품, 비스킷, 난초, 캔디, 홍삼, 합판, 채소종자
러시아	157.4 (8.5)	175.4 (8.4)	203.8 (9.2)	207.5 (9.0)	1.8	권련, 커피조제품, 마요네스, 돈육, 물, 라면, 대두유, 간장, 빵, 초콜릿
홍 콩	99.2 (5.3)	119.3 (5.7)	123.7 (5.6)	146.2 (6.3)	18.2	자당, 맥주, 권련, 홍삼, 비스킷, 백삼, 국수, 계육, 딸기, 위스키, 커피조제품
대 만	62.0 (3.3)	71.0 (3.4)	110.1 (5.0)	91.9 (4.0)	△16.5	배, 홍삼, 커피조제품, 비스킷, 기타 채소, 권련, 면, 껌, 라면, 빵, 사과
ASEAN	113.9 (6.1)	116.9 (5.6)	143.2 (6.4)	184.1 (8.0)	28.6	커피조제품, 자당, 옥수수전분, 라면, 돈육, 권련, 단감, 채소종자, 맥주
E U	52.5 (2.8)	64.5 (3.1)	67.5 (3.0)	49.6 (2.2)	△26.5	일담배, 라면, 국수, 젤라틴, 채소쥬스, 합판, 비스킷, 백삼정, 선인장
기 타	328.0 (17.6)	310.9 (14.9)	348.4 (15.7)	432.1 (18.8)	24.0	

자료 : 농림부, 2006년도 농식품 수출입동향, 2006  
주) ( )안은 전체 수출금액 중 해당국가 수출 비중



중국(홍콩포함)은 화훼류, 과자류가 감소하였으나 인삼류, 당류 등의 수출호조로 전년대비 12.2%(28.3백만불) 증가하였다.

러시아는 돼지고기가 감소(39.7%)하였으나 과실류의 수출호조(737.6%증가)로 전년대비 1.8%(3.6백만불) 증가하였으며, 대만은 김치, 인삼 등은 증가하였으나 과실류 가공식품 등의 부진으로 전년대비 16.5%(18.2백만불) 감소하였다.

#### 나. 수입동향

2006년도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대비 12.1% 증가한 13,327백만불로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농식품 수입국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부류별 수입동향을 보면 채소류는 생강 등 일부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외식업체의 수요증가로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김치는 중국산 김치의 기생충알 검출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1.5% 증가한 88백만불이 수입되었다.

과실류는 키위와 포도가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고 미국, 칠레 현지 작황이 양호하여 증가하였으며, 오렌지, 바나나 등도 국내소비 증가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5.8% 증가한 713백만불이 수입되었다.

그 밖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수입은 국내산의 수급차질로 크게 늘어났으며, 곡류와 박류를 포함한 기타 품목 수입도 소폭 증가하였다. 특히 쌀은 MMA물량 226천톤(가공용 204천톤) 도입으로 전년대비 130.5% 증가하였다.

&lt;표 1-2-26&gt;

## 2006 농식품 수입실적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 분	2004 수입액	2005(A)		2006(B)		증감률(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b>농식품 합계</b>	<b>11,219.8</b>	<b>34,536.0</b>	<b>11,888.5</b>	<b>35,479.5</b>	<b>13,327.3</b>	<b>2.7</b>	<b>12.1</b>
<b>◦ 농 산 물</b>	<b>7,444.6</b>	<b>24,765.5</b>	<b>7,397.3</b>	<b>25,142.1</b>	<b>8,117.2</b>	<b>1.5</b>	<b>9.7</b>
- 곡 류	2,264.0	12,611.6	2,022.9	12,687.8	2,116.1	0.6	4.6
- 두 류	519.7	1,418.7	430.5	1,211.6	360.6	△14.6	△16.2
- 서 류	98.3	326.5	81.9	327.1	78.1	0.2	△4.6
- 박 류	666.9	3,515.0	615.0	3,760.9	632.1	7.0	2.8
- 채유종실	145.2	243.8	118.8	285.3	163.3	17.0	37.5
- 과 실 류	564.3	692.5	615.6	761.6	712.7	10.0	15.8
- 식물성유지	432.6	664.6	498.3	661.4	493.6	△0.5	△0.9
- 채 소 류	331.6	476.1	329.9	557.9	411.8	17.2	24.8
- 화 훼 류	23.4	5.4	28.8	5.6	35.8	3.7	24.3
- 커 피 류	116.1	92.6	167.0	93.6	190.4	1.1	14.0
- 연 초 류	205.8	37.5	155.2	46.9	184.9	25.1	19.1
- 김 치	29.5	111.5	51.3	178.0	88.0	59.6	71.5
- 주 류	383.5	268.4	435.7	285.9	480.9	6.5	10.4
- 당 류	399.6	2,330.4	507.1	2,181.9	683.2	△6.4	34.7
<b>◦ 축 산 물</b>	<b>1,755.3</b>	<b>888.0</b>	<b>2,360.5</b>	<b>1,065.1</b>	<b>2,748.5</b>	<b>19.9</b>	<b>16.4</b>
- 쇠 고 기	600.4	196.4	735.1	236.3	879.0	20.3	19.6
- 돼지고기	352.5	278.8	619.9	333.0	777.9	19.4	25.5
- 닭 고 기	55.5	58.5	113.0	75.6	118.3	29.2	4.7
<b>◦ 임 산 물</b>	<b>2,019.9</b>	<b>8,882.4</b>	<b>2,130.7</b>	<b>9,272.3</b>	<b>2,461.6</b>	<b>4.4</b>	<b>15.5</b>
- 원 목	704.2	5,318.9	707.9	5,442.8	755.7	2.3	6.8
- 합 판	393.1	793.8	420.4	819.6	500.3	3.3	19.0
- 섬 유 판	77.5	304.6	108.5	340.4	129.3	11.8	19.2

자료 : 농림부, 2006년도 농식품 수출입동향, 2006

국가별 수입동향을 보면, 미국은 최대 수입품목인 옥수수 수입 폭증에 따라 전년대비 28.5% 증가하였으며, 중국은 채소류, 김치, 주류 등의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곡류, 두류 등의 수입 감소로 소폭 감소하였고, 쇠고기 및 밀, 쌀 등 곡물류의 수입이 증가한 호주가 전년대비 21.9% 증가하였다.

2004년 FTA체결 후 과실류, 돈육 등을 중심으로 꾸준한 수입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칠레는 전년대비 20.3% 증가하였다.

<표 1-2-27> 2006 국가별 농식품 수입실적

(단위 : 백만불, %)

국 별	2003	2004	2005 (A)	2006 (B)	증감률 (B/A)	주 요 수 입 품 목
<b>농식품 계</b>	<b>10,221.1 (100.0)</b>	<b>11,219.8 (100.0)</b>	<b>11,888.5 (100.0)</b>	<b>13,327.3 (100.0)</b>	<b>12.1</b>	
미 국	2,739.6 (26.8)	2,744.8 (24.5)	2,198.5 (18.5)	2,826.0 (21.2)	28.5	옥수수, 밀, 돼지고기, 대두, 오렌지, 침엽수원목, 아몬드, 닭고기, 쌀
중 국	2,061.6 (20.2)	1,511.1 (13.5)	2,216.5 (18.6)	2,199.1 (16.5)	△0.8	옥수수, 합판, 김치, 쌀, 고추, 섬유판, 밀, 기타과실, 참깨, 당근
호 주	804.1 (7.9)	1,199.4 (10.7)	1,359.5 (11.4)	1,656.9 (12.4)	21.9	쇠고기, 사탕수수당, 밀, 침엽수원목, 보리, 치즈, 당밀, 흡연용담배
브라질	471.1 (4.6)	673.2 (6.0)	582.1 (4.9)	600.9 (4.5)	3.2	대두, 옥수수, 오렌지, 닭고기, 커피, 잎담배, 에틸알콜, 치즈
뉴질랜드	489.3 (4.8)	623.4 (5.6)	679.6 (5.7)	697.5 (5.2)	2.6	침엽수원목, 쇠고기, 키위, 치즈, 카세인, 조제분유, 녹용, 호박
인 도	147.9 (1.4)	390.0 (3.5)	138.1 (1.2)	234.1 (1.8)	69.5	채종·콜자씨박, 참깨, 기타식물성유박, 잎담배부산물, 피마자유
일 본	214.3 (2.1)	219.4 (2.0)	200.1 (1.7)	212.7 (1.6)	6.3	채소종자, 배합사료, 향미용조제품, 기타소스제품, 기타유지가공품
칠 레	69.3 (0.7)	110.7 (1.0)	143.8 (1.2)	173.0 (1.3)	20.3	돼지고기, 포도, 포도주, 침엽수제재목, 키위, 토마토, 오렌지
ASEAN	1,286.0 (12.6)	1,352.6 (12.1)	1,443.8 (12.1)	1,567.8 (11.8)	8.6	합판, 바나나, 팜유, 열대산제재목, 당밀, 파인애플, 커피, 야자유
E U	1,064.7 (10.4)	1,248.6 (11.1)	1,458.8 (12.3)	1,587.9 (11.9)	8.8	돼지고기, 위스키, 올리브유, 합판, 포도주, 우유조제품, 잎담배, 초콜릿
기 타	873.2 (8.5)	1,146.6 (10.0)	1,467.7 (12.4)	1,571.4 (11.8)	7.1	

자료 : 농림부, 2006년도 농식품 수출입동향, 2006

주) ( )안은 전체 수출금액 중 해당국가 수입 비중

(식품산업과 행정사무관 이경일, 장동욱)

## 2. 농산물 남북교역동향

### 가. 농산물 교역규모

2006년도 남북한 교역실적은 1,349.7백만달러로 전년도 1,055.8백만달러에 비해 27.8% 증가하였다. 이중 농림축산물 교역실적은 379.8백만달러로 전년대비 19.0%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남북교역규모 1,349.7백만달러의 28.1%를 차지하였다.

<표 1-2-28>

### 남북교역 동향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연 도 별 교 역 실 적		
	2005	2006	증감률(%)
전 체	1,055.8	1,349.7	27.8
농림축산물	319.1	379.8	19.0

자료 : 남북교류협력 동향(통일부)

### 나. 농산물 교역동향

#### (1) 반출입 통관실적 총괄

2006년도 농림축산물의 대북 반출입 실적을 살펴보면, 반출은 341.5백만달러로서 전년도 288.7백만달러보다 18.3% 증가하였고, 반입은 38.3백만달러로서 전년도 30.4백만달러 보다 25.8% 증가하였다.

#### (2) 주요 품목별 반출입 실적

##### (가) 반출실적

농림축산물 반출 총품목수는 113개 품목이며, 이중 농축산물은 쌀, 밀가루, 비료, 소시지 등이고 임산물은 합판, 건축용목제품, 수목류, 산채류 등을 포함한다.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쌀 100천톤(188백만달러), 비료

359천톤(129백만달러)가 농림축산물 전체 반출금액의 92.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1-2-29>

주요 품목별 반출실적

(단위 : 톤, 천달러)

품 명	2005년(A)		2006년(A)		증감률(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789,829	288,706	476,593	341,544	△39.7	18.3
쌀	400,404	110,740	100,301	187,636	△75.0	69.4
밀 가 루	1,997	1,071	6,431	2,966	222.0	176.9
채 소 류	7,043	3,341	1,327	2,523	△81.2	△24.5
대 두 유	23	33	1,510	1,299	6,465.2	3,836.4
기타농산가공품	1,468	4349	1,623	4,511	10.6	3.7
합 관	1,536	1,067	982	1,885	△36.1	76.7
기 타 목 재	1,498	1,303	1,101	1,737	△26.5	33.3
비 료	367,787	145,300	359,002	128,646	△2.4	△11.5
기 타	8,073	21,502	4,316	10,341	△46.5	△51.9

자료 : 남북교류협력 동향(통일부)

(나) 반입실적

농림축산물 반입 총품목수는 69개 품목이며, 이중 농축산물은 한약재, 호박, 로얄제리 등이고, 임산물은 표고버섯, 송이버섯, 고사리, 호도 등이다. 반입실적은 농림축산물이 38.3백만달러로 전년대비 25.8% 증가하였고, 그중 호박의 증가율이 높았다.

<표 1-2-30>

주요 품목별 반입실적

(단위 : 톤, 천달러)

품 명	2005년(B)		2006년(A)		증감율(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12,595	30,438	17,554	38,293	39.4	25.8
표고버섯	1,291	7,541	1,396	10,711	8.1	42.0
고사리	1,217	5,514	1,415	7,797	16.3	41.4
한약재	1,102	2,360	1,471	3,938	33.5	66.9
기타채소	2,108	2,769	2,330	3,446	10.5	24.4
기타버섯류	596	3,765	523	2,573	△12.2	△31.7
송이버섯	23	1,144	12	1,029	△47.8	△10.1
호 박	976	324	2,322	946	137.9	192.0
로얄제리	30	408	2	181	△93.3	△55.6
기 타	5,252	6,613	8,083	7,672	△53.6	△16.0

자료 : 남북교류협력(통일부)

(농업협상과 행정서기관 김재철)

## 제 3 장 국제 농업동향

### 제1절 국제 곡물수급과 가격동향

#### 1. 국제곡물 수급동향

##### 가. 개요

2007/2008년도 세계 곡물(쌀·밀·잡곡)생산량은 전년 대비 81백만톤(4.1%) 증가한 20억 72백만톤, 총소비량은 2006/2007년보다 48백만톤(2.4%) 증가한 20억 94백만톤, 2007/2008 재고율은 생산량 감소 및 소비량 증가로 인해 2006/2007년도 16.4%에서 1.4%p 하락한 15.0%로 전망된다.

##### 나. 쌀

2007/2008년 세계 쌀 생산량은 2006/2007년 보다 1백만톤(0.1%) 증가한 4억 19백만톤, 소비량은 전년대비 1.5%(643만톤) 증가한 4억 25백만톤,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8.0% 감소한 71백만톤으로 전망된다.

##### 다. 밀

2007/2008년도 세계 밀생산량은 전년보다 7백만톤(1.2%) 증가한 6억톤, 소비량은 2백만톤 감소한 6억 16백만톤, 재고량은 1억 7백만톤으로 전년보다 12.8% 감소, 기말재고율은 전년대비 2.5%p 낮은 17.4%로 FAO 권장 재고율(23~26%)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라. 옥수수

2007/2008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보다 66백만톤(9.3%) 증가한 7억 69백만톤, 소비량은 전년보다 43백만톤 증가한 7억 64백만톤, 재고량은 전년보다 5백만톤 감소한 1억 10백만톤으로 예상되어 재고율이 14.5%로 FAO 권장재고율(사료곡물 15%)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 대 두**

2007/2008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전년보다 15백만톤(6.3%) 감소한 2억 21백만톤, 소비량은 전년보다 10백만톤(4.4%) 증가한 2억 33백만톤으로 전망되며 특히, 미국·중국·아르헨티나는 감소되고, 브라질의 생산이 증가할 전망이다.

<표 1-3-1> **USDA 주요곡물 수급총괄**

(단위 : 백만톤)

구 분		2005/2006(A)	2006/2007(B)	2007/2008(C)	증 ▲ 감 C/B
				2007년 10월전망	
전체곡물	생 산	<b>2,017.11</b>	<b>1,991.37</b>	<b>2,072.43</b>	4.1
	소 비	2,031.44	2,045.60	2,093.77	2.4
	교 역	253.38	254.07	250.80	▲ 1.3
	재 고	388.82	334.58	313.24	▲ 6.4
	(재고율%)	(19.1)	(16.4)	(15.0)	
쌀	생 산	<b>418.06</b>	<b>418.13</b>	<b>418.64</b>	0.1
	소 비	415.54	418.42	424.85	1.5
	교 역	30.16	28.92	30.06	3.9
	재 고	77.44	77.15	70.94	▲ 8.0
	(재고율%)	(18.6)	(18.4)	(16.7)	
밀	생 산	<b>621.66</b>	<b>593.08</b>	<b>600.47</b>	1.2
	소 비	624.45	617.99	616.22	▲ 0.3
	교 역	116.16	110.57	105.80	▲ 4.3
	재 고	147.63	122.72	106.97	▲ 12.8
	(재고율%)	(23.6)	(19.9)	(17.4)	
옥수수	생 산	<b>696.22</b>	<b>703.41</b>	<b>768.97</b>	9.3
	소 비	703.93	721.35	763.66	5.9
	교 역	80.92	91.31	91.09	▲ 0.2
	재 고	122.99	105.05	110.36	5.1
	(재고율%)	(17.5)	(14.6)	(14.5)	
대 두	생 산	<b>220.44</b>	<b>235.77</b>	<b>220.99</b>	▲ 6.3
	소 비	215.25	223.45	233.28	4.4
	교 역	63.92	70.34	74.89	6.5
	재 고	52.88	62.94	50.75	▲ 19.4
	(재고율%)	(24.6)	(28.2)	(21.8)	
잡 곡	생 산	<b>977.39</b>	<b>980.17</b>	<b>1,053.31</b>	7.5
	소 비	991.45	1,009.19	1,052.70	4.3
	교 역	107.06	114.58	114.94	0.3
	재 고	163.74	134.71	135.33	0.5
	(재고율%)	(16.5)	(13.3)	(12.9)	

※ 자료 : USDA, 전체곡물 = 쌀 + 밀 + 잡곡(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호밀, 기장, 혼합곡)

(식량정책과 행정사무관 박희수)



## 2. 국제곡물 가격동향

### 가. 쌀 값 동향

미국 농업부(USDA)가 2007년 10월 15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0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의 본선인도가격(FOB: free on board)은 전년 동월대비 10.4% 상승한 톤당 584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의 본선인도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8.1% 상승한 톤당 332달러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쌀은 2002년 10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2004년 2월에는 톤당 570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7월부터 점차 하락한 가격은 2004년 11월 톤당 397달러로 내려간 이후 2005년 4월까지 지속되었다. 2005년 9월부터 상승하여 11월에는 톤당 507달러로 상승한 후 2006년 2월까지 유지되었다. 2006년 3월은 톤당 491달러로 하락했다.

2006년 5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가격은 2007년 10월 현재 전년 동월대비 10.4%, 전월대비 1.4% 상승한 톤당 584달러로 198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07/2008년 미국의 중·단립종 쌀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이란에 대한 태국산 쌀의 수출수요 증대로 2006년 5월 초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7월에는 321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11월에는 302달러까지 내려갔다. 2007년 10월 현재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톤당 332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8.1% 상승하였다. 최근 태국 정부가 재고미 판매를 늘렸지만 전월과 동일한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나. 밀 값 동향

2005년 상반기까지 소맥 선물가격은 톤당 120~13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0월에는 톤당 139달러에 이르렀다. 2005년 11월에는 132달러로 다시 하락하였으나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6년 7월에는 184달러까지 상승하였다.

2007년 12월물 인도분 소맥 선물가격은 10월 12일 현재 톤당 319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65.3%, 전월대비 2.9% 상승하였다. 2007/2008년도 미국, 러시아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세계 소맥 재고량은 1977/1978년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 소맥가격은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다. 옥수수 값 동향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4년 4월에 톤당 124달러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04/2005년도 옥수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면서 2004년 11월에는 톤당 78달러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5년 상반기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7월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2005/2006년도에는 공급량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2005년 11월에는 톤당 76달러에 이르렀다.

2005년 12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7년 12월물 인도분이 2007년 10월 12일 현재 톤당 138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6.0% 상승하였지만 전월대비로는 2.1% 하락하였다. 2007/2008년도 옥수수 생산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만 소비량도 늘어나 2007/2008년도 옥수수 선물가격은 강보합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라. 대두 값 동향

미국산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은 2004년 4월 톤당 425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여 2006년 상반기까지 25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6년 8월 248달러를 시작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은 2007년 10월 11일 현재 톤당 415달러로서 그동안 최고치였던 2004년 4월 가격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최근 운임포함가격의 급상승한 원인은 국제 곡물 수급 불안정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과 함께 해상운임이 동반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2006년 12월 해상운임은 톤당 53달러였으나 2007년 10월에는 102달러 수준으로 급등하였다.

<표 1-3-2>

**세계 곡물가격 동향표**

(단위 : 달러/톤, FOB)

품 목	2005/2006	2006/2007	2006. 10	2007. 9	2007. 10	증감률(%)		
						전년	전년동월	전월
쌀(중립종)	484	538	529	576	584	8.6	10.4	1.4
(장립종)	301	320	307	332	332	3.8	8.1	0.0
밀	142	181	193	310	319	76.2	65.3	2.9
옥수수	88	140	119	141	138	▲ 1.4	16.0	▲ 2.1
대 두	214	267	218	350	359	34.5	64.7	2.6

※ 자료 : USDA(2007.10)

(식량정책과 행정사무관 박희수)

## 제2절 주요국가의 농업동향 및 양자간 통상협력

### 1. 주요국가의 농업동향

#### 가. 미 국

##### (1) 농업경제동향

미국의 농경지는 1억 8천만헥타로 전체 토지면적(9억 24백만헥타)의 약 20% 수준으로 세계1위를 차지한다. 2005년 농업생산액은 12조4천억불에 이르며, 2006년도 농산물 수출도 686억달러에 달하는 세계최대 농업국가이다. 반면 농업인구는 5백6천만명(2005)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불과하며, 대규모 기업농 및 중소규모 농장으로 이루어진 농가는 212만호로 총가구의 2%에 이른다. 반면 소규모 가족농수는 91%에 달하지만 생산액은 27% 수준이고 대규모가족농과 기업농은 각각 7.1%와 1.7%를 차지하고 생산액 비중은 각각 59.1%와 13.7%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농산물 수출은 686억달러로 2005년 625억달러보다 9.7%의 성장

을 보였으며, 농산물 수입은 640억달러로 2005년 577억달러에 비해 10.9% 증가하였다.

2006년도 미국의 무역적자는 7,766억달러에 달하지만 농산물에서는 46억 달러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2006년 주요 곡물생산은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농산물 수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보다 밀은 6.5%, 옥수수는 13.5% 증가하였지만 쌀은 1.5% 감소하였다.

<표 1-3-3> 한미 주요 농업지표 비교

	한국(2006)		미국(통계년도)	
		단위		단위
○GDP	8,874	억\$	124,558	억\$(2005)
- 농림어업	2,338	억\$	996*1	억\$(2005)
- 농림어업 구성비	3.2	%	0.8	%
○총인구	48,297	천명	144.9*2 (301)	백만(2006)
- 농가인구(명)	3,304	천명	2.1*3	백만(2002)
- 농가인구 비중	6.8	%	1.4*4	%
○총가구(A)	15,989	천호	105	백만호(2000)
○농가수(B)	1,245	천호	2,121	천호(2003)
○소사육가구(C)	198	천호	810*5	천호(2003)
- 농가수 비중(B/A)	7.8	%	2.0	%
- 소사육가구 비중(C/B)	15.9	%	38.2	%
○총수출액	325,681	백만\$	10,240억	억\$(2007)
- 농림축산물수출액	2,304	백만\$	687	억\$(2006)
- 농림축산물 비중	0.7	%	6.7	%
○총수입액	309,309	백만\$	18,690억	억\$(2007)
- 농림축산물	13,327	백만\$	640	억\$(2006)
- 농림축산물 비중	4.3	%	3.4	%

자료 : USDA(www.ers.usda.gov) 및 농림통계 변형, 국회 답변자료

<표 1-3-4>

미 주요 농산물 생산량

(단위 : 백만톤)

	세계전체		세계전체		B/A(%)	
	생 산	교 역	생 산	교 역	생 산	교 역
밀	592.98	107.09	49.32	24.77	8.3	23.1
옥수수	701.03	85.78	267.60	53.34	38.1	62.1
콩	236.07	70.45	86.77	29.67	36.7	42.1
쌀	416.37	29.31	6.24	3.00	1.5	10.2

미농업부 경제연구소(ERS)자료, 김재수 전 주미농무관 자료 재인용

(2) 농업정책동향

미국의 농업정책 및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주요 농업정책은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단가, 연도별 예산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농업법으로 법제화하여 집행하고 있다. 2006년 정책사업은 2002년 농업법(Farm Bill)에 근거하고 있다.

2002년 농업법(Farm Bill)은 2002년 5월 2일 하원에서, 그리고 5월 8일 상원에서 가결된 후 5월 13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되었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작물년도) 5년간 유효하며, 예산 배분은 10년(2002~2011) 계획을 반영하여, 10년간 총 1,900억불(추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농업법은 1933년 제정된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를 근간으로 발전하여 왔는데 기본적으로 1862년 미농업부(USDA) 창설이후 가족농 중심의 소득 보존과 가격지지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가격지지는 직불제 형태로 생산조정과 재고관리를 시장기능에 따르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7년 농업법 개정을 앞두고, 미 농무부는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전국 농민 및 농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소득안정지원정책이 대규모 농장을 확보한 기업농 중심의 곡물, 사료작물 등에 편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과일·채소·특용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 혜택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토로되었다. 향후 2007년 농업법 개정은 WTO에서의 보조금 감축 압력과 보조금 확대를 기대하는 농가와 의회의 요구 사이에서 상당한 진통을 거쳐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 및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됨에 따라 국내외산 농산물 및 식품의 위생검사기준과 통관절차, 유기농산물 규격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생산식품뿐만 아니라 수입식품의 안전성조치와 관련된 농무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table) 전 단계를 감시하여 식품 안전성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축산물에 적용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를 과일, 채소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였다. 특히, 2003년 12월의 BSE 발생 이후 소와 쇠고기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NAIS(동물개체식별시스템) 검역강화, 연구개발사업이 확충되어 실시되었다.

9.11테러를 계기로 창설된 국토안보부는 농업과 식품분야를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부문으로 인식하여 동식물검역 및 식품 수입 절차도 바이오테러에 대비한 감시·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유기식품기준, 유전자변형농산물(GMOs)의 안전성 기준 및 표시제, 계란 위생기준, 식육의 원산지표시제 도입 등에 관하여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유기농업인증제, 시범적인 유기농업지원제 등을 마련하여 유기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나가고 있다.

환경농업정책의 일환으로 토양유실, 지하수 오염, 습지상실 등의 환경문제 방지를 위해 보전유보 계획(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 장려계획(Wetland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UIP)도 확충하였다. 이러한 환경농업정책은 국내적으로는 생산 감소 효과를 가져와 곡물의 과잉생산을 방지 하는

효과는 물론 여가와 복지욕구의 충족과 종합적인 국가 안보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여타 분야의 농무부의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WTO 허용보조 프로그램은 향후에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최근 미국농업정책의 주요 과제로 농산물 시장 확대 및 수출 증대를 목적으로 WTO, APEC, FTA 등 각종 국제기구 및 지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 지향성이 강한 공화당 부시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농업정책은 농산물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역협상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획득, 범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greement of the America)를 비롯한 지역FTA 정책 추진 등으로 강화하고 있다. 무역협상 권한은 2002년 8월 1일 상원을 통과하여 발효된 것으로 2007년 7월 1일까지 유효하다. 동법안은 대통령에 대한 무역협상권한(TPA) 부여, 무역으로 인한 실직 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TAA),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연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무역협상권한의 시한 연장은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진행여부, 현 부시행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및 미국내 정치세력의 판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그리 전망이 밝은 편이 아니라는 평이다.

넷째, 미국은 세계적인 농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1년간 연평균 1.8%의 생산성 향상이 지속될 수 있었던 점은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투자, 농업인프라에 대한 공공 지출, 비료나 농기계에 대한 기술향상 등 네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의 기술개발 지원은 농산물의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을 위한 Bio기술, GM기술, 곡물연료 생산 및 사용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통상협력과 수의사무관 장재홍)

## 나. 중 국

### (1) 농업경제동향

중국의 2005년 농가인구는 총 인구의 57.0%인 745,440천명이고, 경지면적은 국토의 13.6%인 130,039천ha이다.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0.67ha로 매우 영세한 규모이다. 농산물 수출입은 수출이 264.6억 달러이고 수입이 221.9억 달러로 4.3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전년의 6.9억불에 비해 무역흑자 폭은 소폭 감소하였다.

<표 1-3-5>

중국의 주요농업지표

구 분	단 위	2005	구 분	단 위	2005
◦ 농촌 인구 - 총 인구대비	천명 %	745,440 57.0	◦ 벼 생산량 ◦ 옥수수 생산량	백만톤 "	181 139
◦ 농가 호수 - 총 가구대비	천호	193,088 56.7	◦ 식량작물 재배면적 ◦ 채소·과수 재배면적	천ha 천ha	104,278 27,756
◦ 1차산업 총생산액 - GDP 대비	억 위엔 %	23,070.4 12.6	◦ 농산물 수출 - 총수출 대비	억달러 %	264.6 3.5
◦ 경지면적 - 농가호당경지면적	천ha ha	130,039 0.67	◦ 농산물 수입 - 총수입 대비	억달러 %	221.9 3.4

자료 : 농림업 주요통계(2007)

### (2) 중국의 농업과 농촌정책

중국의 2006년 GDP는 약 2조6천7백억불로써 전년 대비 10.7%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번째 규모다. 그러나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 실업 및 삼농 문제(三農; 농업·농촌·농민 문제, 협소한 농지, 낮은 농업생산성, 호주제를 통한 도시·농촌 분리정책 등으로 인한 도농 소득격차 확대 등의 문제) 등 사회문제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농업, 농촌, 농민의 위기를 총칭하는 삼농문제는 1980년대 식품의 공급문



제에서 최근 농민소득, 농촌소비, 농촌의 노동력 이전문제 등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식량생산을 늘리고,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며,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삼증(三增)”이 제시되고 있고, 이를 통하여 경제사회발전의 물질적 토대인 삼농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06년 3월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을 결정하였다. 지금까지의 개혁개방정책이 성장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11차 5개년 계획부터는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중시되는 지역균형발전, 사회복지제도 확충, 농촌 소득 향상, 화합사회 건설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공업과 도시가 농업과 농촌을 지원하여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을 건설하자는 “신농촌 건설” 정책이 채택되었다.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운동은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모델로 하여 개발도상국들이 그간 추진해온 경험을 차용하여 중국 현실에 맞게 작성한 마을단위 종합개발방식이다. 신농촌 건설의 목적은 농업생산력 발전, 농민 생활수준 제고, 농촌 기초시설 개선, 농촌사회사업 발전, 농촌기초단계 민주화로서, 이를 통한 도농간 격차를 축소하여 “조화로운 사회” 실현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2006년도 국무원 1호 문건(1號 文件; 최우선 역점 과제)은 신농촌 건설 촉진을 위한 8대 부문 32개 사업 과제를 발표하였다. 아래에서 신농촌 건설관련 주요 농업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농업지원 정책 강화이다. 장기적이고 안정된 농업에의 재정 지원체제를 수립하고자 2005년보다 14.2%가 증가한 총 3,397억 위엔을 농업지원자금으로 투입하였다. 또한, 농민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2006년 농업세 및 농업특산세를 폐지하였다. 이로써, 8억 농민이 1,250억 위엔의 혜택을 입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에 782억 위엔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중앙 정부는 식량생산 직접보조, 우량종 보조 및 농기계 구입 보조 등 이른 바 “3보조(補助)”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실시하고 있다. 식량생산 보조의 경우 13개 식량 주산 지구를 중심으로 식량위험기금의 50%를 지불

하였고, 식량 주산지 현(縣)에 대한 장려제도도 확대하여 2005년의 55억 위엔에서 85억 위엔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경지보호제도의 엄격한 시행이다. 중국 국토자원부에 따르면, 2006년 10월말 현재 중국의 경지면적은 1억 2,185만ha로 2005년말에 비해 30만 6,800ha가 순 감소되어 중국 인구 1인당 평균 경지면적이 278평으로 낮아졌다. 중국의 인구 증가추세, 식량 등 농산물 수급상황, 경지면적 및 경지 비옥도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경지면적을 1.2억ha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현재의 중국 경제사회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경지가 매년 일정 면적이상 감소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지의 타용도 전용을 억제하는 경지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식량의 종합적인 생산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식량 과종면적 확대, 단위당 생산량 제고 및 13개 식량 주산 지구를 포함한 식량생산기지 건설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농촌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여 농업발전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농촌식수의 안전공사를 위해 중앙 및 지방 재정에서 각각 60억 및 69억 위엔을 투입하여 2,897만 명의 농민이 혜택을 입었다. 또한, 농촌의 메탄가스 사용시설 건설에 총 40.6억 위엔을 투입하여 메탄가스 사용 농가가 약 450만 호 증가하였다. 또한, 농촌 도로개조 및 건설을 위해 총 430억 위엔을 투입하여 향(鄉)·촌(村)의 아스팔트 도로를 12만 km 확장하였다. 또한, 농촌시장 건설을 추진하여 2006년에만 총 10만여 농촌 상가를 조성하였다.

넷째, 농업 및 농촌경제 구조에 대한 전략적인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 농업의 구역화 분포를 지정하여 우수 농산물산업지대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전문화·구역화된 농업생산을 발전시켜 자원절약형, 환경보호형 농업 및 농촌 순환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신농촌 건설을 통한 삼농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도농간 격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 2006년도 중국 농민의 평균 순수입은 2005년에 비해 7.4% 증가한 3,578 위엔 이었는데, 이는 도시주민의 수입과 비교해 볼 때 삼분의 일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의 신농촌 건설을 위

한 농업·농촌투자가 늘고 있지만, 향후 호구제도 개선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 도시 취업 기회의 증대, 농촌지역의 농업의 소득원 개발 등 특단의 정책 전환이 없는 한 현 수준의 도농격차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협력과 농업주사 오동진)

## 다. 일 본

### (1) 농업경제동향

일본의 2005년 농가인구는 총 인구의 6.6%인 8,370천명이며, 2006년 경지면적은 국토의 약 12.4%인 4,671천ha이다. 2005년 호당 경지면적은 1.7ha로 한국의 1.4ha보다 약간 많은 편이다. 2006년 농산물 수입액은 50,041 억 엔으로 수출액 2,359억 엔보다 약 21.2배 가량 많다.

<표 1-3-6>

일본의 주요농업지표

구 분	단 위	2005	구 분	단 위	2005
◦ 농가 인구 - 총 인구 대비	천명 %	8,370 6.6	◦ 쌀 생산량	백만톤 (현미 기준)	9.07
◦ 농가 호수 - 총 가구 대비	천호 %	2,848 5.8	◦ 맥류* 재배면적	천ha	268
			◦ 과실류* 재배면적	"	240
◦ GDP(2006)	억달러	43,660	◦ 농산물 수출 (2006추산)	억엔	2,359
◦ 경지면적(2006) - 호당 (2005)	천ha ha	4,671 1.7	◦ 농산물 수입 (2006추산)	억엔	50,041

자료 : 1. 농림업 주요통계(2007)

2. 일본 농림수산통계(2006),\*맥류 4종, 과실 17종

3. 농산물수출입액은 농림수산성([www.maff.go.jp](http://www.maff.go.jp)) 자료

## (2) 농업정책동향

일본 정부는 식량자급률 저하, 농업인의 고령화, 농지면적의 감소, 농촌의 활력 저하 등 식료·농업·농촌을 둘러싼 정세의 변화, 국제화의 빠른 진전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1961년 제정하였던 구 「농업기본법」을 대체하는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을 1999년 7월 제정하였다. 동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21세기 농정의 기본이념은 식료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 농업의 다면적 기능의 충분한 발휘,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농촌 진흥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1세기 농정의 기본이념에 따른 모든 시책 실시의 평가 및 보증을 위하여 2000년 3월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 5년마다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2005년 3월 1차 수정을 거쳤다. 동 기본 계획은 2015년까지 10년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공정을 제시하고 매년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식료·농업 및 농촌에 관한 시책의 기본 방침, 식량자급률 목표, 식료·농업 및 농촌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책 등을 담고 있다.

이하 2005년 책정한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에 의거 일본 정부가 “21세기 신농정 2006”으로 추진하였던 농정개혁 과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기본계획의 추진전략은 국제전략, 국내 농업의 체질 강화, 식품의 안전 확보와 건전한 식생활의 육성, 새로운 분야의 개척, 농촌진흥전략으로 구분된다.

첫째, 국제 전략으로는 WTO 및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일본산 농산물 및 식품 수출을 촉진하며, “동아시아 식품산업 공동체” 구상을 추진하고, 품종보호제도 등 지적재산권 보호 및 활용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가 있다. 특히, 일본산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출액을 2009년 6,000억 엔을 목표로 5년 내 2배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수출 실적은 2005년 4,008억 엔에서 2006년 4,490억 엔으로 12.0% 증가하였다. 또한, 동아시아에 일본의 식품산업 현지법인 활동 규모를 5년간 30~50% 제고하기로 하고, 2010년까지 110~125억 불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 및 활용을 위해 식품신품종 출원건수는 2005년 1,385건에서 2010년 2,000건으로 5년간 50%를 제고할 계획이다.

둘째, 국내 농업의 체질 강화를 위해서 핵심경영체의 육성·확보와 신규

취농의 촉진 및 식량공급비용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경영체의 육성 및 확보를 위해서 예산, 금융, 세제 등 각종 시책을 핵심경영체에 집중하는 한편, 생산기반 정비, 각종 공공시책 추진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인 핵심경영체 육성내용으로는 인정농업자 수가 2005년 약 19만5천명에서 2010년까지 33~37만명까지 늘릴 계획이고, 마을영농은 2005년 약 1만 규모에서 2010년까지 2~4배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경영에 대한 여성참여를 촉진하고 의욕적인 기업과 젊은 인력을 적극 유치하였고, 일반기업 등 농업참여법인 수는 2005년 156개에서 2010년 5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직불제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2010년에는 농정개혁 추진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농업의 체질 강화를 위해서 식량공급비용 감축을 추진하고 있고, 생산과 유통 양면에서 성역없는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5년간 20%의 생산·유통비용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식품의 안전과 건전한 식생활의 육성을 위해 국내 가축전염병 등 발생 및 만연을 방지하고 해외전염병 등의 침입방지시책의 추진을 강화하고 있고, 식품 표시의 적정화 및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일본농업표준(JAS) 규격의 보완을 추진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건전한 식생활의 육성을 위해 가정, 학교, 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급식, 관광과 연계하여 지산지소(地産地消)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학교 급식 중 지역생산 농산물 비중을 2004년 21%에서 2010년 30%이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넷째, 기술과 지적재산에 의한 새로운 산업분야의 개척, 바이오메스를 활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연료 등의 개발을 통한 새로운 분야 개척이다. 잠재적 시장수요에 부응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지역브랜드 확립 등을 통한 새로운 산지모델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현재 200억 엔인 기능성 농식품의 시장규모를 2010년까지 신식품·신소재의 시장 규모를 700억 엔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섯째, 농촌지역 진흥을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농촌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역에서”를 토대로 지

역에서 스스로 창출한 성공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을 수정하여 정부는 지역의 자발적인 추진에 대한 참가의 촉진, 지역의 노력과 창의력 유도, 재도전에 대한 기회 제공 등 간접적 지원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통상협력과 농업주사 오동진)

## 라.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 (1) 농업경제 동향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2006년 현재 2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정치적 연합체로서 2006년도 현재 GDP는 108,028억유로, 인구는 459,692천명, 면적은 397,300천ha 거대 경제권이다.

EU 25개 회원국 전체의 경지면적은 164백만ha, 농가구수는 9,653천호(2004), 농업분야 취업자수는 9,541천명이며, 농업총생산액은 3,116억유로 정도이다. 2005년 농산물 생산액은 우유생산이 1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곡물류 10.3%, 쇠고기 9.5%, 돼지고기 9.4%, 신선채소 8.6%, 신선과일 6.5% 포도 및 포도액 4.8% 순이었다. 농업생산에서 회원국들의 비중을 보면 프랑스(20.3%), 이탈리아(14.2), 스페인(12.7%), 독일(12.6%), 네덜란드(6.9%), 영국(6.5%), 폴란드(4.9%), 그리스(3.9%), 덴마크(2.5%), 벨기에(2.2%), 포르투갈(2.1%), 헝가리(2.0%), 아일랜드(1.9%), 오스트리아(1.7%), 스웨덴(1.3%), 핀란드(1.3%), 체코(1.1%), 슬로바키아(0.5%), 리투아니아(0.5%), 슬로베니아(0.4%), 라트비아(0.2%), 사이프러스(0.2%), 에스토니아(0.2%), 룩셈부르크(0.1%), 몰타(0.0%)의 순이었다.

EU 전체로 볼 때 농수산업 종사자가 전체 고용인구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의 EU-15국(3.8%) 체제보다 높아져 4.9%이다. 국가별로는 영국(1.4%), 룩셈부르크(1.7%), 벨기에(2.1%), 독일(2.3%)은 그 비중이 낮은 반면, 폴란드(17.1%), 리투아니아(14.8%), 라트비아(12.6%), 그리스(12.4%) 등은 높은 편이다. 신규 회원국을 중심으로 전체 고용인구 중 농수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농업이 전체 GDP중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룩셈부르크(0.3%), 스웨덴(0.4%), 영국(0.4%), 독일(0.6%), 벨기에(0.8%)가 낮은 편이며, 그리스(4.7%), 리투아니아(2.9%), 스페인(2.8%), 헝가리(2.7%), 폴란드(2.5%) 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표 1-3-7> EU의 주요 농업 지표(2005)

국 가 (25개국)	경지면적 (천ha)	농가구 (천호)	가구당지 경면적 (ha)	농업분야고용		농업 생산액 (백만 유로)	농업 부가가치 (백만 유로)	GDP 대 비 (%)	농산물 무역			가계비중 식품비 (%)
				취업자 (천명)	전체 대비 (%)				수입 비중 (%)	수출 비중 (%)	무역 지 수 (백만 유로)	
EU-25	163,706	-	-	9,541	4.9	311,569	143,095	1.3	6.0	6.1	-2,453	:
EU-15	130,331	-	-	6,180	3.7	280,562	131,241	1.3	6.1	6.0	-3,128	
벨기에	1,386	52	26.9	90	2.1	6,657	2,245	0.8	7.1	4.9	-1,736	17.6
체코	3,606	42	84.2	195	4.1	3,419	949	1.0	4.3	3.9	-182	24.8
덴마크	2,712	48	53.6	88	3.2	7,783	2,512	1.2	7.8	19.7	2,382	15.5
독일	17,035	390	43.7	845	2.3	38,583	12,810	0.6	4.7	2.4	-2,970	14.8
에스토니아	834	28	29.9	35	5.8	526	208	1.9	5.1	4.4	-48	26.7
그리스	3,805	-	-	545	12.4	12,358	8,423	4.7	6.2	19.9	-3	19.6
스페인	25,690	-	-	987	5.2	39,761	24,910	2.8	8.0	9.6	-1,692	17.3
프랑스	29,584	-	-	924	3.8	63,203	28,372	1.7	4.7	8.3	4,840	17.3
아일랜드	4,307	133	31.8	114	5.9	5,647	2,159	1.3	3.5	11.6	3,041	12.0
이태리	14,710	1,729	7.4	926	4.1	44,245	26,329	1.9	6.1	5.3	-806	17.4
사이프러스	136	45	3.4	16	4.5	622	330	2.5	9.4	20.1	-80	22.2
라트비아	1,734	129	13.2	130	12.6	752	277	2.2	6.5	9.5	-22	29.4
리투아니아	2,837	253	11.0	218	14.8	1,611	605	2.9	4.1	9.2	77	35.2
룩셈부르크	129	2	52.7	3	1.7	251	101	0.3	1.3	1.1	-36	21.2
헝가리	5,863	715	6.0	187	4.8	6,129	2,386	2.7	2.5	10.7	574	26.1
몰타	10	11	0.9	3	1.7	125	57	1.3	6.5	5.4	1	20.6
네덜란드	1,924	82	23.9	258	3.3	20,965	8,532	1.7	8.8	14.7	-2,077	14.0
오스트리아	3,263	171	19.1	199	5.3	5,477	2,365	1.0	4.5	4.6	442	13.6
폴란드	15,906	2,477	6.0	2,386	17.1	15,057	6,107	2.5	6.3	11.8	348	25.8
포르투갈	3,737	324	11.4	605	11.8	6,411	2,559	1.7	11.9	9.1	-678	-
슬로베니아	509	77	6.3	83	8.9	1,073	485	1.8	7.6	5.8	54	20.2
슬로바키아	1,941	69	27.4	108	4.9	1,693	450	1.2	2.8	2.9	-49	24.8
핀란드	2,267	71	32.1	119	4.9	4,267	1,353	0.9	2.4	2.8	256	17.7
스웨덴	3,019	76	42.1	98	2.3	4,249	1,100	0.4	4.1	3.0	286	16.0
영국	16,761	287	55.4	381	1.4	20,707	7,471	0.4	6.0	4.8	-4,377	12.9

자료 : European Commission, Agricultural Statistics

EU 역내 교역을 제외한 전체 역외 수출입액 중 농산물 및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이 6.1%이며 수입은 6.0%이다. 농산물 역외 수출의 주요 대상국은 미국(20.9%), 러시아(8.1%), 스위스(6.7%), 일본(6.3%) 등이며, 2004대비 10% 정도 증가하였다. 주요 수출품목은 주류 및 음료(13,967백만유로), 낙농품, 달걀 및 벌꿀(5,174백만유로), 육류(3,822백만유로) 등이다. 농산물 역외 수입의 주요 대상국은 브라질(14.1%), 미국(9.9%), 아르헨티나(7.0%) 등이며 주로 과일 및 너트류(11,295백만유로), 유지종자류(4,962백만유로), 커피, 차 및 향신료(4,556백만유로) 등이 주요 수입품목이다. EU의 농산물 교역은 역내 무역이 역외 무역에 비하여 비중이 크다. 2005년도의 역외 농산물 무역적자는 24억유로이다.

## (2) 농업정책동향

EU는 1957년 3월 로마조약에 의거 회원국 공통의 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실행하고 있다. 이 조약 내용을 살펴보면 EU농정은 단일시장(Single Market), EU 생산 농산물 우선(Community Preference), 공동재정부담(Common Financial Responsibility)을 기본운용 원칙으로 삼고 공동농업정책(CAP)의 목표를 농업생산성 향상, 농민의 소득향상,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적정한 소비자 가격유지에 두고 있다.

이러한 CAP도 1988, 1992, 1999년(Agenda 2000) 및 2003년 7월(MTR), 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수차례의 개혁을 겪었다.

1차개혁(1988) 때는 농산물 과잉생산문제가 그 배경이 되었고, 2차 개혁(1992) 때는 UR협상에 대비 가격지지 축소 및 직접지불제 도입, 제3차 개혁(1999, Agenda 2000) 때에는 CAP 재정지출억제 등을 목표로 가격지지 축소, 직접지불 강화, 농촌개발정책 확대, 제4차 개혁(2003년 7월)은 단일농가직접지불제도의 도입, 가격지지 축소, 환경과 농촌개발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Agenda 2000의 주요내용은 곡물분야에 대한 지지가격을 2000/2001년부터 2개년에 걸쳐 15% 감축하고, 소득 손실보상을 위한 직접지불금을 인상 지급하며, 직접지불을 조건으로 실시하는 의무 휴경비율을 기존 17.5%에서 2006/2007 까지 10%로 하향 조정하되 시장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



기로 하고, 쇠고기 분야는 광우병과동 등에 따른 공급통제로 재고가 낮아지고 있으나 2005년까지 재고가 늘어날 전망이므로 지지가격을 2000년 7월부터 3년간 균등비율로 20% 감축하고 장려금을 인상 지급하며 조방화를 위한 가축사양밀도는 ha당 2.0 가축단위로 계속 제한기로 하였다. 낙농분야에 있어서는 지지가격을 2005/2006부터 3년간 균등비율로 15% 감축하고 그에 따른 낙농보상금을 2005년부터 지급하되 젖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우유생산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현행 쿼터제도는 2007/2008까지 연장하는 등 생산쿼터제도를 급격히 폐지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환경보전차원에서 CAP보조금 지급시 일정한 환경기준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농가가 이를 위반할 시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조기이농, 농업환경, 임업, 조건불리지역 등과 관련한 농촌개발정책, CAP수행을 위한 재정문제 등도 「Agenda 2000」의 공동농업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EU 공동농업정책 중간개혁안(MTR: Mid-term review)은 2003년 6월 26일 합의되었다. MTR은 전체 예산 규모 면에서는 Agenda 2000에서 설정된 수준과 같지만 CAP의 추가 개혁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변화를 담고 있다. MTR에서는 새로운 농정수단과 운용체제가 도입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당부분의 블루박스에 해당하는 직접지불을 WTO 규정이 허용하는 그린박스의 형태로 전환했다. MTR은 보상 직접지불과 가축두수에 대한 프리미엄 등 블루박스의 대부분을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WTO상의 허용보조(그린박스)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금의 다양한 직접지불을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형태로 통합해 농가당 단일 직접지불(single farm payment: SFP)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둘째, 일부 품목에 대한 가격보조를 폐지하거나 그 수준을 낮췄다. 독일에서 많이 생산되는 호밀에 대한 개입가격이 폐지되고, 쌀에 대한 개입가격은 지금의 1/2 수준인 톤당 150유로로 감축되면서 그 개입물량도 연간 7만 5,000톤으로 제한된다. 곡물에 대한 개입가격은 지금과 같은 톤당 101.31유로로 유지하기로 했다.

낙농제품에 대한 쿼터는 2006/2007~2008/2009년에 0.5%씩 늘어나고, 쿼터제도는 2014년까지 유지된다. 대신에 버터에 대한 개입가격은 2004년부터 4년 동안 모두 25% 줄고 개입물량도 7만 톤에서 3만 톤으로 감소된다. 탈지분유의 개입가격은 3년 동안 총 15%를 감축하지만 개입물량은 10만 9,000톤으로 유지된다. 우유에 대한 목표가격은 없어졌다.

셋째, 환경과 농촌개발에 대한 조치가 강화됐다. 직접지불을 받기 위해 농가는 환경보전 등 기본적인 의무준수요건(cross-compliance)을 이행해야 한다. 의무준수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수혜 농가에 벌칙(보조 규모의 감축)이 부과된다.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 농업환경 조치(AEM)에서 회원국과 공동 부담하는 EU의 비율이 높아졌다. 1인당 GDP가 EU 평균의 75% 이하인 목표 1지역의 경우에 EU의 분담 비율이 최대 85%로 늘어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60%로 정해졌다.

2005년은 2003년 중간개혁에서 제외되었던 설탕 분야의 개혁 방안이 타결되었다. 2004년 6월에 집행위에서 설탕분야 개혁안을 발표한 이래 많은 토론과 의견수렴, 협상의 과정을 거쳐 2005년 11월에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지가격을 4년간 36% 인하하고 보조금 지급은 생산과 단절하되 소득손실의 64.2%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개년 간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공수매 등 시장개입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2006년 12월 EU집행위는 농업부문에 대한 회원국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였는 바, 기존의 복잡한 농업부문 국가보조금 가이드라인을 통합하여 2007~2013년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신설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기존의 농산물 상품광고, 도축장 폐기물 관련 국가 보조금 지급가이드라인 및 농업부문 단기정책 용자지원지침은 폐지되고, 용수 관련 지원, 에너지작물 및 전력 관련 소비세 면제 지원 내용이 국가 보조금 지급 범주에 추가로 포함되었다. 한편, 농산물 가공, 판매 관련 국가보조금 지급규정은 폐지되고, 일반 산업부문 국가보조금 지급 규정에 의해 규율하도록 하였다. 일정 수준(농가당 3년간 3,000유로) 이상 국가 보조금

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규율대상 국가보조금으로 보지 않는 de minimis 규정은 그대로 존속시켰다.

유럽연합은 7년간 중기 예산을 미리 정하는데, 2007~2013년간 중기예산을 확정하였다. 총예산 8,624억 유로 중 농업예산은 3,629억 유로이며 이중 가격지지 및 직접지불에 2,931억 유로, 농촌개발에 698억 유로가 배정되었다. 농촌개발정책 분야에 대한 예산은 분야별로 예산 배정 하한을 규정하였는데, 농업경쟁력 제고에 10%, 농촌경제 다각화에 10%, 환경 및 국토관리 지원에 25%, LEADER 방식에 5%를 최소로 배정해야 한다.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F) 등 여러 회계에서 농촌개발정책의 재원이 마련되고 있는데 이를 유럽농촌개발기금을 창설하여 재원을 통합하기로 하였다.

(통상협력과 농업사무관 김영태)

## 2. 양자간 농업통상협력

2006년도 양자간 농업통상 및 협력활동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결과의 이행 및 2001년부터 논의가 되고 있는 DDA 농산물협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다. 아울러 2004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 협상에서도 양자 통상 및 협력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또한 FTA, DDA 협상을 계기로 미국 쇠고기 수입 등 상대국들의 양자 현안 협의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쌀협상에 따른 MMA 도입 과정에서도 각국의 이해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 추진에 따라 검역·통관 등에서의 수출애로사항 해소요청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부는 국내적으로는 통상의제점검회의 등을 통해 관련과 및 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대응하며, 국외적으로는 주한 외국공관과 수시 접촉하여 각국 동향을 파악할 뿐 아니라, 각종 양자 협의채널(무역·경제공동위, 장관관 면담 등)을 통하여,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사

실관계에 오해가 없도록 우리측 입장을 적극 설명하며 이슈화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초기진화에 주력하였다.

한편, 농식품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수출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품목별 협의채널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인·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고 농업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도 도모할 계획이다.

### 가. 미 국

2006년도 양자간 농업통상 및 협력활동의 핵심은 한·미 FTA 협상과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둘러싼 양국간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농축산물 관세인하가 한·미 FTA 협상의 주요 관심사였으며, 미국은 협상 초기에 위생 및 검역분과에서 동식물검역관련 수입규제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를 원하였으나 과학기술적 사안으로 전문기관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우리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양국협상대표간 동식물검역관련 수입규제는 협상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은 우리의 최대 농산물 수입국이며, 미국입장에서도 한국은 캐나다·멕시코·일본·중국에 이어 다섯번째 수출국이다. 2006년에 옥수수·대두·밀 등 곡물류, 돼지고기·닭고기·낙농품 등 쇠고기를 제외한 축산물, 오렌지·건포도·아몬드·양파·주류·과일 및 채소주스 등 과채류 및 가공품 등 거의 모든 농산물에 걸쳐 약 27억달러 어치를 수입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산물은 과실류(주로 배), 인삼류, 면류 등이 약 2.8억달러 수준으로 수출이 저조하였지만 미국은 일본에 이은 2번째 농식품 수출 시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미국간에는 농산물 교역과정에서 크고 작은 통상현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06년 내내 언론의 주목을 받은 사항은 한·미 FTA협상과정에서의 농산물에 대한 양허문제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이었다. 그 밖에 양국간 농산물 통상현안은 주로 동식물검역 규제에 대한 사항과 생명공학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및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정책건의서를 통해 쇠고기 수입재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지역화 개념 적용, 유전자변형 농산물 함유 가공품에 대한 ‘유전자변형’ 상표표시 의무화, WTO이행계획에 따른 농산물 관세인하 약속이행 및 석류 수입허용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산 감귤의 수출재개와 삼계탕에 대한 수입허용절차의 조속한 진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간의 농산물 통상현안은 한·미경제협의회, 한미통상현안 정례점검회의, 한·미동물검역전문가회의 및 한·미식물검역전문가회의 등의 정례회의와 이런 정기적 협의절차 이외에 우리나라 주미 농무참사관의 외교활동과 주한 미국농무참사관 등과의 공식·비공식협의 등을 통해 일상적인 통상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상협력과 수의사무관 장재홍)

#### 나. 일 본

일본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우리 농산물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다. 우리와 농업여건이 비슷하고 농업통상 분야에서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 WTO, FAO, OECD, APEC 등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상호 정보교류와 공조체제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고, 양국 주재공관 등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8년 10월 8일 한·일 양국 정상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양국을 둘러싼 새로운 경제정세를 기초로 포괄적인 경제통상 분야의 협의를 위한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6년 12월 제5차 회의가 동경에서 개최되어 다자 및 지역차원의 협력, 양국 통상 분야 협력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농업 분야의 고위급 대화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 농업관련 고위급 협의채널을 구축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 양국간 상호관심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농업관련 각종 다자간 국제기구에서의 원만한 공조유지와 정보교류를 확대

할 수 있게 되었다. 2003년 3월 21일 동경에서 제4차 한·일 농업각료회의를 개최하였고, 본 회의에서 양국 농업장관은 WTO차기 농산물협상에서의 공동대응 합의 및 새로운 농업정책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한·일 양국은 상호보완적 농업기술협력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여 1968년부터 한·일 농림수산물기술협력위원회를 매년 교환 개최하고 농업기술협력 및 정보교류를 추진하여 왔으며 제39차 회의가 2006년 11월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한편, 일본은 2003년 5월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농림축산물의 생산·가공 단계 등에서 사용되어 식품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농약, 동물용 의약품 및 사료 첨가물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 제도 시행 전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일본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 14개 종류에 대하여 우리 기준을 반영시켰고, 우리 관심품목의 잔류기준에 대한 추가 반영을 위해 일측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동시에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상협력과 농업주사 오동진)

## 다. 중 국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교역은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래 급격히 증가되어 왔다. 2005년 기준 중국은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중국에 3번째로 많은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2005년 양국간 농산물 교역량은 한국이 중국에 231백만불을 수출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에 2,216백만불을 수출하고 있다. 전체산업 분야로는 한국이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대중국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양국간 통상현안 협의는 매년 개최되는 한·중경제공동위원회와 한·중 무역실무회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전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농산물의 대한국 수출 증대에 관심이 매우 크다. 중국은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정관세폐지

및 세율인하, 수입입찰제도개선, 중국산 과일수입문제 등 경제·통상분야의 관심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요청사항에 대해 국제기준에 입각한 동·식물 검역제도 및 수입절차를 설명하고 상호간 협력을 통하여 무역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공동 번영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양국간 농업의 상호보완적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96년 한·중 농업분야의 전반적인 교류협력강화를 위해 양국간 한·중 농수산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06년 5월 서울에서 제10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양국 농업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함에 따라 WTO, APEC 등 각종 국제 기구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제7차 회의시 양해각서를 개정하고 종전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위주의 협력을 농업정책 및 통상분야 협력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2005년 11월 “김치 기생충알 파동”이 한·중간 통상 마찰로 촉발되면서 양국간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협약체”의 조기 개최에 합의하고, 2006년 1월 제1차 회의를 북경에서 개최하였다. 본 협약을 통해 공산품 뿐만 아니라 식품, 농축산물의 검사검역을 논의함으로써 양국간 농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교류와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협력과 농업주사 오동진)

## 라. 캐나다

캐나다산 농산물은 2006년도에 약 4.4억달러가 수입되었으며, 주요 품목은 제분용밀·유채유·보리·알팔파·돼지고기·치즈·감자제품 등이다. 반면 우리나라 농산물은 라면·감귤·배·홍차등 차류 비스킷 등이 수출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약 0.25억달러에 그쳐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은 그리 활발한 상황이 아니다. 우리나라 농산물중 캐나다로 수출되는 대표 품목은 감귤이나 최근 중국과의 가격경쟁력 열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는 미국시장 편중의 문제점을 벗어나기 위해 최근 들어 우리나라 농산물시장개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세가 높거나 차별대우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국 관심 품목에 대해 유사제품과 동일한 우대조치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으로 2003년 5월 이후 수입이 중단된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배매체가 부착된 팽이버섯의 수입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한·캐나다간 FTA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캐나다는 자국산 쇠고기 문제의 전향적 검토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기술적 전문가 협의를 통해 국제기준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 및 주한 캐나다대사관과의 공식·비공식 협의 등을 통해 통상현안 및 협력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통상협력과 수의사무관 장재홍)

#### 마. 유럽연합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와의 농산물 교역은 전체 규모에서의 비중은 크지 않으나, EU는 우리나라로의 농산물 수출액이 50백만불(2006 잠정)로 8번째로 큰 수출국이며, 우리나라 농산물을 1,587백만불(2006 잠정) 정도 수입하는 미국, 중국 및 호주에 이어 4번째로 큰 수입국이다. EU로부터 수입이 수출보다 월등히 많은 교역 구조이며, 이에 따라 한국과 EU간에는 주로 EU에서 한국으로의 농축산물 수출과 관련한 동식물 검역문제가 양측간 통상현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농업통상에 관련된 협의는 2001년 4월 1일에 발효된 한·EU 기본협력협정 하에 설치된 한·EU 공동위원회에서 농업분야 의제도 포함하여 논의해 오고 있는 바, 특히 동 공동위원회 산하에 농업 실무작업단을 구성하여 양자간 농업통상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함으로써 통상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

2006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한·EU 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측은 한



국산 인삼제품에 대하여 이탈리아 측이 요구하는 식물병증명서(Phytopathologic Certificate)에 대해 이를 요구하는 기관 및 법적근거를 문의하면서 인삼제품이 가공품임을 들어 이 조치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EU측은 쇠고기와 관련,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라 뼈를 제거한 살코기의 수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측은 OIE 규정을 존중하나, EU 지역에서 아직도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임을 감안하여 수입 재개 문제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관련하여 한국 측이 지역화 개념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EU측의 문의에 대하여는 조류 인플루엔자는 여러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철새 등 야생조류에 의해 주로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진정된 이후에 국제기준을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EU측의 녹용 수입허용 요청에 대하여는 BSE가 사슴에 전이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함을 설명하였고, 돈육 수출작업장을 승인하는데 있어 일괄 목록 승인방식(prelisting)을 채택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 방식을 인정하나, 회원국별로 신청을 받아 위생상황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검역협정(WTO/SPS), OIE,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기준의 기초 하에서 이들 통상 현안에 대한 협의해 왔다.

(통상협력과 농업사무관 김영태)

## 바. 중남미 국가

중남미 국가는 지정학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게다가 농작물 및 가축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중해과실파리나 구제역 등이 발생하고 있어 농산물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의 농산물 교역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일부

국가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동식물 검역상의 문제가 해소될 경우에는 농산물교역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브라질은 세계 제2위의 농업국가로서 생산량과 수출량에 있어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옥수수, 대두박, 커피, 오렌지 등 검역문제가 해소된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국 수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금액 기준으로 중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 이어 6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대두유, 옥수수, 대두박의 수출이 많은 편이다. 칠레와는 2004년의 한-칠레 FTA 체결 이후로 포도, 포도주, 키위, 돼지고기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교역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남미 국가는 동·식물 위생 및 검역 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ABC국가(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를 위시하여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자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 주요 국가 및 세부 품목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의 오렌지·쇠고기 및 가금육, 브라질의 망고·감귤류·쇠고기 및 돼지고기, 칠레의 만다린·망고·가금육 및 쇠고기, 멕시코의 포도·오렌지·자몽·탄저린 및 가금육, 에쿠아도르의 망고, 콜롬비아의 열대과일류, 페루의 포도, 우루과이의 감귤류 및 쇠고기 등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들 지역에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채소종자와 사과·배 등 과일류를 수출하기 위해 식물검역상의 수입제한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 등의 열대과일 및 육류의 시장개방 요청에 대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WTO/SPS)」과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국제수역사무국(OIE)」 등 국제기준에서 설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상대국의 위생상황에 따라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며, 그 외의 농산물의 경우 UR협상에서 양허한 범위에서 수입관리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대응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식량 및 유전자원의 확보 등 자원외교적 측면과 농업분야 국제협상에서의 협력 유도를 위한 여러 국가들간의 농업협력 사업을 활발

하게 진행하고 있다. 2005년 5월에는 중남미국가 중 브라질과 최초로 「한-브라질 농업협력위원회 설치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양국의 농업부문 협력을 위하여 정보교환, 전문가 교환, 공동연구, 기타 농업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통상협력과 수의주사 김 규)

### 사. 아시아-아프리카 국가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은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나 농업협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지역이나 풍부한 천연자원 등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 등 동남아국가들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농업국가로 미 작 농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농업과 유사한 측면이 많아 이들 국가와의 농업교류를 통한 협력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 나라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데, 매년 무역불균형 해소를 내세워 개별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검역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열대과일·축산물 등 농산물 수입허용, 검역협정체결 등 자국산 농산물의 대한국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양국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농업장관면담, 경제공동위, 주한주재관 면담 등 다각적인 협의 통로를 통해, UR 등 국제적 협상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관리 제도의 이해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동식물 검역현안에 대하여는 WTO/SPS규정 및 IPPC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 국제식물보호협약), OIE 등 관련 국제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입허용 절차가 운용되고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있다.

아시아-아프리카 각국과의 주요한 통상협력 채널로는 ASEAN+3 농림장관회의,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란, 남아공 등과의 정례적인 경제공동위 및 무역공동위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시로 농업장관회담, 통상장관 및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양국 농업교류 확대 및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통상협력과 주무관 이미자)

### 제3절 농업관련 국제기구 활동

#### 1. WTO 활동

WTO는 UR 협상결과에 따라서 상품,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국제무역질서를 관할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1995년 1월 1일 공식출범하였다. WTO는 출범 이후 각국 무역정책의 개혁 및 자유화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2001년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 농업, 서비스 등 기설정외의 비농산물 시장접근 등 여러분야를 포괄하는 새로운 다자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협상을 출범시켰다. 엄밀하게 말하면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2001년 11월 DDA 협상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이전부터 자체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1997년부터 WTO 회원국간 “분석 및 정보교환”(Analysis and Information Exchange)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00년부터 농업협상이 개시되었고 DDA 협상이 출범함에 따라 DDA 협상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특히, “분석 및 정보교환” 단계를 거치면서 농업협상의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주요 쟁점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01년 제4차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은 비농산물, 농산물, 서비스 분야의 무역자유화와 함께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등 기존 협정의 개정, 환경에 대한 새로운 규범 수립, 4개 싱가포르 이슈(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및 정부조달투명성)를 포함하고 2005년 1월 1일까지 모든 협상을 종료토록 일정을 정하였으며 2003년 9월에 제5차 각료회의를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하여 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치적 지침과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당초 정해진 협상시한을 지키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당초 2003년 3월 및 5월말로 예정된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의 Modality 합의 실패, 서비스 국내규제 및 보조금, 정부조달 등의 규범에 대한 가시적 진전이 나타나지 않는 등 대부분 분야의 중간일정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5차 각료회의가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었다. 칸쿤 각료회의는 DDA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99년 제3차 시애틀 각료회의에 이은 두 번째 결렬로 WTO의 구심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어 WTO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와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당초 칸쿤 각료회의는 미국과 EU의 농업협상 모델리티 수립에 관한 공동 제안서가 제시됨에 따라 성공적으로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제2차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의제로 채택한 싱가포르 이슈의 협상개시 여부에 대해 ACP국가들의 강경한 반대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그러나 대부분 협상 전문가들은 농업 분야에서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 그룹이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의 대폭 감축 및 철폐, 시장접근기회의 확대 등 선진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등 농업분야에서의 합의실패에서 그 실질적인 원인을 찾고 있기도 하다.

제5차 각료회의의 실패 이후 DDA 협상은 한동안 소강상태를 유지하다 2003년 10월 중순부터 주요 4개 분야(농업, 비농산물, 싱가포르이슈, 면화)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수출·입국간 뚜렷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2004년을 맞이하였고, 2004년에 들어서면서 DDA 협상 진전 필요성에 대한 회원국간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이후 소강상태를 유지하던 농업협상은 2004년 2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각 협상기구 의장단이 선임되어 협상준비 체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시 활력을 띠기 시작했다. 협상의 새로운 진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2004년 7월말까지 기본골격 수립을 목표로 향후 협상일정을 확정하고, 3월부터 7월까지 총 5차례의 농업위원회 특별회의를 통하여 세부원칙을 위한 기본골격을 합의하기로 하였다. 특히 2004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대선, EU 집행위원회 교체 등 국내적 사정으로 상반기내에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상당 기간동안 DDA 농업협상의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기본골격만이라도 합의를 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04년 6월 30일 농업위원회 의장은 무역협상위원회(TNC) 회의에서 그

동안 합의된 부분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 보고서를 기초로 2004년 7월 16일 기본골격 초안이 발표되었다. 이후에는 각국의 대표들이 제네바에 모여 배포된 초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집중적인 논의를 펼쳤으며, 각 그룹 및 그룹간 협의를 통하여 합의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2004년 7월 30일 1차 수정안이 제시되었고, 이틀에 걸쳐 진행된 마지막 회의를 통하여 드디어 2004년 8월 1일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을 채택하였다. 이사회는 또한 2004년 말로 예정된 협상시한을 연기하고 2005년 12월 홍콩에서 제6차 각료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기본골격이 합의되기까지 협상과정에 적극 참가하고 특히, 농산물 수입국그룹인 G10의 일원으로서 시장접근분야에서 관세상한 및 의무적 TRQ 증량 저지에 집중하는 한편, G33(개도국 그룹)으로서는 개도국의 특별품목과 개도국 우대 긴급수입 관세제도 확보 등에 치중하였다. 특히 기본골격 초안 제시에 앞서서는 농림부 장관을 비롯한 G10 각료들이 공동회의 및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G10그룹 입장반영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였고, 7월말 집중적으로 벌어진 협상에는 농림부 차관이 협상대표로 제네바 현지에서 파견되어 직접 협상에 참가, G10(수입국 그룹) 공동기자회견 및 주요국 면담 등을 통하여 적극 대응하였다.

우리나라는 관세상한 문제,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 별도처리, TRQ 증량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G-10 수입국그룹, 개도국 그룹 등과 공조하여 대응하였고, 그 결과 G20(수출개도국 그룹)과 미국의 관세상한 설정요구를 저지하고 추후 평가과제로 명시하게 되었고, 민감품목의 자기선정 원칙, 특별품목에 신축성 부여를 확보하는 등 G20이나 미국 등의 강한 주장을 완화시킨 성과가 있었으며 수입국 및 개도국의 입장도 일부 반영되도록 하였다.

2004년 하반기와 2005년 중에는 기본골격을 토대로 세부원칙 마련을 위해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지속 개최되어, 세부원칙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인 쟁점들을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DDA 농업협상의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졌는데,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기본골격에서 합의한 구간별 관세감축을 위하여 비종가세의 종가세 상당치 전환문제, 개도국 특별수입제한조치 등이 논의되었고,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 분야에서는 농업보조금의 구체적 기준, 수출신용, 식량원조 등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

각 분야별 쟁점들에 대한 기술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2005년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6차 WTO 각료회의가 홍콩에서 개최되었으며 각료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하였다.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는 WTO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제네바, 시애틀, 도하, 칸쿤에서 5번에 걸쳐 각료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칸쿤 각료회의에서의 경험은 다자간 무역체제를 선도하는 WTO의 역할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볼 때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무언가 DDA 협상 진전에 있어 성과를 내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회원국 모두가 가지고 있었다.

홍콩 각료회의 직전까지 회원국간 집중적인 협상이 있었으나,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등 DDA 협상 핵심쟁점에 대한 회원국간 입장차, 특히 농업에 대한 입장차가 아직도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관한 완전한 형태의 세부원칙(modalities) 타결을 시도하지 않는다는데 회원국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비록 완전한 형태의 세부원칙을 타결하지 않는다는데 공감대가 있었으나, 회원국들은 홍콩 각료회의 각료선언문에 자국에게 유리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협상 노력을 전개하였다. 우리 대표단도 홍콩 각료회의 개최식 이전부터 활발하게 움직였다.

G10 각료회의에서 한국의 박홍수 농림부 장관, 일본의 나카가와 농림수산대신, 스위스의 다이스 경제부장관 등 각료들이 대거 참석하여 DDA 협상에서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G10 공조를 평가하고 향후 공조를 보다 강화해 나가자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G10 각료회의 직후 G10 각료공동기자회견에서 박홍수 장관은 DDA 협상에서 각국의 다양한 농업현실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G33 각료회의에는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 각료들이 많이 참석하였으며, 홍콩 각료회의에서 개도국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Special Safeguard Mechanism)의 중요성을 강하게 제기하

기로 의견을 조율하였다. 특히,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핵심이 “개발(Development)” 문제이므로 개발 문제의 핵심요소로 특별품목과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를 포함시키자고 합의하였다.

G33은 또한 특별품목과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에 대한 G33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여타 개도국과의 연대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12월 16일 G33과 G20 공동각료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공동각료회의에서 다시 한번 개도국 특별품목과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홍콩 각료선언문은 개도국 특별품목과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에 대해 상세하고 우호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G10은 홍콩 각료회의 기간 중 매일 수시로 접촉하면서 협상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하였다. 특히 홍콩 각료회의 기간 중에는 민감품목에 협상력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조율하고 민감품목에 대한 수출국들의 공세를 차단하는데 많이 노력하였다. 그간 G10은 민감품목은 일반품목에 비해 시장개방폭이 작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 등 수출국들은 관세감축과 TRQ 증량간에 선택을 허용한 것도 큰 양보라고 주장하면서 수입국들을 압박해 왔다. 민감품목에 대한 수출입국간 치열한 대결 끝에 홍콩 각료선언문에는 민감품목의 대우에 대해서는 모든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검토해 나간다고 기술하고 있다.

홍콩 각료회의의 가장 뚜렷한 성과는 향후 DDA 협상일정을 정한 것이다. 홍콩 각료선언문에 따르면 2006년 4월 30일까지 세부원칙에 합의하고, 2006년 7월 31일까지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농업분야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그동안 크게 EU와 미국, 수출국들간 입장 대립이 극심하였던 수출보조 철폐 시한을 정한 것도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다.

미국과 수출국들은 2010년까지 수출보조를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EU가 수출보조적 성격을 띤 수출보조 조치들도 함께 2013년까지 철폐한다는 데 동의함에 따라 수출보조 철폐시한이 정해진 것이다. 이와 함께 개도국들에 한하여 수출물류비 등은 수출보조 철폐 이후 5년간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철폐대상인 수출보조는 양



허된 것이 없으나, 개도국 지위를 전제로 감축면제 대상이던 수출물류비 등의 보조는 앞으로 2018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협상과 사무관 최봉순)

## 2. OECD 활동

### 가. OECD 농업분야 활동 개요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OECD 농업 위원회, 농업정책 및 시장작업반회의, 농업위/무역위 합동작업반회의, 농업 위/환경위 합동작업반회의 등 산하작업반회의, 각종 워크숍 및 전문가회의에 참여하여 논의에 대응하여 왔다. 농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회의에서는 그동안 회원국 농업정책에 대한 점검·평가, 다원적 기능, 식품경제, 농업 환경평가, WTO농업협상 쟁점에 대한 연구·분석, 농산물 시장 및 유통기능 향상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 OECD는 WTO농업무역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과거 OECD의 연구가 UR협상시 주요쟁점이 되었던 농업 보조금 감축문제 및 시장 지향적 농업정책의 추진 등에 영향을 주었듯이, 이러한 작업 결과는 현재 진행중인 DDA농업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OECD는 회원국 농업정책 점검·평가활동의 일환으로 첫째,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가별 검토를 실시하여 회원국 농업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며, 둘째, 회원국 농업정책 개선정도를 점검·평가하고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OECD는 AGLINK라는 고유의 모형을 사용한 중기농업전망을 실시하여 농산물의 생산·소비·무역·가격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OECD와 FAO가 공동으로 세계농업전망을 발간하고 있다.

## 나. OECD 세계농업전망

개도국에서 1인당 소득 증가, 전반적인 경제성장, 도시화 등이 식단의 변화를 일으켜, 축산품과 사료, 과일, 야채, 가공식품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강한 수요증가는 수입수요의 증가를 가져오며, 이것은 선진국보다 2배에 달하는 인구성장률과 함께 강화되고 있다

그 결과, 개도국들은 점차 세계농업 전망 결정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역할을 침식하고 있어 특히 브라질, 인도, 중국은 세계 농산물 생산과 교역을 형성하는 힘의 새로운 진원지가 되고 있으며, 전망 기간 중 그 경향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주요 생산 및 수출국의 차원에서 분명한 전환이 있었으며 비OECD 지역으로 분류되는 개도국과 전환기국가들은 모든 품목에서 OECD국가들의 생산 증가율을 능가하였으며, 유지작물, 유지박, 쌀, 설탕, 돼지고기, 쇠고기, 버터, 분유의 경우 그 격차가 크며 밀, 조곡, 닭고기, 식물유의 경우에는 격차가 작았다. 유사한 경향이 소비 증가에도 나타나고 있어 비OECD 국가들의 증가율은 OECD 지역을 능가하였고, 세계 총액 중 OECD 지역의 생산 및 소비 비중은 2015년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빈개도국들에 대한 특징적인 변화는 기초 식량 품목의 순수입 증가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나 생산성 증가는 국내수요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제시장에 대한 의존이 증가하고 품목 가격 변동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는 진행중인 정책 개혁과 상당한 농업투자로 인해 특히 대량(bulk) 농산품의 생산과 수출 방향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결과 전통적인 수출업자 뿐 아니라 개도국 및 전환기 국가 수출업자들로부터의 강한 경쟁이 세계 농산품시장의 특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5년까지 농산품 교역의 예상증가율은 농산품에 대한 높은 무역장벽의 존속으로 인해 계속해서 타부문보다 미진(underperform)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품의 경우 무역장벽은 일반적으로 가공농산품의 경우가 대량(bulk) 농산품의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즉, 가공단계별 관세율상

승). 가공농산품의 교역(지난 20년간 대량 농산품의 경우보다 빠르게 성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나 이러한 높은 무역장벽 때문에 향후 10년간은 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며, 수입에 대한 규제와 엠바고가 몇몇 국가에서 계속 적용된다. 이러한 것들은 전망기간 동안 원산지 및 도착지의 측면에서 농업 교역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다. OECD 회원국 농정평가

2005년 OECD지역에서 %PSE로 측정되는 생산자지지는 농가 수취액의 29%에 해당하며 이것은 2004년과 변동이 없으며 1986~1988년의 37%에 비해 하락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05년 PSE는 280십억 USD 혹은 225십억 EUR로 추산된다. 생산자지지, 소비자에 대한 재정지원, 농업에 대한 일반서비스의 합계로 정의되는 농업부문에 대한 총지지는 2005년 GDP의 1.1%에 해당하고 있다(1986~1988년 2.3%).

정책개혁으로 인해 농업지지가 생산자에게 제공되는 방식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가장 생산·무역왜곡적인 형태의 지지(생산 혹은 투입요소와 연계된 지지)는 1986~1988년 91%에서 2003~2005년 72%로 감소하였으며, 생산과 연계된 지지의 감소는 또한 국내가격과 국경가격간 격차의 두드러진 감소로 나타났고, 1986~1988년에 OECD 평균 생산자가격은 국경가격보다 57% 높았으며, 2003~2005년까지 격차는 27%로 하락했다.

이러한 형태의 지지의 감축은 경작면적/사육두수 혹은 과거실적기준 지불의 증가를 수반하여 농가수취액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켰고, 환경적 상호준수 조건들이 점차 이러한 지불에 부가되었다. 그러나 생산 혹은 투입재 사용과 연계된 조치들은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들의 생산자지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생산을 조장하고 자연자원에 압력을 주며 무역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와 수혜자에게 타게팅된 정책(맞춤형 정책)으로의 진전은 크지 않았으며, 운영상 보다 투명하고, 특정 성과달성에 적절하며, 변화하는 우선순위를 반영함에 있어 유연한 정책을 확보하는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986~1988년 이래 농가수취액 중 생산자지지의 비율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하락하였으며, %PSE의 가장 큰 감소는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졌으며, 지지 수준이 높은 국가 중 아이슬란드, 스위스, 한국에서 가장 많은 감소가 이루어졌다. GDP 중 농업 총지지의 비율 또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감소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회원국들의 주요한 개혁조치들을 보면, EU에서의 2003년 개혁이 계속되어 우유 직불로의 부분적인 이행과 10개 회원국들의 단일직접지불제로의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한국은 수매제를 폐지하고 직접지불을 도입하는 쌀 정책 변화를 시행하였고, 캐나다는 일련의 특별 지불의 하나로 생산자에게 예외적인 지불을 하는 농가소득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미국에서는 담배에 대한 쿼타와 가격지지가 한시적 직접지불로 대체되었고, 낙농소득손실 직불이 2007년까지 연장되었다. 터키는 농업개혁 프로젝트를 2007년까지 연장하였으며, 아이슬랜드는 행정적 효율성을 위해 기구를 재조직하였다.

2005년 EU 이사회는 설탕제도 개혁에 합의하였으며, 2006년부터 원당 및 백당의 관리가격은 감축되고 새로운 직불이 단일직접지불제도에 통합될 것이다. 또한 2007~2013년간의 새로운 농촌개발 규정이 채택되었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 특징 중 하나는 지지의 기준을 개별 품목에서 다품목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직접지불을 도입하였다. 노르웨이에서는 국가 환경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하였고, 지역 프로그램들이 수립되었다.

DDA 무역협상에서는 2004년 합의된 기본골격을 기초로 농업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종가세 상당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합의되었고 구체적 제안이 만들어졌다.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의 협상은 DDA 협정에 따라 모든 종류의 수출보조를 병행적으로 제거하고 상응하는 모든 수출조치들을 규율하는 합의에 도달하였다. 무역왜곡적 형태의 국내보조 및 관세 감축률 등 시장접근 개선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이 또한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 있으며, 농업정책개혁 과정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협상의 진전이 긴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하여 추진된 한국농정의 2005년 주요한 정책변화는 쌀에 대한 정부 수매의 폐지와 직접적 소득지지 시스템의 도입이며 이들 조치들은 2004년 말 종료되어 2005년 후반 한국에서 비준된, WTO에서의 특별대우에 관한 재협상에 후속하여 이루어졌다. 직접적 소득지지 시스템은 고정직불 및 시장가격수준에 영향을 받는 변동직불 등 2가지 구성요소를 갖고 있으며, 2005년 생산자지지(%PSE)는 2004년에 비해 변화가 없으며, 1986~1988년 70%에서 2003~2005년 62%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다.

생산자지지 중 시장가격지지의 비율은 1986~1988년 99%에서 2003~2005년 92%까지 하락하였다. 1986~1988년 농업인들이 받는 가격은 세계 시장 가격보다 234% 높았으며, 2003~2005년 이 격차는 153%로 줄어들었다. 가격지지에서 직접소득지지로의 전환이 완전히 이행될 경우, 한국 PSE의 구성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쌀을 포함한 몇몇 핵심품목들이 여전히 국제시장신호에서 고립된 채 남아 있으므로, 지지수준을 낮추고 덜 무역왜곡적인 형태의 지지로 전환하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라. 농업위원회 및 관련작업반 활동**

2006년 12월 1일자로 농업위담당 사무국이 개편되어 기존의 식량·농업·수산물국이 무역국과 통합되어 무역농업국(Directorate for Trade and Agriculture)이 되었으며, 농업관련 조직은 농업정책·무역 및 조정과, 농업정책 및 환경과, 농업무역 및 시장과, 비회원국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관련 협력 연구프로그램, 농업관련표준과 scheme, 수산 관련 1개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계획은 향후 2년간의 OECD 분석활동의 청사진으로 각 회원국은 자국의 농정추진과 관련 시사점이 큰 분야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확정 과정에서 수출입국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우리의 관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준비로 수입국공조모임, 의장단 활용 등 다양

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수출국들은 주로 OECD 논의가 WTO의 무역자유화를 선도하는 방향의 분석작업(무역자유화이점, 국내정책의 무역왜곡 등) 유도하고, 수입국들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지속가능성, 식품 안전, 농촌 개발 등 농업의 사회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작업분야는 2005/2006사업계획과 2007/2008 사업계획에서 확정한 내용위주로 분석·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석작업은 크게 농업위원회 차원의 농업정책개혁, 농업무역쟁점, 농업의 환경지속가능성과 농촌지역개발 작업으로 대별하여 논의되고 있다.

2006년 6월 제145차 농업위원회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농업위원회가 담당하는 농업정책개혁, 농업무역, 농업환경 등 3개 작업분야에 관한 2007~2008년간 사업예산계획 초안에 대해 수차례 논의하고 10개 단위사업, 33개 세부작업으로 구성된 사업예산계획에 합의하였다. 2007~2008년 OECD 농업위원회의 사업예산계획은 농업정책개혁 분야에서 ①회원국 농업정책 점검·평가, ② 비회원국 검토와 정책평가, ③농식품 경제에 관한 종합보고서, ④농업정책이 농촌지역 복지에 미치는 영향, ⑤효율적 식품·농업정책 방안, 농업무역 분야에서, ⑥시장 및 정책에 대한 중기 전망, ⑦WTO 농업협상 평가, ⑧농업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 분석, 농업환경 분야에서 ⑨ 데이터베이스와 모델 개발, ⑩효율적 농업환경 정책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수입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농촌개발, 식품경제, 농가위험관리, 바이오경제에 관한 작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이선복)

### 3. FAO 활동

#### 가. 개요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1945년 10월 16일 정식 발족하여 현재 4,000여명의 직원과 19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UN 최초·최대의 상설전문기구로서 회원국의 농업, 수산업, 임업, 식품영양 및 안전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이를 회원국과 UN기구에 배포하고 있으며 이들과 관련된 많은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농림수산분야의 UN본부라 할 수 있다.

FAO는 2년마다 개최되는 총회를 비롯하여 지역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각종 위원회와 정부간 그룹회의 등을 개최하며, FAO에서 논의된 사항이 기초가 되어 각종 농림수산업에 관한 국제규범이 제정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식량안보특별프로그램(SPFS), TeleFood, 기술협력사업(TCP), 월경 동식물 병해충에 대한 긴급예방시스템(EMPRES) 등이 있다.

○ 식량안보특별프로그램(SPFS)

1994년부터 저소득식량부족국(LIFDCs, low-income food-deficit countries)의 만성적인 기아극복과 식량생산성 제고를 통한 국가 및 가계차원의 식량안보 상황개선을 위해 수질관리, 작물생산의 집약화·다양화, 제약요소 분석 및 해결 등의 사업 수행

○ TeleFood

1996년 세계기아극복을 위한 실천과제의 하나로 1997년부터 “세계식량의 날(매년 10월 16일)”을 전후하여 세계 각국에서 음악회, TV 및 라디오방송, 스포츠경기, 전시회 등을 통한 모금운동 추진

○ 기술협력사업(TCP)

1979년부터 회원국의 긴급한 기술지원 필요성에 대응하여 농림어업 및 농촌개발에 관한 당면문제 즉, 식량증산, 영세농가 및 농촌 노동자의 소득향상 및 영양상태개선 등 해결을 위해 FAO의 특화된 기술능력 활용사업으로 FAO 정규예산으로 지원하는 핵심사업

○ 월경(越境) 동식물 병해충에 대한 긴급예방시스템(EMPRES)

1994년부터 FAO가 동식물 질병의 국경을 초월한 전파를 차단, 근절, 예방하기 위하여 조기경보, 조기대응방안, 질병연구 및 조정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활동을 강화한 사업으로 메뚜기와 우역(牛疫)에 대한 대응을 2대 과제로

하여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EMPRES(The Emergency Prevention System for Transboundary Animal and Plant Pests and Diseases)가 관여하며 TCP를 통해 질병퇴치를 지원

## 나. 주요활동

지난 1996년 로마에서 세계 각국의 정상과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 WFS)에서 2015년까지 기아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정치적 의지와 공통의 책임과 개별국가 차원의 노력을 위한 「로마선언」과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2002년에는 WFS이후 기아극복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아극복 목표달성에 필요한 조치 및 촉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로마에서 38개국의 국가원수를 포함한 184개 국가와 81개 국제기구가 참가한 「세계식량정상회의 : 5년후(World Food Summit : five years later, WFS : fyl)」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기아극복을 위한 세계적 연대노력을 강조하는 “국제빈곤 퇴치연대(International Alliance against Hunger)”의 제목하에 「세계식량정상회의 : 5년후」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문에서 언급한 “적정식량에 대한 권리”의 점진적인 실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정부간 작업반 회의가 여러 차례 개최되었는바, 우리나라는 가이드라인의 자발적 성격을 강조하고, 국가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 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는 1949년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1966년에는 서울에서 아태지역 총회를 개최하였고, 2002년에는 제19차 아시아-태평양지역 농업통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00~2001년 기간중에는 최초로 FAO 재정위원회 진출하여 FAO 예산과 사업을 심의하고 재정상황을 평가하는 등 주요정책과 재정운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 특히, 1989년 이후 3년 임기의 이사국에 7회 연속 진출하여 동 기구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FAO와 유기적인 연결 및 동 기구 회원국들과의 기술교류와 정보교환을 위해 1957년에 『FAO한국협회』를 설립하였으며, FAO한국협회는 “세계식품과 농업(월간지)”, “세계식량농업백서” 등 국제농업 관련자료를 번역·발간하여 농업·식품관련 정부기관, 단체, 협회, 학계 등에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신속히 전파하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농정포럼, 국제식문화 발전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우리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교두보 마련에 이바지 하고 있다.

근래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FAO에 납부하는 기여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도 현재 전체 FAO 분담금의 1.83%인 연간 70억 원 수준으로 납부규모는 190개 회원국 중 1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GDP증가에 따라 기여금의 규모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3-8> 연도별 FAO 분담금 내역

연도별	연간 분담금	분담비율	순 위
2000	3,250,871\$	1.01	16
2001	5,590,222\$	1.74	11
2002	6,053,917\$	1.88	10
2003	6,003,472\$	1.86	10
2004 ~ 5*	3,244,907€+ 3,150,883\$	1.86	10
2006 ~ 7	3,234,048€+ 3,238,619\$	1.83	11

주 : 유로화 강세로 인해 2004년도부터 회원국의 분담금을 달러화와 유로화로 분리(Split Assessments)하여 납부키로 제32차 총회(2003년)에서 결의함.

분담금 납부와는 별도로, 2004 ~ 2007년 4년간 한-FAO신탁기금(72만불)으로 한-FAO잠사업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남미, 아프리카, 동유럽지역의 잠업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도 FAO외부

독립평가(IEE) 기금지원(10만불), 2005년, 2006년에 연이어 역내 개도국들의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국제워크숍을 유치하였고 2006년에는 동 기구 산하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국제기준제정마련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FAO에 대한 지원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제협력과 주무관 강승규)

#### 4. ASEAN+ 3 농림장관회의

2000년 8월 양가라 필리핀 농업장관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과 한·중·일 3개국 간 농업분야 협력 필요성을 요구하였고, 3국이 수용하여 2001년부터 매년 하반기 「ASEAN+ 3 농림장관회의(AMAF+ 3)」가 개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 회의에 매년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농업발전 경험을 소개하고 대아세안 협력사업을 제안함으로써 역내 개발격차의 해소 및 통합에 기여하고 아국의 위상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ASEAN과 한·중·일 3국의 농업협력은 6개 분야 - ①빈곤극복 및 식량안보 ② R&D ③인적자원개발 ④국제적·지역적 이슈 ⑤농업정보 연계화 및 교환 ⑥무역촉진 - 로 구분되고 있다. 이 가운데 ‘빈곤극복 및 식량안보’, ‘인적자원개발’, ‘농업정보 연계화 및 교환’에 대한 협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빈곤극복 및 식량안보’ 협력 차원에서 동아시아비상쌀비축제(EAERR : East Asia Emergency Rice Reserve)가 논의되고 있으며, 2004년 3월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후 본격적인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농업정보 연계화 및 교환’ 협력 차원에서 아세안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 : ASEAN Food Security Information System)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AFSIS는 식량정보(작황, 시장가격, 수출입, 재고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공유함으로써 역내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HW/SW 개발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제1기(2003~2007년) 사업이 완료되면 제2기(2008~2012년)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협력사업 제안 및 이행이 본격화된 것은 2003년부터인데,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협력의 중점을 두어 왔다. 2003년 8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3차 회의에는 허상만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농업금융에 관한 워크숍’ 개최를 제안하였다.

2004년 10월 미얀마 양곤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에는 박해상 농림부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제2차 회의에서 ASEAN 회원국가를 대상으로 제안된 「미곡증산」과 「가축 인공수정」 연수생 초청사업의 2003년 추진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제3차 회의에서 제안한 ‘농업금융에 관한 워크숍’의 개최계획을 설명하였다. 또한, 제4차 회의에서는 아세안 회원국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의 ‘벼농사 물관리 자동화 기법 및 농업용수관리 기술에 관한 연수과정’을 제안하였다.

2005년 필리핀 따가이따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농림장관회의에는 이명수 농림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기초연설을 통해 농업이 갖는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과 농업 비중이 높은 아시아 지역에서 농업·농촌분야의 발전이 역내 빈곤경감, 기아감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지난 4년 동안 아세안국가와 한·중·일 간의 농업협력사업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내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였고,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정책, 자연재해 및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등 많은 도전과제가 어려움에 있는 만큼 이러한 여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아세안 지하수개발 및 관리’, ‘아세안식량안보정보시스템 훈련과정’ 및 ‘아세안 식물검역 전문가 초청 연수’가 등 총 3개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2006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6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에는 박해상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기초연설을 하고 우리측 협력사업에 대한 실적과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실시하였던 ‘아세안 지하수개발 및 관리’, ‘아세안식량안보정보시스템 훈련과정’, ‘아세안 식물검역전문가 초청 연수’를 2006년에도 계속 실시할 것과 새롭게 ‘조류인플루엔자 진단기술 연수 및 진단키트

제공’, ‘서울국제농기계박람회 및 국제농기계학술대회 초청’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6차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사업은 2007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아세안회원국의 관심이 뜨거워 높은 참여율이 예상되며, 아세안 회원국들은 한국의 협력활동이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지속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제7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는 2007년 11월 2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다. 또한,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발효 등을 배경으로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국가간의 관계가 이와 같이 긴밀해짐에 따라 농업분야 협력도 더욱 확대·강화될 전망이다. 제7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에서는 이러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그간 협력사업에 대하여 성찰하고 상호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할 예정이다.

<표 1-3-9>

**우리부 역대 수석대표 현황**

회차	일시 및 장소	수석대표	고위급회의
1차	2001. 10. 인도네시아 메단	김동근차관	이명수국제국장
2차	2002. 10. 라오스 비엔티안	김동태장관	이명수국제국장
3차	2003. 8. 말련 쿠알라룸푸르	허상만장관	이명수국제국장
4차	2004. 10. 미얀마 양곤	박해상차관보	김경규국협과장
5차	2005. 9. 필리핀 따가이파이	이명수차관	배종하국제국장
6차	2006. 11. 싱가포르	박해상차관	김창현국협과장

<표 1-3-10>

**우리나라 제안사업 내역**

사 업 명	년도	시행기관	재원
미곡증산기술연수과정	2003	농진청	KOICA
가축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기술연수			
농업금융에 관한 워크샵		농협	농협
벼농사 물관리 자동화 연수과정	2004	농촌공사	KOICA
AFSIS 훈련과정	2005	정보화담당관실	농림부
지하수개발 및 관리 연수과정		농촌공사	KOICA
아세안 식물검역전문가초청연수		농림부/식검	농림부
조류인플루엔자 진단기술연수 및 진단키트 제공	2006	농림부/ 수과원	농림부
2차 아세안 식물검역전문가초청연수		농림부/식검	농림부
국제농기계박람회 및 학술대회 초청		농림부	농림부
아세안 식량안보정보시스템 초청훈련		농림부	농림부 /KOICA
2차 지하수개발 및 관리 연수과정		농촌공사	KOICA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박경희)

**5. 기타 농업관련 국제기구**

**가. 세계식량계획(WFP)**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은 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y 또는 Less Income and Food Deficit Country) 기아해방을 위한 잉여농산물 원조를 목적으로 1961년 유엔총회 결의로 설립, 활동을 개시하였다. 동기구는 UN 회원국과 FAO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자발적인 기여를 바탕으로 식량 원조를 통한 개도국의 비상사태 해결과 자력개발계획을 자극하며 학교 등 기관 급식사업을 지원하여 급식 대상자들이 적절한 영양을 취하도록 노력하고,

각국 농촌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임금지급 수단으로 식량 원조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하여 동기구로부터 1964년부터 1984년까지 홍수대책, 간척사업, 도로개설 등 총 23개 사업에 10,200만불의 지원을 받았고, 1990년대 중반부터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하여 2007년 현재 매년 10만불의 자발적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동 기구를 통하여 대북식량지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표 1-3-11> WFP를 통한 대북지원 내역

연도	1996	1997	1998	2001	2002	2003	2004	2005~6
내역	혼합곡물 3,409톤	옥수수 5만톤, 분유 300톤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옥수수 10만톤	옥수수 10만톤	옥수수 10만톤	옥수수 10만톤	없음

#### 나.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은 개도국의 농업개발 및 식량생산 증대를 목적으로 UN 산하에 1977년에 창설되어 165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농업개발사업과 관련된 자금유자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창설회원국으로 1981년부터 5차례에 걸쳐 이사국으로 진출하였으며, 2007년 현재 연간 1백만 달러의 자발적기여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5월 IFAD총재(Mr. Lennart Bage) 방한시 농림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하여 한-IFAD농업협력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이를 계기로, 개도국 회원국을 대상으로 2007년 3월 농협중앙회, 농촌진흥청, 농림부가 참여하는 가운데 한-IFAD 공동으로 농촌개발정책에 관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한편, 동 기구는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6년 이후 잠업개발사업(1996~2001, 16백만불), 축산복구지원사업(1998~

2002, 29백만불), 고지대식량안보사업(2001 ~ 2006, 7백만불 보조, 24백만불 용자) 등의 사업을 추진한바 있다.

#### 다.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fro-Asia Rural Development Organization)는 아프리카, 아시아 저개발국의 농촌개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62년 3월에 창설된 정부간 기구로 개도국이 개도국을 원조하는 남남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기구이다. 현재 29개 회원국과 1개 준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63년 2월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집행위원국으로 활동중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1973년 3월 AARDO와 “극동지역사무소 설치”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역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7개 회원국을 관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 기구 재정 기여면에서 2006년도 61천불의 분담금을 납부하여 일본, 인도에 이어 3번째로 큰 재정공여국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역내 회원국들에게 농업발전경험을 전수하기 위하여 1986년부터 농업·농촌발전의 경험을 담은 “새마을 연수과정”을 KOICA사업으로 2년마다 실시하여 왔으며, 시대변화와 회원국의 요구를 반영하여 2006년부터는 동 연수과정을 “지속농업개발과정”으로 대체하여 매년 실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외교적 입지가 취약한 아프리카 회원국에 대하여 우리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국제협력과 주무관 강승규)

## 6. 농업·환경·무역 연계 논의동향

우루과이 라운드이후 농업의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지속가능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농업의 무역과 환경에 대한 영향이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친환경농업의 장려라는 당위성과 함께, 농업보조의 환경효과 및 무역효과를 분석하여 좀더 친환경적이고 무

역친화적인 농업정책을 모색하려는 세계적인 흐름이 있다. 이 과정에서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이 노정되고 있는데, 농업활동은 비료 및 농약의 사용을 통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연경관보전이나 홍수조절을 통하여 환경에 유익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농업·환경·무역논의는 크게 OECD, WTO, 다자 환경협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 가. OECD 농업환경 합동작업반

OECD는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을 주창하면서 농업과 환경간의 관계분석을 위하여, 1993년 9월부터 농업위·환경정책위원회 합동작업반 회의(JWP, Joint Working Party of the Committee for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 Policy Committee)를 설치하여 이 분야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주요 논의사항은 농업환경지표의 개발, 농업환경기준 준수조건 농업지원정책(Environmental Cross Compliance : ECC) 분석, 농업생산·무역자유화·환경과의 관계, 회원국 농업환경정책 목록 작성, 농업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농업의 환경영향 분석 모델 개발) 등이다. 이상의 논의들은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OECD에서의 기본적인 시각은 오염자 부담원칙(Polluter Pay Principle : PPP)과 농업보호 축소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환경에도 긍정적이라는 인식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농산물 수입국 그룹들과 공조하여, 농업의 환경 긍정적 외부효과(다원적 기능 등) 부각에 노력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 및 지역별로 다양한 관계로 이를 반영한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농업환경지표의 개발과 관련, OECD에서는 그간의 농업환경지표 논의결과를 종합한 농업환경지표 종합보고서 제4권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회원국의 농업환경 실태를 수질, 용수사용, 양분, 농약사용, 토양, 생물다양성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분석한 보고서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작업반 논의결과와 회원국 설문결과 및 지표관련 전문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요약부분과 OECD 국가들의 농업환경 변화(제1장), 농업환경지



표 개발 진행 상황(제2장), OECD 국가들의 농업환경 상태 추세(제3장), 정책분석도구로서의 농업환경지표의 활용(제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환경지표 종합보고서 제4권은 2007년 중 공식적으로 발간될 계획이며, 농업환경정책 목록(inventory), 생산자지지 추정치(PSE) 등과 함께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환경기준 준수조건 농업지원 정책(Environmental Cross Compliance : ECC)은 ECC의 개념, 특성, 다른 농업정책과의 일관성 등에 대하여 분석과 아울러 EU,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도 분석하고 있다. 2007년중 분석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인에 대한 직불 정책 개혁과 관련하여 적용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나. WTO 무역환경위원회 회의

1995년 출범한 WTO 무역환경위원회(CT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에서는 무역과 환경에 관한 10개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농업 부문과 관련된 주요 의제는 “무역제한 및 왜곡 제거의 환경적 편익”으로써, 무역 왜곡조치(농업보조금, 고관세 등) 제거가 환경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 또한 2002년 3월부터 도하선언에 따라 무역환경위원회에서 환경협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1년에 2차례 WTO 규범과 국제환경협약의 관계,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 감축 등의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2002년 6월 회의에서 개도국과 케언즈 그룹(농산물수출국들)들은 유기농산물도 환경상품에 포함시켜 저관세 및 무관세품목으로 전환시키자고 주장하였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입국들은 반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회원국들은 2005년 12월 홍콩각료회의 전까지 환경상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비농산물협상(NAMA)과 연계하여 상세 협상원칙(modality)을 수립하고자 하나 환경상품의 범위에 대한 회원국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상설의제인 “무역제한 및 왜곡 제거의 환경적 편익”의 표제하에서 다루고 있는 농업보조의 문제에 대하여 케언즈 그룹은 농업보조금이 농산물 생산을 촉진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가 무역자유화를 통해 환경편익을 증대시키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EU, 일본, 노르웨이 등과 공조하여 농업보조금은 경관보존, 홍수조절등의 다양한 환경효과를 지니므로 보조금의 감소는 환경에 부정적일수도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각국의 특수한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환경과 연계된 농업보조금 논의가 농산물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 다. 다자간 국제환경협약 논의

OECD, WTO 등 다자국제기구에서의 논의와는 별도로 환경보전을 위해 무역을 규제하고자 하는 각종 국제 환경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지구온난화가스로 지목받고 있는 이산화탄소(CO<sub>2</sub>), 메탄(CH<sub>4</sub>), 아산화질소(N<sub>2</sub>O) 등을 감축하도록 약속한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유해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사전통보승인(PIC)협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을 금지·제한하고자 하는 스톡홀름협약, 멸종위기의 다양한 생물종을 보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지속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생물다양성협약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특히, 유전자변형농산물 등 현대생명공학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생명 공학제품의 국가간 이동 및 자연방출이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생태계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2000년 채택되고 2003년 9월 발효되었다. 「생명공학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로 명명된 동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의정서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s)를 사용 용도에 따라 환경방출용 및 기타 LMOs, 식용·사료용·가공용(LMO-FFPs), 밀폐사용 LMO 등 3가지로 분류하여 국가간 이동시 차별화된 교역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동 의정서의 채택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임을 감안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일본, EU, 스위스, 노르웨이 등과 공조하여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수입국의 새로운 환경에 들어올 때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수입국이 그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통보승인제도(AIA, Advance Informed Agreement)를 반영토록 하여 수입국의 주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동 의정서 가입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는 2001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동 법률에 따라 농업·임업·축산업용 LMOs의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부는 ‘농업용 LMO의 수출입 등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였다. 정부에서 2007년 10월 31자로 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사무국에 기탁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8년 1월 1일부터 당사국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LMO법 및 관련 고시 등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협력과 농업사무관 한철수)

## 7. WTO/SPS협정 이행관련 논의동향

UR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협상그룹은 위생 및 검역에 관한 조치가 국제 교역을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주목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규율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WTO/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WTO/SPS 협정’으로 약칭)”이며, 1995년 1월 발효된 이후 벌써 12년이 지나게 되었다. 사실 위생 및 검역에 관한 국제무역 규범은 WTO협정에 처음으로 반영된 만큼 새로운 분야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이해당사국간의 협의와 아울러 WTO차원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를 통해 위생·검역 조치에 관한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규율이 대부분 정립될 수 있었다. 이러한 규율을 정립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WTO/SPS협정에 근거하여 설치된 WTO/SPS 위원회이며, 매년 서너차례의 정례회의를 개최

하고 있다. 2006년에는 4차례의 회의(2006년 1월-34차 추가회의, 2006년 2월-35차 회의, 2006년 6월-36차 회의, 2006년 10월-3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006년도 WTO/SPS위원회에서는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빈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 이를 인정하여 농축산물의 수입을 가능케 하도록 규정한 WTO/SPS협정 제6조(지역화 인정) 이행지침을 작성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2005년 3월부터 브라질을 주축으로 한 중남미 국가들은 지역화 인정을 위한 지침개발이 시급함을 역설해 왔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여 일본·대만과 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우리나라와 입장이 유사한 7개국 모임(LMC 그룹; Like-minded Countries Group)은 지역화 인정지침을 개발한다는 대의에 순응하되, WTO/SPS협정에서 정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자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공조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브라질 등 중남미 그룹은 병해충 지역화 인정을 위한 평가절차 상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 평가단계별로 이해당사국간의 충분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또한 일정한 시간 내에 완료되도록 강제(시한을 정하자는 의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LMC 그룹은 이미 WTO/SPS협정과 OIE/IPPC 기준에서 지역화 인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한편, 중남미 그룹이 요구하는 사항은 병해충의 유입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그 와중에서 2006년 3월 WTO/SPS 사무국은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그간의 쟁점과 논의결과를 정리하여 지침초안을 제시하였다. 동 지침초안에 대해 많은 회원국들이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우리나라도 회원국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화 평가절차에 시한개념을 둘 수 없다는 등의 의견을 공식문서로 개진한 바 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WTO/SPS 위원회는 OIE나 IPPC가 기술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지역화 인정기준을 정하였거나 논의 중에 있음을 주목하고 이와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역화 인정지침을 작성하기로 한다는데 기

본적인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지역화 인정지침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서는 LMC 그룹과 중남미 그룹 모두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하였으며 결국 지침문안을 작성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되었다.

한편, 브라질은 우리나라와의 양자협의를 요청하고 자국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 수출을 위한 위생조건을 문의하면서 향후 구제역 비발생지역 인정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브라질내 위생상황이 불안정함을 지적하고, 현 상황에서는 열처리 가공제품에 대한 검토는 가능하나 신선 쇠고기 등의 수입허용 검토는 어렵다는 점을 밝히는 선에서 대응하였다.

SPS위원회에서는 WTO/SPS협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국가의 위생 및 검역관련 무역현안에 대한 이의제기 및 답변 등 현안 논의의 장이 제공되고 있다. 2006년에는 우리나라의 SPS조치와 관련된 통상문제가 WTO/SPS 위원회에서 공식 의제로서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가까운 장래에 지역화 지침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 구제역 등 주요 질병 및 병해충에 관한 지역화 인정문제에 대한 불만이 다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SPS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않았으나 호주(호주산 생우 검역, 한국산 감귤·단감 수출 등), 캐나다(캐나다산 쇠고기, 한국산 팽이버섯 수출 등), 남아공(레몬 등), EU(육류 수출작업장 승인), 뉴질랜드(감자), 알젠티(가금육, 오렌지) 등과 수차례의 비공식 협의를 개최하였으며, 관심사항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들 국가들이 자국산 농산물 및 축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검역조치를 이의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관련 조치의 정당성 및 후속조치 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다.

2006년에도 국제교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의 위생 및 검역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에 대하여 WTO/SPS협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WTO 사무국에 통보하여 각 회원국에 회람토록 조치하였다.

(통상협력과 수의사무관 허승무)

## 8. 국제농업협력사업

국경을 넘나드는 전염성이 강한 조류독감의 발생, 인도양연안을 강타한 쓰나미 등 광범위한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은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국제이슈를 깊이 들여다보면, 발생국의 경제적 빈곤상황이 근저에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이러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기술협력, 자금 및 물자지원 등을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나라의 주된 산업이 농업임을 감안할 때 국제농업협력의 역할이 특히 크다 할 것이다.

또한, 최근의 DDA/FTA 협상 경험은 국제사회에서의 우호적인 관계수립이 필요함을 보여주는데, 국제협력사업은 이러한 우호관계 수립을 위한 수단으로도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 상대국에 대한 농업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기업을 진출시키며, 필요한 농식품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출관로를 개척하는 등 부대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이에 농림부에서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6년에 국제협력예산 8억4천만원, 2007년 13억원을 확보하는 등 국제농업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국제협력사업의 목표를 첫째,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개발도상국내 기아 및 식량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 증대, 둘째, 한국에 우호적인 세력 확보로 DDA, FTA협상의 측면지원, 셋째, 농업관련 해외투자 및 수출지원을 위한 정보수집 기반마련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농업협력사업은 기존 농업협력약정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면서 전략적인 중점지원 지역으로 선정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신규 협력약정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아세안과 같은 지역협력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국제적인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연수사업을 정례화 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아국의 농업협력사업을 국제적으로 특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7년에 추진 중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 농업협력약정 체결 후속조치 및 체결을 위한 준비사업

- 몽고
  - 축산물 위생기술개발 및 연수
  - 양돈 및 비닐하우스기술 연수
- 아제르바이잔
  - 수확후관리기술 초청연수
  - 수리관개기술 초청연수
- 캄보디아 협력사업
  - 옥수수 종자 개발 지원

◇ 아세안 등 지역협력체와의 협력사업

- 조류인플루엔자 진단기술연수
- 식물검역전문가 연수
- 식량안보 정보시스템 훈련
- 수확후관리기술 개발 이전

◇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 국제식물보호협약(FAO/IPPC)
  - 국제식물검역 기준제정 워킹

◇ 구소련 독립국가연합지역 고려인 동포지원 사업

- 고려인동포 농업기술연수
- 고려인 전문가 파견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이은정)

# 2006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제2편 ●

제1장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정추진기반 강화

제2장 2006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 제1장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정추진기반 강화

### 제1절 농업·농촌 종합대책

#### 1.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 및 조정 추진

정부는 10년간(2004~2013)의 농업·농촌 분야 중장기 발전 계획인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상황변화에 맞추어 보완하고 투융자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종합대책과 투융자계획을 3년 단위로 평가·조정하기로 대책 발표 당시(2004년 2월)에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3월부터 지난 3년간(2004~2006)의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DDA/FTA 협상진행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종합대책과 투융자계획을 조정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우선, 2005년 12월부터 운영해온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단을 지속 운영하면서, 관계부처협의회, 투융자평가협의회 구성·운영 등 점검·조정 필요한 추진체계를 갖추었다.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 및 조정 워크숍, 농림기관 혁신 토의, 농업인단체장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투융자평가 연구용역, 관계부처, 농업인단체가 참여한 투융자평가협의회(5회) 및 시도 농정과장 회의 등을 개최하여 점검·조정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공모(4~9월)를 통해 9건의 정책과제를 선정하였고, 여론조사(농업인 350명, PCRМ고객 3,300명), 농림부·국정브리핑 홈페이지와 블로그(우리농)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정책제안을 적극 수렴하였다. 여론수렴 결과, 농업인들은 농산물 가격안정, 재해 등에 대비한 경영위험관리, 직불제 확대, 연금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전문가토론, 여론수렴결과 등을 토대로 소득·경영안정대책을

대폭 보완하고 농정체계를 농가유형별 맞춤형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119조원 투융자 계획 조정방향을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외경제위원회에 보고(6월 21일)를 하였다.

이후,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119조원 투융자 계획 조정과 관련한 세부 작업을 진행하였다. 세부추진과제별로 정책추진실적과 투융자실적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투융자 규모를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11월 27일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FTA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 조정은 한미FTA 협상과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 협의(12월 5일), 중앙농정심의회 보고(12월 18일) 등을 거쳐 조정방향을 정립하는 수준에서 2006년도 조정 작업을 마무리 하였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송남근)

## 제2절 2006년도 예산 중점투자분야 및 재원확보

### 1.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예산규모

2006년도 농림예산은 대외적으로는 FTA, DDA 등 농산물시장개방 추세 및 대외적으로는 농산물 가격불안정, 잦은 재해,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 심화, 농촌지역 복지여건 낙후 등 어려운 상황의 인식하에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삶의질 향상 5개년 계획의 실천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2006년도에는 농업·농촌대책과 쌀협상비준대책 소요를 증액 반영하고 새로운 농정수요에 부응하는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10개)하는 등 농림부문 총 예산규모는 전년에 비해 3.2% 증가한 8조 7,912억원으로 책정되었다.

농가소득·경영안정, 농촌개발·복지증진, 농업체질강화 부문의 예산은 2005년에 대비하여 증가하였고, 생산기반조성, 양곡관리·농산물수급 부문은

축소 편성하였다.

농림부문 예산의 분야별 편성내역 주요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강화를 위해 직접지불제를 확충하였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단가를 10만원/ha 인상하고, 조건불리직불제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직불제 예산이 2005년 1조 14억원에서 2006년 1조 9,235억원으로 0.9% 증가하였으며, 재난대비 경영안정장치 강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확대(535억원 → 767억원)하고, 농업인재해공제 지원단가를 현실화(28,100원 → 46,140원)하였다.

농가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농신보 금융기관 출연을 확대(4,000억원 → 5,780억원)하고, 영농비 부담경감을 위해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실소요를 지원하였다.

농촌사회 안정을 위한 복지 및 교육지원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50%(2005년 40%)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을 2005년 2ha에서 2006년에는 5ha미만 농가까지 확대하고,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무이자 융자지원을 확대(127억원 → 483억원)하였다. 또한, 취약농가에 대한 영농인력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227억원)하고, 농촌지역개발을 이끌어갈 지역리더육성, 그린투어축진 등을 위한 도농교류활성화사업의 지원을 확대(19억원 → 39억원)하였다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245억원 → 420억원) 및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인상하고, 저농약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농산물 생산에서 수확후 관리단계까지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축산물HACCP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인증 및 사후관리 전담조직설립 운영(11억원) 및 신속한 방역을 위해 공익수의사제도를 신규 도입하였다.

전문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식·기술농업 확충을 위해 농업인 교육 인프라 확충 예산을 확대(36억원 → 122억원)하고, 농림기술개발은 핵심전략기술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450억원 → 522억원)하였다.

생산기반조성사업은 계속지구 준공위주로 추진하되, 재해대비 시설개보수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표 2-1-1〉 2006년 농림예산 재원별 규모(2청 포함)

(단위 : 억원)

구 분	2005예산 (A)	2006예산 (B)	증△감	
			(B-A)	%
◇ 예산일반지출	85,159	87,912	2,753	3.2
◦ 농가소득·경영안정	21,843	23,405	1,562	7.2
◦ 농촌개발복지증진	4,708	5,760	1,052	22.3
◦ 농업체질강화(농진청,기본경비포함)	12,792	14,481	1,689	13.2
◦ 양곡관리농산물수급	18,544	16,205	△2,339	△12.6
◦ 농업생산기반조성	16,373	16,334	△39	△0.2
◦ 농축산경영자금	3,187	2,828	△359	△11.3
◦ 산 립	7,712	8,899	1,187	15.4

(재정팀 서기관 이정형)

## 2. 농특세 운용

2006년도 농특세 세입실적은 2조 9,597억원으로 세입예산액 2조 7,345억원보다 2,252억원(8.2%) 증수되었으며, 2005년도 세입실적 2조 4,730억원보다 4,867억원(19.7%) 증수되었다. 증수요인은 증권거래세(거래대금의 0.15%)와 종합부동산세(15%→20%) 수납실적이 예년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06년도 집행실적은 농어업경쟁력강화로 1,990억원, 농어촌생활여건개선 2,449억원, 농어민복지증진에 1조 5,468억원이 사용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9,690억원이 전출되어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되었다.

(재정팀 사무관 최태열)

### 제3절 농림사업 평가 및 투융자 효율성 제고

#### 1. 농업·농촌 투융자 현황

2006년은 농업·농촌종합대책 119조원 투융자 계획 시행 3년차로서 2006년 투융자규모를 10조 3,289억원(국고예산기준)으로 계획하여, 계획대비 실적은 106.2%로 10조 9,715억원이 집행되었다.

<표 2-1-2> 2006년도 투융자 계획 및 집행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계 획(A)	실 적(B)	B-A	대비(B/A)
국 고	103,289	109,715	6,426	106.2
(보 조)	(77,146)	(84,687)	(7,541)	(109.8)
(융 자)	(26,143)	(25,028)	(△1,115)	(95.7)

분야별로는 국고투융자 10조 9,715억원 중 영농규모화 촉진, 전문농업인 육성 등 농업체질 강화 및 경쟁력 제고 분야에 3조 4,733억원(31.7%),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 농외소득 증대 등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강화 분야에 2조 7,841억원(25.4%), 농촌 사회안전망 확충, 농촌지역 개발 등 농촌 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조 2,402억원(11.3%), 농산물 유통혁신 분야에 7,018억원(6.4%), 산림자원 육성 분야에 8,574억원(7.8%), 농업기계화를 포함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분야에 1조 9,147억원(17.4%)이 집행되었다.

2006년도 119조 투융자 계획 분야별 집행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2-1-3> 2006년도 국고투용자의 사업 분야별 내역

(단위 : 억원, %)

분야(기능)별	계획(A)	실적(B)	대비(B/A)	비 중
합 계	103,289	109,715	106.2	100.0
□ 농업체질강화 및 경쟁력 제고	28,267	34,733	122.9	31.7
◦영농규모화 촉진	4,371	4,485	102.6	4.1
◦친환경농업 지원	1,917	1,620	84.5	1.5
◦농산물상품가치 및 안전성 제고	2,471	1,169	47.3	1.1
◦전문농업인 육성	1,308	2,353	179.9	2.1
◦농림업 기술개발 보급	4,304	4,051	94.1	3.7
◦원예 및 축산업 선진화	3,896	4,654	119.5	4.2
◦농업정책자금 지원 확대	8,000	15,347	191.8	14.0
◦지역농업 육성지원	2,000	1,054	52.7	1.0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강화	25,695	27,841	108.4	25.4
◦농가 소득안정망 확충	25,182	27,432	108.9	25.0
◦농외소득 증대	513	409	79.7	0.4
□ 농촌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15,223	12,402	81.5	11.3
◦농촌사회 안정망 확충	3,331	2,465	74.0	2.2
◦교육 및 기초복지인프라 구축	2,755	1,973	71.6	1.8
◦농촌지역 개발	9,137	7,964	87.2	7.3
□ 농산물 유통혁신	9,877	7,018	71.1	6.4
□ 산림자원 육성	6,210	8,574	138.1	7.8
□ 농업생산기반 정비	18,017	19,147	106.3	17.4
◦농업생산기반 정비	15,315	18,530	121.0	16.9
◦농업기계화 지원	2,702	617	22.8	0.5

(정책평가팀 기술서기관 손영규)

## 2. 농업투융자 사업의 평가 실시

### 가. 농림사업 성과평가 실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자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04년도에 마련한 “투융자 심사평가시스템 혁신방안”(2004년 4월) 및 “농림사업 평가시스템 개편”(2004년 12월) 내용에 따라 2005년도에 추진한 주요 113개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2006년도에 실시하였다.

농림사업 성과평가는 사업담당부서가 사업별로 사업수행 당해년도에 평가지표와 목표달성 전략을 수립하고, 익년도에 사업부서의 자체평가와 평가부서의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 학계·생산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림보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업별로 조직목표, 상위 정책과의 연계성,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상충성, 목표달성도, 프로세스(의견수렴, 현장점검, 정책홍보 등)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한다. 예산편성방향은 증액 또는 현수준 유지, 현수준유지 또는 감액, 통합·폐지 등으로 구분·제시하고, 제시된 예산편성방향에 따라 다음년도 예산편성시 그 결과를 반영토록 조치하며, 사업별로 제시된 제도개선 사항은 법령정비, 사업지침의 수정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간다.

2006년도 평가결과를 요약하면 i)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친환경직접지불제,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등 27개 사업은 예산을 증액 또는 현수준 유지, ii) RPC운영자금, 농산물자조금, 가축공제사업, 농어민건강보험료 지원 등 32개 사업은 현수준 유지, iii)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영농규모화, 농산물 물류표준화 등 21개 사업은 현수준유지 또는 감액, iv)농축산경영자금, 경영이양직불제 등 11개 사업은 감액, v)중축등록사업, 마늘산업작목전환 등 5개 사업은 통합·폐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책평가팀 농업사무관 김상경)

### 나. 농림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농림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체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2006년도 자체평가는 연두업무보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농업개방 확대 적극 대응” 등 6개 과제를 선정,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였다.

자체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외부전문가 24명과 내부위원 3명을 위원으로 “농림업무자체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2006년도에는 분기별로 해당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과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2006년도 연두업무보고 과제인 6개 정책목표, 27개 이행과제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계획수립단계부터 집행, 목표달성, 평가결과의 활용까지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평가팀 시설사무관 강경만)

### 다.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평가

농정시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자치단체 스스로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농정업무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업무를 평가해 오고 있으며, 평가결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포상금(시상금) 지급과 더불어 유공자에게 포상을 실시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업무 평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직접 집행·관리하는 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정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추진토록 함으로써 정책자금의 투자효율성 제고 및 지방농정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

금년에는 2006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추진한 ①투융자사업관리부문(주요 재정사업의 집행실적·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재해대책 시설물관리실태 등), ②중점농정시책(고품질브랜드쌀 생산 유통, 가축방역 및 조



사료생산·농산물 수출촉진·농산물 유통대책·농업정보화·친환경농업 육성·농촌관광 및 지역개발·농촌교육 및 복지개선 등), ③농업부문예산투입노력 (임의지방비 투입규모·투입비율·증가율·균특회계 예산확보율 등), ④지역농업차별화시책 등 4개 분야를 종합 평가하였으며,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평가와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이 상호교차 확인하는 현장조사 병행 실시를 통해 선정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70백만원의 시상금 지급과 정부포상을 하였다.

특히, 2006년도 농정업무 평가는 지방농정의 여건변화에 맞게 평가항목을 조정하고, 지자체의 건의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종합순위 결정방식을 종합순위 및 분야별(투융자사업관리 등 4개) 순위 결정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평가항목간 배점조정·평가지표 및 기준 등의 보완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등을 제고하였다. 예산은 예전과 달리 지자체의 자율성이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임의지방비 증가율’ 및 ‘균특회계 예산 확보율’을 평가항목에 추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과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 우수 도에 가점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현안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유도하는 등 농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상금은 평가결과 선정된 우수 지자체에 집중 배분하여 사기진작이 되도록 하였으며, 지자체의 평가에 따른 업무부담을 줄이고 도별 시·군의 수에 따른 평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 확인조사 대상 시군을 조정(24개시군→19)하는 등 대폭적으로 평가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실시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119조 투융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여부 확인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를 매년 평가해 나가는 한편, 평가 항목과 지표, 기준 등을 변화하는 농정 여건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평가팀 농업사무관 이득섭)

## 제4절 농림행정 색신·조직개편 및 법령제도 개선

### 1. 농림행정 규제완화

정부는 규제개혁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8년 3월 1일 규제개혁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4월 18일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근거 대통령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령 제·개정시 규제신설 강화 사항을 심의·조정함으로써 규제사항 남발을 억제하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에 들어서 2004년 8월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규제기획단을 설립하고 기존 규제를 전면 검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거나 규제수를 대폭 감축해나가는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농림분야 행정규제는 2006년 말 현재 268개로서, 분야별로는 국내 가축 전염병 예방, 축산물 유통상 위생관리 등 공중위생과 보건에 관한 규제와 안전한 농축산물의 공급, 기타 농약생산·안전관리, 유해식물의 국내유입방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통분야 및 식량농자재 분야, 그리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지분야 등의 규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2006년도에는 농림규제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법령안 제·개정 시 사전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공표하도록 하여 피규제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도록 하고, 행정규제에 따른 피규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림부내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전체위원 17명중 15명을 민간위원들로 구성하고 행정 규제의 신설·강화에 따른 사전 심사절차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규제정비의 지속적인 발굴정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단체 및 법인과 그밖에 민간이해관계인들로부터 불편규제를 수집·점검하였다. 또한 피규제자가 느끼는 규제의 체감도 및 순응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친환경농업정책에 대한 규제순응도를 조사토록 하여 정책에 반영하였다.

2006년도 주요규제정비는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지원을 위하여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던 농지보전부담금을 대폭 감면하고, 시장구조

의 경쟁체제에 장애가 되어온 도매시장 경매사 지정제도를 없애는 한편, 사업자 또는 민원인 등의 법령 위반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였으며, 행정조사 목적을 위한 종자 등의 시료를 무상수거 해온 것을 유상수거로 전환, 그밖에 기존규제 중 실효성이 약화되거나, 규제를 집행함에 있어서 규제내용이 불분명하여, 규제집행시 공무원의 재량행위 남용이 예상되는 규제 등 총 73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이를 정비하였다.

(행정법무팀 서기관 황인용)

## 2. 농정조직의 개편

### 가. 대국민서비스 강화 및 국경검역인력 증원 추진

쌀 재협상 이후 농가소득보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FTA협상을 위한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협상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수행할 인력, 농산물품질관리 및 수입쌀 원산지 단속인력, 농축산물 국경검역인력 및 수입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실무 153명을 증원하였다.

- 본부 : 자유무역협정2과, 농생명산업정책과 신설,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자유무역협정과 실무인력 등 15명(4급1, 5급8, 6급4, 7급2, 직급상향 5급1)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산물품질관리·대민서비스 일선기관 실무인력, 수입쌀 원산지 단속인력 24명(5급10, 6급14, 직급상향 6급2), 10출장소 신설 및 분리 증설
- 농업연수원 : 청사시설관리 및 방호인력 1명(7급1)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축산물위생감시과·동물보호과·위험평가과 신설·운영인력, 검역탐지견센터 운영인력, 인천공항 검역인력, 수입축산물 정밀검사 인력, 조류인플루엔자·브루세라·수퍼박테리아 연구인력 86명(4급3, 5급11, 6급22, 7급26, 별정3, 연구관1, 연구사20)
- 국립식물검역소 : 목재포장재 검역인력, 인천공항 CIQ인력 21명(5급1, 6급5, 7급7, 8급8, 직급상향 5급5)

- 종자관리소 : 보급종 생산·공급인력, 재배시험 및 특수검정 인력, 보급종 및 품종보호 관리인력 6명(6급3, 연구사3) 등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 제19368호, 2006년 3월 3일, 대통령령 제19418호, 2006년 3월 29일),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농림부령 제1517호, 2006년 3월 8일, 농림부령 제1520호, 2006년 3월 29일, 농림부령 제1533호, 2006년 8월 1일)>

#### 나. 주요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농림조직 개편 추진

예산·기금 배분 및 집행점검기능 강화, 효율적인 홍보기획 및 지원체계를 구축, 맞춤형 농정 총괄·조정 및 직접지불제 총괄업무를 수행할 과단위 기구 증설(재정팀, 맞춤형농정팀), 조직의 탄력성이 큰 참모조직은 “과”에서 “팀”으로 변경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첫째, Top-down제 도입에 따라 예산·기금 배분 및 집행점검기능 강화  
둘째, 효율적인 홍보기획 및 지원체계를 구축

셋째, 맞춤형 농정 총괄·조정, 농가등록제, 농촌형 특별 소득보조, 농가 소득정책, 직접지불제 총괄업무

넷째, 조직의 탄력성이 큰 참모조직은 “과”에서 “팀”으로 변경

다섯째, 한미 FTA 협상을 전담 조직 신설

여섯째, 식량국장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에게 위임전결권 부여 등

일곱째, 종자·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지원 전담조직 신설 등

#### 다.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2007년 농림부 소요정원 협의 추진

농촌정주지원단·정주지원과·도농교류과 신설 등 2006년도 수시직제 반영분야, 농지은행제도 등 법령의 제개정으로 실무인력 증원이 필요한 분야, 품질 및 안전성·농축산물검역검사·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분야 등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대민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분야 등을 중심으로 2007

년도 농림부 소요정원을 작성,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다.

- 본부 : 농촌관광·복지 및 지역개발 분야(농촌정주지원단·정주지원과·도농교류과 신설 및 실무인력 등), 법령 제개정 및 장비도입 분야(농지은행제도·동물보호법·공익수의사제도 실무인력·통합정보화팀 신설 및 실무인력), 친환경농업·품질 및 안정성 분야(자연순환농업팀 신설 및 실무인력·육류 이력추적시스템·검역제도 관리·축산물위생 관리 등), 행정수요증가 및 실무인력(중자생명산업과 및 북한농업협력팀 신설 및 실무인력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품질 및 안정성분야(원산지 단속·LMO관리·GAP관리 인력 등), 친환경농업분야(친환경인증 인력), 시험·연구 분야(정밀분석·사료분석 인력), 출장소 분리 증설 등
- 농업연수원 : 행정 및 청사방호 인력, 교육과정개발 전문인력 등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품질 및 안정성 분야(동물약품관리과·축산물위해관리과 신설 및 실무인력 등), 검역·검사 분야(동물검역부 신설·탐지견관리과 신설 및 실무인력·CIQ 2교대 근무인력), 시험·연구 분야(조류인플루엔자과·부루세라과 신설 및 실무인력, 연구인력 보강 등)
- 국립식물검역소 : 검역·검사 분야(우편식물검역담당과 신설 및 실무인력·주한미군 반입식물 및 CIQ 검역인력 등), 시험·연구 분야(중부격리재배관리소 확대 등)
- 국립종자관리소 : 품질 및 안정성 분야(보급종 생산·공급인력, 품종보호 심사인력, 등록관리인력, 민간육종 활성화인력, LMO관리 인력 등)

(혁신인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규억)

### 3. 농림분야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

정부는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단계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도입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며, 대형유통업체의 등장 등에 따른 유통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간 또는 시장도매인 간 인수·합병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업인과 소비자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 2006년 중 모두 10개의 농림법률 제·개정을 추진하였다.

### 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가축의 사육단계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도입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제정 및 작업장 적용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동 법률을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의 사육단계에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도입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제정 및 작업장 적용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판매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던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농림부장관에게 하도록 하고,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영업자 등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며,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농림부장관은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축산물의 경우에는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 또는 진열하는 것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공포 2006년 3월 24, 시행 2006년 9월 25일).

## 나.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분류를 간소화하고,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인증관리를 강화하며,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수입자 외에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하는 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 법률을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정의내용에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등 친환경농업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행농업과의 차이가 불분명하므로, 친환경농업의 정의내용 중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관행농업의 개념을 삭제하여 그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친환경농산물의 분류가 5종류로 많아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일반친환경농산물을 분류에서 제외시키고, 전환기유기농산물을 유기농산물로 흡수하여 친환경농산물의 분류를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의 3종류로 하고, 무농약농산물 중 축산물은 무항생제축산물로 분류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인증능력 구비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정행위를 한 자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이 취소된 자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다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신청할 수 있어 민간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므로, 친환경농산물인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5년마다 재지정을 받도록 하고,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형이 확정되거나 인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이 취소된 자는 1년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고,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생산자와 수입자만 인증을 받을 수 있어 유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생산자와 수입자 외에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공포 2006년 9월 27일, 시행 2007년 3월 28일).

#### **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산지의 생산자들이 조직화되고 대형유통업체가 등장하는 등 유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환경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간 또는 시장도매인 간 인수·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수탁거부금지규정을 완화하며,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법률을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통환경의 변화로 도매시장법인의 대형화가 필요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얻으면 도매시장법인 간의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시장도매인 간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였고,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수탁거부금지의무로 인하여 도매시장에 미등록 출하자의 출하품 및 유해농산물 등이 유입되어 경락가격 하락 및 쓰레기 과다발생 등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유통명령 위반 출하품, 미신고 출하자의 출하품, 안전성검사결과 기준 미달 출하품 및 최소출하량 기준 미달 출하품 등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미달품 출하자에 대해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출하자 간, 유통인 간 또는 출하자와 유통인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이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공포 2007년 1월 3일, 시행 2007년 7월 4일).

#### **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반려동물의 사육 및 유기동물의 증가 등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등록제 시



행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동물 학대행위 방지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률을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버려지는 동물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시·도지사는 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반려동물의 관리소홀로 개에 물리거나 개회충증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이 증가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반 외출시 인식표 부착, 안전장구 휴대 등 소유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시·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특정지역에서의 사육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반 여부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및 살아있는 동물의 채액을 채취하는 행위 등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동물이 차량으로 운송되는 도중 상해를 입거나 질식사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 운송시 적합한 사료의 공급, 상해를 방지하고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차량의 사용 등 동물을 운송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정하였으며,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감시와 계도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농림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보호감시관과 명예감시관을 지정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동물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동물보호감시관에 대하여 동물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동물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동물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공포 2007년 1월 26일, 시행 2008년 1월 27일).

(행정법무팀 사무관 박은엽)

#### 4. 농가유형별 맞춤형농정 추진

정부는 맞춤형농정을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전업농, 중소농, 영세고령농 등 농가유형별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농업·농업인·농촌에 대하여 각각 산업정책·소득정책·농촌정책으로 세분화하여 정책을 설계하였다. 맞춤형농정은 이와 같은 기존 정책기조 속에서 최근 FTA, DDA협상 등으로 급변하는 농정여건에 따라 농정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시도이다.

UR이후 우리 농정은 산업측면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왔다. 영농규모화, 수리시설개발, 기계화 등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전체 평균농가 대상의 경쟁력제고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정체상태였던 농업부문 성장세가 1995년부터 회복되고 농산물의 가격인하로 소비자후생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득과 복지시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농산물의 가격하락과 시장개방으로 농가의 실질소득은 줄어들었다. 또한, 도시소비자는 맛있고 안전한 고품질의 신선한 농산물을 원하고 있다. 농촌이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등을 보존하며, 도시생활 이후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삶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와 농업인과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2013년까지 장기적으로 맞춤형농정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 맞춤형농정이란 농가를 대농, 중소농, 영세농, 고령농 등으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정책프로그램을 메뉴방식으로 제시하고, 농가는 스스로의 발전단계에 따라 정책프로그램을 차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농업소득 비중이 크고 경쟁력이 있는 전업농 등에 대해서는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인 경쟁력향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규모화로 높아진 경영불안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재해보험, 부채관리, 자조금제도 등 위험관리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논농업중심, 특정품목중심의 직접지불제도를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농가별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부분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소득불안정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반면, 농업적 성장에 한계가 있는 고령농은 복지시책을 강화하여 은퇴 후에도 안심하고 농촌에 살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농외 취업이 어렵고 대외개방 확대에 적응이 어려운 고령 중소농에 대해서는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아울러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 핵심정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다. 2007년에는 주요정책에 대해 별도의 T/F팀을 구성,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범사업 시행방안 및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 추진을 위한 기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조정과 행정사무관 안창근)

## 제5절 농업관련기관 개혁

### 1. 농업협동조합

#### 가.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 추진

##### (1) 추진배경 및 경과

농협중앙회는 1945년 해방 후 많은 논란 끝에 1957년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구)농협과 신용사업을 전담하는 농업은행으로 발족하였으나, 농업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 등을 위해 1961년 (구)농협과 농업은행이 3년만에 통합됨으로써 종합농협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농촌의 고리채 폐단을 없애는 데에 나름대로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힘든 농사일임에도 불구하고 가난이 되물림 되는 농촌의 현실과 도시와 농촌간의 문화적 이질감을 더욱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농업인들은 농협에 대한 지속적인 역할 강화 요구는 지속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협이 신용사업에 치중한다는 비판과 함께 경제사업 강화를 위한 농협중앙회의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였다.

1997년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신·경분리 문제 등 농협 개

혁 문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되면서 1999년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축·인 삼협중앙회를 통합하고 사업부문별 전담대표이사를 도입하여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였고 신·경분리문제를 정부가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농협법 부칙 제16조에 명기되었으며, 1999년 농협법에 따라 「신경분리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한국금융연구원으로 하여금 신경분리의 타당성을 연구하게 하고, 연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2003년 자율개혁 원칙에 따라 농협중앙회 내에 농업인 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의 건의사항 등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보고서의 1단계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농협법은 농협중앙회가 신·경분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법 시행 1년 이내에 제출토록 하고, 농림부 장관은 농업 또는 금융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토록 규정하였다.

2004년 개정된 농협법(부칙 제12조)에서 농협중앙회는 법률 제6018호 농협법 부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금융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중앙회의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농업경제사업 및 축산경제사업)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자본금 확충 및 운영개선방안, 법인의 설립방안 및 설립기한, 교육·지원사업의 사업비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법 시행(2005년 7월 1일)후 1년 이내에 마련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은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을 농업 또는 금융전문가, 농업인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에서는 자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2006년 6월 농림부에 제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본금 확충, 조합자립 경영 달성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현 농협중앙회를 농협법 틀내에서 3개의 별도 특수법인으로 분리하고, 경제사업 적자보전과 신용사업 BIS 비율 유지(10%) 등을 전제로 추가로 7.8조원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15년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농협의 경제사업 독자생존 기반을 만들기 위해 산지(일선조합) 및 소비자유통망 구축에 향후 10년간 13조원을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 (2) 신·경분리위원회 운영

정부는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를 논의하기 위하여 2006년 1월부터 농림부, 농특위, 학계, 농민단체, 변호사, 회계사 등 15명으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위원회는 농림부 차관과 학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2006년 6월 농협안 제출전까지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현황 분석 등 농협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방향 등을 집중 논의하였으며, 7월 이후 재경부 등 관계부처, 언론, 농협 등 위원회를 23명으로 확대·개편하여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위원회에서는 11차례 회의를 통해 수협중앙회 독립사업부제 사례분석, 농협의 교육·지원 및 경제사업 현황분석, 농협에서 제출한 세부추진계획 등의 타당성 검토 등을 논의하였으며, 세부추진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전문 연구용역 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에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부, 농협, 연구원 등으로 실무기획팀을 구성하여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 확충, 법인 설립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 및 검토를 진행하였다.

위원회에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필요 자본금 규모 및 자본금 확충방안 등 논의가 필요한 사안별로 신·경분리위원회에서 집중 검토를 하였으며, 주요 쟁점, 이해관계자들의 이견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과장급, 농민단체, 연구용역 기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하였으며, 그 동안의 논의사항 등을 종합하여 위원회 차원의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 추진에 대한 정부 건의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협동조합과 기술서기관 박순연)

## 나. 일선조합 구조조정 추진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부실조합 조기 정리 및 조합의 부실 예방을 위해 제정된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전년말 결산 및 경영상태평가결과 등을 기초로 20개 조합을 부실우려조합 등으로 신규 결정하고 경영개선조치 권고·요구·명령을 하는 등 일선조합의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였다.

2005년도의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구조개선을 추진 중인 조합에 있어서도 합병이행기간은 종료되었으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는 이행기간을 연장하여 합병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재무구조개선을 추진 중인 조합의 경영개선상황을 평가하여 이행상황이 미흡한 조합에 대하여는 추가 경영개선조치사항을 부과하거나 적기시정조치의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조치를 하여 구조개선 추진에 박차를 가하였다.

또한,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에도 35개 조합에 총 551억원(출연 394억원, 대출 157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는바, 재무구조개선을 추진중인 4개의 조합에 157억원을 3년 무이자 대출로 지원하였고, 31개의 합병조합에 출연금 31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퇴출대상조합의 계약을 인수한 3개 조합에 계약이전 손실금 보전을 위해 83억원을 출연하였다.

이와 같이 일선조합의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 2006년도에도 11개 조합이 합병으로 정리되었으며 3개 조합은 정리 중에 있다. 또한 14개 조합이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정상화되었다.

2006년도 결산결과 조합 경영수지는 조합의 경영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합병 등 구조개선의 노력으로, 적자규모가 18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71억원 감소하였으며 전체 조합의 당기순이익 또한 10,14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666억원이 증가하였다. 또한, 적자조합은 전년에 비해 17개 조합이 줄어든 14개 조합이다.

경제·신용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어 전체 경제사업실적은 28조 3,017억원으로 전년 대비 3.99% 성장하였으며, 예수금 평잔액은 131조 6,578억원

으로 전년 대비 21.53% 성장하였고, 상호금융 대출도 91조 1,667억원으로 전년 대비 8.40% 성장하였다.

(협동조합과 행정사무관 이정길)

## 2. 한국농촌공사

### 가. 중장기발전전략 재정립 및 실행체계 구축

한국농촌공사는 업무수행영역확장 등 변화된 위상과 새로운 경영패러다임, 시대적 정서 등을 감안하여 기업이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기업이념을 토대로 미래모습을 10년 목표수준으로 가시화하는 등 장기비전을 재정립하였으며, 기업이념 및 장기비전 실현을 위한 중장기발전전략도 공사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재정립하였다.

중장기발전전략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진단하고 사업화방안을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장기(10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되, 중·단기(3~5년) 목표도 제시하여 진행과정도 관리토록 하였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전사 추진조직(성장전략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였고, 중장기 성장전략은 Two-Way 방식 즉, 정부정책사업 중심의 성장동력(공익성), 자체사업 등 순수수익사업 중심의 성장동력(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그 결과 3대 사업전략(정책사업의 고도화 추진, 신규사업의 성장성 강화, 자체사업의 수익성 확보)과 2대 경영지원 전략(효율적인 경영체계 확립, 특화된 경영인프라 구축)으로 구분하였고, 이에 따라 16개 전략과제, 52개 실행과제, 71개 세부 실행과제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공사 내부역량에 따른 실행과제의 우선순위와 과제별 로드맵 수립을 통한 단계별 추진계획도 수립하여 「농업·농촌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공기업」에 걸맞은 실행체계를 확립하였다.

### 나. 고객만족경영 강화로 사랑받는 공기업상 구현

공사 명칭변경 등 변화된 환경에 맞게 고객서비스 방향을 전환하여 새롭

게 정립된 미션과 비전에 대한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고객만족과 성장동력확충에 역점을 두고 실행되도록 경영자원을 집중 배분하였다. 특히 고객 접점 사업현장에의 인력배치 등 경영자원을 우선배분 하였고, 고객만족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신설 및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였다.

우선 고객서비스현장을 주고객인 농업인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미지 삽입, 내용간소화, 구체적인 실천적인 현장표현으로 개정하여 신뢰성을 제고하였고, 상시적 고객만족 실천을 위하여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시스템을 운영하여 고객만족 업무의 평가와 보상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발적 고객만족 실천문화를 정착시켰다. 「고객의 소리」, 「고객제안」, 「사장과의 대화」등 온라인 부분 운영을 강화하여 고객의 참여를 확대시켰으며, 고객의 기대에 부응토록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연중운영체제로 전환하였다. 또한 도시의 잠재고객에 대한 농어촌정주지원 토털서비스를 위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개설, 도시민을 위한 ‘전원생활 가이드’발간배포, 페스티벌 개최 등을 실시하였고, 고객만족 실천 직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공사/도본부 베스트 친절사원상」을 제정하는 등 고객서비스 활동을 강화하였다.

#### 다. 경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윤리경영 실행조직을 본사에서 지사까지 확대 실시하였고, 윤리경영 총괄부서를 사장 직속부서로 조정하여 기능을 강화하였다.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제정, 영농규모화사업 부조리 예방 시스템(SMS 등) 구축·운영, 윤리경영 상시점검 및 평가체계 구축, 임직원의 상시적 자가진단을 위한 청렴온도계시스템을 운영, 청렴윤리 스타팀 포상제도 신설 등 평가 및 피드백 강화를 통한 윤리경영 실천력을 제고하였다.

또한 윤리경영교육을 확대 시행하여 교육인원이 전년대비 163%로 증가하였다.

나눔경영을 위하여 공사 홈페이지 내에 「사회공헌」사이트의 신규 개설운영, 사회봉사단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규정 제정시행, 사회봉사단 발대식,



사회공헌 우수부서 포상제 실시, 사회봉사활동 기금조성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이행을 강화하였다.

(농촌정책과 사무관 이원희)

### 3. 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어민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농수산물 가격안정, 유통개선 및 수출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정 집행기관으로서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수행사업의 성과제고를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005년 초 신경영 전략을 수립하여 글로벌 마케팅 기능 강화와, 시판용 MMA쌀 전담관리, 수입정보 조사·분석 등 신규 정책사업 수행체제를 마련한 바 있고, 2006년에는 환경과 역량 분석을 통해 ‘선택된 국가와 품목에 수출집중’, ‘식량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등 10대 중장기 전략과제를 발굴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유통공사는 농식품 수출촉진을 위해 안전성 관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 제공, 수출자금 지원 등 생산부터 수출까지 종합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06년에는 일본, 중국 등 14개국 관측활동(46회)과 박람회 참가(19회)하여 256백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출유망품목을 개발하여 생산부터 해외마케팅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다. 수출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밀착형 수출컨설팅(307회)을 실시하였고, 정부지정 원예전문생산단지(149개)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안전·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우리 농산물의 해외 인지도를 높여나가기 위해 파프리카, 배, 국화, 장미 등을 대상으로 공동대표브랜드(Whimori)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수출농산물 GAP인증기관으로 지정(2006년 3월)되어 수출농산물의 품질·안전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공사의 이러한 수출지원 활동은 환율하락, 유가상승 등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2006년도에 농식품 수출 23억 4백만불을 달성하여 4년 연속 농식품

수출 실적치를 경신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유통공사는 정부비축사업 담당기관으로서 농산물 수급관리와 적기방출로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하였고, MMA쌀 도입·판매 전담기관으로서 2006년부터 시판용 수입쌀(22천톤)의 도입과 판매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여 정부의 양곡관리 정책에 기여하였다.

고추, 마늘 등 주요 민감품목(27개 품목)의 민간도입가능가격, 품목위장 과 규격위반과 같은 불법수입사례 등을 조사하여 농림부, 관세청에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저가수입 등에 따른 국내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TV 기획물 및 우리 식문화 체험행사 등 차별화된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고, 식품업체 경영개선자금 지원 및 사이버 식품상담센터 운영 등 식품산업 육성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지유통조직 종합평가업무를 담당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마케팅과정과 APC 경영혁신과정 등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유통공사는 혁신경영과 조직의 체질개선을 위하여 1부서 1혁신과제 운동 등 100대 혁신과제를 추진하고, 혁신경진대회 등을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혁신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채용연령제한 폐지, 직위공모제 확대, 경력개발관리(CDP)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부서별 업적의 실시간 측정, 평가 인센티브 차등 폭 확대 등 경영관리체제를 성과중심으로 전환 하였다.

한편 부패 개연성의 사전 진단·점검을 위한 ‘청렴이행심사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공기업 최초로 업무전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On-line 감사체계 확보를 위한 e-감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청렴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정부투자기관 중 1위의 성과를 거두었다.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제안제도 활성화와 고객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신속·정확한 대 고객지원체제를 구축하였고, 농수산물 정책자금 용자제도 개선, 수출자금 지원서류 간소화, 비축물자 방출제도 등 각종 제도개선을 한 결과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3년 연속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유통공사는 내부 운영시스템 개선 등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시장개척 기능과 우리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식품산업 육성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한식세계화,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유통효율화 등 신규정책사업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유통정책과 사무관 정영환)

#### 4. 한국마사회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마사 진흥과 축산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마사회는 농업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증대된 관심과 경영여건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설정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한국마사회는 “국민과 함께 달리는 생명과 사랑의 공익기업”이라는 미션과 “고객에게 최고의 즐거움과 사회에 최고의 가치를 주는 기업”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네 가지 경영전략을 추진하였다. ① 한국마사회 및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 긍정적 이미지로 변화시킴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상을 구현하고, ② 고객 중심의 경마제도와 시설의 운영으로 고객 중심의 마인드로 변화함으로써 고객을 우선시하는 고객 제일주의를 실현하며, ③ 우수 경주마를 도입하여 경주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 한국경마의 상품성을 높이고, ④ 조직과 인적역량을 강화하고 진취적 조직문화를 창출하여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경영혁신과 윤리경영 실천으로 우수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 등이다. 2006년에는 ‘윤리경영, 고객만족 및 혁신경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조직의 자원 및 역량을 집중하여 다음의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 (1) 종합경영 부문

경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사행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상존하고 있으며, 여타 사행산업과의 경쟁 심화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등 외부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리경영 강화와 고객만족도 제고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성과를 거두었고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다.

한국마사회는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수직적 및 수평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상시 노사 의견 소통 창구를 열어 놓아 조직내부의 의사소통과 정보의 공유를 가능케 하였으며, 조직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하기 위해 인사·조직·혁신 부문에서 많은 개선을 이루었다.

마권발매친절화운동 프로젝트를 구현, 창구에서의 신속하고도 부드러운 마권 발매를 실시하여 고객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그 동안 져어 있던 패배의식으로부터 조직내에서도 하면 된다는 의욕을 불러일으켰다.

경마팬과 합동으로 윤리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경마 산업 분야 총 18개 단체가 참여하는 경마산업 투명사회협약을 한국마사회와 1:1로 체결하여 경마산업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비상임이사의 원활한 안건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 개최절차의 준수, 이사회 개최시마다 비상임이사 대상 사전 안건설명회 개최, 2007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검토회 개최 등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또한,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서 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고,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에 비상임이사를 참여시켰다.

우수 학습활동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및 실적의 경우, 혁신마일리지 부여,

활동비 분기당 지급, 최우수 동아리 포상금지급, 해외 교육 파견자 선정 시 우선권 부여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운영하였으며, 과제 발굴 및 제출 노력도, 과제이행노력도, 학습참여도 등을 내부경영평가 지표로 설정하였다. 형식적 학습을 지양하기 위하여 모든 학습활동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기준 미달시 낙제처리, 학습동아리활동의 구체적 증빙 요구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고객이 미소 짓는 Hi-Tis 구축 프로젝트의 경우 고객만족경영의 기본인 ‘친절’을 선택한 점은 일견 평범해 보이나, 그 추진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직원 배치에서 교육, 모니터링, 인센티브까지 추진내용이 유기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으며, 기획예산처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년대비 15점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2) 주요사업 부문

한국마사회는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대국민 이미지 개선과 신뢰받는 기업상 구현을 위한 사업들간의 연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응하여 핵심기능 및 경영목표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연계성이 우수한 사업을 우선 편성하였다.

경마사업에 비해 마사진흥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작년도 지적에 대해서는 마사전략팀을 신설하는 등 마사진흥 사업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경마이미지가 악화되었고, 이로 인한 규제 강화, 지속적인 매출감소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 윤리경영·투명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위기에 처한 농축산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마사회는 조직의 자원과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위기 극복방안으로서 공익성 강화에 매진하는 한편, 기업으로서의 안정성·영속성 유지를 위하여 경영효율화를 추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경주의 질적 향상을 통한 흥미 제고를 위해 민간도입 씨암말의 수준 향상을 유도하였고, 교배지원체계 개선, 후기육성인프라 확충, 육성전문인력

양성, 육성조교검사 제도의 시행 등을 통한 후기육성 붐 조성으로 경주마의 잠재능력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능력부진 씨암말의 도태를 장려하여 국내산 경주마의 수급규모를 조절하고 경주마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농가 소득의 안정화를 기하고 있으며, 마필 생산 및 육성 체계 개선을 통해 국내산 경주마의 기록 향상과 경마 품질 개선에 기여하였다.

또한 장수 목장 설치로 국내 마필생산규모에 걸맞는 육성 인프라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게 되어 경주마의 후천적 경주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씨수말정보시스템의 분석 능력 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씨수말을 대상으로 검정을 실시할 수 있게 한 것도 국내산마의 수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기여 측면에서는 최근 4년간의 매출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7억원의 기부금을 지원함으로써 상당 수준의 사회 환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직원 1인당 평균 봉사시간은 2005년 7.6시간, 2006년 30시간을 기록하여 주요기업 평균 6시간에 크게 앞서가고 있다.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1사 1촌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지역에 농촌복지시설 지원차량 63대를 기부하였으며 강원도를 중심으로 수해 지역에 임시 주택 50채를 공급하였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가게, 야간 공부방, 원어민영어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자녀 300세대에게 난방용 키트를 지원하였다.

### (3) 경영관리부문

성과위주의 임금관리를 위하여 2급 이상 직원 130여명에 대하여 연봉제를 시행중에 있으며, 이는 총인원대비 16%로 정부산하기관 평균보다 높다. 총 급여 중 성과급 비중은 28.7%로 다소 높은 수준이며, 성과 차등폭은 전년도 수준인  $\pm 40\%$ 에서  $\pm 50\%$ 로 상향조정하였다.

팀 워크샵 및 크로스미팅, M2M Talk, GNS(Good Neighbor Session) 제도를 통해 수평·수직·노사간 의견소통 채널을 강화하였고, 지방사업장 등 노무관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현장 노무간담회를 4회 개최하는 등 조직내부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K-PAS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간 3만 건에 달하는 전표 발생 및 분실, 결재지연 등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막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이를 통해 연간 10,904시간이 단축되어 약 6명의 인원감축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생산성 대상을 수상하였다.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온 전자조달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조달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였고, 제주발매 전산업무를 본부의 신 현금시스템과 통합하여 인력절감 등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축산정책과 행정사무관 주원철)

## 제6절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활동상황

### 1. 농어업특위의 현황

2001년 11월 14일 WTO(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출범을 위한 도하개발어젠다(DDA)가 채택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협상이 시작되는 등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에 대비하여 농어업·농어촌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농어민, 소비자, 정부와 함께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이하 “농어업특위”라 한다)를 구성 운영(제정 2002. 1. 26 법률 제6336호)하고 있다.

그 동안 농어업특위(제1대 위원장 : 전 농림부장관 한갑수, 제2대 위원장 : 단국대 교수 장원석, 제3대 위원장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황민영)는 국민적 합의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민·관 합동기구로서 본위원회화

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기관·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사무국을 구성·운영하여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제1기 농어업특위는 당초 2002년 1월 26일~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되어 “범국민적·범정부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농어업·농어촌 정책방향의 제시, 농어업정책의 신뢰강화 및 국민적 공감대의 확산”이라는 목표로, 농어업·농어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의 수립, 농어업·농어촌 종합대책 및 투융자계획의 수립, 종합대책 협의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의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큰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DDA·쌀협상 등 갈등국면과 FTA협상 등 산적한 국내외 농어업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각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존속기한을 연장(개정 2004년 12월 31일 법률 제7274호)하여 제2기 농어업특위가 출발하게 되었다.

제2기 농어업특위는 “**농어촌과 도시가 더불어 발전하는 동반성장 구현**”이라는 참여정부의 농정 비전을 두고, 선진 농어업의 육성과 농어가의 소득안정, 미래형 농산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으로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중장기 정책방향의 설정,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점검·평가, 농어업분야의 사회적 통합의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농어촌 실현 등을 중점과제로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어업특위의 2006년도 주요 실적으로는 참여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된 농업 인력의 정예화, 직접지불제 확충, 농지제도의 개선, 쌀 산업 대책, 농촌사회의 인프라확충 등 5대 농어업 과제를 추진하고 점검하는 한편,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향(안) 수립, 농어정 추진상황 점검·평가, 식량자급률 설정방안, 농산물 물류혁신 종합대책, WTO/DDA 및 FTA협상의 동향과 대응방안, 119조 투융자 계획의 조정, 농어민 교육체계의 개선, 협동조합의



혁신, 남북농업 협력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향후 농어업특위는 다양하게 제기되는 농림수산정책의 정책적·사회적 갈등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민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통합 구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송남근)

## 2. 2006년도 농어업특위 운영현황

### 가. 본위원회

2006년도 본위원회는 8월 31일에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 회의의 안건은 2005년부터 논의되어온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방향(안)”이었으며, 회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들이 지적한 의견은 안건과 함께 농림부로 이관되었다.

주요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식품 관련규정을 기본법에 포함하기로 하였으며, 상세한 사항은 추후 부처협의를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농업인들은 식품가공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 어려운 농촌에 부가가치를 올리는 측면에서 생산자의 식품가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다만, 기본법 개정방향(안)에 포함된 식품 및 식품안전 관련규정은 논의중인 식품안전처와 상치될 수 있어 추후 부처협의를 필요하며, 또한 기본법에 식품을 포함하는 것은 현행 정부조직법 및 식품안전관리 체계상 부적절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도 있었다.

또한 농업인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본법에 농업인력 육성을 강화한다는 규정을 두고 개별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 밖의 의견으로 국민식량이나 식품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유희토지의 생산력 증진이나 공익적 기능 유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소유의 짜투리 땅이나 텃밭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업 및 임업에 대한 배려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나. 분과위원회

본위원회 하부조직으로 3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1분과위원회는 농업 및 임업경쟁력 제고, 농산물 유통의 활성화 및 수출촉진, 직접지불제 등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과 친환경농업 등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한 시책분야를, 제2분과위원회는 농어촌지역개발, 농외소득원 확충, 교육·문화·의료 등 농어촌생활 환경개선과 복지증진 분야를, 제3분과위원회는 어업분야 경쟁력 제고 및 소득안전망 확충분야를 다루고 있다.

제1분과는 분야별(쌀, 원예, 축산, 임업 등) 전문가로 구성된 33명의 위원이 2006년 1월 19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농업·농촌기본법, 식량자급률 설정방안, 농산물 물류혁신 종합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방향(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어 5월 2일에 제2차 회의에서 논의한 후, 실무TF를 운영하여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어 6월 21일에는 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의결하였다.

제2분과는 분야별(지역개발, 복지, 여성,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24명의 위원이 2006년 2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06년도 추진과제를 논의하였다.

제3분과는 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학계, 관련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14명의 위원이 2006년 1월 25일 제1차 회의이래 11월 9일까지 3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WTO/DDA 및 FTA 협상의 동향과 대응방안, 2006년도 농어업특위 주요 업무계획, 2006년도 수산부문 중점 논의과제, 수산업·어촌종합대책의 점검 평가, 수산업·어촌의 다원적 기능, 어업인 지원 기본계획안, “수산분야 직접지불제 도입방안(안)”을 논의하였다.

## 다. 소위원회

소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세부과제를 분야별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책협의회(4), 소위원회(3), 전문가회의(2) 등의 다양한 형태로 과제별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1분과는 2개의 정책협의회(농업통상, 농협활성화)를 구성·운영하였다. 농업통상 협의회는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되어 협의회 6회, 간담회 1회,

한·미FTA 관련 농업인단체장 간담회 1회를 개최하여 DDA 농업협상 동향 및 대책과 한·미 FTA 농업분야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을 학계, 전문가, 농민단체, 농림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TRQ, SSG, SPS를 비롯한 민간품목 보호장치 등 협상전략을 논의하였고,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농협활성화 정책협의회에서는 4회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자격요건강화, 조합선택권 부여,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시군단위 광역합병 추진, 조합 이용자 중심의 이익분배 체계 개선, 중앙회 무이자 지원자금 원직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을 학계, 전문가, 회원조합 등과 논의하였다.

기타 현안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본법 간담회 1회, 농업·농촌 뉴비전 선언 제정 간담회 1회, 우리 술산업 활성화 간담회 1회, 농어업 예산 및 금융혁신 간담회 1회, 119조 투융자사업 평가 토론회 1회,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관련 토론회 1회,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방안에 관한 토론회 1회, 한국 농어업 블루오션 전략 토론회 1회 등 총 21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2분과에서는 2개 정책협의회(농업교육정책혁신, 농어촌여성정책), 1개의 소위원회(식생활교육추진법제정)를 구성·운영하였다. 식생활교육추진법 제정을 위해 4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식생활교육추진법제정 소위원회는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되어 소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농어업특위의 법률초안을 마련하였으며, 효율적인 법률제정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 국민운동 차원으로 승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론화 및 입법단계에서 농림부가 전략적인 과제로 채택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고, 농어촌여성정책협의회는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되어 협의회를 5회 개최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증대하고 가족복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농업교육정책혁신 협의회는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되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협의회 2회, 토론회 1회를 통하여 농업인 교육의 문제점, 농업인 교육정책 혁신방안을 토의하여 농업인 교육조직의 비효율성, 조직의 역할분담, 농업인 인력육성, 농업교육담당자들의 역량 발휘, 교육체제와 교육프로

그럼의 효과적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제3분과는 2개의 소위원회(개방화대응, 유통제도)를 구성·운영하였다. 개방화대응 소위원회는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되어 소위원회를 7회 개최하여 우리나라 수산직불제 도입환경, 농업분야 직불제 현황 및 전망, 우리나라 수산부문 직불제 추진방안 등을 검토, 토의하여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방안”을 마련하였고, 유통제도 소위원회는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되어 소위원회를 7회 개최하여 수협산지위판장 활성화 방안, 일본의 수산물 산지시장 기능강화 대책 등을 검토, 토의하여 수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 라. 지역농어업특위

지역 농어업특위는 관할구역의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지역의 농어업·농어촌발전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지역의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업인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의료·교육 기타 농어촌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여 농어정정책 수립시에 뒷받침을 하고 있다.

2006년도 지역 농어업특위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등 9개 지역에 설치되었다. 주요 활동실적을 보면 지역농어업특위 운영 활성화 도모와 지역농어업특위간 긴밀한 관계유지를 위하여 중앙농어업특위와 합동으로 지역 농어업특위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어업특위 평가,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각 지역농어업특위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농어업특위 역할 및 농업·농촌기본법 주요 개정 방향 설명, 지자체별 2006년 지역농어업특위 운영 및 향후 발전방향 등 지역농어업특위 활성화를 위한 심도깊은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앞으로 지역자체 운영활성화를 통한 지역 특성화 및 차별화로 지역민의 소득증대를 유도하고 중앙 농어업특위와 지역 농어업특위간의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역 농어업특위 활성화를 통한 지역 농어업정 강화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 마. 은퇴자를 위한 전원마을 조성 심의위원회

2005년 12월 본위원회에 보고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6년도에 은퇴자를 위한 전원마을 조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은 농림부 이명수 차관이 맡았으며, 전문가 5명, 관련단체 6명, 관계부처 9명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3차례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동 위원회는 지자체 은퇴자마을 조성계획에 대한 평가기준 심의, 은퇴자마을 조성 컨테스트 참가 지자체에 대한 심사(예비평가), 우수 지자체 은퇴자마을 조성계획 심의, 바람직한 은퇴자마을 조성 모델 정립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자체에 대한 관계부처 사업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은퇴자마을 조성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관계부처 협조체계 구축 및 심의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개선사항 파악 및 보완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농림부 등 관계 부처 실무자를 중심으로 은퇴자마을 조성 작업단 및 실무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lt;표 2-1-4&gt;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

(2005년말 현재)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위원장(1)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민영
당연직 위원 (6)	재정경제부장관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권오규 박홍수 김성진 장병완 김영주 김현중
농어업인 단체 (11)	농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 산림조합중앙회장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전국농민단체협의회장 전국한우협회장 생활개선중앙회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부회장 한국수산회장	정대근 - 장일환 문경식 윤금순 엄성호 남호경 조희숙 서정의 허기옥 이상만 박규석
소비자 및 시민단체 (4)	한살림 회장 한국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이사장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이사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	박재일 박영숙 송보경 이덕승
전문가 및 언론인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충남대학교수 한국신지식농업인회장 부경대명예교수 충북대학교수 한신대학교수 KBS 보도본부해설팀 해설위원	최정섭 박진도 정운천 최정운 서도원 김주숙 이광호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송남근)

## 제 2 장 2006년도 주요 농정시책 추진

### 제1절 친환경농업 적극 추진

#### 1. 친환경농업의 기반 마련

우리나라의 농약 사용량은 1998년 이후 증가하다가 2002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2006년도에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약 24,000톤이 소비되었다. 전체 사용량은 수도용 농약 사용량 감소에 힘입어 꾸준한 감소추세에 있으나 원예용 농약 사용량은 소득작목 재배 증가 등으로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화학비료 사용량은 성분량 기준으로 1990년 1,104천톤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01년도에 717천톤에서 2003년도에는 678천톤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3년 10월부터 추진한 화학비료 판매가격 차손보전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에 따른 사전구매 등 영향으로 2004년도에 747천톤, 2005년도에는 722천톤으로 증가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478천톤으로 감소하였다.

2006년도에는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를 폐지하는 대신 보다 친환경적인 유기질비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2005년도에는 70만톤(245억원)을 지원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70%이상 증가된 120만톤(420억원)을 지원하였다. 앞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을 화학비료 보조와 상응하는 수준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우리의 농업을 환경과 조화되며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작물양분종합관리와 병해충종합관리를 통해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을 1999~2003년 평균량 대비 2013년까지 40% 감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06년도에 전국적으로 병해충 관찰포 690개소, 예찰포 151개소를 통한 과학적 정밀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적기에 경제적 방제가 실시되도록 하고,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를 점차 확대하여 농약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위한 대농업인 교육도 강화하였다.

또한, 전국 148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토양종합검정실을 통해 토양정밀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에 부족한 성분만을 시비토록 하고 완효성비료, 주문 배합비료, 저농도비료 등 환경친화형 비료공급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1999년부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을 지원하고 있는데, 밭 직불금을 저농약인증농가에게 ha당 524천원, 무농약인증 674천원(논 : 150천원), 유기인증 794천원(논 : 270천원)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장명철, 농업사무관 이상집)

## 2. 고부가가치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로확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육성하고 농업환경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단위 농가에 환경오염경감시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 등을 지원하고, 농업인들이 쉽게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해 나가고 있다.

1995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은 중소농, 소규모, 대규모 지구로 나누어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단위 친환경농업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해 실천기반 조성에 집중하였다. 1995년~2005년까지 총사업비 2,273억원을 투입하여 742개소를 조성하였다.

또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4,068백만원을 투자하여 병해충종합방제기술과 작물양분종합관리기술을 실천하는 친환경농업시범마을 34개소를 조성하였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은 2004년말 기준 2.5%수준이었으나 2010년까지 10%로 확대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을 매년 5% 수준씩 2013년까지 40%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3년까지 친환경농업지구를 읍면 1지구 조성으로 총 1,5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4년부터 대·소 규모 사업구분을 폐지하고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통합하여 사업지구 여건에 맞는 적정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에는 78개 지구 300억원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고 있으며, 단지당 100억원 규모의 광역친환경농업 단지 3개소도 추진하였다.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신뢰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홍보 TV-CF를 제작 방영하였고 2006년도 신규로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8억원을 조성하여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와 소비촉진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초등학생용 친환경 농업 학습교재 140천부를 제작·배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분기별 1회이상 주기적으로 유통실태 및 품질관리 점검을 실시하였다.

친환경농산물의 연중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매취자금 및 유통활성화자금 285억원을 지원하였고, 도매시장 친환경농산물 경매 유통기능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농안법의 정가·수의매매 품목에 포함하였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73개시·군에서 429억원을 지원하여 3,650여개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였으며, 도시 소비자의 친환경농업 인식전환을 위해 농소정협력사업으로 11개 단체(85천명)에 3억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농업교육도 바우처 교육을 2억원규모로 확대하였다.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사무관 윤승우, 농업사무관 이상집)

### 3. 토양개량사업 추진

토양개량사업은 산성토양 개량 및 논토양의 규산성분 공급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5년에 이어 2006년도에도 4년 1주기로 물량을 확보하여 100% 보조사업(국고 80%, 지방비 20%)으로 644천톤(규산 354, 석회 290)을 지원하였다.

또한 살포작업 간편화를 위하여 2001년부터 공급하고 있는 입상규산질 비료를 대폭 확대하여 2005년도 200천톤에 이어 2006년도에는 300천톤으로 확대·공급하였고, 석회질은 2005년도 40천톤에 이어 2006년도에는 60천톤을 입상으로 공급하였다.

아울러 오염농경지와 사질토양 및 토양유실이 많은 경사지, 고랭지의 밭 토양 등 토양의 물리·화학적 개선이 필요한 농경지 개량을 위해 2004년부터 농업종합자금으로 객토사업을 지속 실시하였다.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사무관 조정래)

#### 4. 사료·녹비작물 재배확대

겨울철 노는 땅에 호밀 등 사료작물과 자운영, 헤어리벤티 등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신선 조사료 공급을 통하여 축산사료 중 조사료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토양유기물 함량을 높여 지력이 증진되도록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호밀, 자운영, 헤어리벤티 등 사료·녹비작물을 파종면적 기준으로 2004년도 96천ha의 재배에 이어 2005년도에는 138천ha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리수매에서 제외된 경종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경종농가에서 재배한 보리를 축산농가와 계약하여 사료로써 공급할 수 있도록 청보리 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005~2006년도에는 9,070ha 재배에 이어 2006~2007년도에는 14,721ha로 증가하는 등 휴경지를 이용한 사료작물재배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농가 부산물 및 곡물을 활용한 자가배합사료의 이용도를 높이고, 볏짚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 등에 필요한 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사무관 조정래, 축산자원순환과 농업사무관 전익성)

#### 5.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구축

##### 가. 가축분뇨의 자원화

가축분뇨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자원화(퇴·액비)되면 유기물을 다량 함유한 유익한 비료로 이용이 가능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량 등에 기여하며 작물의 증수와 품질향상에 효과가 있다. 또한, 화학비료 사용을 대체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경종농가에서는 가축분뇨 퇴·액비를 토양에 환원하는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하되 축사구조와 지역여건에 적합한 처리공법의 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경종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품질

이 검증된 퇴·액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농가 스스로 악취 및 파리 등의 제거를 위하여 농장관리, 환경개선제 사용, 분뇨분리 등으로 악취저감을 유도하고 농촌진흥청,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이용과 지도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가축분뇨발효비료(액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액비유통센터(51개소, 2006년)를 지정하여 액비 수거·운반·살포장비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한편, 경종농가의 액비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액비저장조 설치를 지원(2006, 560개소 → 2007계획, 650개소) 하였다.

또한, 2005년 9월 자연순환농업팀이 구성되어 2006년 6월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추진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가축분뇨 발생단계에서부터 이용단계까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별 세부추진과제를 분류하여 경종과 축산이 공존하는 자연순환농업 구현 및 축산·경종농가의 퇴·액비 생산·이용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아울러, 수질오염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정화위주의 법제로 운영·관리해 오던 가축분뇨에 친환경개념을 도입하여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하도록 2006년 9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동 법률에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여 가축분뇨의 이용 촉진 및 관리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전문가의 평가 또는 검증절차 없이 퇴·액비 생산용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시공함에 따라 가동중단, 불량퇴비 생산 등 다수의 시행착오가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분뇨자원화 시스템을 전문가가 평가·검증토록 하여 그 결과를 농가 등에 제공하여 가축분뇨 자원화의 효율성을 증진시켰다. 평가를 통해 시설설치업체의 시스템 시공 후 농가 사후관리 강화 및 지속적인 기술개발 의욕 고취 등 여건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새로운 시스템이나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악취방지 시스템 등 평가분야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자원순환과 행정사무관 이동흥)

## 제2절 고품질·안전농축산물 공급

### 1. 우수농산물(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생산기반 조성

선진적인 안전성 관리제도로 도입 추진 중인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6년도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하여 2003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2005년 8월에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였고, 2006년 1월에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미생물·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 관리 기준 등 GAP 재배·관리지침을 96개 품목에 대해 제정하고, 관련제도 운용을 위해 세부기준 및 실시요령을 고시하였다.

GAP인증업무를 민간주도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인증기관으로 21개 기관을 지정하였다. 수확 후 농산물 처리를 위생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미비시설에 대한 지원(8개소, 14억원)을 하고, 수확후 처리시설 183개소를 지정하였다.

인삼 및 수출농산물 GAP인증관리와 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1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전산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GAP확대를 위하여 GAP 민간인증기관 전담요원 교육(316명)을 실시하고, GAP참여 예정자를 대상으로 농업인 교육은 6,088명을 실시하였다. GAP 및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관측행사, 신문 등 언론매체 홍보, 지하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 GAP참여농가수 : (2003) 9농가 → (2004) 357 → (2005) 965 → (2006) 3,659

(소비안전과 농업사무관 조동근)

## 2. 축산물위생·안전성 수준 제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서는 가축의 사육단계(Farm)부터 최종 소비단계(Table)에 이르는 축산물 공급체인(Supply Chain)의 전 과정에 대하여 각 단계별로 위생·안전관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육에서 최종 판매단계까지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가. 축산물위생관리 제도개선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가축의 사육단계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입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을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지원하며,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개정 내용은 첫째, 가축의 사육단계에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가축사육부터 최종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 HACCP이 적용됨으로서 예상되는 행정소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HACCP 적용작업장 등을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각 도축장의 HACCP 운용 수준이 다른 점을 보완하기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국고 보조사업비 등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둘째, 닭·오리고기 등이 비포장 상태로 유통됨으로써 유통과정중 병원성 미생물 등의 재오염이 우려되고, 수입축산물과 구별이 곤란하여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판매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던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농림부장

관에게 하도록 하고,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영업자 등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며,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수입축산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토록 하였다.

넷째,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축산물의 경우에는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 또는 진열하는 것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 가능성이 있는 축산물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 및 신속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공급되는 축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선진 위생관리기법인 HACCP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유통과정의 관리 강화와 과학적인 위해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축산물 위생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 나.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를 위한 HACCP 제도 추진

도축장 HACCP 제도의 정착을 목표로 2000년 7월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도축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HACCP 제도를 의무 적용하도록 추진하였으며, 2003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도축장에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허가관청인 시·도에서 그 적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HACCP 지정신청 작업장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HACCP 적용작업장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돼지 도축장 96개소, 닭 도축장 41개소와 오리 도축장 4개소에서 HACCP을 적용하고 있고, 이와 함께 유가공장 37개소, 식육가공장 332개소, 알가공업 3, 식육판매업 2, 사료업체 57개소를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HACCP 지정업체는 총 572개소이며 국내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HACCP 제도가 사육단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육단계에 적용할 HACCP 적용 지침 및 모델 개발을 추진하였고 2006년 돼지 사육단계에 대한 지침 및 모델 개발을 완료하였다. 추후 2007년 소, 2008년 닭에도 적용할 지침 및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돼지 사육단계의 경우 지침 및 모델개발과 함께 평가기준이 2006년 11월 제정됨으로서 돼지 사육농장에 대한 HACCP 지정여건을 확립하였다.

또한, 2006년 3월 24일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으로 HACCP 제도가 가축 사육부터 최종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 적용됨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소요에 대비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을 통한 HACCP 지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2006년 10월 31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담당기관(사단법인 축산물HACCP기준원)을 지정하였고 그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수행하던 HACCP 지정,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기관으로 이관하였다.

<표 2-2-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현황**

(2006년 12월 31일 기준)

도 축 장				축산물가공장				기 타	
계	소돼지	닭	오리	계	식육	유(乳)	알	판매업	사료
141	96	41	4	372	332	37	3	2	57

자료 : 농림부 축산국

**다.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서 매년 축산물위생감시지침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도에서 일차적인 축산물위생관리를 담당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중앙위생감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분담하여 2중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06년도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실태 지도·점검은 도축업 346, 집유업 46, 축산물가공업 1,953, 식육포장처리업 3,458, 축산물보관업 169, 축산물운반업 563, 축산물판매업 47,540개소 등 총 54,48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위반된 도축업 29, 축산물가공업 271, 식육포장처

리업 303, 축산물보관업 14, 축산물운반업 7, 축산물판매업 2,049개소 등 총 2,788개소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 등을 취했다.

#### **라. 축산물 수거검사 실시**

목표달성 위주의 획일적인 수거검사를 지양하고 위반이 반복되는 품목을 중점으로 지역별·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하였다.

2006년 수거검사 목표는 6,720건을 계획하였으며, 실적은 목표량보다 증가한 9,438건을 검사하였다. 수거대상 품목은 식육·식육가공품·유가공품 등 축산물가공품이 주 대상이었으며, 수거검사결과 총 32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

#### **마. 국내 축산물의 잔류물질 검사**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대상으로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잔류검사를 실시하였다.

잔류물질검사는 크게 잔류조사(Monitoring), 규제검사(Surveillance), 탐색조사(Exploratory)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2006년에 총 140,666건을 검사하여 이중 0.26%에 해당하는 364건이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된 우리 축산물은 소비자들이 우선 선택하도록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추진과정에 소비자단체의 참여확대 등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우리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

(축산물위생과 수의사무관 이기중)



### 3. 농산물 안전성 제고 및 표시관리 강화

#### 가. 농산물 안전성 제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 및 품질향상을 위해 농산물의 생산, 저장,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 잔류농약, 중금속 등을 조사하여 부적합품은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토록 하는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06년도에는 178품목 66천건의 농산물을 조사하였고 이중 750건이 잔류농약기준 초과 등 부적합품으로 판명되어 폐기 등 조치하였다.

또한, 토양, 용수 등 재배환경의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위해 252건을 조사한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었다. 폐광산지역 등 중금속 오염 우려지역 850여 필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하여 납·카드뮴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107건을 전량 수거하여 폐기하였다.

생산자가 스스로 안전 농산물 생산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450천명의 생산자와 22천명의 관계공무원, 농약판매상 등에 대한 안전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농산물 안전성 업무에 소비자 참여확대를 위해 농소정협의회를 지역별로 개최하였으며 농소정협의회 회원과 합동실태조사를 300건,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조사를 4,500건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 안전성 실태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농림부, 농진청, 산하기관, 농협,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의 전문가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농식품안전종합대책을 지속 추진하였다. 종합대책에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로 부적합품 시장유통 방지, 안전농산물 우대 및 농산물 표시 관리 강화,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소비자 정책참여 기회 확대 등 4개 분야에 대한 추진과제 및 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종합대책은 중장기 농산물 안전성 대책의 근간이 될 것이며, 향후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소비안전과 농업사무관 고경봉)

## 나. GMO·원산지 표시관리 강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GMO)·원산지표시관리를 강화하는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GMO표시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콩, 옥수수, 콩나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2002년 3월 1일부터 감자가 대상에 포함되었다.

GMO표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2006년 456명의 상주단속반을 편성하여 26천여개소를 단속한 결과 표시위반 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GMO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관련협회, 유통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2006년 교육 661천명, 홍보 4,005회, 지역 간행물 90천회)하는 등 GMO 표시제를 널리 알리고 있다. 또한 과학적 기반에 의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정성·정량 분석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는 등 GMO 표시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원산지표시는 1991년부터 수입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래, 1996년 국내가공품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왔으며, 현재 국산과 수입산의 경우 각각 160개 품목과 국내가공품 211개 등 총 531개품목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결과 원산지표시 이행율이 2006년 97.1%에 이르게 되었으나, 조직적 허위표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기획단속 실시, 단속기법 및 과학적 식별방법 개발 등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민간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부정유통 신고망(www.naqs.go.kr)을 구축하였으며, 소비자단체 회원 등 25,000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표시위반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내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소비안전과 사무관 김일상)

#### 4. 가축방역·검역 강화

구제역 방역대책 기본방향은 발생 위험성이 높은 3~5월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강도 높은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을 추진하고, 특별대책기간 종료 후에는 평시 방역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국경검역은 수입건초는 2회(수출국·국내도착) 소독 및 검사(132건)후 합격품만 반입하였고, 해외여행객 신발소독은 공·항만(36개소) 입국장의 발판소독조(215개소 405개)를 운영하여 모든 입국자의 신발소독을 실시하였다. 휴대축산물은 발생국 여행객을 중심으로 탐지견(35두) 및 현장검역관 기동배치(86명) 등을 통해 29천건(74천톤)을 검색하였고 이중 탐지견 검색건수는 7.4천건(13톤)으로 총 검색실적의 25.3%를 차지하였다. 또한 휴대축산물의 반입신고 및 자제를 위해 재외공관(22개국 37개공관)을 통해 검역안내서(125천부)를 배포하였고 검역전용전광판 제작·설치(20대) 선기내방송·리후렛 배포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국내방역은 우선 예찰요원(5,440명)을 동원하여 농장예찰 및 혈청검사(110천두) 실시로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확립하였고, 가축질병신고전화(1588~4060) 및 특별대책기간중 상황실을 운영하였다. 또한, 매주 수요일 “전국일제소독의날”(연 52회)을 운영하면서 공동방제단(3,885개반)을 동원하여 소규모 농가(272천호)에 대해 소독(연 20회)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축산관련 외국인 연수생(473개소 902명)에 대하여는 농협에서 명단을 관리하고 지자체 및 검역원에서는 해당농장을 방문하여 방역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지자체는 초동능력 향상을 위해 가상방역훈련(56개 시·군)을 실시하였고 정기적인 방역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즉, 휴대축산물의 검색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방역상황 점검으로 취약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완 조치하였으며, 지자체 초동대응능력 향상 등을 통해 2002년 6월이후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다만, 지자체·농가·축산시설 경영자의 능동적인 방역활동과 지자체의 방역인력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고, 또한 해외여행객 입국자의 편의를 감안하였기에 휴대축산물 검색에 한계가 있었다.

소 브루셀라병 방역대책은 2013년 근절을 목표로 가축시장·도축장 및 문전거래되는 모든 한육우 암소에 대한 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하였으며, 10두 이상 농장(연2회)과 수집상·중개상(연4회)이 사육하는 소, 자연교배 수소(연4회)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가축 및 사람 브루셀라병 예방을 위해 홍보리후렛을 제작·배포(2회 400천부), 전문지 광고 등 예방수칙을 홍보·교육토록 하였다.

한육우 브루셀라병 발생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사유는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또한 일관성 있는 방역대책 추진으로 그동안 숨겨져 있던 감염소를 색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소 브루셀라병 발생 확산방지를 위해서 보완 및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검사대상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돼지콜레라는 2003년 72건 발생이후 2004년 9건, 2005년 5건, 2006년 2건이 발생하여 발생건수가 급속도로 감소하였다.

<표 2-2-2>

**돼지콜레라 발생 현황**

(단위 : 두수(건))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돼지콜레라	1,683 (5)	-	-	406 (13)	5,866 (72)	779 (9)	811 (5)

앞으로 돼지콜레라 발생 최소화 및 청정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예방접종 명령 위반농가(면역형성을 80%미만)는 과태료 처분과 혈청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항체가가 높은 모돈(감염 의심축)은 조기도태 유도로 감염원을 차단하고,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으로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고, 청정화에 대한 단계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밀집지역 농가분산, 친환경 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축방역과 수의사무관 조옥현)

### 제3절 농업구조의 체질개선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

#### 1. 농업구조의 체질개선

##### 가. 영농규모화 사업 촉진

영농의 규모화·집단화를 통하여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 전업농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영농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한국농촌공사를 통하여 비농가나, 전업 또는 은퇴하는 농업인들로부터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를 다시 젊고 유능한 쌀 전업농에게 장기저리의 이자(매매 : 연리 2%, 임대 : 무이자)로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우리나라의 쌀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영농규모화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동 기금은 재원의 상당부분을 이자율이 높은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재특회계의 차입에 의존함으로써 구조적으로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관리기금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997년부터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규모 확대를 할 수 있는 농지임대차사업 중심으로 그 추진방향을 전환하였다.

청장년층의 쌀 전업농 참여를 촉진하여 영농규모화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지매매사업자금 상환 기간을 당초에 20년 균분상환에서 15년에서 30년까지 연령별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여 청장년층에 대한 자금상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

2006년도 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10,426ha 4,341억원으로 이중 농지매매가 3,856ha 2,856억원, 농지임대차가 6,537ha 1,458억원, 농지교환·분합이 33ha 27억원을 집행하였다.

동 사업자금의 시·도별 예산은 각 시·도별 농업진흥지역 면적, 쌀 전업농수, 2006년 사업신청액, 전년도 집행실적, 농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배

정하였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 많고 쌀 전업농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규모 확대가 촉진되었다. 전체 벼 재배농가 903천호 중 8.9%(80.3천호)의 비중을 차지하는 쌀 전업농이 전국 벼 재배면적(955천ha)의 32%를 담당하여 쌀 산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쌀 전업농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3ha이상 생산 농가가 48천호로 이중 쌀 전업농이 39천호(81%)를 차지하였다.

<표 2-2-3> 2006 영농규모화사업 계획 대 실적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2006 계획(A)		2006 실적(B)		집행율 (B/A)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계	10,227	434,146	10,426	434,112	100
농지매매	3,933	285,564	3,856	285,564	100
임대차	6,244	145,857	6,537	145,857	100
교환분합	50	2,725	33	2,691	99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국

#### 나.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농규모화사업과 마찬가지로 한국농촌공사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년간 계속하여 벼를 재배하고 10년이상 벼농사에 종사한 연령이 63세이상 69세이하인 고령농가가 소유농지를 쌀 전업농에게 매도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최단 2년, 최장 8년간 ha당 241천원(연 2,896천원)을 매월 분할 지급하며, 임대하는 경우는 ha당 2,977천원을 1회에 일시 지급해 주고 있다.

아울러 한·칠레 FTA 비준시 추가지원 대책에 따라 70세이상 72세이하

고령농업인에 대해서도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매도·임대 공히 ha당 2,977천원을 1회에 걸쳐 일시 지급해 주고 있다. 지급상한은 재정범위를 감안하여 2ha까지로 되어 있다.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산성이 낮은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과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가 동시에 달성되도록 영농규모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6년도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3,709ha 14,391백만원으로 이 중 매매이양이 566ha 3,963백만원, 임대이양이 3,143ha 9,389백만원을 집행하였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72.7천명의 고령은퇴 농업인에게 1,373억원의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하여 고령농업인 1인당 189만원의 소득을 지원하였으며, 쌀 전업농 49.6천명에게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농지 49.1천ha를 양수하여 쌀 전업농 1인당 1.0ha의 영농규모를 확대하였다.

<표 2-2-4> 2006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계획 대 실적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2006 계획(A)		2006 실적(B)		집행율 (B-A)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계	4,818	17,491	3,709	14,391	82
사업비	4,818	16,452	3,709	13,352	81
운영비	-	1,039	-	1,039	100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산경영과 기술서기관 김기훈)

## 2. 농업생산기반 정비 지속 추진

### 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과거의 경지정리는 당시의 영농 수단인 경운기 등을 이용한 영농방식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 필지 규모가 600~1,200평으로 작고, 농로가 없거나

협소하며, 용수로와 배수로가 겸용 또는 토공으로 되어 있어 대형 농기계 작업과 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과거 경지정리된 지역중 평야부의 집단화된 우량농지 지역을 재정비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1994년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고 이를 재원으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이미 경지정리된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주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필지 규모를 3천평 규모로 대형화하고, 용수로와 배수를 구조물화하는 등 시설을 현대화하며, 농로는 기존의 폭1.5~4m를 3~7m으로 확장·정비하여 대형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표 2-2-5> 연차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ha)

구 분	목 표	2006까지	2007계획	2008이후
사 업 량	164	101	4	59

주 : 봄마무리 기준임. 2003년에 목표면적 조정 : 200천ha → 164천ha  
 자료 : 농림부 농촌정책국

최근 쌀 산업여건변화, 농촌·농업에 대한 재정수요변화 등을 감안하여 기계화·규모화 영농에 꼭 필요한 집단화된 농지 위주로 시행하기 위해 당초 개발목표 200천ha를 164천ha로 재설정하고, 수리시설 개량만으로 영농여건 개선이 가능한 지역은 수리시설개보수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1994년 가을에 5천ha를 시작으로, 2006년 봄마무리까지 국고 1조 9,936억원, 지방비 6,073억원 등 2조 6,009억원을 투자하여 101천ha를 완료하였다.

(시설관리과 시설사무관 박재수)

**나. 밭기반정비사업**

밭기반정비사업은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 확충



을 위하여 생산기반 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 등의 수원공개발, 농로개설, 밭경지정리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1970년대에는 일부 지역에서 밭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쌀 증산 및 고미가정책 등의 영향으로 우량밭이 논으로 전환되어 밭정비가 정착되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 국민소득증대와 더불어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신선채소, 과일 등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밭작물의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밭기반 정비 여건이 성숙되어 1994년부터 전국 단위로 밭기반정비를 시행하게 되었다.

사업 초년도인 1994년에는 국고지원율이 60%로 지방비 부담이 어려운 일부지역에서는 지방비(40%)를 부담하지 못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사업추진방식도 착수 당해년에 완료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고지원율을 1995년에 70%, 1996년에 80%로 상향조정하였고, 사업추진방식도 착수 당해연도 완료방식에서 2개년차 사업완료방식으로 조정하였으며, 밭기반이 정비된 지구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생산유통지원사업 등 관련사업과의 연계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적정한 사업계획 검토, 시설물 활용방안, 영농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군, 농업인, 한국농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는 사업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농업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시설물을 관리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완료 후에는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조직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밭 관개용수는 기존 저수지와 양수장의 여유수량을 활용하고, 신규 농업용수 개발시에는 밭용수를 확보하는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 지하수 개발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밭기반정비사업은 국민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한다. 또한, 밭작물 생산성 향상과 맛 등 품질이 우수한 밭작물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재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

업경쟁력 제고, 아름다운 국토공간을 가꾸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요 시책사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6>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천ha, 억원)

구 분	총발면적	목 표	2006까지	2007계획	2008이후
사 업 량	716	110	73	5	32
사 업 비		25,794	16,903	1,094	7,797

자료 : 농림부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 기술서기관 전경구)

**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어촌지역의 도로 확·포장사업은 1970년대에는 새마을사업 등 주민생활사업 위주로 추진되었고, 1985년부터 농어촌소득원 도로사업으로 농림부 주관하에 추진되었다. 1990년 12월 지방양여금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정으로 농어촌소득원 도로사업이 행정자치부(당시 내무부)로 이관되어 1991년부터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통합되어 추진되었다.

그러나,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농어촌생활권 위주의 개발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는 기여하였지만, 대형농기계의 보급확대 등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1995년도에 별도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농림부 주관하에 시작하였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농로는 개설되었으나 농로가 협소하고 비포장인데에 따른 기계화영농, 농산물 운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였고, 주산단지과 미곡종합처리장 등 농업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 시설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유통구조개선에 기여하였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농업경쟁력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생활도로로도 이용되는 등 농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7>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천km, 억원)

구 분	목 표	2006까지	2007계획	2008이후
사 업 량	35	17.5	1.3	16.2
사 업 비	37,071	17,933	1,405	17,733

자료 : 농림부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 시설사무관 박재수)

### 라. 배수개선사업

매년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침수피해를 입는 수해상습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정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며 2006년에는 2,179 억원을 투입하여 약 5천ha를 준공함으로써 2006년까지 총 대상면적 188천ha의 71%인 134천ha를 완료하였다. 최근 기상변화로 강수량이 증가되어 침수면적이 늘어나고 있고 설치된 지 오래된 시설은 홍수배제능력이 부족하여 시설개선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따른 사업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 2-2-8>

###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ha)

구 분	총대상	2006까지	2007계획	2008이후
사 업 량	188	134	4	50
지하배수	47	3	-	44
사 업 비	43,252	26,936	2,103	14,213

자료 : 농림부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 기술서기관 전경구)

**마.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방조제 등이 이미 설치되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중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영농급수에 지장이 있으며, 재해에 위험이 있는 시설을 보수·보강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2006년도에는 저수지, 양수장, 방조제 등의 재해취약시설과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로중 흠으로 되어 있어 유지관리가 어려운 용수로의 개보수에 4,358억원을 투입하였다. 사업별로 보면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개보수에 3,454억원,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에 340억원, 지방관리 방조제개보수에 564억원이 투입되었다.

<표 2-2-9>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지구)

구 분	총대상		2006까지		2007계획		2008이후	
		%		%		%		%
공사관리수리시설	8,769	100	5,622	64.1	106	1.2	3,041	34.7
국가관리방조제	206	100	117	56.8	11	5.3	78	37.9
지방관리방조제	3,284	100	117	34.0	81	2.5	2,086	63.5

자료 : 농림부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 시설사무관 김동권)

**바. 농업용수 개발사업**

농업용수개발은 영농에 기본이 되는 물을 확보·공급하는 사업으로서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농업인의 열망도 높은 사업이다. 그러나 연간 예산지원규모가 실제 소요보다 크게 부족하여 준공이 지연되고 사업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시행중인 지구의 준공을 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하며 예산규모도 확대하는 등 동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 대규모 용수개발의 사업준공(경북 성주, 전북 동화 7,380ha)에 이어, 2006년도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101개 지구에 2,436억원을 투입하여 15개 지구 3,966ha를 준공하여(지표수 보강 1,508ha, 소규모용수개발 224ha 준공) 용수부족지역 영농급수에 기여하였다.

<표 2-2-10>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ha)

구 분	총 계 획	2005까지	2006실적	2007이후
대 · 중 규 모	118.8	56.5	4.0	58.3
소 규 모	11.0	0.3	0.2	10.5
지표수 보강	31.8	21.0	1.5	9.3

자료 : 농림부 농촌정책국

(기반정비과 기술서기관 이성홍)

**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하천 등 대규모 수계를 중심으로 농업용수 공급,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 등 각종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수자원 확보와 기계화 영농기반구축은 물론, 상습침수를 해소하고 우량농지를 창출하여 영농환경개선 및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1970년에 금강·평택지구를 시작으로 2006년까지 총 22지구 28만 3천ha를 추진하여 그중 금강, 평택, 계화도 등 15지구 16만 2천ha를 완공하고 현재 7지구 12만 2천ha에 대한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2006년에는 시행중인 7지구에 국고(농특회계) 910억원, 농지관리기금 2,510억원 등 총 3,420억원을 투입하였다.

한편, 2006년에는 2001년 8월 환경단체가 제기한 새만금사업 공유수면매립면허의 무효확인 및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 사상 3번째로 공개 변론을 열고 2006년 3월 16일 “새만금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해양환경, 수질대책 등은 사업자체를 무효라고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며, 사업을 취



### 아.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은 기존의 인력에 의하여 현장위주로 물 관리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중앙관리소에서 원격조정에 의하여 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용·배수 제어시설을 자동화하고 원격조정장치를 설치하는 등 물관리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용수절약 및 물관리비 절감 등 물관리 효율을 높이고 재해 등에 신속히 대처, 농업인에 대한 물관리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2006년도에는 10개 지구에 국고 66억원을 투입하여 3개 지구를 준공하였다.

<표 2-2-12>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추진계획

(단위 : 지구)

구 분	총대상		2006까지		2007계획		2008이후	
	개	%	개	%	개	%	개	%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93	100	12	12.9	1 (10)	1.1	80	86.0

※ 사업량은 완료기준이며, ( )는 시행물량임.

자료 : 농림부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 시설사무관 김동권)

## 3. 농업전문인력 육성

### 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1) 개요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젊은층의 이농 현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국내 농업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생산기술과 경영기법을 실천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농업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장차 우리 농업을 선도할 농업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81년도부터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일정기준에 적합한 청장년을 후계농업인으로 선발하여 영농기반 확보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특히 35세 미만의

젊은 농업인력은 창업농후계농업인으로 선정하여 후계농업인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45세 미만의 농업인력에 대해서는 신규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 2006년도 추진상황

2006년에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은 499명을 선정하고 농업종합자금으로 총 17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은 1,044명을 선정하고 1인당 평균 7,000만원을 개인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으며, 기술교육, 각종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병행하였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이 된지 5년이상된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발전가능성을 평가하여 추가지원 대상자 1,829명, 1인당 평균 금액 8,000만원 한도로 1,200억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 중 한우 마리수 증가로 인하여 한우 구입자금을 별도 지침이 있을때까지 잠정지원 중단하여 소값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였고, 창업농 교육을 선교육 후 선정 지원방식으로 개편하여 적격사업자 선정후 원활한 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농 후계농업인 육성대상자는 특·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따라 1인당 2천만원~2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차등 지원되고, 창업농 자금은 연리 4%에서 3%로 인하하여 농촌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창업농 자금을 2천만원~2억원까지 차등지원하여 후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여 창업농자금 지원시 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2-2-13> 2006년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육성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경 종	축 산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1,044	653	391

자료 :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신규후계농업인 육성대상자는 시·군의 추천을 받아 농업종합자금 사업 계획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2~5천만원 범위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때 금리는 3%이며, 상환기간은 1~5년거치 2~10년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 (3) 평 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1981년부터 2006년까지 2조4,376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우리 농업을 선도할 125천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확보하였으며, 우리 농업·농촌의 활력 제고 및 지속성 확보에 기여하였다.

(경영인력과 기술서기관 양주필)

## 나. 농업법인 육성

### (1) 농업법인제도

1989년 영농규모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 육성계획을 농어촌발전종합대책으로 발표하고, 이듬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제정에 따라 법인설립의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농업법인제도가 도입되었다.

1994년 농업법인에 농업생산, 가공·유통 기능까지 포함한 생산자조직으로 역할과 기능이 부여되고, 위탁영농회사의 명칭을 농업회사법인으로 개칭하면서 농업법인제도의 체계가 정립되었으며,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의 제정으로 농업법인 육성 근거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동 법으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고,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할 수 있다.

<표 2-2-14>

농업법인제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목적	협업적 농업경영	기업적 농업경영
근 거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발 기 인	농업인 5인이상	합자(유·무한 각 1인이상), 합명(2인이상), 유한(2인이상 50인 이내), 주식(1인이상)
의 결 권	1인 1표제(인적 구성)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	출자지분(물적 구성) 비농업인도 의결권 인정
출 자	농지, 현금, 현물	농지, 현금, 현물
출자한도	제한 없음	총출자액의 3/4까지 비농업인 출자가능
농지소유	제한 없음	대표이사 및 집행이사 1/2이상이 농업인이고, 농업인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1/4이상

(2) 농업법인 현황

농업법인 수는 2000년 5,208개소에서 2006년 5,308개소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농업법인의 연간 총 매출규모는 2000년 1조 7,003억원에서 2006년 4조 2,645억원으로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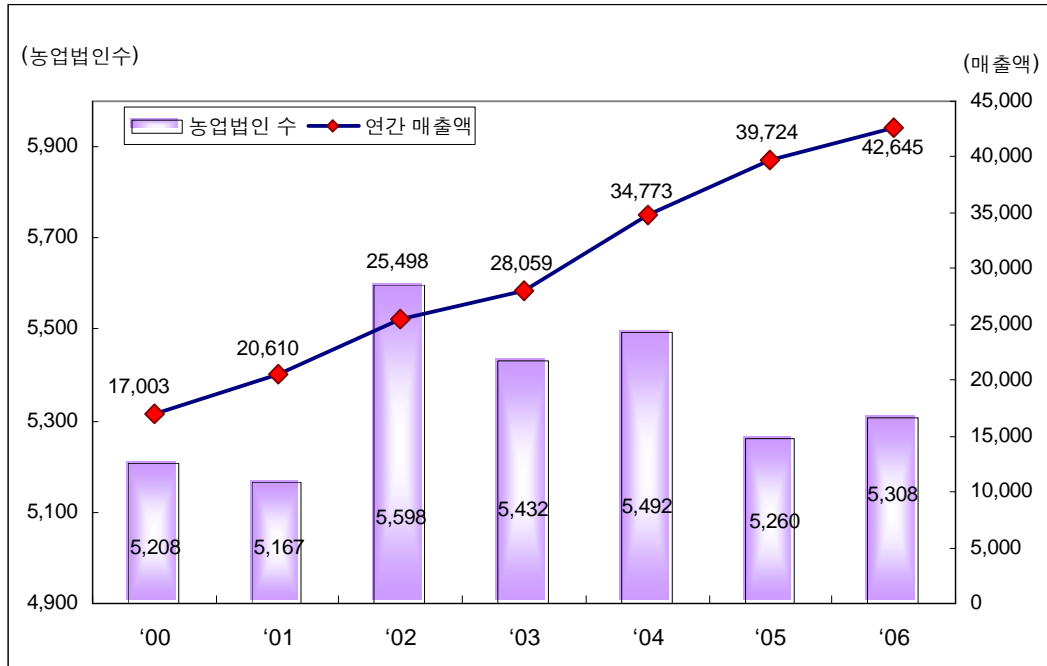
또한, 농업법인당 자산은 2000년 11억 8백만원에서 2006년 14억 7천1백만원으로 33% 증가하였으며,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2000년 286%에서 2005년 188%로 평균98%p가 감소하여 안정성이 증대되었다.

2006년 법인당 출자금은 2억4천9백만원이며, 평균 출자자수는 20명선이 고, 농업법인당 평균 매출액은 2000년 5억5백만원에서 2006년 16억8천만원으로 232.7%가 증가하였다.

특히,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법인이 2000년 332개에서 2006년 797개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법인별 당기 순이익은 2000년 5백만원에서 2006년 4천8백만으로 9.6배가 증가하였다.

2006년 농업법인의 평균 종사자 수는 8.6명으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2-1> 농업법인 수 및 연간 매출액



<표 2-2-15> 농업법인 수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영농조합법인	3,852	3,919	4,315	4,274	4,425	4,293	4,410
농업회사법인	1,356	1,248	1,283	1,158	1,067	967	898
합 계	5,208	5,167	5,598	5,432	5,492	5,260	5,308

### (3) 농업법인제도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

농업법인제도는 개별농가의 자본과 기술을 통합하여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고, 고품질·기술농업의 실현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농업경영의 전문화 촉진에 기여하였으며, 법인화를 통해 농업분야에 기업적 경영방식을 도입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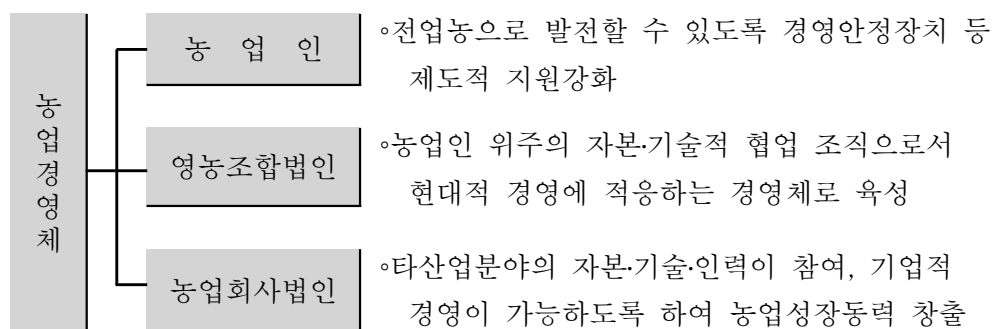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거 농업법인의 지원우대로 정부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후 개별 경영체로 전환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법인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4) 농업경영체활성화 대책 추진

이러한 농업법인이 DDA·FTA 등 개방확대에 대응하여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4년부터 농업경영체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농업인 위주의 농업관련 세금제도를 농업법인의 성장을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농업회사법인에 외부자본과 경영 전문인력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진입제한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창업 및 기업경영의 전 과정에 걸쳐 농업법인의 사업원활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충해 나가기 위해 대책을 수립·추진하였다.

2006년말까지 총17개 추진과제 중 14개 과제를 완료하였으며, 3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 <제1차 농업경영체활성화 대책 주요 추진실적>

#### ◇ 법인 성장유도방향으로 세제보완

- 농업법인 창업 후 2년내 취득 농업용 부동산의 취·등록세 면제
- 농지구입 정책자금 이자를 농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
- 농업법인의 농지 구입시 국민주택채권 구입의무 면제
-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업용 창고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 5년간(2005~2009) 농업소득세 과세 중단
- 친환경 농업용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세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배제

#### ◇ 외부자본과 전문인력 참여 촉진을 위한 진입제한 완화

-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격기준에 지자체 농업공기업 포함(추진중)
- 농업법인에 관광사업 허용 등 부대사업 제한 완화(추진중)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인 출자지분과 농지소유제한 완화(1/2→1/4)

#### ◇ 기 타

- 농업법인협의체 구성 → 한국농업CEO연합회 설립(2006년 3월)
- 창업보육센터 권역별 확충 및 농업벤처펀드 신규조성 등 농업벤처 육성
- 맞춤형 교육기반 구축 및 컨설팅 지원제도 개선
- 경영회생지원사업 지침 개정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 마련
- 영농조합법인 종사자에 대한 건강공제 혜택 등
- 농업회계처리지침 마련, 정보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 중장기 검토(추진중)

(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유미선)

## 다. 신지식 농업인 육성

### (1) 개 요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기술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기로, 농업도 소규모 토지·자본으로 신지식과 기술 및 마케팅을 잘 활용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농업의 시대이다. 이러한 지식농업 시대의 주역으로서 농업과 농촌의 변화를 주도 해 나가고 농업경쟁력 제고함을 물론 농업인의 신지식농업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1999년에 ‘신지식농업인’ 발굴·육성계획을 수립하여 1999년부터 신지식농업인을 선발해 오고 있으며, 2006년에도 24명의 신지식농업인을 선발하는 등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218명의 신지식농업인을 선발하였다.

지금까지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에 대해서는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를 통하여 신지식농업인들이 보유한 신기술과 노하우를 농업인에게 확산·보급시키기 위한 기술교육 등을 전수하고 있으며, 미래의 전문농업인인 농과계 학생에 대한 지식농업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신지식농업인의 성공모델을 네트워크화 하여 농업인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포털사이트(www.farmig.com)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지식농업인 홈페이지 운영 및 전자상거래 등을 관리하는 등 신지식농업인에 대한 관련정보를 일반농업인이나 소비자들에게 최대한 제공해 오고 있다.

아울러 신지식농업인의 영농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제도 발굴은 물론 정부시책을 수행하고 전달해 주는 농업선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선진농업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 < 신지식농업인의 개념 >

---

지식의 생성·저장·활용·공유를 통해 농업의 생산·가공·유통 등을 끊임 없이 개발·개선·혁신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변화를 주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2) 신지식농업인 육성 방안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식농업을 주도할 신지식농업인을 확대 발굴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전문농업인력 육성차원에서 99년부터 추진해 온 신지식농업인 선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정부의 직접적인 사업자금 지원방식 보다는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에 대한 농신보 보증한도의 점진적 확대, 경영컨설팅 우대 등 간접지원방식을 적극 모색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신지식농업인들의 자긍심과 독자적인 사업추진능력을 도모해 주도록 하며, 신지식농업인으로서의 양성을 위하여 미래의 농업세대에 대한 신지식농업인 농장 견학 투어 및 체험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각종 농업박람회를 통한 지식농업 분위기 확산과 방송매체 등을 통한 신지식농업인 영농현장 및 활동 소개, 우수사례 전파 등 신지식농업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장차 신지식농업인을 한국농업을 이끌어 갈 지식농업의 주체세력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이호재)

**라. 농업인 교육훈련**

(1) 도입배경 및 의의

농촌인구의 감소·고령화 등 농업 인력의 양적·질적 저하가 심각하며, 시장개방 확대 등 농업환경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농업의 핵심역량이 노동, 토지, 자본 중심에서 지식, 정보, 창의성 및 문제해결 능력을 지닌 인적자원 중심으로 변화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전문지식·기술 및 경영혁신 능력을 겸비한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농업교육 추진체계나 프로그램 등은 환경변화나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낙후되어 있으며, 과거 증산과 정부주도의 틀 안에서 큰 변화없이 미세조정만하여 답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며 평균수준의 교육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농업인

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였고, 체계적인 교육지원시스템 및 교육인프라 구축도 미흡하였다

따라서, 신지식·기술·경영능력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및 농업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현재 농업인에 대한 교육현상 및 농업인 교육기관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교육훈련 체계 혁신을 위한 방안과 체계적인 교육지원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가장 핵심이 되는 농업인력의 경쟁력을 체계적인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통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우리나라 농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기 때문이다.

## (2) 2006년도 추진상황

농업교육혁신은 농업의 체격과 체력을 키우고 체질을 개선하는 성장동력이며, 정직한 흙의 가치, 진정한 땀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배워서 돈이 되는 교육을 통하여 농업인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시발점이다.

지금까지 농업교육은 미래 비전과 그 비전을 실현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고 과거 답습과 정체를 되풀이 해왔다. 이에 따라 농업계와의 12차례 간담회와 농림부·교육부·농고교사 등으로 구성된 농고현장체험교육 T/F 팀을 구성, 8차례 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모으고,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수요자 맞춤형 농업교육프로그램 모델」연구용역을 추진하여 2006년 1월에 농업교육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농업교육체계 개편방안을 보면, 민간주도 맞춤형 전문교육방식으로 전환하고, 젊고 유능한 후계인력 발굴과 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배워서 돈되는 교육으로 농촌에 희망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교육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론과 현장 동시 접목, 신기술 도입 스피드화 등 글로벌 교육모델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품질혁신, 시장확대, 생산비 절감, 안전성 확보 등에 교육초점을 두어 배워서 돈되는 현장교육 기회 제공으로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정책의 주요 내용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신지식·기술·경영능력 중심의 전문교육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및 농업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젊고 유능한 농업경영인 육성 등을 위하여 농업교육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다

첫째 농업교육의 목표는 민간주도의 현장위주 맞춤형 전문교육 방식으로 전환하여 농업인이 고소득을 올리는 「배워서 돈되는 전문교육 기회 제공」으로 농업시장의 개방 확대와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욕구 등에 대응하여 농업인이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고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주고자 함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담당했던 각종 농업인 교육을 생산자단체 등 민간이 주도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교육내용도 일반적이며 평균적인 교육에서 중농이상 규모화된 농가를 대상으로 한 현장위주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추진하였고, 이를 위하여 자조금이 조성된 품목(18개)과 자조금이 조성되지 않았으나 기 지원품목(6개)에 대해 품종선택에서 유통·마케팅, 이론/실습/해외연수까지 전 과정을 일괄 Package 형태로 수요자 중심의 품목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품목 단체가 아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8개 일반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는 기존 회원관리 위주에서 마케팅이나 자금 활용 등 농업인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경영기법, 농업인 성공사례 등 특수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자체·농협·대학·농업인단체·지역농업클러스터 등이 연계하여 지역농업교육협력체를 구성하고,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하여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한 기술연구에서부터 교육·지도까지 농업인의 요구가 반영되고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농업인 조직화를 통한 계약재배 확대, 품종통일, 재배방법 통일 등으로 우수한 공동 브랜드나 통합 브랜드를 적극 확산시켜 나가도록 브랜드 육성 교육도 실시하였다.

둘째, 농업의 활력을 높이고 우수한 젊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후 계농업경영인 선정방식을 선선발 후교육에서 선교육 후선발 체계로 변경하여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셋째, 미래 농업에 대한 비전을 갖고, 농업환경에 부합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잠재적인 신규 영농인력 양성을 위해 농과대에 영농정착교육과정을, 농고에 현장체험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지원하였다.

영농정착교육과정은 농학계대학의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하여 농대 2학년 부터 3년간 창업희망학생에게 현장과 연계한 교육과정으로 강원대, 공주대, 제주대에서 시범 실시한 후 평가를 거쳐 2007년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농고의 현장체험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농업·농촌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농업응용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가와 학교간 협력을 통해 현장 견학·체험·실습, 농업인 성공사례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10개 농고에서 시범 운영하였다.

넷째, 귀농자 등 비농업계 인력의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과정도 새로이 도입되었다.

만 44세 미만의 신규 영농정착 희망자를 대상으로 품목 특성에 따라 3~6개월의 단기 과정을 신설하여 농업이론과 실습, 영농설계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다섯째, 교육인프라도 대폭 확충하였다.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제시하는 교육프로그램 모델을 20개 품목과 4개 공통과정에 대해 개발하여 교육기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농업인, 대학교수, 현장전문가 등 전문강사 및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시설과 교육기관 풀을 구성하여 농업인 전문교육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농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업교육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업교육과 컨설팅, 지도사업 등을 총괄·조정토록 해나가고, 각 교육기관의 정보를 상호 연계해서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도록 통합농업교육정보 시스템도 구축하였다.

돈이 되는 농업교육을 실현하고 농업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2005년 35억원 수준이었던 농업인 교육 예산을 2006년 122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농업교육체계 개편을 적극 뒷받침하였다.

### (3) 평 가

농업인단체 등의 교육 참여 확대로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교육 추진여건이 마련되었으며 문제해결형 기술습득, 농업금융 활용방법, 맞춤형 사업계획 수립교육 등 현장에서 필요한 고품질 교육내용 및 모델이 시도되었고, 현장교육수요가 교육과정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교육기관의 노하우와 교육기법을 접목하여 교육성과를 높이고, 관광성격이 짙었던 해외연수를 전문연수기관이 계획 수립·사전교육·현지진행까지 일괄 추진하는 체계로 개선하였다

또한, 지역농업교육협력체가 구성되고, 지역단위 교육목표의 공동설정 및 기획기능 수행으로 중복교육이 감소하고,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교육수요조사·기획부터 자체평가까지 교육운영 업무 개선에 큰 기여를 하였다

(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김휴현)

## 마. 여성농업인 육성

### (1) 개 요

1960년대 이후 진행된 산업화정책으로 농가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여, 1970년의 14,422천명이 2006년에는 총인구의 약 6.8%인 3,304천명으로 줄었다. 농가여성인구도 1970년의 7,258천명이 2006년에는 1,697천명(농가인구의 51.3%)으로 감소하였다.

<표 2-2-16>

농가인구 추이

(단위 : 천명)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14,422	10,827	6,661	4,032	3,591	3,530	3,415	3,434	3,304
남성 (%)	7,164 (49.7)	5,415 (50.0)	3,279 (49.2)	1,972 (48.9)	1,748 (48.7)	1,715 (48.6)	1,654 (48.4)	1,677 (48.8)	1,607 (48.6)
여성 (%)	7,258 (50.3)	5,412 (50.0)	3,383 (50.8)	2,060 (51.1)	1,843 (51.3)	1,815 (51.4)	1,761 (51.6)	1,757 (51.2)	1,697 (51.3)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2005), 농업기본통계(2006)

이와 같은 농가인구변화에 따라 농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의 하나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농가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토록 할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여성농업인력의 전문화라는 목표 하에 다양한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1999년에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여성농업인력육성)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00년에는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1~2002년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령·시행규칙을 완비하여 여성농업인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2006년에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전문인력화, 복지 증진 그리고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이라는 4대 추진과제로 하는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 주요 추진시책

(가) 농가경영협약 보급을 위한 교육 지원

농가경영협약은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가족구성원간의 영농계획의 수립, 노동에 대한 보수, 휴가, 경영승계 등의 내용을 문서로 명확하게 협약함으

로써, 가족구성원의 농업경영 참여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고취하고 경영합리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성농업인단체를 통해 ‘농가경영협약’을 교육하고 있으며 농림부에서는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73쌍을 교육했으며 92농가가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각종 위원회 및 협동조합 등에 여성의 참여확대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확보와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그리고 여성의 관점이 농업정책에 반영되도록 농업관련 각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농정분야 각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1997년 5.1%에서 2001년 30.2%, 2002년 35.8%, 2003년 35.9%, 2004년 32.4%, 2005년 30.5%, 2006년 33.1%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농업협동조합 운영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를 추진한 결과, 여성조합원 비율은 (2001) 19.6% → (2002) 21.2% → (2003) 22.6% → (2004) 23.6% → (2005) 25.3% → (2006) 26%, 여성대의원수는 (2001) 1,924명 → (2002) 2,225명 → (2003) 4,167명 → (2004) 4,886명 → (2005) 8,341명 → (2006) 8,530명, 여성임원수는 (2001) 94명 → (2002) 181명 → (2003) 207명 → (2004) 237명 → (2005) 304명 → (2006) 348명으로 꾸준히 확대되었다.

이밖에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촌공사 등 농업관련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여성임원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다) 여성농업인단체 지원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활성화를 꾀하고 농촌지역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여성농업인단체 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매년 여성농업인 단체주관 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업·농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시·농촌간 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여성농업인단체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회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2006년 주요 지원내역을 보면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큰 폭으로 확대되어 농림부 338백만원, 농협 200백만원을 각각 지원하였다.

<표 2-2-17>

**여성농업인단체 교육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합계	농 립 부							농 협						
	소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소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033	412	80	90	85	76	81	338	483	25	95	47	66	50	200

<표 2-2-18>

**여성농업인단체 현황**

단 체 명	대표자	회원 (명)	설립목적	지도기관 (조직형태)	설립일자
농가주부모임진국 연 합 회	김귀숙	58,000	농촌여성의 소득사업개발 및 지위향상	농 립 부 (사단법인)	1999.11.
생활개선중앙회	조희숙	97,000	농가생활의 질 및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	농촌진흥청 (사단법인)	1994.11.
전국여성농민회 총 연 합	김덕윤	10,000	여성농민의 권익실현	농 립 부 (비영리민간단체)	1989.12.
한국여성농업인 중 앙 연 합 회	우정규	53,000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도모	농 립 부 (사단법인)	1996. 8.

(라)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훈련실시

신기술·신지식농업으로의 이행과 친환경농업의 확산, 유통 및 식품안전을 비롯한 농업관련산업의 발달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는 농업·농촌발전의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농가인구의 51%에 달하고 농업주종사자의 53%를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정도는 개인 뿐 아니라 국가의 농업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었다.

농림부·농촌진흥청·농협 등 농업관련기관의 주관으로 영농에 필요한 각종정보를 활용하고 스스로 체계화 할 수 있는 정보화 교육 6685여명,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및 브랜드교육 552여명, 농

업경영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전하기 위한 경영혁신 및 리더십교육 2,969명을 실시하였다.

특히 2002년부터는 여성농업인 교육훈련에 관심과 자질이 있는 여성농업인 또는 관련단체 지도자를 대상으로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강의기법 등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창조적 실천력을 갖춘 여성농업인 전문강사요원을 양성하고자 농림부 소속 농업연수원에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지도력개발과 직업능력강화과정으로 나뉘어 동일인을 대상으로 연중 2박3일씩 총 6회에 걸쳐 합숙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 24명의 수료생을 배출한데 이어 2003년 22명, 2004년 19명, 2005년 23명, 2006년 2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현장의 여성농업인 강사요원으로서 폭넓은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분야별, 수준별 맞춤형 전문교육을 강화하고자 「여성농정위원」과 「여성농촌관광지도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각각 2005년 30명과 42명, 2006년 40명과 40명의 여성농업인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 (마)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및 해외연수 실시

젊고 유능한 여성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농업에 종사하여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도록 1992년부터 후계여성농업인을 선발하였으며, 2006년까지 총 7,411명의 여성농업인 후계자를 선발하였다.

2004년부터는 창업농 지원사업으로 개편하고 대상자 선정 시 여성의 경우 가산점(20점)을 부여하는 등 여성신청자 우대장치를 마련하여 여성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144명의 여성 창업농 후계농업인이 선정되었다.

한편, 선도 여성농업인으로 하여금 선진농업국의 영농기술과 경영기법 등을 체험하게 하여 국제적 안목을 증진시키고 국내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06년에는 3개 여성농업인단체 소속 63명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유럽 선진농업국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다.

<표 2-2-19>

**연도별 후계여성농업인 수**

(단위 : 명)

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7,411	213	267	442	595	707	823	1,011	980	859	462	339	264	147	158	144

\* 2004년 이후는 창업농 후계농업인

(바)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환금성이 높은 원예작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농가에서의 재배가 확대됨에 따라 원예작물 재배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의 노동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을 완화하고 영농의 효율화를 향상하기 위해 농작업 환경의 과학화와 자동화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노동의존도가 높은 밭농사에서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개발·보급은 여성농업인의 영농의지를 높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여성농작업의 기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에는 고추정식기 등 4종의 농기계에 대하여 현장점목시험을 실시하고, 자주식 양파수확기 등 7종의 농기계를 개발하는 등 2001년부터 총 37종의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개발하고 29종에 대하여 현장점목시험을 실시하였다.

<표 2-2-20>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실적**

(단위 : 종)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현장점목 시험	농기계 개발	현장점목 시험	농기계 개발	현장점목 시험	농기계 개발	현장점목 시험	농기계 개발	현장점목 시험	농기계 개발	현장점목 시험	농기계 개발	현장점목 시험	농기계 개발
29	37	5	8	7	12	4	5	5	3	4	2	4	7

(사)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촌의 고령화·과소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여 젊은층의 농촌거주 유도 및 지역사회 활력유지를 위해 2004년부터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농지소유규모 5ha 미만인 농어가로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의 영유아(0~5세)중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이며,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층 보육료·교육비를 지원 받는 아동은 제외된다.

월 지원액은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만 5세 100%) 수준이며, 해당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자격(조건)확인 후 농업인 계좌에 직접 지급하는 일종의 직불형태의 지원사업이다.

2004년은 사업 첫 해로 월평균 21천명에 대하여 지방비를 포함하여 203억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에는 30천명에 대하여 35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에는 33천명에 대해 220억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더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보육여건으로 인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2006년부터 이들에 대한 육아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이며 다른 조건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와 동일하다. 월 지원액은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25%(만 5세 및 50%) 수준이다.

2006년은 사업도입 첫해로 23천명에 대하여 96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2-21>

**연도별 영유아 양육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천명/월)

구 분	2004		2005		2006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27	14,602	30	19,154	33	21,999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	-	-	-	23	9,613

(아)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관련규정에 따라 제1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 (2001~2005) 완료 후 2006년부터 추진할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 (2006~2010)을 수립하였다.

2차 계획은 1차 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의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2차 계획은 ‘남녀 농업인 책임과 성과를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라는 비전 아래에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전문인력화, 복지증진, 정책인프라구축’ 등의 4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성 인지적 정책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양성 평등한 관점에서 농림사업의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2006년에는 농업정보서비스사업 등 13개 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관련사업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한편, 정책담당자들의 양성평등의식 제고 및 여성농업인육성 기본방향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농림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 농업관련단체 교육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여성농업인정책반」을 농림부 농업연수원에 개설하여 2001년 38명(3일), 2002년 44명(3일), 2003년 34명(5일), 2004년 33명(5일), 2005년 29명(5일), 2005년 24명(5일)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여성정책과 사무관 신우식)

**바. 농업벤처 육성**

농업벤처는 농림업, 농업 전후방연관산업 및 농촌과 관련된 분야에서 농업생명공학기술 등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고위험-고수익의 중소형 모험기업으로서 생산성제고 및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 창출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업관련 산업의 발전 및 농업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농업벤처를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에 농업벤처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전문펀드 조성, 농업벤처 창업보육센터 지원,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지원 등 관련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1) 2006년도 추진상황

정부와 민간이 공동출자하여 2001년(100억원, 1호 조합)과 2002년(80억원, 2호 조합)에 이어 2006년에 농업전문투자조합 3호(100억원)를 결성하였다. 특히 2호 조합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농업벤처에 투자하여 코스닥에 상장시키면서 농업벤처펀드 최초로 147%(117억원)의 이익을 회수하여 농업부문도 성장발전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4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였고, 지식농업실현 제5회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창업아이템 6점을 선발하여 시상한 바 있으며,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보육센터 확충을 목표로 시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1차로 2005년에 영남지역(경상대학교)에 이어 2006년도에는 호남지역(전남대)에 농업특화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였다.

<표 2-2-22> 제5회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수상작

구 분	출품자	시상금	아 이 템
최우수	박기형	10백만원	버섯을 이용한 미네랄함유 농산물의 생산 및 이를 이용한 기능성식품 개발
우 수 (2)	이상만	5	근권난방용 발영메쉬(시설재배에 활용)
	김국환	5	섭취가 용이하며 저렴한 홍삼가공제품
장 려 (3)	이용광	3	항균, 항산화물질을 이용한 사료첨가제
	이효형	3	와인식초음료 및 디저트용 젤리
	이혜진	3	식용조성물이 교반된 조란가공품 제조

(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유미선)

### 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농업경영의 상업화·규모화·전문화로 인한 농업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농축산물 생산 중심의 지도사업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부합하고, 개별농가 특성에 맞는 경영개선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1999년부터 농업분야 컨설팅 제도(농림부 주관의 민간컨설팅, 농촌진흥청 주관의 공적컨설팅, 농협 등 주관의 농업인단체 컨설팅)를 도입하였다. 민간컨설팅은 대규모 기업농 대상, 농촌진흥기관의 공적컨설팅은 민간컨설팅농가를 제외한 일반농가 대상, 농업인단체 컨설팅은 농협 등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농업인에게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농가의 자력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2-2-23>

#### 경영컨설팅사업비 지원현황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사업량(개소)	220	441	553	759	847	870	1,000	1,009	1,080
사업비(백만원)	1,710	3,388	4,427	5,586	5,696	6,550	8,000	8,640	8,640
국 고	671	1,227	1,499	1,676	1,709	1,965	4,000	4,400	4,400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의 컨설팅사업 비교>

농림부 : 특정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업적 전문컨설팅

농촌진흥청 : 다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적 공적 컨설팅

<표 2-2-24>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의 컨설팅사업 비교

구 분	농 립 부	농촌진흥청
목 적	◦민간컨설팅 기반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농업인 지도의 효율성 제고 및 경영개선 뒷받침
대 상	◦민간컨설팅 희망법인 및 농가 - 농업경영 종합자금 지원대상 - 원예·특작·축산분야 대규모 경영체 ◦대상경영체 수 : 연간 약1,000농가	◦컨설팅 희망하는 농업인  ◦대상경영체 수 : 연간 약65,00농가
컨설팅 내 용	◦경영기장·회계·재무관리, 생산관리, 농자재·가공·마케팅 등에 관한 컨설팅	◦생산기반·시설, 생산기술, 농산물 판매활동, 경영기법 등의 진단 → 처방 → 지도·자문
컨설팅 수행주체	◦민간컨설팅 기관·업체 - 대학교수,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수의사 등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기관별 역할 분담 - 품목별 전문지도사, 연구원, 대학교수, 독농가 등
사업비 용 도	◦농업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업체의 컨설팅료 보조	◦분야별 컨설팅팀 운영 ◦컨설팅체계 강화를 위한 컨설턴트 양성
컨설팅 비 용	◦평균 8,000천원 (농가 30% 부담)	◦농업인 부담 없음
지원조건	◦국고보조50%, 지자체20%, 자부담30%	◦국비50%, 지자체50%
사업추진 기 관	◦시·도지사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협의 지도사업은 조합이 조합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고유목적사업

(1) 2006년도 제도개선 내용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이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생산기술 중심의 컨설팅에서 농업경영전반으로 대상과 내용을 확충하여 운영 하였다.

이를 위해 경영, 마케팅, 브랜드 등 종합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 농가기준을 제한하여 일정 규모 이상 농가위주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원예·특작 : 3,000㎡이상, 가공 : 매출액 2억원 이상, 한우·젓소 50두 이상, 돼지 1천두 이상, 양계 2만수 이상

또한, 농업경영컨설팅업체에 대해서는 전문가등으로 컨설팅업체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컨설팅 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2년마다 평가하여 재 인증하는 체계로 컨설팅업체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였다.

즉, 농업계 전반에 검증되지 않은 컨설팅회사의 난립 문제가 제기되어 능력 있는 업체를 공모·평가·선정하여 컨설팅 업체 pool을 구성하고, 농업인은 이 컨설팅업체 pool에서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컨설팅 업체의 질 향상을 통해 농업인에게 양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아울러, 농업경영컨설팅이 특정 품목에 편중된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한 품목에 50% 이상 배분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농축산물 브랜드 주체에 대한 컨설팅 실시를 통해 농가조직화,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시장 교섭력 배양 등 경영능력을 제고하고, 농촌관광, 브랜드, 클러스터 및 경영희생지원 등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영역을 다각화해 나갔다.

(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김휴현)

## 제4절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 1. 농업관측제도 기능 강화

농업관측사업은 1999년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농업관측정보센터」를 설치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동 사업은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액이 많고 가격등락 폭이 큰 주요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재배(의향)면적, 작황, 생산·출하와 재고 동향, 해외시장정보, 수출입동향 및 기타 기상여건에 따른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생산과 가격 추세를 전망하는 예측정보를 마련,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생산계획 단계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영농의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유통·가공업체 및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시장정보를 바탕으로 농산물거래나 출하조절과 소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농업관측사업을 수행해온 농촌경제연구원에 대해 농업관측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 지원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7일 개정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출연금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2007년 1월 3일 공포) 1999년 9개 품목으로 출발한 농업관측사업은 이후 지속적으로 관측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2006년까지 모두 27개 품목에 대해 관측을 실시하였고, 쌀은 2006년의 시범사업을 토대로 2007년부터 정식 관측대상품목에 포함하였다.

또한 생산·유통정보와 함께 소비정보 제공을 위하여 품목부류별로 연 4회 실시하던 소비자패널(1,000명) 조사를 2006년에는 11회 실시하였고, 해외정보 수집에 있어서도 다변화를 추진하여 중국 외에 미국, 칠레, 일본, 뉴질랜드, 벨기에 등 총 7개국에 40명의 모니터 요원으로부터 주재국의 유통·가격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교역량이 급증하는 중국에 대하여는 2005년 9월부터 북경 및 산둥성의 농업경제연구소와 협력하여 실시해온 정보교류사업을 정착시켜 중국 도매시장의 주요 가격정보를 비롯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있다. 2006년 12월에는 중국 ‘농업부 정보중심’간의 양해각서(MOU)를 갱신하여 한·중간 정보교환 대상품목을 확대하였다. 주요 농축산물 생산국가의 생산·유통 및 수출체계와 정책의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정보교류체계를 활성화하고, 관세청의 수출입정보를 실시간 활용토록 하는 등 해외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였다.

수집된 농업관측정보에 대한 가공·분석 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축산물

정보가공시스템을 개선하고, 주요 청과물의 계절별 생산·공급 모형을 보완해 왔으며, 중장기 수급관측모형(KREI-COMO)의 예측 능력도 향상시켜 오고 있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관측정보 제공시스템을 개발<sup>1)</sup>, 주산지 정보를 그래픽 위주의 지리정보와 연동하여 현행 텍스트 방식보다 쉽고 직관적인 형태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측정보에 대한 활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농업관측정보는 매월 수집, 분석·가공한 부류별 관측정보를 품목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와 소관 실·국의 세밀한 검토를 거친 후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관측보(월보·분기보)에 담아 주산지 작목반, 표본농가, 모니터 요원 및 생산자단체 등에 배포함과 아울러 농업전문지, 인터넷, 농업관측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는 바, 2006년에는 주산지 속보 9회를 포함하여 총 47회의 관측보를 제공하였고, 21천여 명에 이르는 이메일(E-mail) 회원에 대하여 매월 관측정보 메일을 제공하는 등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해 오고 있다. 농업인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농업인의 약 68%가 관측정보 제공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농업관련기관 종사자의 96%가 농업관측정보가 농업인들의 영농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최근 재배면적과 생산이 늘고 있는 콩에 대해 2008년부터 관측을 실시할 예정으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정보서비스 확대, 품목별 전문가 양성과 전자태그(RFID)의 활용 및 위성정보를 이용한 원격탐사(RS)의 시범도입 등 관측기법의 과학화를 추진하여 더욱 정밀하고 유용한 농업관측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1)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하여, 도매가격 및 산지가격 정보(2006), 수출입정보(2007), 저장정보(2008) 등을 연차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업관측사업 수요자 조사(2006년 11월)



<표-2-2-25> 주요 농축산물 부류별 관측정보 발표시기

부류별	해당 품목현황	발표시기	
		발표시기	발표시기
채소류 (9개)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파, 감자, 당근, 양배추	3 ~ 12월	1일
과일류 (6개)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	3 ~ 11월	10일
과채류 (7개)	오이, 수박, 참외, 호박, 토마토, 딸기, 풋고추	"	"
축산물 (5개)	한육우, 젓소, 돼지, 산란계	2, 5, 8, 11월	25일
	육계	2 ~ 12월	"
곡물류 (1개)	쌀 (2008년 콩 추가)	1, 5, 8, 11월	15일

(통계기획팀 행정사무관 황영현)

## 2. 마케팅지향형 산지유통혁신

### 가. 공동마케팅조직 등 산지유통주체 육성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 전자상거래 등 신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지유통 주체의 규모화, 전문화, 브랜드화가 절실하다. 그 동안 정부는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육성 지원하고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는 등 마케팅의 규모화·전문화에 역점을 두어 2006년까지 산지유통전문조직 260개를 선정하였고 산지유통시설 APC 253개소를 지원함으로써 산지유통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상당수가 지역조합단위 소규모 판매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경영면에서도 마케팅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상품화·브랜드화·고정거래처 확보 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산물유통의 근본문제인 산지유통조직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규모화된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시·군단위 이상 농가를 조직화하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연간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공동마케팅조직을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0개 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다.

2005년도에 최초로 9개조직을 선정하였으며 2006년의 경우 공모를 통해 신청한 조직(12개)에 대해 농가조직화, 사업규모, 브랜드 능력, 경영성과, 향후발전계획 등에 대한 현지심사와 평가를 실시한 후 관계전문가로 구성·운영되는 산지유통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조직을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하였다.

<표 2-2-26> 조직유형별 공동마케팅선정조직

선정연도	합계	거점산지조직형(3)	사업연합형(7)	전문마케팅법인형(5)
2005	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천농협(합병조합)</li> <li>▪대관령원예농협(전문조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성(지역조합주도)</li> <li>▪나주·합천(시군연합)</li> <li>▪햇사레(도간연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맛젤영농조합법인</li> <li>▪(주)논산수출물류센터</li> <li>▪(주)농산무역</li> </ul>
2006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주원예농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도연합)</li> <li>▪부여·여주(시군연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회사법인 통통</li> <li>▪폴빛 영농조합법인</li> </ul>

공동마케팅조직은 기존 산지유통조직에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 광역화된 사업권역, 회원제 생산·출하관리 등 차세대 기업형 마케팅조직으로 육성해 가고 산지유통전문조직은 매년 매출규모,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분석, 농협군과 법인군으로 분리하고 상대평가하여 A~F등급(6개그룹)으로 구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리를 1~3% 차등화하고 우수조직은 무이자 인센티브자금을, 하위 10%의 부진조직은 자금회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선택과 집중의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2004년 농협법 개정을 통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된 농협연합사업단에 법인화를 의무화 하고, 실질적인 경제사업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공동마케팅조직의 규모화·조직화가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2006년도 선정된 6개 공동마케팅조직에 대해서는 3년간 용자 1%의 유통

정책자금(66,617백만원), 1년간 무이자인센티브(15개조직 44,826백만원), 홍보 및 브랜드 개발지원(15개조직 350백만원)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선별비 보조(40~50%), APC시설보완 사업자 우선선정, 공동마케팅조직 회원 농가에 대한 농업종합자금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또한, 산지유통혁신을 위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케팅 전문화를 주도할 유통인재 활용을 촉진하고 수확후 관리기술도 적극 개발하여 APC 등에 보급하였으며, 공동마케팅조직 및 산지유통전문조직에서 농산물 판매·유통·품질관리 등 경제사업에 종사하는 품질관리사에 인센티브를 지원(206명 21,310백만원)함으로써 농산물 품질·유통관리 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경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유통인재 양성을 위한 「농산물 유통전문교육과정」을 지방대학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 등에서 저온저장, 브랜드 개발, 안전성 관리, 물류개선, 수출마케팅 등 유통단계·분야별로 특화된 3~9개월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품목별 수확후 관리기술 매뉴얼을 개발하여 사이버컨설팅도 지원하였다.

공동마케팅조직이 활성화되면 단순 공동판매에서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산지-소비자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할 책임 있는 거래 주체로서 우리나라 농업경쟁력과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통정책과 농업사무관 이광하)

#### 나.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속 추진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유통능력 향상, 공정한 거래 실현을 위해 농산물 표준규격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농산물 생산자 등이 표준규격에 맞는 농산물을 출하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포장재비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포장화율 및 표준규격출하율이 향상되고 농산물 상품성도 향상되었다.

<표 2-2-27> **농산물 포장화율 및 표준규격 출하율**

	1998	2004	2005	2006
포장화율(%)	17.1	50.4	54.5	69.3
표준규격출하율(%)	75.1	85.4	87.8	88.7

2002년부터는 농산물 산지의 규모화를 통한 물류효율화 및 균일화된 농산물 출하를 촉진하기 위해 농산물을 공동선별·공동계산·공동출하 산지 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 조직을 대상으로 공동선별비를 지원하여 공동선별 물량이 2002년 158천톤에서 2006년에는 353천톤으로 늘어났다.

<표 2-2-28> **공동선별물량 및 지원현황**

	2002	2003	2004	2005	2006
공동선별물량(천톤)	158	227	273	306	353
공동선별비 지원(억원)	24	34	50	70	83

2006년도에는 배추·무의 상품성 향상, 투명한 거래, 공영도매시장 환경 개선 등을 위해 배추 포장유통 시범사업(9월~10월) 및 평가회(12월)를 거쳐 배추·무 포장유통 추진방안을 발표(12월 13일)하여 2007년 1월부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배추·무 포장유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출하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배추·무를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포장재비를 집중 지원한다.

2006년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원규모는 480억원으로 120여개 품목에 대하여 공동선별비 및 포장재비를 지원하였으며, 2006년말 현재 69.3% 수준인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을 2013년까지 80%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유통정책과 농업사무관 변상문)

### 3. 농산물 물류혁신 및 도매시장 운영효율화

농산물 유통비용은 2005년말 현재 26조 3,379억원 수준으로 소비자 구입액 58조 5,287억원 대비 45.0%를 차지하고 있다. 저장성이 낮고 포장화율이 낮은 엽근채류(68%), 화훼류(69.7%), 양념류(64.8)의 유통비용 비중이 높은 반면, 식량작물류(27.4%), 축산부류(42.7)는 유통비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정부에서는 1997년부터 생산자 조직, 공영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 지게차, 플라스틱 상자, 파렛트, 광폭차량 등의 물류기기를 지원하여 산지에서 농산물을 규모화·기계화하여 농산물의 물류효율화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생산자 조직 등이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등을 풀회사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임차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물류기기 임차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마늘 포장유통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공영도매시장에 유통되는 배추·무가 산물형태로 출하되어 불투명한 수량계산, 속박이 발생 등의 거래 불신 초래 및 물류효율화를 저해하고, 도매시장내에서 재다듬기·재선별로 유통비용 증가 및 쓰레기 발생량을 급증시켜 오수·악취로 도시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됨에 따라 배추의 상품성 제고, 물류효율화, 투명한 거래, 도매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포장유통 시범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수도권 8개 공영도매시장에서 배추 포장유통 시범사업(2006년 9월~10월)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 기간에 수도권 8개 공영도매시장에 배추가 전량 포장되어 반입되었으며, 시범사업 평가회(2006년 12월) 개최 결과 이해관계자의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2006년 12월 13일 배추·무 포장유통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하여 2007년 1월부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배추·무 포장유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한편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중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를 위해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과제로 선정하여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 (2005년 4월~8월) 하였으며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추진하였으나, 2006년 12월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보류 되었다.

또한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기대증가, 대형유통업체 확산 등 유통환경변화에 따라 도매시장활성화와 경쟁력제고를 위해 2005년부터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국무회의 및 2006년 12월 국회의결을 거쳐 2007년 1월 3일 공포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동법의 주요 내용은 도매시장법인간, 시장도매인간 인수·합병근거를 마련하여 도매시장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안전성기준 위반 농수산물의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농수산물 출하 신고제를 2009년부터 의무화 하였으며, 시장내의 농수산물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출하자와 유통주체간의 분쟁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도매시장거래분쟁위원회”를 설치하여 출하자를 보호하는 한편 도매시장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통정책과 농업사무관 변상문, 행정사무관 임채록)

#### 4. 축산물시장 차별화

개방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수입산 및 국내 축산물 상호간의 시장차별화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선택기준을 제공하는 한편 우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2004년 수립한 ‘축산물 브랜드 종합대책’을 보완하여 2006년 2월 “축산물브랜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품질과 위생·안전성 등이 확보된 우수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여 소비자 신뢰와 시장차별화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주요 추진내용은 우수 브랜드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37개 경영체를 선정, 1,02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현지실사 평가 및 브랜드 경진대회를 통하여 22개 우수 브랜드경영체에 300억원의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브랜드경진대회 및 전시회”를 개최(9월 7일~9

일, 코엑스)하여 우수 브랜드경영체에는 정부차원의 시상과 홍보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을 과거 한우·돼지에서 육우·육계를 추가하여 2006년에는 36개 우수 브랜드(한우 15, 돼지 14, 육우 2, 육계 5)를 선정, 소비자단체와 유통업체에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였다.

육류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과학적이고 제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소비자가 참여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먼저 브랜드업체를 대상으로 소 유전자(DNA)감별법을 활용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판매단계까지만 실시해 오던 원산지표시제를 쇠고기를 대량 소비하는 음식점에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을 개정(2004년 8월 4일)하여 식육판매업영업자는 음식점 영업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토록 의무화하여 음식점에서 식육을 구입하는 경우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의 음식점에서도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05년 12월 1일)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주도의 축산물 위생감시를 소비자중심의 자율감시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축산물위생처리법을 개정(2004년 1월 29일)하여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을 운영토록 하였으며, 부정·불량축산물의 신고포상금제를 확대하여 유통기한경과나 무허가, 무신고영업행위 등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2천여명의 명예감시원을 위촉·운영하고 있다.

(축산물위생과 서기관 신대식, 서기관 이학주, 수의사무관 김대균)

## 제5절 농·축산물 수출확대 및 수입관리

### 1. 농·축산물 수출확대 대책

#### 가. 수출여건 및 수출현황

우리 농업은 안으로는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농촌인구의 감소에 직면해 있고, 밖으로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가속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으로 시장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저가의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여 농가의 불안감 또한 가중되고 있으나, 농산물 시장개방은 우리 농산물의 해외진출 기회도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어 수출농업 육성을 통한 우리 농업의 활로개척 및 농가소득 증대, 신 성장동력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의 농식품 소비 트렌드가 기본적 영양섭취의 차원을 넘어 건강 등 삶의 질과 연결되면서 김치, 인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일본·중국·동남아 등지에서 겨울연가, 대장금 등의 한류 영향으로 우리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식문화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어 농식품 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 45조원 농업·농촌투융자사업, 119조원 농업·농촌 종합대책사업 시행에 의한 시설재배면적 증가 및 기술발달,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등에 힘입어 농식품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중국 등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성, 수출업체 영세성, 수출품목의 다양성 미흡 등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고, 국가간 식습관 차이라는 전통적 요인 외에 수입국의 식품안전기준 강화 등이 새로운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어 어려움도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장애극복을 위해 고품질·안전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 한류열풍을 활용한 해외 수요기반 확충, 수출증대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6년 농식품 수출은 환율하락, 유가인상, 폭우 등 수출악재에



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3.7% 증가한 2,304백만불을 달성하였는데, 신선농산물은 536백만불, 가공농식품은 1,769백만불이었다.

#### 나. 고품질·안전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조성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 농산물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고품질·안전 농산물을 대량생산하여 국제농산물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여러 나라에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고품질·안전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출전문 원예전문생산단지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해 우수단지에는 수출물류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러한 결과로 2005년에 129개이던 단지수가 2006년에는 149개로 확대되었다.

또한, 우리 농산물 주 수입국의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시키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안전성 프로그램을 중점 보급하여 수출농산물에 대한 농약검출에 대비하기 위해 307회에 걸쳐 수출컨설팅을 실시하였다. 특히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대일 신선채소류 수출농가영농조합·수출업체를 대상으로 ISO 국제품질인증 획득을 지원하였으며, 채소류 수출업체 사전등록제 및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채소류 안전성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개방화 시대 수출농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수출이 유망한 25개품목(신선 10, 가공 15)을 발굴하여 생산부터 수출까지 개발수출을 지원하였다.

#### 다. 한류를 활용한 공격적 마케팅 전개

동아시아에서 한류 드라마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대장금’의 양미경, K-1 스타 최홍만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해외박람회, 판촉전 등에 참여시켜 한국 농식품 및 식문화를 홍보함으로써 우리 농산물 이미지를 제고하여 수출확대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식문화가 상이한 미국, 유럽 등 서양마켓에 대해서는

독일월드컵 연계 홍보, 미 태권도 대회 연계 홍보, 르 꼬르동블루 파리 본교 강연, UN 한국음식페스티벌 등 스포츠·문화마케팅으로 주류시장을 집중 공략하였다.

또한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최근의 소비 트렌드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휘모리’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계획 아래 우리나라 최대 농식품 수출시장인 일본에서 ‘Whimori Week’를 지정하여 캠페인 요리교실, 판촉전 등 종합마케팅을 실시한 결과, 국내산 화훼가 일본 대형유통업체매장에 처음으로 입점하는 획기적 성과를 거양하였다.

권역별 유망박람회 위주의 참가 박람회 선정 및 한국관 내 요리시연, 시음·시식, 문화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로 참가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개별참가박람회 지원 확대를 통해 틈새시장 및 신규시장 개발에도 매진한 결과, 2006년에는 총 19개 박람회에 참가하여 256백만불의 수출계약고를 달성하였다.

아울러, 주요 수출대상국 대형유통업체 Net-Work도 2005년 12개국 144업체에서 15개국 177업체로 확충하였으며, 6개국 113매장에 불과했던 한국식품 상설코너도 2006년에는 9개국 201매장으로 확대하여 수출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 **라.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수출증대효과 극대화**

정부는 수출업체 및 수출단지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의 지원체계를 개선하였는데, 수출단지 인센티브는 5~10%에서 0~12%로, 신규시장개척 인센티브는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였고, 항공운송 인센티브를 신설하였다. 또한 DDA협상에 대비하여 수출물류비를 허용보조에 해당하는 공동대표브랜드 운영, 농약잔류검사비 지원 등 수출조성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허용보조사업 비율을 2005년 10%에서 2006년 11%로 늘렸다.

아울러,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에 대한 정보지원 강화를 위해 농수산무역

정보망(www.kati.net)을 활용 수출가격, 해외바이어 등 9,257건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FTA에 대비하여 주요 품목별 수출경쟁력 조사, FTA 체결 대상국에 대한 시장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식품산업과 행정사무관 이경일, 행정사무관 장동욱)

## 2. 수입관리 대책

### 가. 시장접근물량의 적절한 수입관리 추진

WTO협정 내용과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쌀, 고추, 마늘 등 17개 주요 품목은 국영무역형태로 수입관리하고 연유, 분유 등 6개 품목은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수입관리하여, 수입으로 발생하는 판매이익금을 농업투자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들 품목의 수입은 국내 생산시기, 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시장접근물량을 적절하게 수급관리 함으로서 국내 농업 보호와 WTO협정 이행을 동시에 조화시켜 나가고 있다.

<표 2-2-29>

농축산물 개방 일정표

년도별	개방품목수	주요 품목	수입자유화율
1994말까지	1,537	바나나, 배, 키위, 유채 등	86.0%
1995. 1. 1	172	보리, 옥수수, 대두, 고추, 마늘, 참깨 등	95.6
1996. 1. 1	3	포도, 사과주스(2)	95.8
1996. 7. 1	13	버터, 연유, 유당, 인조꿀, 누에고치 등	96.5
1997. 7. 1	39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 감귤 등	98.7
2001. 1. 1	8	소, 쇠고기 등	99.1
2007. 1. 1	-		99.1
잔여품목	16	쌀 관련품목	
계	1,788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 나. 관련법상 탄력관세의 적극 활용

수입자유화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관련된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고추장, 표고버섯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부과하여 관세율을 인상하였다. 또한 관세화 품목, 즉 관세상당치로 개방한 품목 중 수입량 증가가 우려되는 땅콩, 녹두, 메밀 등 29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량이 기준물량을 초과할 때에는 특별긴급관세제도를 발동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녹두, 팥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기준가격보다 수입가격이 낮을 경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도록 2007년 특별긴급관세 대상품명 발동기준 및 세율을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 다. 원산지표시제 실시 및 단속강화

품질이 낮은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위장되어 유통되는 것을 막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산(160개), 국내산(160개) 및 가공품(211개)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단속 공무원을 활용하여 1998년부터 수입농산물의 국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다.

(농업협상과 행정서기관 김재철)

#### 라. 동·식물 검역기능 강화

WTO 출범에 따른 국내·외 검역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농·축산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1992~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1,400여 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검역시설 및 장비 확충, 최신 검역기술 확립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2005년 이후에도 동물검역 분야는 종전의 기능강화 계획을 연장하여 2008년까지 400억을 투자하는 제5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식물검역 분야도 2016년까지 1,600여 억원의 식물검역 발전 10개년 계획을 확정된 바 있다.

정부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사전예방적이고 과학적인 검역체계를 확립함으로써 DDA협상 진전, 동시다발적인 FTA체결 등으로 인해 새로이 형성되는 검역여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통상협력과 수의사무관 허송무)

## 제6절 생산자 주도의 수급조절 강화

### 1. 쌀 협상비준에 따른 쌀산업 국내대책 추진

#### 가. 쌀산업발전대책 추진

쌀협상과 WTO/DDA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우리 쌀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2004년 2월 쌀산업종합대책을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계획과 연계하여 마련하였다.

아울러 2005년 7월 1일 양곡관리법과 쌀소득보전기금법을 개편하여 해방 이후부터 지속되어오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여 시장개방 폭 확대에 사전 대비하였다. 양정제도의 주요개편 내용은 그동안 추곡수매제가 담당하던 비축기능은 WTO에서 허용하는 공공비축제로, 가격지지에 따른 소득보전기능은 쌀소득보전직불제로, 수확기 출하물량의 조절은 RPC등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로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관세화를 유예 받은 10년 동안 우리 쌀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젊고 유능한 전업농을 중심으로 경영규모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쌀이 외국쌀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품질고급화를 추진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의 경영개선을 통한 민간유통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식량정책과 사무관 박선우)

## 나. 공공비축제 도입 및 정착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비축제는 WTO허용보조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보조금 감축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급변하는 국내외적 시장상황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제도이다. 공공비축제가 WTO 협정상 허용보조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식량안보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재정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시가로 매입하고 시가로 방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비축제는 재해,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일정수준의 재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종전의 추곡수매제도와 같이 정부가 가격을 정하여 수확기에 일정한 물량을 흡수함으로써 가격을 지지하는 수급조절용 제도와는 다르다.

따라서, 정부는 양곡연도말 재고를 86.4만톤 수준으로 연중 43.2만톤을 매입·방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하되, 2005년도는 제도변경에 따른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확기 농가의 판로확대를 위해 57.6만톤을 매입하였다. 또한 공공비축미곡과는 별도로 수확기 가격 안정을 위해 14.4만톤을 추가로 매입하는 등 2005년산 미곡은 총 72만톤을 매입하였다.

2005년의 경우 제도시행의 첫해로써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공감대, 제도변화에 대한 적응 부족으로 큰 폭의 쌀값 하락등 혼란이 야기된 바 있어 2006년에는 공공비축제의 정착을 위해 2005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조기 정착에 노력하였다.

2006년 제도개선 내용으로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산물벼 매입방식을 포대벼와 같은 방식으로 매입·정산토록 하였고, 제도의 일관성을 위해 매입가격을 수확기 전국평균가격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RPC의 산물벼 인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인수하되 포기시 정부 인수방안을 도입하였다. 또한 시행방안의 조기 확정발표 및 홍보로 농업인과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였다.

(식량정책과 행정사무관 한성권)

**다. RPC 경영혁신**

RPC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규모화 및 구조조정을 촉진시켜 RPC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경영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화하는 한편, 경영우수 RPC와 통합 RPC에 집중하는 “RPC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7년도 RPC 경영평가는 RPC 경영자,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결과, 잦은 평가지표의 변경이 오히려 혼란을 준다는 의견과 경영평가가 어느 정도 정착됨에 따라 전년도 평가지표를 동일하게 반영하여 평가하였다.

구분	수익성 지수			규모화 지수			공익성 지수				계
	총자산회전율	영업이익율	유통부가가치율	매출액	건조능력	저장능력	수확기원료곡확보량	수확기원료곡확보율	계약재배비율	친환경쌀판매량	
농협	15	15	10	15	5	5	10	10	10	5	100
민간	15	10	10	15	5	5	15	10	10	5	100

평가결과 288개 RPC(농협 117, 민간 111)에 대해 벼 매입자금 4,538억원을 등급별로 차등지원(A등급 27.5억원 ~ E등급 7.5억원, 등급간 2.5억원 차등, F등급 지원 제외, 금리 0~2%)하였다.

<표 2-2-30> RPC 경영평가 등급별 지원규모

(단위 : 억원)

구분	A	B+	B	C+	C	D+	D	E+	E	F
지원액	27.5	25	22.5	20	17.5	15	12.5	10	7.5	지원제외
(금리)	0%	1%	1%	1%	1%	2%	2%	2%	2%	-
(비율)	(5%)	(5%)	(15%)	(10%)	(15%)	(10%)	(15%)	(5%)	(15%)	(5%)

한편, RPC 경영평가와 연계하여 평가결과 경영부진RPC의 통합 등 구조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07년말까지 11개 시·군(충남 연기·부여·예산, 전북 정읍·고창·김제, 전남 보성·함평·장흥, 충북 진천, 경기 안성) 36개 농협RPC가 통합(200개소→177, △24)하였으며, 통합된 RPC는 각각 「농협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출범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조합경영과의 분리를 통한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통합 RPC에 버 매입자금 및 건조·저장시설 자금 우대지원, 등을 통해 조기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쌀 브랜드 육성사업자 선정시에도 우대하여 쌀 시장개방폭 확대에 대비 쌀 산업의 선도적인 경영체가 되도록 육성하고 있다.

(소득관리과 농업사무관 장대수)

#### 라. 고품질쌀 생산·유통촉진

WTO/DDA 협상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고품질쌀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쌀의 품질고급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쌀 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02년부터 고품질 쌀 생산·유통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동안 우리쌀 품질 향상을 위해 재배관행을 개선하고, 가공·유통단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도 지역브랜드 수준이며 같은 품종을 같은 지역에 재배할 경우에도 품질에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한 대책을 바탕으로 2005년부터는 2010년까지 고품질 쌀 생산·유통 대책 road map을 정하고 단계별, 분야별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유통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진청, 지자체, 농협 등 관련기관·단체와 「고품질 쌀 생산·유통 대책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고품질쌀생산팀 등 6개반의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쌀 품질고급화를 위해 6대 중점 추진과제(적기이앙, 적정포기수 확보, 적정 물관리, 질소비료 시용량 감축, 최소병해충방제, 적기수확)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수입쌀 시판에 대응하여 밥맛이 좋은 고품·운광·삼광벼를 개발하였으며, 고품·운광벼 최고품질의 종자 25톤을 증식하여 2006년에 농가에 조기 보급하였다.

(식량정책과 사무관 박선우)

#### 마.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WTO체제 출범이후 식량수입국의 식량안보는 수출국의 국내 보조금 삭감과 관세인하, 시장개방 압력의 증대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예컨대 국내 보조금 감축으로 생산이 감소하고 소수식량수출국에 많은 수입국이 의존함에 따라 자연재해나 전쟁 등 비상시에 식량이 부족할 경우 수출국의 식량무기화로 필요한 식량의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 식량사정의 불확실성하에서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농업생산을 적정수준 유지하면서 수입과 비축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의 변화로 식량생산의 증가는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데 우리의 생산기반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003년 기준 식품의 50%이상, 주요 곡물의 70% 수준을 해외로부터 조달하고 있어 식량자급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는 바람직한 식량소비 목표를 제시하고, 정부에게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의 반영과 장기적인 식량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로 활용코자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토론회·공청회를 거쳐 식량자급률자문위원회의 대정부 건의서를 기준으로 부내검토와 중앙농정심의회 심의(2006년 12월 18일)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2006년 12월 29일)하였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주식용 곡물자급률, 사료용 포함 곡물자급률, 칼로리 자급률, 주요 품목별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DDA/FTA협상 등에 따른 국내외 수급여건을 반영코자 5년마다 10년 뒤의 목표치를 수정·보완키로 하였다.

<표 2-2-31>

식량자급률 목표치(2015년)

(단위: %)

품 목		2003	2004	2015
곡 류	쌀	97.4	96.5	90.0
	맥류 <sup>1)</sup>	7.0	7.6	4.0
두류(콩) <sup>1)</sup>		29.0	25.0	42.0
서 류		109.1	107.6	99.0
채소류		94.6	94.3	85.0
과일류		85.0	85.2	66.0
우유 및 유제품		79.1	73.4	65.0
육 류		70.8	79.3	71.0
쇠 고 기		36.3	44.2	46.0
돼지고기		94.6	86.0	81.0
닭 고 기		75.9	90.6	80.0
계 란 류		100.0	100.0	100.0
칼로리 자급률 <sup>2)</sup>		45.6	46.7	47.0
주식용 식량자급률 <sup>3)</sup>		68.2	65.3	54.0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		27.8	26.8	29.0

주 1) 사료제외 식용자급률(가공 포함)임.

2) 칼로리 자급률은 수산물까지 포함한 개념임

3) 주식용 식량자급률은 쌀과 맥류(쌀보리, 겉보리, 맥주보리, 밀) 대상임

(식량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선우)

## 2. 채소·과실류 수급조절능력 강화

### 가. 채소류

정부에서는 시장개방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수급조절에 한계가 있어 가능한 한 생산자단체 주도의 자율적 수급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추진하고 있다.

사전적 수급조절의 한 방법으로 생산액이 많고 가격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해 농업관측사업(1999년부터 본격실시)을 실시하여 기상정보, 재배의향면적, 작황, 예상 생산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 미래정보를 신속하게 예측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들이 품목선택, 영농규모 결정 등 영농계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하기간 중 수급조절의 방법으로 민간수매지원(1968년), 정부비축사업(1978년), 채소수급안정사업(1995년)을 통해 채소류 가격이 높아질 경우에는 출하를 유도하고, 가격이 낮게 형성될 경우에는 수매비축, 저급품 출하차제, 소비확대 홍보 등을 통해 공급물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 및 수급안정을 기하고 있다.

<표 2-2-32> 주요 채소류 가격안정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톤, 백만원)

구 분	1990		1995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총 계	74.0	28,472	218.9	60,994	586.6	390,786	848.0	665,718	775.5	776,807	911.3	828,349	1,041.7	833,717	1,178.1	829,822
정부수매 비축	8.9	17,914	57.5	24,909	14.6	18,534	1.7	2,512	0.7	1,093	-	-	296	635	325	697
고추	3.5	15,204	-	-	-	-	-	-	-	-	-	-	-	-	-	-
마늘	1.1	1,602	14.5	16,759	14.6	18,534	1.6	2,489	0.7	1,093	-	-	296	635	325	697
양파	4.3	1,108	43.0	8,150	-	-	(96톤)	23	-	-	-	-	-	-	-	-
민간수매	42.3	8,805	76.6	18,566	45.6	20,848	44.0	25,333	37.8	23,564	33.3	21,538	44.7	23,786	47.1	23,493
마늘	20.2	8,093	14.1	11,566	14.9	14,079	18.7	19,556	17.7	18,010	12.8	16,386	14.5	15,982	14.5	15,048
양파	22.1	712	62.5	7,000	30.7	6,769	25.3	5,777	20.1	5,554	20.5	5,191	30.2	7,804	32.6	8,445
고추	-	-	-	-	-	-	-	-	-	-	-	-	-	-	-	-
정부출하 조정	22.8	1,753	3.8	217	28.4	1,404	60.7	7,873	-	-	89	4,572	44	7,096	61	3,432
계약재배	-	-	81	17,302	498	350,000	740	630,000	737	752,100	789	802,200	657	802,200	745	802,200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또한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과 산업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협약명령제(2000년)와 자조금제도(2000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조금사업은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정부가 자조금 조성액 만큼을 지원하여 생산자단체 주도적으로 농산물 판로 확대와 수급조절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 초년도(2000년) 2개 품목에 64백만원을 지원했던 것이, 2006년에는 21개 품목에 5,809백만원을 지원하여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채소특작과 행정사무관 조용범)

#### 나. 과일류

사과, 배, 단감, 감귤 등 주요 과수에 대하여 2001년부터 추진중인 과실계약출하 사업의 2006년 총 사업비는 3,385억원으로 수급안정사업 물량 확대를 위하여 2006년도에는 375억원을 증액하였다. 2006년 사업량은 사업비 증가로 2005년보다 24천톤이 증가한 163천톤이었으며, 이들 물량의 단경기중 분산출하로 과실가격안정은 물론 과수농가의 소득안정에 큰 기여를 하였다.

저장 및 유통기술의 발전에 따른 유통현실을 감안하여 수급안정사업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3개월로 연장하였으며, 동 사업의 손실발생시 이의 보전 등을 위해 운용자금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적립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적립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추진비 집행한도를 5% 상향하여 전년도말 조정자금 잔액의 15% 이내로 하였다. 이에 따라 산지조합의 마케팅능력 제고에 다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동 사업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자연재해 등에 따른 위약면제 처리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 중 “농가대표 확인서”는 제외토록 하여 증빙자료의 객관성을 강화하는 등 과실수급안정사업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오렌지 등 수입과실의 공급증가 등으로 농가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귤은 (사)제주감귤협회를 중심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감귤유통명령제를 연속 시행하여 생산자(단체)의 고품질 과실의 출하의식 제고와 동 기간중 감귤의 가격이 안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과수화훼과 농업사무관 김기주)

### 3. 양돈·양계 수급안정 지원 및 소비홍보 추진

돼지고기는 1997년부터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었고, 생산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아 과거와 같이 정부에서 산지가격이 낮을 때는 수매비축 하였다가 높을 때 방출하는 등의 직접적인 수급안정대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농협중앙회, 대한양돈협회 등 축산단체가 2004년 4월 1일부터 도축장에서 등급판정을 받는 돼지로부터 의무적으로 거출하고 있는 양돈자조금(두당 400원)의 100%이내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조성된 자조금은 등·안심, 후지 등 비선호부위 소비확대를 통한 부위별 수급안정을 위해 TV·라디오 광고, 이벤트 실시 등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아울러, 양돈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해서 러시아, 대만, 몽골 등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수출확대 기반조성을 추진하였다.

<표 2-2-33>

#### 축산물 가격동향

(단위 : 원/kg)

구 분	1998	2000	2001	2003	2004	2005	2006
쇠 고 기	5,438	7,414	8,284	9,418	8,645	10,806	11,300
돼지고기	2,539	2,474	2,586	2,378	3,420	3,635	3,483
닭 고 기	2,602	2,356	2,528	1,854	2,481	2,469	2,162
계 란	926	774	981	865	1,179	1,204	991
우 유	538	609	610	625	646	696	699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은 도매가격이며, 우유는 원유실제수취 가격임.

양계는 사육수수 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계 D/B사업을 추진하였고, 자조금 및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사업을 통하여 가금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였으며, TV·라디오·신문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로 소비증대에 기여하였다.

특히, 기존의 TV광고 위주의 소비홍보를 지양하고, TV자막광고, PPL광고, 생활정보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통해 광고효율을 제고시켰다.

또한 기존의 축산물가공업체시설 및 운영자금지원사업, 가축계열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가금산업의 전업화·규모화를 촉진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2006년도는 전북 익산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전북 김제, 충남 아산·천안, 경기 안성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확산됨에 따라 오염지역의 가금·돼지·알 등을 폐기하고 위험·경계 지역내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여 AI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를 위해 사육농가, 역학관련농장 등에 살처분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경영안정자금, 구매자금을 지원하여 조기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으며, AI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통한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 TV·라디오·인터넷·잡지를 활용한 소비촉진 홍보를 통해 지난 2003년도 발생시보다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축산경영과 행정사무관 강민철, 농업사무관 조정래)

#### 4. 가축개량 활성화

가축개량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를 찾고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활용하여 가축의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 이러한 가축개량의 방법은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 반복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2006년에 가축개량 시책은 주요 가축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다.

중장기(5년, 10년) 가축개량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량시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가축개량 추세를 살펴보면 <표 2-2-34>에서 보듯이 개량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 가축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한우개량은 개량농가의 등록우를 대상으로 우량 암소와 보증씨수소를 선발하여 계획교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량을 추진한 결과, 작년도 실시한 한우개량 간이 추세조사에서 한우 수소 18개월령의 체중이 571kg으로



둘째, 현재 한우 개량농가가 관리하고 있는 혈통등록우는 장기적으로 적정 두수인 60천두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기반으로 활용한다. 2006년도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에 실제 참여한 농가수는 전년보다 줄어든 14,717호이며, 이들 농가들이 사육하는 관리대상 등록우 중 기록관리가 되는 78,886두와 이 등록우에서 생산된 송아지 60,611두에 대하여 4,73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그밖에 2006년에는 가축인공수정용 정액 생산·공급을 위하여 한우 당대 및 후대 검정을 통해 유전능력 평가를 거쳐 한우 후보씨수소 38두와 보증씨수소 20두를 새로이 선발하였으며, 이렇게 선발을 통해 확보된 보증씨수소 총 41두에서 생산한 우량 한우 정액 1,802천두분을 번식농가에 공급함으로써 한우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젖소개량은 검정을 받는 낙농가 3,822호에서 사육하는 암소 194,315두를 대상으로 유우군능력검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들중 검정성적이 정상적으로 관리되는 193,223두에 대한 검정비 (총 2,079백만원)을 검정농가에 지원하였다. 가축인공수정용 정액 생산에 필요한 젖소 보증씨수소는 2두 선발한 것을 포함하여 보증씨수소 총 16두를 확보하여 국내산 젖소 정액 381천두분을 생산하여 낙농가에 공급하였다. 젖소개량은 검정농가의 경우 검정 참여기간이 길수록, 검정 참여율이 높을수록 평균 산유량이 높다. 2006년도에 유우군 검정농가의 두당 평균 산유량이 일반 낙농가 보다 1,687kg 증가하여 두당 22.2%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6년도 국내 젖소 두당 평균산유능력 추이(305일 기준)

- 검정농가 : (2004) 8,935 → (2005) 9,014 → (2006) 9,271

- 일반농가 : (2004) 7,286 → (2005) 7,417 → (2006) 7,584

+ 1,782                    + 1,649                    + 1,597(22.2%)

돼지개량의 성과를 보면 요크셔 수퇘지의 경우 검정소 검정에 의한 일당 증체량은 1997년 913g에서 2006년 1,027g으로 12.5%나 증가하였다. 돼지의 사료요구율은 1997년 2.36에서 2005년 2.33로 1.3%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닭 개량은 산란계의 경우 산란지수가 1997년 284(개/년) 대비 2006년



312(개/년)로 9.8% 향상되었으며, 육용계의 경우 평균체중(6주 기준)이 1997년 2,416g 대비 2006년 2,530g 으로 4.7% 늘어났다.

돼지와 닭 개량은 민간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직도 돼지와 닭 개량은 민간업체에서 종축을 수입하여 확대 생산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종돈의 능력검정을 위해 종돈검정소와 농장검정을 병행하여 추진한 결과, 종돈 40천두에 대한 능력검정사업을 하여 돼지개량을 촉진하였다.

닭 개량을 위해 종계 40천수에 대한 능력검정을 실시하고 소요 검정비를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였다. 또한 검정성적을 양계농가에 제공하여 양계농가들이 유전능력이 우수한 계종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축산정책과 농업사무관 서재호)

## 5. 우유수급 안정대책

원유 생산량이 정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시는 우유’의 소비감소로 인해 공급 과잉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원유 생산 쿼터제가 점차 정착됨에 따라 원유 수급은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

2006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2,176천톤의 원유가 생산되어 1,908천톤은 원유로 직접사용(백색시유 1,363, 가공시유 193, 유제품 352)하였고 나머지 268천톤을 분유로 가공하여 전년도 보다 잉여량이 17% 감소하였다.

낙농진흥회의 경우 582천톤을 집유하여 485천톤은 정상가격으로 유업체에 계약 공급하였으며, 잉여량은 전년도(112천톤)에 비해 13% 감소한 97천톤 수준이며 치즈·분유·아이스크림 등 용도별로 공급한 후 이에 따른 손실액인 273억원의 원유수급조절자금이 투입되었다.

이와 같이 잉여량이 줄어든 것은 폐업보상 및 원유생산감축대책 시행(2003년 7월)에 따른 원유생산 감축과 낙농진흥회의 정상가격 판매물량 비중이 예년에 비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2-2-35>

**우유 수급상황**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 생산 :	234만톤	254	237	226	223	218
- 수요 :	305	309	304	311	308	312
· 시유 :	157	150	163	161	154	156
(백색시유)	(140)	(131)	(139)	(135)	(132)	(136)
·유제품 :	148	159	141	150	154	156

\* 유제품 수요량은 수입 유제품을 원유로 환산하여 포함된 수치임.

\* 전국 분유 가공량 : (2001) 30만톤 → (2002) 50 → (2003) 36 →  
(2004) 34 → (2005) 32 → (2006) 27

진흥회 잉여량 : (2001) 20만톤 → (2002) 31 → (2003) 20 →  
(2004) 12 → (2005) 11 → (2006) 9.7

한편, 고품질의 목장원유(1A 등급) 상태를 유가공장까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원유 유통단계의 수유·검사방식을 개선하고 낙농가의 유질개선을 지도하여 공장 도착시까지 고품질 원유의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유제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위생성적 및 유질향상 측면에서도 체세포수 1등급 비율은 50.5%로 2005년도에 비해 6.8% 증가하였고, 세균수 1등급 비율이 95.9%로 전년 대비 0.3% 상승하였으며, 유지방 역시 4.03%로 전년에 비해 0.02% 증가하였다.

현재의 우유 수급구조는 만성적인 원유 공급과잉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위적인 방법에 의한 생산조절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따르고 있고, 원유거래 및 유통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덤핑판매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낙농가·유업체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우유 수급관리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생산자 자율에 의한 계획생산체제를 구축하여 낙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경쟁원리가 작동하는 거래원칙 확립을 통해 원유 유통을 합리화 시키며, ‘시장의 확대’에 낙농과 유업체가 공동 노력할 수 있는 낙농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중

장기대책인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시안)을 마련(2005년 7월)하였다. 동 대책(인)을 두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15인)된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세미나·심포지움·간담회·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 폭을 줄여 생산자·유업체·정부 3자간의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주력하였다.

한편, 낙농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우유 소비확대를 위한 TV·라디오 공익광고, 다큐멘터리 방영, 낙농체험목장, 3대 가족소풍 등의 이벤트 및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밖에도 우유의 우수성을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해 교사용 학습 지도서를 개발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하였으며, 유제품 개발 생산시설 지원을 통해 국산 유제품 개발과 노후화된 생산시설을 자동화하는 등 유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였다

(축산경영과 행정사무관 이성주)

## 제7절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추진

### 1.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확충

#### 가.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쌀 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의 확대와 쌀값 하락, 이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쌀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쌀값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적정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직불제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존 쌀소득보전기금법을 전면 개정하여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중전 논농업직불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WTO규정상 환경보전직불제로 분류되어 허용보조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환경농법과 일반농법과의 생산비 차액만큼 만 지급되어야 하므로 지급단가를 지속적으로 또는 대폭 인상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중전 쌀소득보전금은 WTO가 규정한 감축대상보조로 5개년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함에 따라,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 또는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이를 적절히 신속하게 보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새로운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논농업직불제는 생산중립적직불제(decoupled income support)인 고정형직불제로 전환하고, 쌀소득보전제는 쌀값하락에 따른 실질적인 보전이 되도록 쌀값 하락폭과 연동하는 변동형 직불제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를 개편하여 시행(2005년 7월 1일) 하였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정부가 목표가격을 정하고 수확기(10월~익년1월) 산지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떨어진 금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목표가격은 3년마다 변경하되,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5년산부터 2007년산까지 적용할 목표가격은 2001~2003년도 평균 수확기 산지 쌀값과 추곡수매제 직접소득효과, 2003년도 논농업직불제 소득효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쌀 80kg 한 가마당 170,083원으로 설정하였다.

직불금은 그 지급방법에 따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누어지며, 고정직불금은 쌀값과 관계없이 ha당 평균 70만원을 벼 재배여부 및 타작목 재배와 상관없이 지급하며,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지급 단가를 빼고 남은 금액을 쌀을 생산한 농업인들에게 지급한다. 예컨대 2005년산 80kg 한 가마당 수확기 평균 쌀값은 140,028원으로 전년 쌀값 대비 13.4% 하락하였지만, 쌀값과 직불금을 합할 경우 목표가격대비 97.4% 수준을 수취할 수 있었고, 2006년산의 경우는 80kg 한가마당 평균쌀값이 147,715원으로 쌀값과 직불금을 합할 경우 목표가격 대비 98%수준을 수취하였다. 따라서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일정수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소득에 대한 예측가능으로 계획영농이 용이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상당수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직접지불 금액 = (목표가격 - 당년쌀값) × 보전수준(85%) >

목표가격			
당년쌀값			] 고정직불금
			] 변동직불금
		시장판매	

※ 목표가격 : 170천원/80kg, 3년단위 변경

※ 대상농지 : 1998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라·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

(소득정책과 사무관 하종수)

**나. 친환경농업 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친환경농업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도시행규정에 따라 1999년도부터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까지 대상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지역 등 환경개선정도가 크고 지원과급효과가 높은 환경규제지역내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고 대상 농업인은 대상지역내에서 경작하고 작목반을 구성하는 농업인으로서 일정수준이상의 친환경농업실천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농업을 이행하고 그 면적이 1천㎡ 이상인 농업인으로 하였다. 대상농산물은 축산물과 임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2년도에는 논농업직불제와 친환경 영농이행단계에서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더욱 수준높은 친환경농업이 농업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먼저 대상지역을 중전의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예산사정 등을 감안,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 중 일정수준이상 친환경영농을 이행하여 친환경농산물 인

증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친환경직불보조금을 ha당 524천원 지원하도록 하 되, 농가당 최소 1천㎡이상 농지를 경작하여야 하고 연간 친환경농산물 판매 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로 제한하였다. 또한 환경규제지역내에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감안 저농약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직불금은 초기단계 벼의 관행재배와 저투입농법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기준으로 하여 ha당 524천원을 지원하였다. 친환경적인 영농실천으로 사업 시행전인 1999년에 비해 최근 3년간 화학비료 사용량은 단위면적당 약 14% 줄어들었으며, 농약 사용량은 논벼는 줄어들었으나, 원예용 등은 증가 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03년도에는 친환경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논·밭 각각 인증수준별 인센티브 를 추가 지급하였는데, 인센티브는 유기인증 270천원/ha, 무농약 150천원이다.

이로인해 발단가는 저농약인증은 524천원/ha, 무농약 674천원, 유기 794 천원이고, 논은 논농업직불금외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 유기인증은 270천원/ha, 무농약 150천원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했다.

2004년도에는 지원 단가가 논·밭 모두 2003년과 동일하나, 예산은 2003 년 30억원에서 2004년 55억원으로 증가하였다.

2005년도에는 지원단가가 2004년과 동일하나, 예산은 2004년 55억원에서 2005년 69억원이었으나 집행액은 82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2006년부터 논·밭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논 단가도 인상하여 예 산을 114억원으로 확대 되었다.

<표 2-2-36>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ha, 호)

	1999~2001	2002	2003	2004	2005
지 원 액	17,121	2,757	2,988	4,507	8,180
사업면적	31,208	5,274	10,459	12,827	20,780
농 가 수	54,939	6,589	12,195	14,520	22,119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사무관 이상집)

**다. 쌀생산조정제 시행**

쌀생산조정제 사업은 효과적인 생산감축을 통해 쌀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2004년 쌀 협상에 대비한 유예조건 충족을 위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다.

사업내용은 2002년도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2003년부터 3년간 벼나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매년 논 임차료 수준에 해당하는 ha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WTO농업협정문상 허용보조 형태로 운영하였다.

<표 2-2-37>

**쌀생산조정제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사 업 량(ha)		26,357	24,647	23,429
사 업 비 (국고보조)	계	80,492	76,657	72,415
	보 조 금	79,683	75,850	71,624
	관 리 비	809	807	791

\* 사업량은 정산 실적

\* 사업비는 결산 실적

2003년 약정체결량은 27.5천ha이었으며, 매년 약정불이행 등 제외면적을 제외하고 신규신청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3년은 26,357ha, 2004년은 24,647ha, 2005년은 23,429ha의 면적이 각각 약정이행 되었다.

이를 통해 매년 평균 25천여ha의 농지에 벼를 재배하지 않음으로써 연 70여만석의 쌀 생산감축효과를 거두어 쌀 수급안정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2006년 벼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쌀 생산조정제 시행을 유보하기로 결정(2006년 9월 5일)하고, 향후 쌀 수급상황 및 벼 재배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쌀 생산조정제 재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농산경영과 농업사무관 백영현)

## 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본사업 시행

WTO출범이후 수입개방 확대로 산간·오지 등 조건이 불리한 지역은 농업생산성과 소득수준이 낮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교육·문화·의료 등 복지지원도 부족하여 지역공동화가 우려 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마을의 자발적인 발전계기 마련 등 지역사회의 활성화가 필요하여 2004년~2005년 2년동안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부터 전국 읍·면 지역으로 확대하여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본 사업을 추진하였다.

조건불리지역 구분지표를 적용하여 선정한 법정리내의 농지 및 초지를 대상으로 농지소재지 읍·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마을활성화 실천 등 지급요건을 이행한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직불금 지급대상 지역은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고시된 399개 오지면 중 경지율(22%이하) 및 경사도(14%이상인 농지면적이 50%이상)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된 법정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06년도 본사업은 사업대상을 전국 1,420개 읍·면지역으로 확대하였고, 선정지표도 경지율 및 경사도 외에 도서개발촉진법상 지정·고시된 410개 지역은 경지율 및 경사도 관계없이 지원하고, 제주도는 농업적토지이용 적성등급 4등급 및 5등급이 50% 이상 포함된 법정리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등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지원을 확대하였다.

대상 경작지는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토지이용 현상이 2003~20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또는 초지)로서 쌀소득보전등직불제 대상농지는 제외하였다.

신청절차는 마을의 대표를 중심으로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신청서(마을발전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읍·면을 통해 시·군에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마을발전계획의 타당성, 주민 참여의지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한 후 대상마을과 마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보조금지급단가는 밭·과수원은 ha당 40만원, 초지는 ha당 20만원으로



정하고, 보조금 비율은 70% 국고, 30% 지방비로 되어 있으며, 보조금의 최소 30%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마을공동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동 사업은 WTO 농업협정문상의 허용정책(Green-Box)인 “지역원조계획하의 지불제도”를 조건불리지역 농업에 적용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마을 활성화를 통한 농촌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2-38>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연도별 지원액

(단위 : 백만원, 천ha)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사 업 량(천ha)		30	31	118	
사업비	계	12,644	13,856	46,769	
	보조금	소 계	11,572	12,015	45,855
		국 고	8,101	8,411	32,099
		지방비	3,471	3,604	13,756
	행정비(국고)		1,072	1,841	914

(농지과 사무관 이영식)

#### 마.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실시

최근 오지지역이나 한계농지를 중심으로 경작포기 등으로 인한 유휴 농경지가 증가하여 농촌경관의 훼손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적극적인 농촌경관시책에 의한 농촌경관형성으로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5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를 도입하였다.

경관보전직불제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지자체와 마을간 협약을 체결하고, 농지에 일반작물 대신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당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05~2007(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방안을 보완하여 2008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경관보전직불제에서 지원하는 경관작물은 해당지역의 농촌경관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되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작물(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등)로 다년생작물과 곡물, 목본류, 사료 및 녹비작물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신청절차는 마을주민들이 농촌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농촌경관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장에게 신청하고, 지자체장은 마을의 계획을 심사하여 시·도, 농림부에 신청한 후, 선정된 마을과 협약을 체결한다. 지자체장은 협약에 따라 사업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경관보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며, 지급단가는 ha당 170만원으로 국고 70%, 지방비 30%이다.

2006년도에는 10개 시·도에서 총 1,113ha를 신청하였으며, 신청지역 중 470ha를 선정(5월 18일)하고, 총 8억(국고 5.6억, 지방비 2.4억)을 투입하여 추진하였다. 대상지 선정은 전문가와 합동으로 신청지역의 현지조사(5월 8일~13일)를 통하여 녹색농촌체험, 농촌마을종합개발 등 농촌관광과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도·농교류 등에 활용가능한 지역 등을 우선 선정하였다. 선정지역의 경관작물은 메밀, 코스모스 등 하절기 작물 200ha, 유채 270ha였다. 또한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사업성과 등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11월). 모니터링 결과, 경관작물 재배에 따른 외지인들의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농 교류에 기여하고, 농촌의 경관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표적인 예로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은 효석문화제 기간 중 57만명 방문으로 총 23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은 메밀축제 기간 중 20만명 방문, 부안면은 국화꽃축제 기간 중 15만명 방문으로 총 35억원의 지역소득효과를 올렸다.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은 불모지로 방치되어 마을의 경관을 저해하던 농지에 염해에 강한 코스모스와 유채를 식재하여 농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연중 마을경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정주지원과 시설사무관 김현수)

## 2. 금융부담 경감과 경영위험 관리강화

### 가. 농업인부채경감대책 추진

#### (1) 추진배경

2001년 제정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부채경감법”이라 함)에 의한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금리인하,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지원 등 종합적인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수입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산물가격은 정체·하락하는 반면, 농가재가가격은 급등하여 농가교역조건이 계속 악화되었다.

도·농간 소득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나 기존의 부채대책의 상환기간이 비교적 단기여서 농업인이 소득으로 부채를 갚아 나가기 어렵고 부채문제를 상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FTA·DDA 협상 등으로 농가소득의 감소·정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부채상환능력이 단기간내 향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과도한 부채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농가부채대책 수립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2003년 4월 농민단체, 학계,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농업인부채대책위원회」 및 「부채대책실무기획단」을 구성,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장기화, 농업경영회생 프로그램 상설화 등 농업인에 대한 부채대책 추진과제를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농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총 15차례 회의(실무기획단 포함)를 통해 부채경감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2003년 6월 28일 농가부채에 관한 정책건의서를 채택하고 정부에 제출(2003년 7월 2일)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정부는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농업인의 상환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능력에 맞는 상환제도를 도입하는 등 농가 스스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기회보장과 상시 경영회생 시스템 마련에 중점을 두고 부채대책을 마련, 2003년 10월 31일 국회에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부채경감법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동법률개정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2001년에 지원된 상호금융대체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를 6.5%에서 3%로 3.5% 인하하는 내용 및 농업용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7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 등 개정안을 수정하여 2004년 2월 16일 의결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되어 2004년 3월 5일 공포된 개정된 부채경감법에 따라 2004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을 2005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부채경감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하지만 대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FTA확산과 WTO농업협상의 진전 등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부채증가 등으로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005년 12월 29일에 개정·공표된 농가부채경감법에 따라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5.6조원에 대하여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2) 부채대책 내용

### <2006 농가부채경감대책 주요내용>

- ① 2001년 지원했던 상호금융대체자금 원금의 10%이상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는 경우 5년 분할 상환(금리 3%)으로 대환  
- 그 외의 경우는 3년 분할 상환으로 대환하되, 금리는 5%
- ② 재해 등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 대해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경영회생자금을 지원  
- 2006년 2,000억원, 금리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③ 정상상환 및 조기상환 인센티브 지원  
- 정상상환 인센티브 : 정책자금을 부채대책에 의해 상환연기 하지 아니하고 정상상환시 그 상환액에 대하여 납부한 1년치 이자액의 40% 환급  
- 조기상환 인센티브 : 부채대책으로 상환연기한 자금과 지원받은 자금을 약 정당시 상환기일보다 1년이상 조기상환시 그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 환급
- ④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3) 부채대책 추진

2004년 개정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부채경감법”이라 한다)에 의한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금리인하,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지원, 연대보증피해지원금 상환기간 연장 등 종합적인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FTA 확산 및 DDA 농업협상 진전 등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농산물가격은 정체·하락하는 반면, 농자재가격은 급등하여 농가교역조건이 계속 악화되었다.

쌀협상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농가부채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김우남, 김낙성, 유선호의원이 각각 농어업인부채경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2005년 11월 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위”라 한다)에 상정하였다.

그러나 2005년 11월 25일 농해위 법률심사소위에서 3개법안을 폐지하고 농해위 위원회 대안으로 2001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의 상환연기를 채택하여 농업인들이 과도한 부채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농해위 대안으로 상정된 부채경감법은 신속하게 법사위 의결(2005년 12월 7일) 및 국회 본회의(2005년 12월 8일)에 상정되어 의결을 거친 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2005년 12월 15일)되었다.

정부는 국회에서 이송된 부채경감법을 2005년 12월 20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마친 후 2005년 12월 29일 공포하였다. 개정된 부채경감법에 따라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5.6조원에 대하여 부채경감대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부채경감대책 시행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도덕적 해이를 제고하였으며 정상·조기상환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부채상환을 촉진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또,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질병, 농산물가격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06년도 농

업경영회생자금 예산을 2,000억원 반영하여 3년거치 7년분할상환(금리 3%) 조건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농업경영회생자금 시행지침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출기관의 상임 임·직원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여 도덕적 해이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대출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기관 내부 직원으로 실무심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다. 실무심의회는 기본자격대상 여부 및 증빙서류구비 적정여부 등을 사전심사한 후 경영평가위원회에 부의토록 하였으며, 경영회생자금지원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이사회에 보고, 지원대상자금 지원범위를 명확화하고 부부 공동경영시 지원대상자금에 배우자분을 포함, 농신보 부분보증비율(농업인 90%, 농업법인 85%) 강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를 보충토록 하는 등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였다.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회생가능 여부를 심사·평가하여 회생이 가능한 농업인에게는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회생불능 경영체에 대하여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Work-out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업인들의 채무상환 불이행에 따른 농지의 가압류, 경매처리 등의 처리 절차에 대한 제반 지식부족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농림부 및 농협중앙회에 농업인금융사고센터를 설치하여 연체농가 등에 대한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농지은행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 농업생산과 관련된 농업인 연체채권에 대하여는 연체이자감면 및 농산물 수확대금으로 연체채권을 자진변제할 수 있도록 농산물 수확대금 수령시까지 경매진행을 유예토록 하는 등 농업인이 경영회생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표 2-2-39> 부채대책 자금별 농업인 신청 및 지원 현황 (2006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건, 억원)

대 상 자 금	지원규모	신청 현황		지 원 결정액	지원액 (C)	비율(%)	
	(A)	건수	금액(B)			(B/A)	(C/B)
2006상호금융대체자금	38,437	249,548	37,046	36,257	34,028	96.4	91.9
농업경영회생자금	2,000	735	451	343	361	22.5	80.0
계	40,437	250,283	37,497	36,600	34,389	92.7	91.7

(협동조합과 서기관 이용섭)

#### 나.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우리나라는 사계절 기후변화의 차가 큰 북서계절풍지대에 속해 있어 여름철에는 태풍·집중호우, 겨울철에는 폭설·혹한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서해안, 중부지역 등을 위주로 자주 발생하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자연재해의 발생횟수 및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요소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고자 2001년부터 도입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사과·배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2006년까지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뽕·은감 등 7개 과수를 대상으로 보험실시 중에 있으며,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및 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의 실질적인 보험혜택 증대를 위해 폭풍우 인정기준을 최대풍속 14m/sec이상 또는 최대순간풍속 20m/sec이상에서 최대순간풍속 14m/sec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고, 가을동상해 특약의 보험기간을 11월 5일까지에서 11월 10일까지로 5일 연장하였으며, 단감 낙엽피해 보장기간을 10월말까지 1달간 연장하였다. 또한, 조정과 인정피해율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였고, 재해가 없는 농가에 대한 보험료 부담 경감 및 수익자부담원칙 강화를 위해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 폭을 △50%~50%로 확대하는 등 많은

부분에 걸쳐 가입자 편익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그간 태풍 “루사(2002)” 및 “매미(2003)” 등으로 약 3만 2천여 농가에 1,446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사업시행 초기 재해보험사업의 한축인 민영보험사가 태풍 “루사” 피해로 큰 손실을 입자 2003년부터 사업에서 철수하고, 2003년 이후 단독으로 보험인수한 농협 또한 태풍 “매미” 피해로 큰 손실을 입게 되어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운영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등 사업의 추진기반이 크게 약화되어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에 2005년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및 재보험기금 설치로 거대재해로 인한 재해보험사업자(민영보험사 포함)의 위험 일부를 국가가 인수함으로써 재해보험사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안정기반을 구축함으로써 2005년부터 민영보험사의 사업 재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조기확대를 위해 2006년 4월 농림부, 품목별 전문가, 보험전문가, 재해보험사업자 등으로 품목개발추진단을 구성하여 작물별 보험화 가능성 검토 및 도입우선순위 결정, 품목별·재해별 기초 통계자료 축적 등 본격적인 보험품목 확대에 주력하였다.

아울러,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50%(특별지원 8.4% 별도), 운영비의 100%를 지속 지원하고, 보험요율을 2005년 대비 1.03%p 감소한 8.21%로 인하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2006년도에는 전년대비 4.1% 증가한 27,419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면적도 2005년 20,301ha에서 21,466ha로 늘어 가입률 24.5%를 달성하였다.



<표 2-2-40>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성장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대상품목 <sup>1)</sup>	6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	6	6	6	7 (뽕은감 추가)	
가입실적	가입농가(호)	18,549	16,481	23,926	26,335	27,419
	가입면적(ha)	10,994	11,001	17,546	20,301	21,466
	가입률(%)	18.3	15.2	18.2	23.4	24.5
지원규모	순보험료(%)	50	50	50	61.2	58.4
	운영비(%)	70	80	90	100	100
	국고지원액	8,590	16,224	37,803	49,371	50,783
지급보험금	지급농가(호)	6,913	10,134	3,177	5,877	5,171
	보험금	34,709	50,018	13,599	23,871	21,112
	손해율(%)	433.4	290.8	42.3	43.5	36.6

\* 주1) 본사업 시작년도 : 사과·배(2003), 복숭아·포도·단감·감·귤(2004)

(협동조합과 농업사무관 서준한)

**다. 가축공제 운영 내실화**

가축공제는 안정적인 양축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최근 태풍, 화재, 호우 등의 피해를 보는 농가를 중심으로 공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입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축산농가의 가축공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농협을 통해 홍보·농가안내 등을 강화하였으나, 예년에 비해 자연재해 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 공제가입 유발요인이 작았고, 소의 가입률이 다소 저조하여 전체 예산 246억원 중에 190억원만 지출하고 56억원은 불용·변경되었다.

<표 2-2-41>

**가축공제 가입률**

(단위 :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소	7.0	7.2	7.3	7.1
돼 지	43.4	49.9	57.6	66.7
말	2.1	1.9	4.9	6.7
닭	17.4	22.3	32.8	39.3

자료 : 농림부 축산국

또한, 공제가입 대상축종은 당초 소, 돼지, 닭, 말, 오리, 메추리, 꿩, 7개 축종에서 2006년도에 사슴, 칠면조를 추가하여 총 9개 축종으로 확대하였다.

정부는 가축공제 확대를 위하여 “가축공제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2006년 2월)” 결과를 토대로 2007년 2월부터 민영 보험사도 가축공제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07년 4월부터는 소브루셀라병도 공제대상에 포함 하였다.

(축산정책과 농업사무관 서재호)

**라. 재해지원 현실화 추진 실적**

농업재해지원은 농작물, 가축 및 농업용 시설 등의 피해복구지원과 농가별 피해정도에 따른 생계비 지원, 학자금 면제 등 간접지원의 두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농가의 영농재개 도모와 복구부담 경감을 위하여 매년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 인상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사슴, 말, 칠면조, 지렁이 등 11개 종목의 복구지원단가를 신설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농작물 대파대 19개 종목, 가축입식 11개 종목, 채소류 농약대 1개 종목 등 44개 종목의 복구지원단가를 3.2~400%까지 인상하였으며, 인삼농약대 1개 종목을 신설하는 등 재해지원 현실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농산경영과 농업사무관 장영국)

## 제8절 다양한 농익소득원 확충

### 1.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국민소득증가와 주5일 근무제 확대 등으로 국민의 여가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관광형태도 유명관광지 위주의 대중관광에서 가족중심의 체험관광·휴양 등 대안관광 형태로 변화되는 추세이다.

농촌의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 증가, 웰빙(well-being)생활 중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과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농촌체험관광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 도모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농촌체험·휴양기반을 확충하고,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유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도시민의 여가 및 다양한 문화체험 수요에 부응하는 농촌체험·휴양기반 확충을 위해 2002년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마을주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도시방문객들이 농촌체험관광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마을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마을경관 및 컨설팅 등 S/W 관련분야 등 조성을 지원(마을당 2억원)하고 있다.

2006년까지 380억원(국고 190, 지방비 190)을 지원하여 전국에 190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였다. 또한,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도시민의 방문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상품을 개발·보급(2006년에 65개마을 가입)하였다.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해 나갈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대책'을 수립하여, 마을리더·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06년도에는 리더쉽육성과정, 사업주제별 특화과정, 동기화과정(입문과정) 등 4개 과정 21개 세부특별과정을 운영하였으며, 2,286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농산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 마을에 마을대표의 업무부담 경감과 체험 프로그램개발, 방문객관리, 도시민유치 등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제도를 2006년도 처음으로 도입하여 100개마을을 지원,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마을에서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1인1촌 전문가 자문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6년도에 50개 마을(2005년 40개마을)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농림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여름휴가 농산어촌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7~8월중 농산어촌체험마을 방문객수와 매출액이 전년대비 23.7%, 36.8%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났으며, 농촌문화체험기 공모전, 도농교류 정부포상 시상, 농촌체험행사,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대국민 참여를 도모하였다.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 및 수요 창출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농촌관광포털사이트([www.greentour.or.kr](http://www.greentour.or.kr)) 운영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도농교류 수요확대와 활성화, 홍보·교육, 농촌투자유치 등 도농교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농촌공사에 도농교류센터를 설치(2004년 4월)·운영하고 있다.

1사1촌 자매결연 운동은 도시와 농촌이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상생(win-win)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단체와 농촌마을이 자발적

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이 운동은 2003년 11월 개최된 한·칠레 FTA 체결과 관련하여 ‘경제 4단체와 농민단체간 간담회’에서 논의되었고, 2003년 12월 11일에는 대통령, 경제5단체, 농협 등이 참여하여 ‘농촌사랑공동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는 ‘1사1촌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2004년 5월에 1사1촌 자매결연 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하였고, 6월에는 경제5단체와 농협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사랑 협력 조인식 및 1사1촌 자매결연 발대식’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기업체와 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2006년 말까지 기업체 6,316건, 정부부처 30개 기관 등이 참여하여 총 14,498건의 자매결연을 통해 농산물직거래, 농촌일손돕기 등 1,854억원의 교류성과를 창출하였다.

민간주도의 1사1촌 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정착되도록 비전 등 이론 정립, 발전전략과 참여주체별 역할 분담 등 정부차원의 단계별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 운동의 체계적인 정착을 위해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를 사단법인으로 인가(2006년 3월)하고 공익성기부대상단체 등록(2006년 12월), 제1회 농촌사랑지도자대회 개최(2006년 12월) 하였으며, 2006년 2월에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을 개원하여 1사1촌 관련 마을지도자, 도시민, 기업체 직원 등 11천명을 교육시켜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1사1촌 운동은 대내적으로는 재계, 사회·종교·소비자단체, 학교, 정부부처 등 14,000여개의 도시소재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1사1촌 운동의 성공적 추진에 따라 일본, 중국, 베트남 등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며 국위선양에 기여 하였다.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소득증대 등 농촌지역 활력 회복의 전기가 되고, 아울러, 농촌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 도농상생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촌지역개발과 행정사무관 이영길, 사무관 전영미)

## 2. 농공단지 조성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1984년부터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농외소득 증대차원에서 2014년까지 40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여온 사업이며, 사업시행 초기에는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나, 1998이후 IMF영향으로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입주업체 경영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도로망 확충 등 입지여건 개선, 수도권내 입지부족, 지자체의 기업투자유치 강화 등으로 농공단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매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신규추이 : (1999) 1개소 → (2002) 4 → (2003) 11 → (2004) 12 → (2005) 10 → (2006) 7

2006년에는 농공단지 신규 7개소를 포함하여 28개소에 국고 260억원을 지원하여 2006년까지 322개소를 완공하였으며, 2006년말 현재 농공단지의 분양율은 97.8%, 가동율은 93.1%로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다.

<표 2-2-42> 전국 산업단지 분양 및 가동 현황

구 분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분 양 율 (%)	97.8	96.1	95.4
가 동 율 (%)	93.1	84.5	84.5

자료 :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06년 12월)

농공단지는 유형별로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비중(업체수, 면적 기준)이 3/4이상인 경우 “전문단지”, 지역특화업종 비중이 1/2이상인 경우 “지역특화단지”, 그 외는 “일반단지” 구분되며, 농촌지역의 향토·특화자원과 연계된 지역특화단지 조성 확대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최호중)

### 3. 향토산업 육성

향토산업이란 일정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특성있는 향토자원을 개발 또는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농업은 그 자체가 향토산업의 가장 중요한 일부이다. 지역사회 2, 3차 산업의 존립기반이 되는 원재료와 인력을 제공하는 등 향토산업의 발전은 농림어업의 새로운 수요 창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계기를 제공한다. 향토자원이란 특정지역에 주로 존재하고 타지역과의 차별성을 가지며, 지역의 생활과정을 통해 토착·계승되어온 생활양식과 이를 구성하는 자연자원·재화·기술·문화를 말한다.

WTO DDA 협상, FTA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 추진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농외소득 제고와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향토자원을 이용한 향토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2004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에 향토산업 진흥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 9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토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 지자체(시·군)를 통한 제1차 향토자원발굴조사를 실시하여 100개 향토자원을 발굴하고 향토자원 전문기관 및 학계·연구기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향토산업육성 전문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2006년 1월 19개 사업대상을 선정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인 “지역특화사업” 단위사업으로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신설(2006년 4월)하고, 지자체별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 확정, 소요예산 국고 43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2006년 7~10월에는 제2차 향토자원발굴조사를 실시, 발굴된 83개 자원에 대해 사업성 등 평가를 거쳐 2006년 12월 2008년도 사업대상 30개 자원을 선정하였다.

농림부는 향토산업이 지역 핵심전략 사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HW분야와 함께 지적재산 권리화, 연구용역·컨설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SW분야에 걸쳐 포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최호종)

#### 4.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주40시간 근무제 등으로 도시민의 관광·여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웰빙문화의 확산,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 등으로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체험·여가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여건 변화속에서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유치하여 농외소득증대 등 농촌지역의 활력증진을 도모하고 도시민에게는 건전한 가족단위 체험·여가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2년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마을주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방문객들이 농촌체험관광을 보다 유익하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코자,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마을경관 및 컨설팅 등 S/W 관련분야 등 조성을 지원(마을당 2억원)하고 있다. 2006년에는 67개소를 신규조성 하여 전국에 190개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을 주도하는 마을리더·주민들의 사업추진·운영능력 배양 등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체험관광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마을에서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50개마을)하고 있다. 또한, 농촌체험활동 중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를 지원(65개마을)하였으며, 맞춤형 농촌관광 홍보책자(내인생의 코페르니쿠스혁명)제작·배포, 농촌문화체험기 공모전, 제5회 농촌마을가꾸기경진대회 개최, 농촌관광 포털사이트 운영 등 도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이후, 전국에서 다양한 성공모델이 나타나면서 도시민 및 농업인, 지자체의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06년 중 녹색농촌체험마을에 1,343천명이 방문하고, 183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법을 활용한 도시민 초청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와 연계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하며 소득증대에 기여한 사례, 행정과 주민간 일체의 노력 및 기업과의 자매결연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전개한 사례, 마을주민·출향인·귀농예술인이 협력하



여 농촌전통문화와 농사체험이 조화를 이루는 마을로 성장한 사례 등 다양한 성공모델이 나타나고 있다.

(농촌지역개발과 사무관 전영미)

## 5.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사업은 주5일 근무제, 전원생활 등 웰빙 문화 확산으로 농촌체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업생산 및 소득기반 약화로 농촌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2006년 신규 31개 마을을 조성하여 전국에 2002년도부터 총 97개 마을을 조성하였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과 관련공무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지역 어메니티 자원과의 연계사업 추진 등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 증가로 농촌지역 경제 활력화와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2006년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와 “국가균형발전사업 사업단위 평가”에서 2005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농촌전통테마마을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촌관광마을 육성사업의 성공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사업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한국농업 근현대화 100주년 기념 농업기술 대축전』, 『2006 국제체험학습박람회』 등의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농진청, 농협, 농촌공사 등 농산어촌체험마을 부처 등과 함께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비틀맵([www.beetlemap.com](http://www.beetlemap.com))에서 “테마 따라 가는 우리 가족 웰빙 휴양지, 마을 45곳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주제로 입체지도를 제작, 배부하였다.

앞으로 2008년 39개 마을을 신규 마을을 조성하고,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총 170개 마을 조성으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농산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시군단위 지원체계 구축, 사업 성장단계별 매뉴얼

개발 지원, 마을 지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품질관리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는 농촌관광 마을과 네트워크를 선도할 수 있는 거점 마을로 육성하는 등 사후관리와 활성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에서 자발적인 농촌관광 민간조직 육성과 지역별 네트워킹을 통한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 영역을 확장시켜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가 농촌관광 사업의 실질적 지원 주체로서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촌전통테마마을의 성과 제고를 위한 자체 평가시스템을 정비하여 마을별, 권역별, 사업단계별 성장 요인과 저해 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구분, 연구와 지도가 연계되는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정책의 완결성을 이루고자 한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생활지도관 조은희)

## 제9절 농촌활력증진 및 생활여건 개선

### 1. 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계획수립 추진

#### 가. 수립배경

WTO 및 DDA협상 진전, FTA확대 등 농산물시장 개방 가속화와 대내적으로 국가 전체 경제와 농림어업 부문간 성장격차 확대 등으로 농가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농산어촌 인구는 1990년 25.6%에서 2005년에 18.5%로 감소하였고, 농어가 28.6%(2004년)가 만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로 전환되어 급격한 고령화로 농산어촌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90%이상이 도시에 집중되는 등 의료·복지·기초 인프라 부족과 소규모 학교 증가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가 열악한 농촌생활여건이 인구감소를 유발하고 있으며, 인구감소는 교육·의료등 생활여건을 더욱 악화 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급격히 고령화되는 추세에서 농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도농간 격차 해소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건설을 위하여 농산어촌의 주민의 삶의 질을 중소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농촌사회 발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범정부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2002년 이후 제정을 추진하여 왔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2004년 2월)하여 제정·공포(2004. 3. 15, 법률 제7179호)되었으며, 동 시행령도 제정·공포되어 2004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법 제정은 농산어촌의 복지증진,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삶의 질 기본계획 추진 1년차인 2005년도에는 15개 부처에서 부처별로 작성한 세부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복지·교육·지역개발분야 전문가, 농어업인단체 대표 등의 의견 수렴 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2005년 4월) 서면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이를 발표하였다.

2006년에는 이렇게 수립된 삶의 질 기본계획의 좀 더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첫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 기본계획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각 부처에서 수립한 2005년 삶의 질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였다.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 4개 분야 추진을 위해 각 부처에서 수립한 시행계획(91과제) 대하여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단”에서 각 분야별로 사업 계획단계, 집행단계, 성과단계로 구분하여 중점 평가를 시행하였다. 평가결과 평가대상 91개 사업 중 79개 사업이 정상 추진으로, 총사업비 95.9%가 집행 완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체사업을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사업 19개, 부진사업 16개로 나타났다. 삶의 질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를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2006년 5월) 및 국회(2006년 6월)에 보고하고, 각 부처에 통보하여 2007년도 시행계획 및 예산편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범정부적인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구성하고 15개 부처(청)에서 시행하는 농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 등을 총괄·조정하여 농촌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농촌 지역개발·복지관련 유사·중복사업 중 관계부처 협의 및 장관회의 합의를 거쳐 신활력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부처간 업무조정(2006년 8월)을 하였다.

셋째, 삶의질 5개년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으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여도 및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6년 (사)21세기 경제사회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 2,000 가구(농어촌 1,400, 도시 600)를 대상으로 “2006년의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농어촌 주민들은 농어촌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하여 44%가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2005년 37.4%에서 6.6% 향상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하여 그 결과를 조사해 본 결과 농어촌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관련 사업시행으로 농림어업인의 건강보험료 부담률은 2002년 78%에서 2006년 50%로 경감되었고, 국민연금보험료는 2002년 1등급 보험료의 33%(62천원) 지원되었으나, 2006년에는 13등급 보험료의 50%(259천원)를 지원받았다.

교육여건 개선관련 사업시행으로 농산어촌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2002년 216개에서 2006년 282개로 늘어났으며, 농산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2002년 150만원에서 2006년 271만원으로 상향 지원되었다.

편리한 농산어촌 생활을 위한 지역개발 추진으로 상/하수도 보급률이 2002년에는 각각 31%/25% 그쳤으나, 2006년에는 42%/40%로 늘어났으며,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률은 (이용가능 가구수) 2002년에는 82%(308만호)에

서 2006년 99%(373만호)로 확대되었다.

복합산업 활성화 추진으로 1사1촌 자매결연실적은 2004년 2,404건에서 2006년 14,498건으로 확대되어 도농상생의 기반이 조성되고 있으며, 2004년 36억원에 불과했던 교류금액이 2006년에는 1,400억원으로 39배나 증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정책과 행정사무관 엄기훈)

## 2. 농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 가.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 분야 지역개발사업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1,206개 면지역중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361개 오지면,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개발면 53개면 및 무인/무면사무소면 10개면을 제외한 782개면과 광역시내 15개 준농어촌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크게 마을내·마을간도로, 상·하수도시설, 교량, 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는 마을기반정비 부문, 세천정비, 수변공원화, 소공원, 담장정비(식생담조성 등), 빈집의 철거·정비 등 경관개선부문, 복지회관, 마을회관, 체육공원조성 등 문화·복지부문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300개면(15개 준농어촌 자치구 포함) 2,37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마을내 도로 354km, 마을간 도로 93km, 상수도 12개소, 하수도 110개소, 교량 33개소, 하천정비 51개소 마을회관 54개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시켰다.

(농촌지역개발과 시설사무관 이행우)

## 나. 전원마을조성 사업

1990년 이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농촌의 정주여건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함에 따라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농촌인구는 1990년 25.6%에서 2000년에는 20%, 2005년에는 18.5%로 감소하였다. 2005년도의 농촌지역의 노령인구 비율은 도시지역의 7.2%를 크게 상회하는 18.7%를 나타내고 있으며, 86개 군 중에서 57개 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농촌의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이 증시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도시민의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2006년 7월 농림부와 국정홍보처가 공동으로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 1,000명을 대상으로 은퇴 후 농촌이주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1%가 은퇴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농촌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매우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6년 10월에는 12일부터 15일까지 농림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한국농촌공사가 공동으로 20개 시·군이 22개의 전원마을조성계획을 전시한 「2006전원마을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는데, 나흘간의 행사기간중 총 43,870명이 관람하여 도시민들의 전원생활에 대한 높은 수요를 실감하였다. 대통령께서는 전원마을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도시민이 농촌에 정착하여 농촌주민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정책”임을 강조하였으며, “전원마을 홍보를 강화하고 농촌공사가 전원마을조성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농림부는 이러한 도시민의 농촌이주 수요와 농촌의 도시민 유치 수요를 연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원마을조성사업은 그 중 핵심 시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은 20호 이상의 가구가 농촌지역에 전원마을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

설 등 마을기반시설을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지원 대상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면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마을의 규모에 따라 정부에서 10~20억원(국고 80%, 지방비 20%)을 보조지원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는 지원한도를 3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건축비에 대해서는 호당 4,0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저리(농업인 3%, 비농업인 4%) 융자지원도하고 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은 2013년까지 총 300지구를 조성할 목표로 추진중이다. 2004년도에 2지구 시범착수 후 2005년도까지 총 30지구를 착수한 바 있으며, 2006년도에는 총 325억원의 예산을 투입(국고 260억원, 지방비 65억원)하여 신규로 착수한 25지구를 포함하여 55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사업이 초기단계로서 아직까지 사업추진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2006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농림부와 농촌공사 공동으로 전원마을조성 제도개선작업팀을 구성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농촌공사는 도시민의 농촌유입촉진을 위한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2007년부터 전원마을조성 관련 업무부서를 통합·확대한 「전원마을조성팀(1급)」을 신설·운영키로 하였다.

(정주지원과 시설사무관 박종민)

#### 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면단위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2004년말 현재 35.2% 수준으로 도시지역 98.2%에 비하여 상당히 열악한 형편이며, 아직도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촌지역은 우물·계곡수 등 자연수에 의존하여 생활용수를 해결 의존하고 있으나, 우물·계곡수 등은 가뭄시 쉽게 건천화되고, 생활오수·축산폐수·기타 오염물질 유입으로 수질이 악화되어 양질의 용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표 2-2-43>

**상수도 보급현황**

구 분		총대상인구(명)	급수인구(명)	보급률(%)	
전 국		49,268	44,671	90.7	
도시	특광역시	23,079	22,832	98.9	98.3
	시지역	17,061	16,641	97.5	
농촌	읍지역	3,909	3,231	82.6	56.9
	면지역	5,219	1,967	37.7	

자료 : 환경부 상수도통계(2006)

이에 따라, 면단위 농어촌지역 자연마을에 암반지하수를 개발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면서 가뭄시 농업용수와 농산물세척용수까지 병행하여 공급하는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을 199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441억원을 지원하여 267개소를 개발함으로써, 2006년까지 5,364개소를 완공, 1,113천명에게 생활,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정주지원과 농업사무관 이재식)

### 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최근 들어 소득증가, 주5일근무제 시행 등 여건변화로 농촌을 단순 식량생산공간이 아닌 전원주거·휴양·전통문화 등 기능을 갖춘 쾌적하고 농촌다움을 지닌 미래형 복합 생활공간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농촌개발수요에 대응하여 농촌어메니티 자원과 지역개발을 연계시켜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농가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종합개발사업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화·분권화시대에 맞게 주민·지자체가 스스로 지역발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강화차원에서 실천을 통한 학습형 지역개발 추진 방식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따라 2004년부터 상향식의 주민참여형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는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발전잠재력이 있는 수개의 마을을 소권역으로 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권역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기반시설확충,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사업대상지 선정시부터 지역주민이 스스로 해당지역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 공무원, 지역내 전문가 등이 파트너십(partnership)을 형성하여 지역발전을 주도함으로써 소권역별 잠재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의 농촌공간을 정비하고자 한다. 지원금액은 권역당 3~5년간 40~70억원(국고80%, 지방비20%) 범위내에서 권역의 크기, 가구수 등 권역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계획수립 시 단계별로 전문가의 평가·자문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6년까지 총 1,411억원(국고 1,155, 지방비 256)을 투입하여 56개 권역에 대하여는 사업을 추진하고, 20개 권역은 2007년도 사업착수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2-2-44> (단위 : 권역,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4	2005	2006	
사업비계	115,520	20,000	48,870	46,650	
기본계획수립	사업량	96	36	40	20
	사업비	13,300	4,000	6,050	3,250
사업시행	사업량	56	-	36	56
	사업비	102,220	16,000	42,820	43,400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별로 잠재자원을 발굴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공사가 민간전문가 또는 민간기관과 컨소시엄 및 위탁방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권역개발 및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권역별로 현장에서 자문

회를 개최하였으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농촌마을개발 발전방향을 재정립하고, 사업 활성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토론회, 사업참여자 연찬회 등을 실시하여 사업의 발전방안을 토론하여 계획에 반영하였다.

(농촌지역개발과 시설사무관 한준희)

#### 4. 농촌의 교육·의료 등 생활여건 개선

##### 가. 복지지원 개선

정부는 2004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농촌의 사회보장 수준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2006년도에는 2004년 이후 추진된 농어민 건강보험료의 경감 확대 및 농업인 안전공제의 보상수준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 복지지원을 강화하였다.

농어민 건강보험료는 2003년까지 농어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납입보험료의 22%를 경감 지원하여 왔으나, 2004년부터는 농림부에서 추가 경감을 실시하고 있다. 2004년에는 8%, 2005년에는 18%를 추가 경감하였으나, 2006년에는 28%를 추가 경감하여 농어민 건강보험료의 총 50%를 경감 지원하고 있다.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은 2006년에는 표준소득월액 13등급(480,000원) 소득 이하는 보험료의 50%를, 13등급 소득 초과는 13등급 보험료의 50%를 지원하여 1인당 연간 최고 259,200원을 지원하였다.

농기계 사고 등 농작업 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안전공제의 사망공제금 보상수준을 2005년 1,500만원에서 2006년에는 2,5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정아름)

**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지원**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1994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교육부에서 담당하여 오다 2004년부터 농림부로 이관되어 추진 중이다.

1인당 한 학기 지원금액을 2000년까지는 100만원, 2002년 150만원, 2003년 200만원, 2004년부터는 학자금(입학금, 등록금, 기성회비) 범위 내에서 신청한 전액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까지 지원실적은 251천명, 3,956억원이다.

<표 2-2-45>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지원실적**

(단위 : 천명, 억원)

1994 ~ 1999		2000 ~ 2005		2006		계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100	993	126	2,286	25	677	251	3,956

자료 : 농림부 농촌사회과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김낙신)

**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영세농업인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1990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사업시행 초기에는 농촌의 면지역 거주 농업인 자녀중 중학생 및 실업계고교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4년도에 읍·면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실업계고교생만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왔으며 2001년에 편모농업인에 이어 2002년도에는 편부농업인의 인문계 고교생 자녀까지, 2003년도에는 인문계를 포함하여 전 고교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지원대상은 1990년 사업시행부터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지소유규모 1.0ha미만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양축인·임업인·어업인의 자녀 중 실업계·인문계 고교생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였고, 2004년도에는 경지소유규모 1.5ha미만 농가까지 확대 지원하였고, 2005년도부터는 전농어

가로 확대하여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도까지 총 1,799천명, 8,552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2-46>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정책의 변천**

연도	대 상	비 고
1990	면지역 중학생, 실업계고교 1, 2학년생 (경지소유규모 1.0ha미만 농가)	전액 국고 지원
1991	면지역 중학생, 실업계 고교생	실업계 고교생 3학년 추가
1992	면지역 중 2, 3학년, 실업계 고교생	읍지역중 도서벽지 실업고생 추가 지원 1993부터 지방비 2/3부담
1994	면지역 실업계 고교생	중학생 의무교육 전면 실시
1997	읍·면지역, 시의 개발제한구역 실업계 고교생	읍지역 전체, 시의 개발제한구역 확대 국비 30%, 지방비 70%부담
1999	상 동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자녀 포함 국비 30%, 지방비 70%부담
2001	편모농업인 자녀는 인문계고교생까지	상 동
2002	편부·모농업인 자녀는 인문계고교생까지	상 동
2003	인문계 포함 전 고교생까지	상 동
2004	상 동 (경지소유규모 1.5ha미만 농가)	상 동
2005	전 농어가로 확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교부세로 지원)

자료 : 농림부 농촌사회과

<표 2-2-47>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실적**

(단위 : 천명, 백만원)

1990~1992		1993~1996		1997~2005		2006		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626	148,179 (148,179)	400	173,806 (57,466)	674	446,860 (109,319)	99	86,358	1,799	855,203

주 : ( )내서는 국고지원액(1990~1992 100%, 1993~1996 1/3, 1997~2004 30% 부담) 2005년부터 지방이양

자료 : 농림부 농촌사회과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김낙신)

**라.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하여 설치된 전국 11개 학교 자영농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 생활을 통한 협동의식 및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젊고 우수한 농업전문인력의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1986년부터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지원실적은 총 38천명, 222억원이다.

<표 2-2-48>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실적**

(단위 : 명, 백만원)

1986~1992		1993~1997		1998~2005		2006		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9,446	4,135 (827)	6,235	3,050 (610)	19,508	13,128 (2,281)	2,474	1,844	37,663	22,157

주 : ( )내서는 국고지원액(20% 부담), 2005년 부터 지방이양

자료 : 농림부 농촌사회과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김낙신)

**마. 농촌 노인 복지 지원 강화**

농촌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인보호체계 구축하고 건강·장수마을 조성하는 등 노인복지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현재 농어촌 노인에 적합한 일거리나 건강관리, 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 등 기회를 제공하는 건강·장수마을을 2006년 300개 마을 육성하였으며, 농산어촌 재가노인 복지센터를 2006년도에 16개소를 설치하였다.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김낙신)

## 바.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도입

농촌지역의 고령화 현상은 급격하게 진행되어 2005년도 말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8.6%로 고령사회(Aged society)를 지나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에 진입해 가고 있으며, 또한 이혼율의 증가<sup>3)</sup>로 조손가정이 늘고 있는 등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농림부 조사결과<sup>4)</sup>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사고를 당한 농가는 25.8%였으며, 사고농가 중 62.7%가 농사일에 지장을 받았으며, 사고농가의 47.7%는 도움을 받을 대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곤란에 처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사고나 장애 시에 겪을 농사와 가사에의 어려움을 제공하기 위한 인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농가를 지원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농림부에서는 농업인의 사고 발생시 영농인력을 지원(영농도우미)하고, 고령·취약농가에 가사인력을 지원(가사도우미)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생활 지원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82개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을 도입하였다.

2006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의 규모는 총 2,933백만원(국고지원 2,053백만원)의 예산으로 사고농가 4,000명과 고령농업인 12,000명에게 지원을 목표로 하였다. 영농도우미는 총 1,920백만원 중 국고지원 70%와 영농도우미를 이용하는 농업인이 30%를 부담하고, 가사도우미는 총 1,013백만원 중 70%를 국비에서 지원하고 농협에서 30%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고농가에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지소유규모 3ha미만, 65세 미만의 농업인이 전치 2주 이상 농작업·교통·재해사고 등을 당한 경우에 최장 10일까지 지원하며, 2006년도 지원실적은 2,180농가에 연인원 21,383명을 지원하였다.

고령 취약농가에 지원하는 가사도우미 지원은 65세 이상의 고령단독·편조손 농가 및 65세미만 사고농업인 중 1개월 이상 가사활동이 어려운 농

3) 농촌지역 이혼건수 : (1990)8,480건→(2000)21,154→(2005)23,060

4) 취약농가 인력지원방안 연구(2005년 12월, 농림부&농업기반공사)

가를 대상으로 주로 자원봉사자에 의해 세탁, 청소 등 가사 일을 지원하며, 2006년도에 12,038농가에 연인원 83,222명을 지원하였다.

한편, 당초 영농도우미 신청 절차 중 사고발생 1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신청후 2개월 이내에 영농도우미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중상을 입은 경우 등 농가에서 부득이 신청(이용)기간을 경과하는 경우가 있어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영농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6년 8월 1일부터 치료기간 중에 신청하고 치료기간 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하였다.

(여성정책과 행정사무관 이상목)

## 5. 농업·농촌정보화의 확대 추진

### 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그동안 농림사업관리는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신청·대상자선정·자금 집행·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없어, 사업대상자가 중복선정 및 지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사후관리 또한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었다.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은 2013년까지 투자되는 119조원의 농림 투융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처리방식을 On-line화하여 읍면동·시군·시도·농림부에서 사업진행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하는 동시에 업무간소화와 사업집행의 투명화를 통해 농림행정을 혁신코자 구축된 시스템이다.

2006년도에는 직접지불제사업 등에 대하여 신청서식 표준화 및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등 업무재설계(BPR)를 추진하였으며, 이중 3개 직불제사업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2006년 하반기에는 축산분야 정보표준화와 정보화 효과가 큰 축산사업 위주로 온라인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농림사업 추진방식을 기존 off-line에서 on-line(사업신청-대상자선정-사업이행-자금집행)방식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별도보고 없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사업시행지침도

이에 따르도록 개정하였다.

AgriX는 공무원의 신청서 입력시 주민등록정보 및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 G4C를 통해 신청자격 유무를 사전에 검증하여 중복신청 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업무효율화를 증대시키고, 농업인에게는 직불제 사업에 대하여 온라인신청이 가능하고, 토지대장 등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자격검증, 보고서 작성생략 등으로 업무처리 시간이 82% 단축되었으며, AgriX에 대한 만족도는 77.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보화기획팀 전산사무관 문광규)

#### 나. 농업·농촌 정보컨텐츠 확충

농업인이나 소비자에게 출하지원시스템을 통합하여 한층 강화된 농림수산정보망(www.affis.net)을 이용,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유통가격정보는 물론 생활·문화·교육·의료·농촌관광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가공하여 제공함으로써 영농활동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다음 그린넷(green.daum.net)을 통해서 30개 농림유관기관(137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농업 관련 정보를 연계, 농업인, 도시민, 학생 등이 여러기관의 농업·농촌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농촌정보화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등 도·농교류 활성화와 정보격차해소에 기여하였다.

또한, 우리의 주 농산물 수출입 상대국인 중국의 각 성 도·소매가격 정보를 농업인에게 수집·제공하고자 중국 농업부와 유통가격정보교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는 중국산 수입농산물의 저가신고 방지 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7개 농업경영체를 선정하여 농산물의 생산관리, 자재구매 관리, 판매·정산관리 등을 함에 있어 전산화가 가능하도록 정보시스템 구축과 정보화 컨설팅을 실시, 농업경영체 경영효율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농가소득 증대와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구축한 1,706농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홈페이지 18농가를 선정하고 우수 사례집 제작배부 및 중앙일간지(4개소) 광고 등 홍보도 적극 추진하였다.

(정보화기획팀 행정사무관 강신복)

#### 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화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교육내용 및 교재를 기초·중급·전문과정별 특성에 맞는 교육내용으로 집중화·차별화하고, 교육내용을 수준에 따라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리고 지역농협과 농업기술센터 중 농업인이 가장 가까운 기관에서 기초·중급 과정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하위 연계교육의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또한 전국 22개 농업계대학을 통해 분야별 농업용 SW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된 농업경영정보 전문교육(공모과정) 개발을 확대하여 수요자 맞춤형교육을 강화하였다. 농업정보119요원 및 정보화선도자 등 교육 강사에 대한 인증시스템을 보완·강화하고 교육기관 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로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였다.

또한, 농업인의 정보화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재택·반복학습 지원을 위해 온라인교육 콘텐츠의 추가 개발 및 사용자 확대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통합교육(Blended Learning)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였다.

그리고 농촌현장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버스교육은 마을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충분한 맞춤형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농업정보119 서비스는 만족도조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방문교육 및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전국 9개도 90여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보화선도자 및 원격지원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방문교육이 되도록 하였다.

<표 2-2-49>

**농업인 정보화교육 실적**

(단위 : 명)

구 분	계	1998~2003	2004	2005	2006
총 계	503,937	312,627	73,199	61,229	56,882
기초교육 (컴퓨터·인터넷활용)	152,358	117,722	20,445	7,144	7,047
중급교육 (농업정보활용)	65,152	41,355	13,182	6,607	4,008
경영·회계 S/W(중기)	3,905	-	-	1,766	2,139
품목·분야별 전문교육	17,521	14,067	2,039	1,056	359
농업정보 119서비스	91,508	56,200	13,190	12,074	10,044
이동버스 정보화교육	9,790	7,478	1,230	570	512
정보화선도자	81,364	11,271	16,292	23,943	29,858
자체교육(농협,기술센터)	38,393	20,588	6,821	8,069	2,915
생산자단체(농협)교육	11,186	11,186	-	-	-
정보화공공근로사업 (농가방문교육)	32,760	32,760	-	-	-

자료 : 농림부 투융자평가통계관실

(정보화기획팀 행정사무관 강신복)

**제10절 농정제도개혁**

**1. 농지제도 개선**

급격한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개방화의 진전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구조개선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내외 농정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지제도를 재검토하여 농업인의 실익이 극대화 되는 방향으

로 개선하였다.

증장기적인 농지제도 개선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농업계 내외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농지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마련한 개정 농지법이 2005년 7월 21일자로 공포되어 2006년 1월 22일부터 시행(농지 임대허용범위 확대 관련사항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농지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를 개선하였다. 먼저, 비농업인의 참여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농지 소유를 제한함에 따라 기업적 경영을 위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타부문의 자본·기술·인력의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를 개선하여 소유요건중 농업인의 출자지분을 현행 2분의 1이상에서 4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임차료 안정 및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농지의 임대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농지은행을 통해 5년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 농업경영목적 취득농지의 임대를 허용하였으며, 규모화된 농지의 세분화 방지를 위해 상속농지·이농후 계속 소유농지의 소유상한 예외를 허용하여 농지은행을 통해 전업농 또는 농업법인에게 장기임대하는 경우 상속은 2ha까지, 이농은 면적상한 없이 임대기간동안 소유를 허용하였다. 처분의무가 발생한 농지를 다시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농지은행에 매도 위탁한 경우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하도록 하여 농지처분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2006년 농지법 개정예 이어 하위법령도 개정하여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구체화 하였다.

우선, 농업진흥지역내에 농가소득증진 및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고, 진흥지역 해제기준을 지자체 위주로 조정하여 미곡종합처리장(RPC)·산지유통시설(APC)의 설치규모를 종전의 1ha에서 3ha로 확대하고 농산물 판매시설·체험시설 등의 설치를 신규로 허용하였다. 또한,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농업보호구역내 행위제한을 관리지

역 및 농업진흥지역내 행위제한 수준에 맞게 조정하여 주말·관광농원시설 및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중 설치가능한 시설을 명시토록 하였다.

아울러, 전용제한 면적기준을 7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하고 10ha까지 허용하던 농업진흥지역 밖 시·도지사의 전용허가권한을 20ha까지 허용하였으며,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된 산업단지 등 10개 지역·지구 등에 대한 농지전용권한을 전부위임하는 등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행위제한 수준에 맞추어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지자체장의 권한을 확대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휴양펜션업 시설에 대하여는 1천㎡까지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휴양관광업의 진흥을 도모하였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여 국가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지과 사무관 송태복)

## 2. 농지은행 본격 시행

쌀 소비감소, 시장개방 확대 등 여건변화에 따른 농지시장 불안을 사전 대비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통한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동안 농지은행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농지법은 2005년 7월 21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은 2005년 12월 29일 개정하였다.

농지은행의 주요기능으로는 농지유동화정보제공, 농지임대·매도수탁관리,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농지시장안정 매입·비축사업이 있으며, 시장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05년 7월부터 농지은행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농지매물·거래동향·시세 등 농지유동화정보를 제공하고, 2006년 1월부터는 농어촌종합정보포털과 연계하여 농촌주택, 귀농, 농산어촌 문화체험 등 다양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지소유자가 자경이 어려워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이를 수탁하여 전업농 등에 임대하여 규모화를 촉진하는 “농지임대 수탁 사업”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나 개발 예정지역안의 농지 등은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여 투기목적 농지취득을 차단하고, 임차인의 영농안정을 위해 5년 이상의 수탁기간 설정과 계약기간 내 해지시 계약 잔여기간 총 임차료의 20% 수준을 위약금으로 징수토록 하였다.

\* 농지임대수탁 실적 : 2005년-111.4ha(234건), 2006년-3,373.2ha(6,913건)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당해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고, 농업인은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다음 환매권도 보장하고, 경영회생을 유도하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여 파산직전에 있던 183농가의 회생을 돕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농지소유자가 농지의 매도를 위탁하는 경우 이를 농지은행이 수탁하여 전업농·창업농 등에게 매도하는 “농지매도수탁사업”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여 농지 매도 및 매입을 돕고 있다.

또한,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하여 비축한 후, 농업인 등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지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지수급 불안에 사전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농지과 사무관 이영식)

### 3.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

#### 가. 추진배경

기존의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한 평균적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지역에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시스템농업의 구축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농림부의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따라 새로운

농업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2004년에 지역 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05년부터 120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나. 기본 정책방향

(1) 생산위주 농업을 1·2·3차 산업이 연계된 「농산업」으로 전환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농정시스템으로 혁신을 유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및 고용증대 효과를 창출하며, 대내외적인 농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업경영체 및 지역농산업의 잠재력과 핵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119조 투융자의 효율성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2) 클러스터 사업은 패키지형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내 산·학·관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클러스터 생산기반조성,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3) 시범사업 첫해인 2005년도는 20개 시범사업단을 선정하였고, 2007년까지 3년간 개소당 평균 60억원(국고 50%, 지방비 50%)을 지원하고, 본사업은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등을 거쳐 클러스터의 정책과 사업성을 검증한 후 2008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 다. 시범사업 추진현황

##### (1) 사업추진방안 수립

(가) 2004년 2월 23일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 시 농정추진 및 지원체계 개편과 지역농업발전전략을 포함하고, 2004년 3월 8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지역의 가용자원을 통합적·유기적으로 결집한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계획을 보고하였다.

(나) 2004년 5월 25일~10월 31일 「지역농업클러스터 T/F」를 구성·운영하여 전문가 초청토론회, 현장사례조사, 지역농업 활성화 워크숍, 지방농정과장협의회 등을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다) 2005년 1월 4일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수

립하였으며, 2005년 1월 18일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각 지자체로 시달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2) 2006년도 사업추진 실적

일 시	내 용	비 고
2006.2.13~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단 혁신활동 평가</li> <li>- 2005년 사업추진 절차 및 내용위주로 평가 실시</li> </ul>	
2006.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농업클러스터 중장기 발전방안 협의</li> <li>- 도 농정과장 및 중앙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 위원 등</li> </ul>	
2006.5.1~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농업클러스터 워크숍</li> <li>- 도 농정과장 및 20개 사업단장 등 140여명 참석</li> <li>- 사업단별 추진실적 및 2006 사업계획 발표 등 본격적 사업추진 점검 및 독려</li> </ul>	
2006.6.21~6.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농업클러스터 실무 워크숍</li> <li>- 농림부, 농관원, 20개 사업단 실무자 등 50명 참석</li> <li>- 사업추진 점검 및 사업비 집행 독려, 평가방향 및 사업발전방안 등 논의</li> </ul>	
200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단 중간평가</li> <li>- 사업 추진 준비 및 집행과정의 충실도 평가</li> </ul>	
2006.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러스터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지도</li> </ul>	

(구조정책과 농업사무관 이연숙)

## 제11절 WTO/DDA 농업협상 등 대외협력에 적극 대응

### 1. WTO/DDA 농업협상 추진

#### 가. 세부원칙 협상 등에 대해 적극 대응

2005년 홍콩 각료회의 이후 2006년 들어서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관한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협상이 가속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관세와 보조금 감축을 둘러싸고 미국, EU, G20, G10, G33 등 주요국 및 주요 그룹간 입장차가 매우 컸으며, 홍콩에서 이루었던 합의와는 달리 2006년 4월말까지 세부원칙을 타결하지 못하였다. 관세 감축과 관련하여 미국과 G20은 EU에게 양보를 요구하였으며 반대로 EU는 국내보조에서 미국이 추가적으로 양보를 해야 한다면서 맞섰다. 한편, 미국과 EU는 비농산물 분야에서 G20가 관세를 추가 감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팔코너 농업협상 의장은 6월 21일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하였다. 이 세부원칙 초안은 그간 주요국의 입장을 사실상 그대로 나열한 것으로서 괄호로 처리된 미합의 문구가 700개를 넘었다. WTO 주요국 각료들은 6월 21일부터 7월 1일간 제네바에서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달라 합의도출에 실패하였다. 관세감축의 경우에는 EU가 G20 제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의향을 보이는 듯도 하였으나 국내보조 감축 및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에 대한 신축성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주요국 각료회의가 실패함에 따라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회원국들은 향후 구체일정을 정하지 않고 라미 사무총장에게 주요 6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과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협상의 돌파구를 찾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나라는 각료회의 기간동안 G10, G33 등 유사 입장국과 각료회의 및 기자회견을 갖고 그룹의 공동입장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는 활동을 펼쳤다. 물론 WTO 그린룸(Green Room) 회의에서 세부 쟁점별로 우리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는 활동도 병행하였다. G10은 관세상한 반대화 민감품목의 신축성 확보, 협상과정의 투명성을 강



조하였고 G33은 개도국 특별품목과 특별긴급관세에서 신축성을 주장하였다.

주요국 각료회의가 성과 없이 끝난 후 라미 사무총장은 미국, EU 등 주요국들과 협의를 갖기 시작하였다. 라미 사무총장은 각국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다면서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신축성을 좀 더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러시아 쌍뜨 빼체르스부르구(St. Petersburg)에서 주요 8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주요 8개국 정상들은 현 DDA 협상의 교착상황에 대해 우려를 같이하고 향후 1개월 내에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정상들의 촉구에 힘입어 미국, EU, 일본, 인도, 브라질 장관들은 7월 17일 제네바에서 향후 협상 진전방향을 논의하였다. 이 논의 결과 주요 6개국 즉 미국, EU, 일본, 인도, 브라질, 호주 장관들은 7월말에 회동하여 3대 핵심쟁점인 농산물 관세감축, 농업보조금 감축, 공산품 관세감축 등에 대한 타결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주요 6개국 각료들은 7월 23일 제네바에 모여 협상 돌파구 마련을 모색하였으나 미국은 EU, 일본, 인도 등이 농산물 관세를 추가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반면 EU, 인도, 브라질, 일본은 미국이 국내보조를 더 감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주요국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림에 따라 협상 돌파구 마련에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7월 24일 라미 사무총장은 무역협상 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협상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DDA 협상을 일시 중단한다고 선언하였다. 물론 그간 합의를 이룬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라미 총장은 향후 협상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협상이 재개되기 전까지 각국이 국내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촉구하였다.

협상 중단이후 미국, EU 등 주요국 및 그룹 차원의 비공식 협상이 진행되었고, 라미 사무총장은 11월 16일 비공식 무역협상위원회 회의를 소집 각 협상그룹 의장을 중심으로 “DDA협상 전반 재개를 선언”하였다. 협상이 정상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본격적인 협상보다는 주요국, 주요그룹 상호 간 탐색전, 주요 그룹내 기술적 협의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 나. DDA 농업협상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농업협상 추진체계 강화

정부는 홍콩 각료회의 이후 장기간의 협상 기간 동안 대외적으로 WTO 농업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이해관계국 들을 대상으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적으로 농업협상에 대한 농민들의 이해와 합의를 유도하고 각계의 의견을 협상에 반영하기 위해 협상동향에 대한 대국민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협상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협상시마다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및 E-mailing 서비스 등을 통해 알려왔고 각종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였다. 농업통상정책협의회 및 현장출장 등을 이용하여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는 DDA 농업협상이 당초 협상일정을 넘겨 계속 진행됨에 따라 협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협상과 관련한 농림부내의 조직을 보강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DDA 농업협상을 전담하기 위하여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설하였던 1급 상당의 고위직(농업통상정책관)을 2007년까지 연장하여 운영토록 하였다.

한편, 통상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협상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본부와 해외 협상담당자로 배치하고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상정책협의회·통상자문단 등을 운영하고 국내외 통상전문변호사를 자문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농업협상과 사무관 최봉순)

## 2. FTA 농업협상 추진

### 가. 한·미 FTA 협상대응

양국 정부는 사전실무점검회의(3회), 통상장관회의(6회) 등을 거쳐 2006년 2월 3일 한·미 FTA 협상 출범을 선언하였다. 양측은 2006년 중에는 6월, 7월, 9월, 10월, 12월 모두 5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2007년 일정은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협상 분야별로 17개의

분과(Negotiating Group)와 2개의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하였고, 정부는 우리측 협상 목표 및 협정문 초안 작성을 완료하여 2006년 5월 12일 국회에 보고하고 5월 19일 미국과 협정문 초안을 교환했다.

농림부는 농업분과와 SPS (위생 및 검역) 분과의 협상을 총괄하고, 원산지·서비스·지재권 등 농업과 관련된 분과 협상에도 참여하였다. 범정부적 FTA추진에 대응하여 농림부에서는 농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미 FTA 대책추진단’을 설치하고 협상은 물론 국내 대책 및 홍보 등을 총괄하였다.

<1차 협상: 미국 워싱턴, 2006년 6월 5일~9일>

1차 협상에서는 양측의 기본입장 설명, 협정문 초안 검토 및 관련 정보 교환을 통해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농업분과 협상에서 우리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미측은 자유무역을 강조하면서 특별한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SPS분과 협상에서는 양국간 SPS 현안에 관한 협의채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었으나 SPS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은 원칙적으로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2차 협상: 서울, 2006년 7월 10일~14일>

농업분과 협상에서 농산물 세이프가드(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s) 도입, 관세철폐 이행기간의 연장·수입쿼터(TRQ) 등의 운영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양국간 의견 차이가 커 농업부분 통합협정문을 작성하지 못했다. SPS 분과 협상에서는 1차 협상에 이어 양국의 검역제도를 소개하였으며 의견교환을 통해 상호 이해를 꾀하였다. SPS 분과는 이견이 있는 부분을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통합협정문을 작성했다.

<3차 협상: 미국 시애틀, 2006년 9월 6일~9일>

3차 협상을 앞둔 8월 15일 한·미 양측이 교환한 양허안을 3차 협상에서 처음 논의했다. 양측은 농산물 양허에 대한 서로의 기대수준에 상당한 차

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리측은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적 취급 및 관세철폐 이행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반면, 미측은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하였다. 농산물세이프가드 도입에 대해서도 양국간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 우리측은 민감품목 논의를 위해선 세이프가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반면, 미국측은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논의를 위해서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SPS분과 협상에서는 양국의 검역제도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4차 협상부터는 협정문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시키기로 합의하였다.

<4차 협상: 제주, 2006년 10월 23일~27일>

제4차 협상에서는 농업분야 협정문에 대해서 상세한 논의를 하여 일부 쟁점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절충하고 입장이 상치된 부분은 양측 입장을 병기하는 수준에서 통합협정문을 작성하였다. 한·미 양국은 협정문에 농산물세이프가드 조항을 도입키로 합의 하였는데 발동기준 등 세부세항에 대해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양허안과 관련하여 3차 협상에서 다루지 않은 품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협상 마지막 날 우리측 수정 양허안을 미측에 전달하였다. 미측도 일부 품목의 양허를 개선한 수정 양허안을 제공했다. SPS분야는 투명성 규정 및 협의채널 문제에 대한 상호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쳤으며, 차기 협상에서는 상호 대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5차 협상: 미국 몬타나, 2006년 12월 4일~8일>

제5차 협상에서 우리측은 농산물 양허와 관련하여 축산물, 과일류 등의 품목별 민감도를 상세히 설명하고 미국측의 관심정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235개 미정(Undefined) 품목을 포함한 민감품목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향후 품목별 양허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였다.

(자유무역협정2과 행정서기관 박수진)

## 나. 한·아세안 FTA 협상 대응

2003년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ASEAN을 단기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하였으며, 2004년 12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2년내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아세안은 우리의 5위 수출시장이며 한-아세안 FTA 진행은 한-칠레 FTA 이후 처음 거대 경제권과의 FTA 협상이라는 의미를 가진 협상이다.

본협상 단계로서 2005년 2월~2006년 11월간 총 15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 협정 서명, 상품협정 본문 및 상품자유화 방식에 합의하였다. 상품자유화 방식으로서 현행관세유지, 관세의 일부 감축 등 관세철폐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초민감품목 200개(HS 6단위)를 확보하였다. 양측은 2006년 4월 11차 협상에서 상품 양허안에 타결하였으며, 2006년 8월 한-아세안 경제장관 회의시 상품협정에 서명하였다.

양허협상 결과 농산물은 현행관세 유지 71개, 향후 10년간 현행관세 유지 377개 등 448개의 민감 품목을 설정하였다. 원산지 규정은 우회수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신선농산물의 경우 역내에서 태어나서 자란 동물이나 재배 후 수확된 식물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인정해 주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출시 정부기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중국, 인도, 호주 등 제3국산 농산물이 아세안을 경유하여 우회 수입되는 경우 관세 감축이나 관세철폐의 이득을 누릴 수 없도록 하였다.

상품협정 서명 이후 서비스·투자 협상 논의가 진행 중이며, 서비스 분야의 경우 개방분야의 목록화 방식을 채택하기로 상호 합의 하였으며 투자 분야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농림 서비스, 투자 분야의 경우 개방영역과 비개방영역을 구분하여 목록을 제시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아세안 FTA는 이미 상품 협정이 종료되었으나, 그 후속 작업으로서 다양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각 아세안 회원국들의 TRQ 증량 요청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대내적으로는 대아세안 TRQ 관리 및 2007 HS 코드 개정으로 인한 혼란 발생을 방지하는 등 순조로운 발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상품협정문 서명에 참여하지 못한 태국과의 양자회의가 진행 중에 있다.

(자유무역협정과 행정사무관 피계림)

## 다. 한-캐나다 FTA

2005년 7월 15일 한국과 캐나다 양국통상장관이 한-캐나다 FTA 협상 출범을 공식선언함으로써 캐나다가 칠레, 싱가포르, EFTA에 이어 한국의 6번째 FTA 협상 파트너가 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북미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에 한발 내딛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로 적은 조정 비용으로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나다는 2005년 현재 세계 제3위 농산물 수출국으로서 NAFTA, 이스라엘, 칠레, 코스타리카와 FTA를 맺고 있다. 2004년 현재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라면, 감귤, 배, 파스타 등이고, 주요 수입품목은 돼지고기, 밀, 우지, 유장, 감자, 유채유 등이다. 향후 협상에서 이들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캐나다의 관세철폐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캐나다 FTA협상은 2006년까지 총 8차례 협상이 진행되었다. 제1차 협상(7.28, 서울)은 분과구성, 협상일정 등 향후 협상의 틀을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실질적인 논의는 없었다.

2차 협상(9.27~30, 서울)은 캐나다가 9월초 마련한 협정문 초안에 대한 우리측 검토의견을 토대로 협정문 완성을 목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결국 양국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이었고 미합의 사항은 추후 협상을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상기 협상에서 캐나다는 관세철폐 수준(Scope of Tariff Offers)과 관련하여 농산물에 대해서는 2002~2004년 수입액의 99%이상을 양허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농업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농산물 분야 관세철폐율이 저조할 것을 우려하여 높은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3차 협상에서는 협정문의 잔여쟁점과 관세철폐안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캐나다는 자국의 조선·자동차 시장 개방을 알리면서 전반적인 이익의 균형을 위해 우리의 농산물 시장의 포괄적인 자유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캐나다는 조선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를 비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철강·자동차 관련 반덤핑관세 조항을 거부하고 있어 사실상 전면 개방

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구실로 농산물 시장 개방의 압력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제 5차 협상(2006년 4월 24일~27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1차 상품 양허안을 교환하였으며 제 7차 협상(2006년 9월 25일~28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2차 양허안을 교환하였다. 이후 제 8차 협상(2006년 11월 20일~23일, 서울)부터 농업소분과를 설치하고 양측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양허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향후 캐나다와 농업협상은 평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캐나다의 일반특혜관세(GPT) 수혜국이고 대(對) 캐나다 수출품목에 대한 적용 관세는 무관세이거나 10%이하의 저율관세가 부과되어 있을 뿐이다. 반대로 캐나다의 대한(對韓) 농산물 수출액 규모는 한국보다 약 10배 이상 많고 대부분 고관세 품목이라 캐나다로서는 우리나라의 관세 양허를 통한 실질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더욱 공세적 입장을 취할 것이다. 또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캐나다는 조선·자동차 등 민감 분야에 대한 전면 개방 가능성을 알리고 농산물에 대한 높은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무역협정과 행정사무관 이용직)

#### 라. 한·인도 CEPA\* 협상

한·인도 CEPA 협상은 2004년 10월 양국 정상외 협상이 CEPA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양국 산·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연구그룹의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논의가 개시되었으며, 2005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친 공동연구그룹회의 개최 결과, CEPA 협상 추진을 양국 정부에 건의하는 최종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2007년 타결을 목표로 2006년 3월부터 추진되었다.

2006년도에 4차례 개최된 협상을 통해 양국은 7개 분과별 협상작업반(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기타규범 및 경제협력, 일반조항 및 분쟁해결, 원산지규정, 통관행정 및 절차) 회의를 개최하여, 협정문안과 상품양허 세부원칙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협정문안 협상에 있어서는 양측 모두 적극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상품, 서비스, 투자 등 협상 전부문에 걸쳐 통합협정문 작성에 진전을 이루었으며, 특히 상품분야 협정문안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조항에서 합의 문안을 마련하였다.

상품 자유화 방식을 논의하는 상품양허 세부원칙에 있어 양측은 모두 극히 민감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되, 전체적으로 일정한 수준이상의 개방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7년도는 협상부터 상품 자유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국가이며, 자급자족적 농업 형태에 하부구조도 열악하고, 한·인도양국의 농산물 교역 규모도 미미한 수준이나 인도의 농산물 수출 및 수입 실적을 고려할 때 교역 잠재력은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한·인도 CEPA체결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부 관계관 및 품목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면밀한 대응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무역자유화를 강조하는 일반적 개념의 FTA에다 경제·기술 협력 등 다양한 경제관계를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지칭

(자유무역협정과 수의서기관 전종민)

### 3. 남북농업 협력추진

북한에 대한 지원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정신과 북한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동포애’정신을 구현한다는 당위적 측면과 남북화해 협력의 실현이라는 실용적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 대북지원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북한 주민의 생활고를 덜어주고 우리 동포애를 전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민족공동체회복에 기여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도적 지원은 국제적으로도 지원대상국의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 범위내에서 성의껏 돕는다는 입장에서 북한의 식량사정, 남북 관계 상황, 국제사회의 지원동향 등을 고려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 가. 정부

정부차원의 지원액은 2006년 현재 총 11억 118만달러로 전체 대북지원액의 66.9%를 차지한다. 1995년 쌀 15만톤 무상지원을 시작으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220만톤을 차관형식으로 지원하였고, 2006년에는 북한의 수해복구를 위해 쌀 10만톤을 무상지원하였다. 1999년부터 비료 11.5만톤을 당국차원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20~30만톤씩 2006년까지 총 225.5만톤(7,058억원)을 무상지원 하였다.

2006년에는 총 35만톤, 1,200억원 상당의 비료를 2회에 걸쳐 지원하였다. 2차 20만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7월 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나, 당시 진행중이던 잔여물량이 소량인 점과 우리가 북한에 대해 지원하기로 이미 통보한 점 등을 감안하여 예정대로 북한에 전달하였다.

북한의 2006년도 곡물생산량은 전년 454만톤에 비해 1.3%감소한 448만톤이며,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식량지원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 나. 민간

1995년부터 시작된 민간의 대북지원은 초기에는 대한적십자사가 국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기탁받은 물품을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1999년 2월 10일 대북지원 창구 다원화 조치에 따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민간단체도 독자창구로서 지원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5년부터 2006년까지 민간차원 대북지원규모는 6,347억원으로 적십자사를 통한 지원이 1,718억원(27%)이며 나머지 4,629억원(73%)은 독자창구를 통해 지원되었다. 대북지원 사업자수는 1999년 9개 단체로 시작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말 현재 65개 단체가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 어린이 등 취약계층 지원 및 농업개발 분야 등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2000년부터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대북지원사업 중 지원의 시급성, 복측 수혜대상과 분배지역, 분배투명성 확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대북지원 사업내용도 기존의 긴급구호나 일회성 지원, 단순물품 지원에서 벗어나 북한에 기술 전수가 가능하거나 자립·자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성 사업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지원분야도 농업개발, 보건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확장·전문화되고 있다.

(구조정책과 농업사무관 이연숙)

# 2007년도 농정시책

제3편 ●

제1장 2007년도 농정방향

제2장 2007년도 주요농정 시책

## 제 1 장 2007년도 농정방향

### 제1절 2007년도 농정목표

현재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은 대외적으로는 한미 FTA 협상 마무리,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협상, DDA협상 등으로 개방이 확대되어 경쟁이 심화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소득 향상으로 농산물에 대한 선택기준이 가격보다는 안전성,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도·농간 소득 및 복지격차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농촌에 대한 관점도 문화, 생태, 관광자원으로서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내외 농정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우리 농업·농촌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식품 세계일류, 농촌 Global Top 10’을 비전으로 내세워 다음과 같이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 첫째, 농업개방 확대에 대응한 농정시스템 체계화
- 둘째, 소비자에게 안전한 고품질 농식품 공급
- 셋째, 농업체질 강화 및 경쟁력 제고
- 넷째, 농업인 소득 향상 및 경영안정 강화
- 다섯째, 도시민과 상생하는 활력 있는 농촌구현

(재정기획관실 정책기획팀 행정사무관 윤원섭)

## 제2절 2007년도 농정시책방향

5대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특히 2007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첫째, 농업·농촌 종합대책 보완 및 맞춤형 농정 추진체계 정립

둘째, 농가유형별 특성에 맞는 직불제 개편

셋째, 식품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발굴

넷째, 농축산물 우수브랜드 육성

다섯째, 농식품 안전성 및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

여섯째, 농촌 삶의 질 향상 및 도농교류 촉진

여섯 개의 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설정 추진하게 된다.

### 1. 농업·농촌 종합대책 보완 및 맞춤형 농정 추진체계 정립

정부는 2004년 2월 수립한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에 대해 3년간의 실적을 평가하고 한미 FTA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보완한다.

농업정책은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 제도를 도입하여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농식품 정책과 농촌 정책을 대폭 강화하게 되며 농업·농촌 종합대책 보완에 따라 119조원 투융자계획도 집행성과 분석결과에 따라 투자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는 등 대폭 조정하게 된다

한편, 농업·농촌 종합대책 보완을 뒷받침하도록 「농업·농촌기본법」을 「식품·농업·농촌기본법」으로 개정하고, 「FTA이행특별법」을 개정하여 농가피해 보전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아울러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여 현장 적용에 문제가 있거나 투융자 효율성이 낮은 사업 등을 발굴하여 법규 개정 등을 추진하는 ‘농림정책 리모델링’을 시행하게 되고, 이를 위해 농림부·농업인·소비자단체로 구성된 「농정 리모델링 추진단」을 설치하여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게 된다.

## 2. 농가유형별 특성에 맞는 직불제 개편

정부는 2009년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밭농업·과수·축산을 포괄하는 직불제 개편방안을 마련하며 이를 위해 외국 사례 및 농가소득 현황 분석 등을 통해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바람직한 농업구조 실현을 위해 고령농 은퇴 촉진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마련되며, 조기은퇴 직불제는 고령농 은퇴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한편, 기존 직불제는 대상지역 확대 등 내실화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제는 도서지역 지급대상을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에서 전도서(제주도 포함)로 확대하고 경사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경관보전 직불제는 연, 자운영 등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 3. 식품산업육성 및 신성장 동력 발굴

정부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경영개선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가칭)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산물 수급에서 식품 가공·소비까지 통계정비를 위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며 2008년 이후 해외 한식당 국가인증제 도입을 위해 해외 한식당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주요 권역별 실태조사도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민간 주도의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민간육종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육종가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년중 ‘농업유전자원의보전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국내 농업 유전자원을 종합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국외 반출 방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 시군을 대상으로 1,500ha 규모의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돼지콜레라 경구용 백신, 가축사료용 항생제 대체물질, 배추분자마커 개발을 통한 분자육종 등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 4. 농축산물 우수브랜드 육성

정부는 농산물이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된 품질관리 및 상품차별화를 위해 금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우수 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이 추진된다.

쌀은 2010년까지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군단위 대표브랜드 100개소를 육성하고, 금년에는 시장·군수가 주도하여 브랜드경영체 통합 등 규모화를 추진하며 소비자단체 주관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를 실시하고 12개 우수브랜드를 선정하여 홍보를 실시한다

원예농산물은 2013년까지 채소류 50개소, 과실류 21개소(전국 1, 광역 20)의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되 채소류는 주산지를 중심으로 우수브랜드 경영체를 선발·지원하고 과실류는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된 품질관리, 상품 차별화 및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한 과실 브랜드사업을 추진하며 고려인삼을 세계적으로 명품화하고,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삼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축산물은 규모화된 광역브랜드 조성 등을 통해 2013년까지 총 80여개소 내외의 우수브랜드 경영체를 집중 육성한다

2004~2006년까지 선정된 73개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규모화·내실화를 추진하고 브랜드 기반 확충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브랜드 경진대회」, 「브랜드 인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5. 농식품 안전성 및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

정부는 농산물 안전성 조사가 농약위주에서 중금속으로 확대되고, HACCP 적용범위가 소 사육단계, 축산물 보관·운반·집유단계까지 확대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한우 위주에서 육우까지 확대하고 시·군 단위에서도 단위까지 사업방식을 다양화한다.

금년부터 구이용 쇠고기에 대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고 2008년에는 쌀로 확대 적용된다.

수입쌀 시판에 대응하여 Non-GMO 쌀 도입을 위해 선적전 수출국 정부 기관 확인, 국제검정기관 검사, 국내도착시 식약청 검사 실시 의뢰 등 3단계 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한편, 2007년부터 매년 150명의 공익수의사가 지자체·가축위생사업소·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배치되어 방역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6. 농촌 삶의 질 향상 및 도농교류 촉진

정부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체계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오지종합개발과 농촌정주기반 확충,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과 농촌주택정비, 신활력지원과 지역특화사업 등의 통합을 검토하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촌주택정비사업은 2007년에 지원 조건을 단일화하고 2008년 이후 지원한도 및 금리 추가 인하를 검토한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을 위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말 교육과 생활상담을 하는 교육 도우미 제도를 30개 시군에 시범 실시한다

도농교류 및 도시민 유치를 위해 ‘(가칭)도농교류촉진법’ 제정이 추진되고 시군의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시작된다

이를 위해 인구 과소화 시군 등 10개 시군을 선정하고 최대 3년간 10억 원 내 지원이 이루어진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추진중인 55개소 외에 신규 15개소를 추가 착수하고 2008년 사업지구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공모방식으로 선정된다.

아울러 전원마을 조성주체를 시·군, 한국농촌공사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고 마을정비구역 지정시 도시계획구역 결정 등 관련법령 의제사항 확대 등 입주자 형태, 지역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재정기획관실 정책기획팀 행정사무관 윤원습)



## 제3절 2007년도 농림부문 예산 확보

### 1. 2007년 농림예산 편성방향

2007년도 농림예산은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삶의질 향상 5개년 계획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여건변화에 따른 투자소요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다.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지원 강화를 위해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예산을 확충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등 경영안정 및 부담경감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투자확대에 중점을 두는 한편, 경쟁력강화를 위한 농업체질 개선 지원 강화를 위해 농산물과워브랜드 육성 및 새로운 소득작목을 적극 발굴하고, 친환경농업육성, 안전성제고 정예인력 육성 및 수출농업 지원을 확대하였다.

2007년도에는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직불관련 소요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타부처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예산을 농림부소관으로 이관하고, 농특세관리특별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가 폐지되어 농림부소관 회계가 6개에서 4개로 단순화 되었다. 또한, 농특회계내 전입금계정을 농특세사업계정으로 전환하고, 균특회계내에 제주특별자치도사업계정을 신설하였으며, 새로운 농정여건에 부응하는 신규사업(16개)을 적극 발굴 하였다.

2007년도 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지원면적을 확대하고, 농가경영위험 관리 및 농업재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대상품목 확대(7개) 및 농업인 재해공제 사업량확대와, 지원단가를 현실화하였다.

둘째, 삶의질 향상을 위한 복지 및 지역개발 중점지원을 위해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정주기반을 확충하고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영유아양육비 보육료 지원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였으며, 은퇴자 등 도시민의 농촌이주 촉진을 위한 농촌유치 프로그램 및 농업·농촌테마공원 사업을 신규 지원하였다

셋째, 친환경·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위생·안전성 강화, 전문인력육성

등 농업체질강화를 위해 자연순환농업과 연계하여 유기질비료 지원을 확대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해 분뇨처리시설 지원을 확대하였다. 농업 전문인력 및 지식·기술농업을 확충하고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생산 시범 사업을 신규 추진하였다.

넷째,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 촉진을 위해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을 확대하여 포장 및 하역기 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규격출하 사업은 무·배추 포장화 소요를 반영하였다.

다섯째, 농업생산기반조성부문은 재해예방 및 준공위주로 지원하되, 수리 시설개보수,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시행지구 마무리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등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 2. 2007년 농림예산 규모

2007년도 농림부문 예산은 총 9조 4,410억원으로 2006년 보다 7.4% 증가되었으며, 기능별·재원별 규모와 사업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3-1-1> 2007년 농림예산 부문별 규모(2청 포함)

(단위 : 억원)

구 분	2006예산 (A)	2007예산 (B)	증△감	
			(B-A)	%
◇ 예산일반지출	87,912	94,410	6,498	7.4
◦ 농가소득·경영안정	23,405	23,545	140	0.6
◦ 농촌개발복지증진	5,760	10,000	4,240	73.6
◦ 농업체질강화(농진청,기본경비포함)	14,481	16,012	1,531	10.6
◦ 양곡관리농산물수급	16,205	17,079	874	5.4
◦ 농업생산기반조성	16,334	16,893	559	3.4
◦ 농축산경영자금	2,828	-	순감	-
◦ 산 립	8,899	10,881	1,982	22.3

(재정팀 서기관 이정형)

## 제4절 농정 추진체계 개선

### 1. 농소정협력사업 추진체계 개선

농업인, 소비자, 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도시 소비자들에게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농업인에게 소비자 지향적인 영농을 유도하여 농업인·소비자간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1999년부터 「농·소·정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동안 여성·소비자단체, 농업인단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한 농소정협력사업은 2006년까지 107억원이 지원되었으며, 매년 10만명 이상의 도시소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농업·농촌 이해증진, 직거래와 일손돕기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우리 농산물 및 환경의 중요성 인식 등 직·간접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기여하였다.

2007년 농소정협력사업은 공모를 통한 도농교류 사업과 농촌지역의 문화사업과 소비자를 위한 교육분야에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사업에는 녹색소비자연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총 41개 단체가 참여하여 도·농교류사업, 농업·농촌알리기사업, 농업·농촌지키기사업 등을 추진하며, 그 외 농업인과 농촌주민을 위한 농촌지역 순회공연 사업, 미래의 소비주역인 젊은 엄마와 함께하는 유치원어린이 농촌체험교육사업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농·소·정협력사업은 주5일제 근무 등에 따른 도시민의 여가 활동 기회를 농업인·소비자간 만남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제발전과정에 형성된 농업인과 도시민, 농업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정서적 장벽을 허물어 ‘동등 차원의 주고받는 관계’, ‘공생관계’를 구축하여 상호보완적인 상생(相生)관계 형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한편, 농림사업 평가 시 농·소·정 협력사업은 도농교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농교류사업과의 연계추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

회 2007년 예산안 심의시 농·소·정 협력사업이 도농교류협력지원사업과 일정부분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부터 농·소·정 협력사업을 도농교류활성화 정책과의 연계 추진을 위해 농업구조정책국 여성정책과에서 농촌정책국 농촌지역개발과로 이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표 3-1-2> 2007년 농·소·정협력 지원사업

유 형	공 모 사 업			문 화 사 업	소 비 자 교 육 사 업
	농업·농촌체험사업	농업·농촌알리기사업	농업·농촌지키기사업		
사 업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생산현장체험·농촌문화 체험, 일손돕기</li> <li>◦친환경 농업현장 체험 및 일손돕기</li> <li>◦숯가꾸기 및 녹색산촌 체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기농 종합체험 도농 축제 한마당</li> <li>◦박과채소 우수성 홍보 및 축제 한마당</li> <li>◦학교급식 영양사와 학부모의 친환경농산물 생산현장 체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농산물을 이용한 사계절 떡과 차 체험</li> <li>◦소비자-생산자 일손땀기 사업</li> <li>◦사랑의 손잡기 김장 대축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 청소년을 위한 뮤지컬 순회공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엄마와 함께하는 어린이 농촌 체험교육</li> </ul>
사업량	26개 단체(924백만원)	8개 단체(260백만원)	7개 단체(316백만원)	12개지역(280백만원)	8개단체(220백만원)

(여성정책과 행정사무관 이상목)

## 2. 농림사업 투융자 평가 및 효율성 제고

### 가.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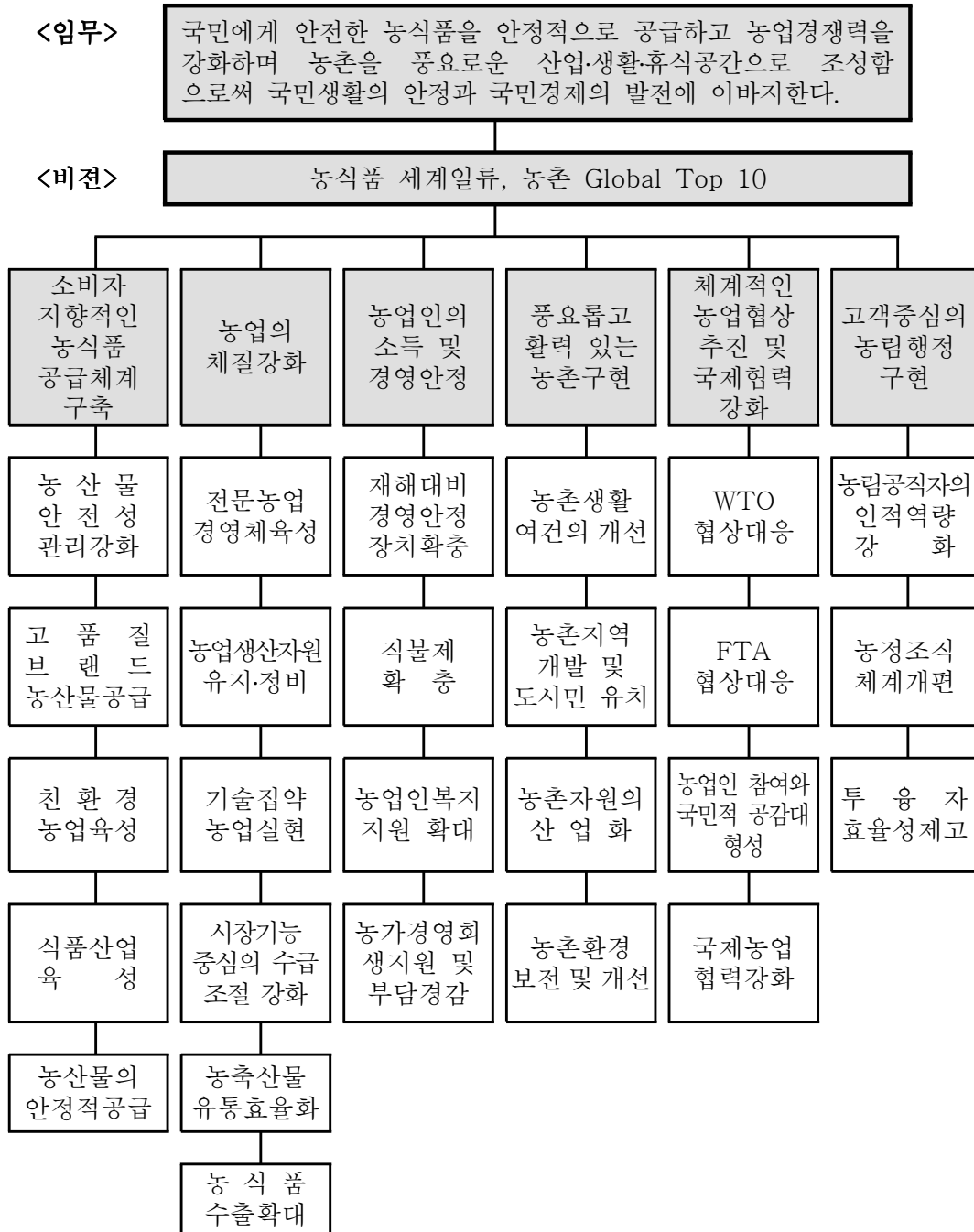
정부는 2006년 3월, 기존 정부업무평가를 체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자율적 평가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각 중앙행정기관의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의 수립·시행·평가·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제정하여 제5조 및 6조에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2007년부터 의무화하고 국회상임위에 보고를 명문화 하였다.

“성과관리 전략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5년) 계획으로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등을 설정하고 다른 법령에 의한 중·장기 계획 및 재정운영 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소 3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해야 한다.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동 시행계획에는 당해연도의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의 과거 3년간 성과결과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 (1) 성과관리전략계획 수립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림부의 임무(Mission)와 비전(Vision)을 “국민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며 농촌을 풍요로운 산업·생활·휴식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와 “농식품 세계 일류, 농촌 Global Top 10”으로 각각 정하고 동 임무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6개와 성과목표 26개로 하는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1월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였다.

<그림 3-1-1> 성과관리 전략계획 체계도(2007~2011)



## (2)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성과관리시행계획은 성과관리전략계획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임무·비전·전략목표는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성과목표는 27개로 전략계획(26개)에 비해 1개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전략계획의 주요 성과목표에서 “농업인 참여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제외하고 2007년도 중점과제인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조정 및 맞춤형 농정추진체계 구축을 포괄하는 “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정 지원체계 구축”과 “가축질병 및 동식물 검역 강화” 성과목표를 추가하였기 때문이다.

성과목표내 관리과제는 201개로 주요정책과제 89, 재정성과 83, R&D 3, 정보화 17, 인사 6, 조직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부터는 관리과제를 기준으로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편성시 제출토록 되어 있는 국가재정법의 ‘성과계획서’를 성과관리시행계획으로 같음하기 위해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시기를 매년 상반기로 변경하여 2008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안)은 2007년 6월 29일 까지 수립하여 제출하였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검토(2007년 7월~8월)를 거쳐 현재 보완작업 중에 있으며 국회의결 예산을 반영한 시행계획 최종안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 나. 농림사업 성과평가 추진

### (1) 2006년 성과평가 결과

2005년 주요 113개 재정사업 평가에 이어 2006년에도 115개의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2005년부터는 기획예산처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투융자관리계획서의 작성과 평가부서의 총괄평가는 기존 대로 유지하면서, 사업담당부서의 자체평가를 기획예산처가 채택하고 있는 재정사업자율평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평가의 통일성 및 사업담당부서의 평가업무 부담을 경감 시켰다는 것이다.

농림사업 성과평가는 사업담당부서가 사업별로 사업수행 당해년도에 평가지표와 목표달성 전략을 수립하고, 익년도에 사업담당부서의 자체평가와 평가부서의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 학계·생산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림업무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업별로 조직목표, 상위 정책과의 연계성,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상충성, 목표달성도, 프로세스(의견수렴, 현장점검, 정책홍보 등)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한다.

2006년도 농림사업성과평가는 예산편성방향을 증액 또는 현수준 유지, 현수준유지, 현수준유지 또는 감액, 감액, 통합·폐지·사업종료 등으로 구분 제시하고, 제시된 예산편성방향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다. 또한 사업별로 제시된 제도개선 사항은 법령정비, 사업지침의 수정 등을 통해 개선하였으며 일부는 검토 중에 있다.

평가결과를 요약하면 i)과원폐업지원사업,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 등 40개 사업은 예산을 증액 또는 현수준 유지, ii)농작물 재해보험, 농업관측, 영농규모화사업 등 59개 사업은 현수준 유지, iii)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 양봉산업, 농지기반조성(대구획경지정리) 등 9개 사업은 현수준유지 또는 감액, iv)수매지원사업,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농축산경영자금융자 3개 사업은 감액, v)오염농경지 특별관리,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 등 4개 사업은 감액 또는 통합·폐지·사업종료를 제시하였다.

<표 3-1-3> 2006년도 농림사업 성과평가 결과

(단위 : 개)

예산편성 평가의견	2005년 사업	2006년 사업	2006-2005 (%포인트)
계	96(100%)	115(100%)	0
증액 또는 현수준 유지	27(28%)	40(34%)	6
현수준 유지	32(33%)	59(51%)	18
현수준유지 또는 감액	21(22%)	9(8%)	△14
감액	11(11%)	3(3%)	△8
통합·폐지·사업종료	5(6%)	4(4%)	△2



농림부는 앞으로도 농림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선택과 집중”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선진국의 사례분석, 외부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사업평가제도를 지속 개선하여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2) 2007년 농림사업 성과평가 계획

2004년, 2005년, 2006년에 이어 2007년 농림사업 성과평가도 계획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과정을 이행 중에 있다.

2006년 농림사업 성과평가는 115개 주요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평가 체계의 확립 및 평가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아직도 일부사업의 경우 투입 또는 산출지표를 평가 지표로 제시하고 목표치도 보수적으로 설정하여 평가의 질적인 면에서는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2007년도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성과지표에 대하여 계속 수정·보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중복으로 인한 농림사업의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분야, 농촌지역 개발분야, 브랜드육성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집중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가) 2007년도 성과평가 대상사업

평가 대상사업으로는 i) 경상적인 행정경비, 행사성사업비, 정부내지출, ii) 2007년 종료사업, 2008부터 통합되는 사업, iii) 정착에 다년도가 소요되는 신규사업 등을 제외한 평가의 실익이 있는 주요 재정사업 130여개(관서사업 포함)를 선정하였다.

#### (나) 평가방법 및 절차

각 사업부서는 소관사업의 평가지표·목표치·사업추진 프로세스 관리계획을 담은 투융자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한 다음 사업종료후 사업담당부서는 재정사업자율평가 체크리스트에 따른 자체평가결과를 평가전담부서에 제출(2008년 2월~3월)한다. 평가부서에서는 사업부서 자체평가와 집중평가

자료 등을 기초로 i) 예산편성방향 ii) 제도개선사항 iii) 개인 성과등급을 제시하는 총괄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농림업무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2008년 4월)한다.

(다) 평가방법

사업의 목표, 추진체계, 지원조건 등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예산편성방향은 i)증액 ii)현수준유지 iii)감액 iv)통합 v)중단의 다섯가지를 기본유형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혼합유형을 제시하여 전년 에 비해 예산편성 방향을 더욱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2005사업평가부터 도입된 개인 성과등급도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 별로 구분하여 제시할 계획이다.

(정책평가팀 사무관 김상경)

**다.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평가 시책**

2007년도 지자체 농정업무 평가는 그동안 평가과정이나 결과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반영하고 평가결과 활용 및 지자체추진 우수시책을 확산·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농정 여건 변화에 맞게 평가체계를 개선·보완하였다.

개선·보완된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로 지자체의 농업분야 투자재원 관심도(임의지방비 증가율, 균특예산 확보율) 등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고 평가 결과 종합우수도만 아니라 분야별(4개) 평가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둘째로 매년 주요 ‘농림사업추진상황’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지자체 예산배분(사업 물량 배정시) 등에 활용토록 하고,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가보조사업의 예산집행현황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토록 하였으며, 차별화시책 등 지자체 추진 우수시책은 다른 지자체에 확산·전파하여 벤치마킹을 유도하도록 개선하였다. 세 번째로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간 배점을 조정하였고 지표 등의 보완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정평가 항목과 지표, 기준 등을 지방농정 여건 변화에 맞게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평가팀 행정사무관 이득섭)

### 3. 농림행정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 가. 농림행정 제도개선

농업인, 소비자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농림분야 각종 규제와 민원 또는 부조리 유발 소지가 있는 농림행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고질 반복 집단민원 및 잠재적 민원이 내재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 다양한 제도개선 발굴 시스템의 운영과 현장농정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고객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향상되었던 점과 양 위주의 제도개선 등 다소 미비하였던 점을 반영하여 금년에도 ① 농정현장체험 학습, 과의 날, 현장농정상담역 제도 운영 등 현장밀착 농정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② 법령·훈령·예규 등 관련규정, 행정지침 등에 내재된 제도개선 과제의 자체발굴을 확대하며 ③ 민원만족도 및 청렴도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업무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④ 농업인·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제도개선협의회와 정책고객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현장적용에 문제가 있는 정책(제도)을 발굴하여 고객관점에서 농업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농업정책 리모델링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정책고객의 요구(Needs)를 반영한 농림정책 품질제고를 농림제도개선의 목표로 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원해소대책회의 운영과 민관합동 농림제도개선협의회 개최, 제도개선 발굴 모니터단과 현장농정상담역(1,253명)을 참여패널단으로 운영하는 등 농림제도개선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농림부 홈페이지와 참여마당 신문고 등 온라인을 통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며, 현장밀착 농정을 통해 사각지대/소외계층의 잠재적 민원을 발굴하고자 2~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2~3명의 '농정상담역' 농업인을 지정 운영하

고, ‘농정현장체험학습(과장급 이하 전직원 대상)’ 및 ‘과의 날’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민원내용중 제도개선사항(총무과)과 자체 감사결과(감사관실)를 대상으로도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농림제도 발굴체제의 강화와 현장밀착형 농림제도 발굴로 상반기 중에 제도개선과제 82건을 검토하였으며, 그 중 35건에 대해서는 개선완료 및 추진중에 있고, 21건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정하였다.

금년 하반기에는 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준 면적조정(1,000㎡이상), ② 여성농업인의 실질적 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확대 지원, ③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정부지원 유기질비료(퇴비) 공급체계 개선(농협 → 지자체) 등 국민생활 불편을 직접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위주로 집중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서비스 만족도(전년도 65.4점) 조사 및 자체 주요정책 고객만족도(전년 58.9점) 조사 등을 실시하여 농림제도개선의 추진성과가 농업인 등의 고객만족으로 연계되는지를 자체평가하는 등 농림행정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농림정책의 품질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혁신인사기획관실 농업사무관 김철순)

#### 나. 농림행정 규제완화

2007년도 현재 농림부 소관 규제는 268개이다. 2007년도 규제정비방향은 경쟁촉진에 저해되거나 사업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의 정비하고,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자의적인 해석이 우려되는 조문을 명확히 하며, 지방분권화 촉진을 위하여 지방이양사무를 발굴·이양을 통한 분권화 촉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규제정비 과제발굴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지·축산위생·유통분야 등의 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아울러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한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안정성 강화 및 품질관리 향상 등을 원하는 소비자의 목소리를 함께 아우를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도에는 규제정비 대상과제로 51건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이를 정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선정 검토 중에 있는 정비대상과제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경제적 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 17건, 사회적 불편을 주는 규제 11건, 행정적 규제 5건, 그밖에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규제정비가 18건이다.

정비대상과제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식물을 수입할 경우 모든 병해충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수입을 금지해오던 것을 국제식물협약 등에서 과학적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거나, 이미 국내에서 경제적인 피해가 미미하다고 인정된 병해충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식품 제조·가공업업을 하는 자가 축산물 가공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 식품위생법령과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시설기준을 각각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2개의 법령을 일치시키는 한편, 친환경 농산물인증제도 및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도와 중복되고 있는 농산물 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선택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년도 규제정비과제는 정비대상과제를 정부입법계획에 모두 반영하여 사전에 정해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자체규제정비심의위원회에 정비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서 정비내용의 객관성 및 충실도를 강화하고, 입법지연 등으로 정비가 늦어질 경우에는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등과 협조하여 의원입법으로 대체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등 정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법무팀 서기관 황인용)

#### 4. 농림조직 및 직제개편 추진

농림부의 비전, 미션 및 전략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피해보전 등 농업분야 보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의 인력을 보강하고, 그 동안의 업무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일부 실·국과 소속기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변경·조정하는 한편, 미국산 쇠고기 등 농축산물 수입증가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농업·농촌·식품산업 등 핵심기능이 부각되도록 부 명칭 변경 검토

둘째, 농정변화에 대응한 실·국 명칭변경 및 편제조정

셋째, 실·국별 기능·정원 조정을 통하여 식품산업, 소득작목 개발 등 신성장아이템 분야 기능 강화, 직불제, 재해보험, 부담경감 등 소득안정 지원기능 강화 및 일원화, 학자금 지원, 도우미 지원 등 복지 관련 업무 일원화, FTA, DDA 협상 본격화에 대비한 대책 수립기능 보강, 성과관리, 평가, 정부혁신 등 지원기능 조정 등

넷째, 한미 FTA 협상 체결에 따른 농업보완대책을 위하여 과 신설 및 인력증원

다섯째,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증원, 국경검역 강화를 위한 인력증원, 정부 보급종 생산을 위한 전담 조직신설 및 인력증원

(5)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2008년도 농림부 소요정원 협의  
시설장비도입, 법 제·개정, 지시, 대책, 협약, 주요정책 등 필요분야를 중심으로 2008년도 농림부 소요정원을 작성,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다.

- 본부 : 법령 제개정 분야(새만금사업관리단, 기획팀 등 신설, 친환경축산정책, 바이오산업 실무인력 등), 지시, 대책 등 분야(국제농업국 조직 확대, 한우 강화대책 등 기구 신설 및 실무인력)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법령 제개정 분야(맞춤형농정팀, 농업경영체 등록제, 우수농산물·이력추적관리, 친환경업무 인증업무관리, 유전자

변형생물체 관리 기구 신설 및 인력증원), 주요정책 분야(품질안전부, 원산지정보팀 등 기구 신설 및 인력증원)

- 농업연수원 : 행정 및 청사방호 인력, 교육과정개발 전문인력 등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시설장비 도입 분야(인천공항CIQ, 무안국제공항, 탐지견 인력), 법령 제개정 분야(실험동물과, 축산물위해기준과, 축산물 위생관리 인력 증원 등), 주요정책 분야(중부지원 신설, 조류 인플루엔자과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 등)
- 국립식물검역소 : 시설장비 도입 분야(우편식물검역과 신설 및 실무인력, 도라산·부산신항·무안국제공항출장소 신설, 인천공항CIQ 검역 인력 등), 법령 제개정 분야(LMO 국경검역 인력증원, 대 대만 수출검역 지원 인력증원) 등
- 국립 종자관리소 : 시설장비 도입 분야(강원지소 신설에 따른 보급종 생산·공급인력, 품종보호 제도운영 인력 등)

(혁신인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규역)

## 5.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활동

2007년도는 고객중심의 협치농정 실현 등 농업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강화를 위해 “신뢰받는 농어정, 함께 열어나가는 희망 농어촌”을 비전으로 「개방화시대에 농업·농촌에 희망을 주는 공감대 형성」, 「DDA/FTA 협상 관련 사회적 갈등 완화, 협상전략 연구」, 「농정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정 조직의 혁신방안 수립」, 「농업인단체와 정부간, 부처간 등 정책 추진과정의 이해관계 조정」등 4개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개방화시대에 농업·농촌에 희망을 주는 공감대 형성은 농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업경제학회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외국사례·농정성과 등을 심층 연구·분석하여 한국 농업·농촌 비전 설정을 위한 농업·농촌 뉴비전 수립 연구를 추진하고 우리 고유의 우

수한 음식문화와 식사예절의 계승발전, 건전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식생활 교육추진법 제정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둘째, DDA/FTA 협상 관련 사회적 갈등 완화, 협상전략 연구 및 지원활동 전개는 한·미 FTA 등 현안 중심의 농업통상협의회 운영 활성화, 농산물 관세체제 개편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자생력 확보를 위한 수산조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셋째, FTA확대 등 새로운 농정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농정 담당주체인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농정 조직의 혁신방안은 농업·농촌기본법 개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농정조직 정비, 농업인 등 정책고객중심의 협치 농정시스템을 마련하여 농정에 대한 참여도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정에 대한 만족도 제고, 금년내에 농정추진체계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농정추진체계혁신협의회 및 소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넷째 농업인단체와 정부간, 부처간 등 정책 추진과정의 이해관계 조정은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정책의 55개 세부추진과제 및 모델마을·은퇴자마을의 추진실적 점검·평가, 시장 개방화에 대비한 농협 활성화 방안 마련, 수산업 개방 확대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수산기본법 제정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2007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진행중이고 현재 진행 중인 과제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존속기간의 연장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송남근)



## 제 2 장 2007년도 주요농정 시책

### 제1절 쌀산업 구조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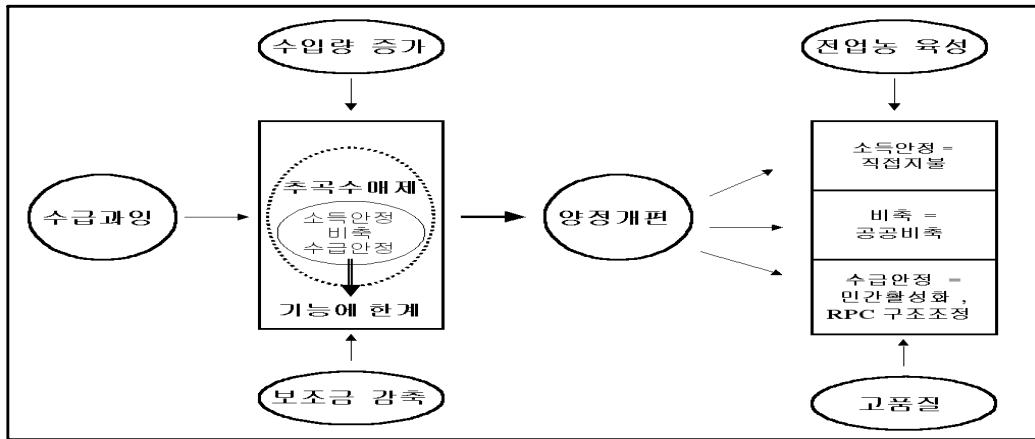
#### 1. 새로운 양정제도의 정착

국내생산량의 30% 수준에 달했던 정부수매량이 1995년 WTO체제출범이후 지속적인 수매보조금 감축(매년 750억원)으로 생산량의 15%수준까지 줄어들어 추곡수매제 본래의 소득지지기능과 물량흡수기능이 축소되었다. 향후 DDA협상이후 추가적인 보조금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수매제도 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오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양정제도를 개편하였으며 변화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중에 있다.

(식량정책과 행정사무관 박선우)

#### <양정제도 개편>

- ◇ 쌀농가의 소득안정, 식량안보목적의 비축, 수급조절 기능을 추곡수매제도가 담당해왔으나,
- ◇ 앞으로는
  - ① 소득보전방안을 통한 직접지불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 ② 식량안보목적의 비축은 공공비축제로,
  - ③ 수급조절은 민간 수급조절기능 활성화로 달성
- ◇ 전업농 규모화와 고품질화로 쌀산업 경쟁력을 확보



### 가. 공공비축제

2007년도에는 공공비축 매입물량 축소(2006년 504천톤 → 2007년 432천톤)를 감안하여 산물벼 매입물량을 축소하였으며,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톨백 매입사업을 시범 실시(전국 8개소)하고, 출하버 샘플검사를 도입, 검사 대기시간을 감축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공공비축제 도입과 함께 수확기 홍수 출하 물량 흡수를 위해 산물벼 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는 등 산지RPC를 중심으로 민간유통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품질 좋은 쌀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생산·유통측면에서도 시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품질고급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식량정책과 행정사무관 한성권)

### 나.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정부는 쌀값 하락시에도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80kg 가마당 목표가격을 170,083원으로 설정하고 3년마다 변경하되, 변경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고정직불금은 쌀값 하락에 관계없이 ha당 평균 70만원(80kg 가마당 11,475원)을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

지 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2007년 10월에 고정직불금(진흥지역안 746천원, 진흥지역밖 597천원)을, 2008년 3월에는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정책과 사무관 하종수)

## 2. 쌀 전업농 육성

쌀전업농 육성사업은 한국농업의 근본문제중의 하나인 규모의 영세성을 탈피하고, 쌀산업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UR 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1995년부터 본격 추진되었다. 본 사업은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 기본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책임질 수 있는 규모화·전문화된 효율적 경영체를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의 사업추진 결과 1995년에는 14천호의 쌀 전업농이 선정된 바 있으나 2006년말 현재 80.3천호로 늘어났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영농규모화사업의 농지매매사업, 농지임대차사업, 교환분합사업을 통해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농지 집단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농지매매·임대차 사업은 농업 기반공사가 비농업인, 고령농가, 은퇴농가의 농지를 매입·임차하여 논의하고 경영규모를 확대하려는 쌀 전업농에게 매도·임대하는 사업이다. 농지매매사업을 통해 농지를 지원받은 농가는 연리 2.0%(2006년부터 적용)로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5년까지 균등 분할 등의 조건으로 농지매입대금을 상환하고, 임대차 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차한 농가는 계약기간(5년이상)동안 무이자로 매년 임차료를 상환토록 하고 있다.

영농규모화사업이 본격 추진된 1995년 이후 2006년까지 3조 9천억원의 투·융자를 통해 50.7천호의 쌀 전업농에게 108천ha(매매 37천ha, 임대 70천ha, 교환분합 1천ha) 논을 유동화 하였다. 그 결과, 지원받은 쌀 전업농의 논 경영규모가 지원 전 호당 2.3ha에서 2006년에는 4.6ha로 2.3ha가 증가하였으며, 이들 쌀 전업농이 담당하는 경영면적도 1995년에는 전국 벼

재배면적의 3%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도에는 32%로 확대되었으며, 이들의 76.7%가 40~50대의 청·장년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이 쌀 전업농들은 보유한 농기계를 활용하여 인근 지역의 소규모 농가의 농작업을 대부분 대행하고 있는 등 지역농업을 실질적으로 유지·지탱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경영체가 다수 출현하여 시장 지향적인 경영마인드를 갖고 우리나라 쌀생산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쌀시장 개방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여 우리 쌀농업의 체질 강화와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해 「쌀 전업농 육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해오고 있다. 본 대책의 목표 및 비전은 2013년까지 지대별 여건 등을 감안, 호당 경영규모 6ha 수준의 쌀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여 이들이 2013년 예상 벼 재배면적인 83만ha의 절반 수준을 경영토록 하고,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과 대등한 소득수준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정책내용은 ① 쌀 전업농의 규모화, 정예화로 쌀산업 핵심주체로 육성, ② 쌀 전업농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 ③ 소득 및 경영안정장치 마련으로 경영내실화, ④ 지역 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에는 쌀 전업농 육성사업을 농지규모 확대를 위한 물량지원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양정여건의 변화와 쌀 전업농의 역량강화 등에 대한 다양한 접근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맞추기 위하여 2007년에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한 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방식 등을 농림정책 리모델링위원회를 거쳐 개편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상농지는 논 중심에서 밭까지 확대하고, 농지매매사업 지원단가(논 30천원/3.3m<sup>2</sup>, 밭 35천원)에 포함된 10% 자부담을 폐지(인상효과 11%)하며, 농가당 매매지원 상한면적을 20ha에서 10ha로 축소하여 경쟁 가능한 지원 규모로 조정하였다. 또한 쌀 전업농 선정·관리를 시·군에서 사업시행기관인 한국농촌공사로 일원화하여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표 3-2-1> 쌀 전업농 육성 주요 추진실적(1995~2006년)

쌀전업농수(2006년)	호당 경영규모	지원논 면적 및 투융자액		
		면적(ha)		금액(억원)
▪ 80.3천호 - 3.0ha 이상 : 39천호	- 지원받은 쌀전업농 : 4.6ha - 전체 쌀전업농 : 4.2ha (2007년 4.4ha)	계	107,976	3조 9,330
		매 매	37,258	2조 4,710
		임대차	69,464	1조 4,012
		교환분합	1,254	608

(농산경영과 기술서기관 김기훈)

### 3. 쌀종합처리장(RPC) 경영혁신

정부는 양정제도 전환 및 수입쌀 소비자 시판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쌀 산업의 안정적인 기반 구축을 위하여 “RPC 경영개선 종합대책”을 2006년도에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가. RPC 경쟁체제 도입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및 지역기준에 충족하고 벼 매입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RPC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등 RPC 경쟁체제를 도입한 결과, 2007년도 말까지 농협 1개소, 민간 5개소가 신규 RPC로 인정되어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RPC 경영평가 결과 부진업체(F등급) 11개소는 미참여하여 자금지원이 중단되는 등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나.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RPC의 부족한 건조·저장시설을 지속 지원하여 수확기 물량흡수 및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2008~2013년까지 건조·저장시설 1,190개소를 추가 지원하여 유통량 대비 저장능력을 70%까지 확충하고 특히,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 기반 구축을 위해 저온저장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08년도 RPC 건조·저장시설 사업은 전체 110개소(통합 11, 증설 67, 저온창고 30, 방폐장 유치지역 2개소)에 국고 25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다.

RPC의 부족한 건조·저장시설 확충으로 야적문제가 해소되고 품질별 구분저장이 가능하여 고품질쌀 유통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 쌀 수탁판매사업 추진**

RPC가 수확기에 예상판매 가격의 일정비율을 선도금으로 농가에 지불하고 판매가 완료된 후에 정산해 주는 수탁판매제를 시범사업(2006~2007)으로 추진하였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수탁판매제를 희망하는 RPC와 농가를 대상으로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수탁판매 참여 RPC에게는 정부 재정에서 수탁선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탁판매제가 활성화되면, 농가는 수확기에 기존의 공공비축, RPC 산물 판매외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한편, RPC에서 판매가격으로 정산하게 되면 농가는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고품질쌀을 생산하게 되는 동기가 되고, RPC는 수확기 자금집중 부담과 가격하락 위험부담이 완화되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쌀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우리쌀의 품질경쟁력을 높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쌀 우수브랜드 육성사업”을 2007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3년까지 쌀 주산지 시·군을 위주로 규모화된 대표브랜드 100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7년도 사업대상 8개소를 선도적인 모델로 육성

하기 위해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쌀 브랜드육성정책, 벼 보급종 생산·공급 방안, 재배관리 및 수확 후관리기술, 브랜드쌀 마케팅 등 분야별 필수사항을 수록한 “쌀 브랜드육성” 메뉴얼을 제작·보급(1월 중순, 500부)하여 현장실무지침서로 활용토록 하였다.

둘째, 농진청·종자관리소·한식연 등 관계전문가로 “쌀 브랜드 육성 중앙지원팀”을 구성하여, 사업경영체의 사업계획을 지도(2~3월)하였으며,

셋째, “쌀 브랜드 육성대책” 각 도 순회교육(3.15~4.10) 및 “경영체 순회교육”(3.27~4.16)을 통해 지자체, 농업인, RPC 경영체 등의 브랜드 육성의식을 고취시키고 사업 추진상황을 지도·점검하였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위해 확보된 예산 72억원(브랜드경영체의 시설현대화 지원 64억원, 교육·홍보, 컨설팅 비용 8억원)을 지원하여 시·군 대표브랜드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소득관리과 농업사무관 장대수)

#### 4.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2007년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 대책의 기본 목표는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와 소비자 신뢰 확립을 통한 “맛있고, 안전하고, 잘 팔리는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 체계구축”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6가지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로 논토양의 지력증진을 위해서 화학비료 사용을 억제하고 토양 유기물의 함량을 증대시켜 토양을 개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화학비료 사용을 억제하고 유기질비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화학비료 차손보전을 폐지하였으며, 대신 유기질 비료에 대한 보조를 120만톤에서 2007년에는 150만톤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논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규산질 비료는 시용 편의 및 토양 개량효과 제고를 위하여 입상공급을 추진하여 2010년까지는 전량 입

상 공급할 계획이다.

둘째로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품질 좋은 쌀 품종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품종 육성방향은 외관이 우수하고 밥맛이 좋으며 가공특성이 우수한 품종으로 병해충 및 재해저항성이 강하여 소비(小肥)재배에도 수량이 떨어지지 않는 친환경 재배적성 품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숙기별 10개 품종을 2010년까지 개발 추진 중이다. 그중 운광벼, 고품벼, 삼광벼, 운광벼, 고품벼는 개발을 완료하고 금년도부터 일부 공급하였다. 이러한 일반적 고품질 품종 이외에도 가공용 및 기능성 쌀 품종도 폭넓게 개발하여 특성화된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셋째로 전체 벼 재배면적의 25%에 해당하는 면적에 과종할 수 있는 종자의 양을 기준으로 매년 정부 보급종을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07년 벼 종자 갱신율은 42%이며 이를 2008년까지 50%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선공장을 신설하고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넷째로 적기이앙, 적정 포기수 확보, 적정 물 관리, 질소질 비료 시용량 감축, 병해충 최소 방제, 적기 수확 등 6가지로 대표되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핵심 재배기술을 농가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로 농가와 RPC간의 계약재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RPC가 단순히 원하는 수준의 균일한 원료곡을 확보하기 위해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품종 및 재배법을 표준화하여 지도하는 등 고품질 쌀 생산의 적극적인 주체로 나서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여섯째로 우리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와 포장양곡 표시제 조기정착을 추진 중이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00명의 명예감시위원을 위촉하고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민간 감시기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포장 유통을 확대하고 우수 브랜드 쌀 평가 및 브랜드 통합을 유도하여 소비자



가 우수한 품질의 쌀을 기호에 맞추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농산경영과 농업사무관 성신상)

## 제2절 농업전문인력 양성

###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농촌인력의 급감과 농업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07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은 3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과, 45세미만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후계농에 대한 지원은 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하고 있고, 잠재농업인력확보를 통해 후계인력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2005년부터 실시한 3개 사업(농업인턴제·창업농후견인제·대학생창업연수)은 앞으로도 영농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다.

또한 종전까지는 후계농업인 선정 후 일년간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정금액을 2~3년내에 분할 대출을 받을 수가 있도록 3년자금대출제(후계농업인이 일차년도에 배정금액의 40%이상을 대출하면, 나머지 자금은 예산 범위내에서 3년안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를 시행하여 불필요한 대출과 자금확보를 위한 무리한 대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 후계농업인 지원사업이 1회성 지원후 농업종합자금 등 경쟁력 있는 농업인에게 유리한 자금외에는 마땅한 지원책이 없었으나, 2006년부터는 후계농업인 선정후 5년이 경과한 농업인중 평가를 거쳐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8천만원까지 지원하는 후계농업인 추가지원 사업을 도입하

였다.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1,500명이며, 금리 3%,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이 전업농·신지식농업인으로 조기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뿐만 아니라 교육과 컨설팅도 수요자 중심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는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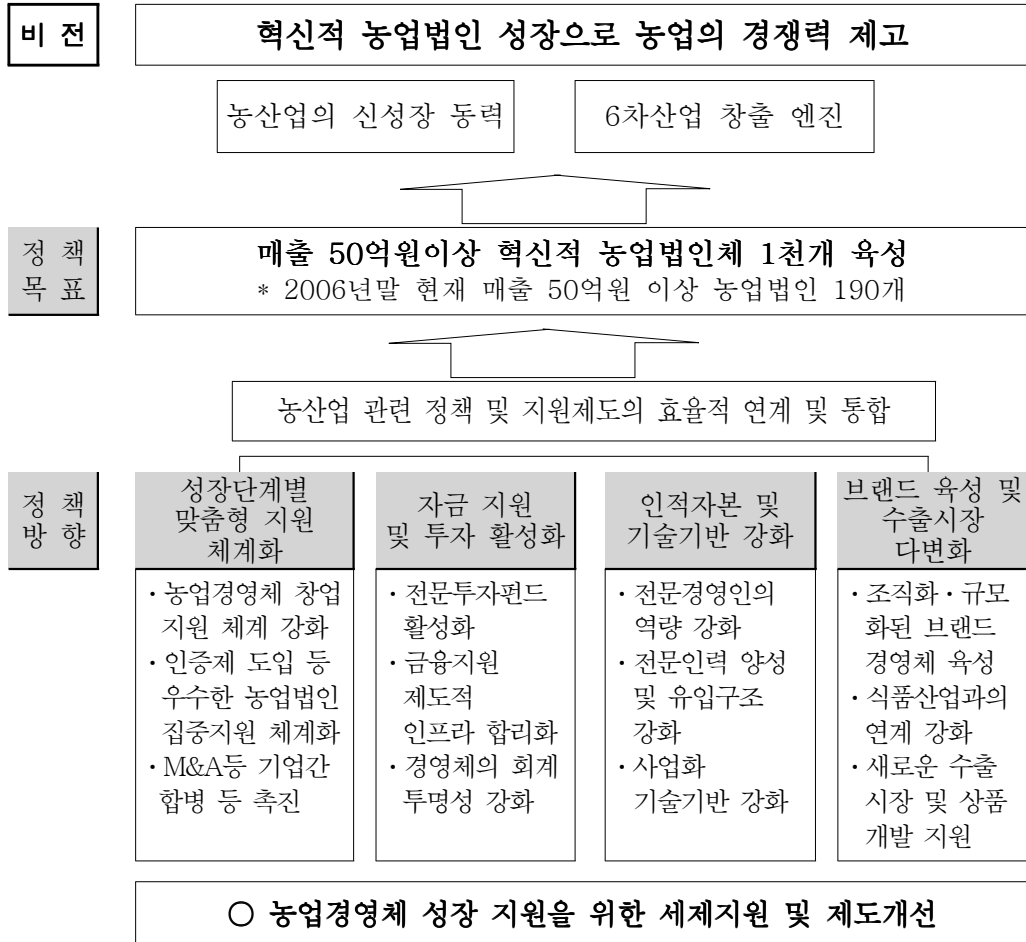
(경영인력과 농업서기관 양주필)

## 2. 제2차 농업경영체 활성화방안

2006년 5월 19일 관련업계, 농업인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법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존대책을 종합·점검 및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2차 농업경영체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다.

농업법인의 애로사항으로는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문제, 신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부족,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정보화 기반 부족 등이며, 과도한 표시·광고규제 등과 세금 부담도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가. 기본방향**



**나. 세부추진방안**

(1) 성장단계별 농업법인 양성 인프라 구축

농업법인이 세제혜택, 농지소유 허용 등 많은 정책 지원을 받고 있으나 실태 파악이 불가능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부는 건전한 농업법인의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기적인 농업법인 조사를 통해 유명무실한 법인을 정리하고 설립과정에서 농업인 확인과정 등을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 농업법인이 창업보육 혜택을 받는데 있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를 권역별로 확충(2008년 9개소 예정)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제도'에 농업분야 평가지표를 신설하여 선도 농업법인이 인증받고 정책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 (2) 농업법인 투자 유치 및 자금 지원 개선

농업법인의 담보문제 및 회계투명성의 부족, 소극적 대출 경향 등으로 인해 정책자금을 배정받아도 대출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정책자금 취급기관을 농협위주에서 시중은행으로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농업회계기준 정착 및 농업법인 신용평가 모형개발 등을 통하여 농업법인에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Inno-biz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15억원→ 30)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업법인에 농업전문투자펀드 등 투자방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1년까지 1천억원 규모(누적액 기준)로 농업전문투자펀드를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펀드운용 과정에서 바이오 등 고수익분야로 편중되거나 민간부문의 투자 참여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 펀드의 투자대상이 농식품·유통업분야에 더 많이 집중(60%)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 (3) 우수 인적 자원 양성 및 유입 촉진

농산물시장의 위험은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법인의 경영 역량은 부족하고 전문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기업 연수기관에 위탁하는 등 농가조직화·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다양한 교육방식을 도입하고, 우수 농업법인이 회계·경영·전산전문가를 채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며, 농업분야 외국 인력 활용도 확대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4) 농업법인의 경영·기술·정보화 기반 강화

농업법인 성장에 신기술 및 신상품 개발이 중요한 요소이나 상품 개발

등 사업화 기술 지원을 받는데 애로가 많고 농업법인에 대한 전문적인 경영컨설팅과 경영정보화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수요자 중심의 상시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여 투자유치기법, 특히 등 컨설팅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업법인의 연구개발 참여비율을 확대(2006 : 총사업비의 6% → 2010 : 20%)하며, 과제선정 평가위원단에 농업법인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이 협력하여 농업법인의 특허자문도 실시할 계획이다.

#### (5)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세제 지원

농업법인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체조직 기능 증진 효과 및 영양학적 유용성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허용하도록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의 배당소득 소득세 감면시한을 2006년 12월말에서 3년 연장하고, 2009년 12월까지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은 비과세하되 농업외 소득은 14% 분리 과세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2006년 12월말 도래되는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의 일몰시한을 2009년 12월말까지 연장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용 비닐을 부가세 환급대상에 포함하고 화훼 종자류(종구·종묘)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도록 하였다.

특히, 1차 대책 수립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 문제는 전문가 연구용역을 거쳐 농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

(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유미선)

### 3.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2006년도에 전격적인 제도개편 이후 2007년도도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먼저 농촌진흥청의 농가경영컨설팅

팅 사업과의 중복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에서 제기된 규모이하 농가 3농가 이상이 모여 컨설팅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지원하던 사업을 농촌진흥청이 실시하는 농가경영컨설팅에서 담당하도록 농업경영컨설팅지도에서는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컨설팅 지원단가를 시·군에서 자율 결정토록 함에 따라 정가로 계약되어 컨설팅 질이 낮아지는 사례가 있어 지원단가를 정액으로 설정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표준화 할 계획이며

- \* 개별농가 : 8백만원, 법인 : 10백만원,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APC·RPC : 30백만원 이내 농가 및 컨설팅업체의 책임의식 제고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바우처 쿠폰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 \* 시·군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쿠폰을 지급하면 농가는 컨설팅 서비스 희망업체를 선택하고 쿠폰과 자부담(계약금)을 업체에게 지급
- \* 업체는 농가로부터 받은 쿠폰(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시·군에 컨설팅 서비스 대가 요구

아울러, 사전 교육을 통한 컨설팅 효과를 높이고 농업정책 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시·군 자율적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제도를 사전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농가가 선정되도록 특히, 컨설팅을 농림부 정책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APC·RPC는 농림부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는 현행대로 시·도(시·군)에서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 ① 사전교육 이수농가 ② 경영회생 지원농가 ③ 2006 우수경영체 선정농가 ④ 퇴·액비 사용농가 ⑤ 지역농업클러스터 농가

또한, 컨설팅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진입이 용이하도록 2년마다 실시하던 컨설팅업체 인증을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김휴현)

#### 4. 농업벤처 육성

고부가가치 농업의 육성, 농업의 고도화·첨단화를 위해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특수농법, IT·BT 등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벤처농업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2006년까지 선정된 5개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는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2005, 2006년에 이어 충청, 강원,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공모하여 4개소를 추가 선정함으로써 권역별 확충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2007년 농안기금 예산으로 확보한 100억원 및 민자 유치를 통해 200억원 규모의 농업전문투자조합(4호 조합)을 결성, 농업분야벤처기업에 투자해 나갈 계획이며, 농업분야 우수아이템에 대해 발굴·시상하는 창업경연대회와 농업벤처투자박람회를 개최하여 농업벤처를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유미선)

#### 5. 농업교육체계 개편방안 추진

##### (1) 추진방향

맞춤형 농정과 연계하여 농업인 수준별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품목별 신기술 보급, 농가 경영능력 제고, 농업인 조직화·브랜드화 등 교육목표를 구체화하여 농업소득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의 품질 향상 및 돈 되는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전 수요조사를 통해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반영할 예정이다.

수요자 중심 농업교육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농업인·지자체의 교육운영 역량을 확충하고, 지역농업교육협력체의 교육기관 및 생산자단체 참여 확대 및 조정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업교육정보시스템 확충 및 교육모니터링 평가 강화를 통해 교육정보 수집부터 평가까지 농업인의 참여를 강화할 계획이다.

## (2) 주요 정책 내용

자조금이 조성된 23개 품목단체 및 비자조금 6개 단체에 대해 각 품목별 고품질 생산기술, 안전성관리, 가공 및 생산 마케팅, 농가조직화 등 기술경영 혁신역량 제고 교육을 실시한다. 품목특성 수요를 반영, 93개 과정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품목교육 추진 방식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자조금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운영된다.

농업교육 경험이 있는 11개 농업인단체에서 농업인이 개방 등 시장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35개 과정의 경영·리더쉽 교육을 운영한다. 농업인단체의 교육운영상 자율성·신축성을 확대하되, 투명한 자금집행이 가능하도록 집행기준을 개선한다.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고 예산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고 직불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집행 원칙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농업의 발전 목표와 특성에 맞는 농업경영 및 기술향상 교육,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농업조직화 교육을 2006년 6개도 4개 시·군에서 2007년에는 전국 9개도, 3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된다. 교육기관별 유사 중복 교육과정을 축소하고 수준별·분야별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 지역단위 통합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산재해 있는 자원과 인력, 시설 등을 통합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 희망농가에게 교육비의 일정액을 쿠폰으로 지급하여 농가가 직접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2007년 바우처의 단가를 높이고, 교육수준에 따라 자부담을 인정하여 친환경 인증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지난해 5천명에서 금년에는 9천명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농업인에 대한 해외연수제도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2006년 전문연수기관을 통해 기획부터 평가까지 역할 부여를 하였으나, 연수전문기관이 역량 부족 등을 문제로 제기하여, 선진농업기술 및 농촌개발 등 「테마별 기



획 연수방식」으로 개선하고, 전문연수기관도 2개에서 6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신규자원 확보를 위하여 농고, 농대에 지원도 확대 된다. 2006년 현장체험 교육 참여 농고 10개교를 2007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농업에 흥미를 유발하고 농업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농과대학 및 선도농가의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또한, 농고 위탁운영에 대비하여 농고 운영체계 개선 및 농고-농대연계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도 추진될 예정이다.

졸업 후 농업을 희망하는 농과대 2학년을 대상으로 3년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농과대영농정착교육과정을 2006년 3개 대학에서 2007년 7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농대 2학년부터 졸업시까지 부전공연계 등을 통해 체계적인 창업준비에 필요한 경영 및 기술교육, 현장실습 등을 지원한다.

귀농단계별 최적의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단계별 귀농 교육을 운영한다. 귀농정보 탐색 그룹인 귀농을 준비하는 도시민을 위하여 온라인 귀농 콘텐츠를 개발하고, 본격적 귀농 준비 그룹 대상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교육중 또는 수료후 영농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생의 각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e-tutor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자문 지원을 제공한다

농업교육기관의 모든 정보와 농업인의 교육이력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 및 기능 개선 사업을 확대 할 계획이다. 현재 농림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교육기관의 정보를 2007년에는 농진청, 농협 등 모든 농업교육기관의 정보를 통합·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2007년 교육과정을 교육 목표그룹 및 교육과정의 내용을 분석, 농업교육분류제를 시범 실시하고, 현장중심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강화하고 컨설팅도 병행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농림부는 2006년 122억원에서 2007년 130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하여 편성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김휴현)

## 6. 여성농업인 육성

### 가.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촉진

#### (1)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의 인정

여성농업인은 농가인구의 5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농업인의 영농기여도에 관한 설문에서도 농작업의 절반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견이 75.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지나 농산물 판매통장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기 어려우며 농업 종사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일반적으로 농업인이 아닌 무보수 가족 종사자로 간주되고 있을 뿐 실질적 농업 경영주로서의 지위는 불명확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을 농업경영의 파트너로서 기여도에 적합한 직업적 지위를 확보토록 함으로써 공동 경영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농업경영체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여성농업인의 농업종사사실 확인을 통해 농업인 증명이 가능토록 관련규정을 보완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 경영주와 경영에 참여하는 가족원간에 농업경영에 따른 역할과 의무, 보수 등을 문서로 명확히 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농업 경영 참여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고취시키는 ‘농가경영협약’ 제도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2007년에는 139농가를 대상으로 50백만원의 ‘농가경영협약’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2) 여성농업인의 정책결정과정 및 생산자 조직 참여확대

농림부 및 지방자치단체 농정관련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결정단계에서부터 여성농업인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 및 작목반 등의 농업생산자 조직에서도 여성농업인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경우는 여성 조합원 비율 28%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여성 조합원의 대의원 및 임원 진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작목반의 경우는 여성 친화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토록 지도해 나갈으로써 여성의 참여를 유인해 나가고자 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 활동 지원

중앙과 지방의 농정 파트너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여성농업인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영농기술 교육 및 리더십 향상 교육 등 단체 주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여성농업인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주관하는 연구활동 및 도농교류사업에 대하여도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업인의 날’ 및 여성농업인단체 행사를 계기로 우수 여성농업인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표 3-2-2> 2007 여성농업인단체 교육훈련비 지원계획

(단위 : 명, 백만원)

단 체 명	교육과정	교육인원	국고지원액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1	100	7
생활개선중앙회	1	228	13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8	630	47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8	805	247

나.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1)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및 리더십 향상

품목단체별로 시행하는 품목별 전문교육에 여성농업인이 2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지역발전의 혁신주체로서 소수정예 여성농업인 CEO를 육성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추진한 ‘여성농업인 혁신인재 비즈니스 아카데미’ 교육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2기 여성농업인 혁신인재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해외연수는 선도 여성농업인으로 체험단을 구성하고, 품목 또는 분야별로 여성농업인의 특성에 맞는 연수과정을 농업인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농업연수원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리더십 향상을 목표로 전문강사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과정의 심화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의 수료생을 대상으로 기획력 및 리더십의 재학습을 통해 관련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 (2) 후계 여성농업인력 육성기반 확충

정부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예농업 인력육성 종합대책(2005년 1월)을 마련하고, 20만호의 정예인력 육성방안을 구체화 한 바 있으며,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도 농업구조의 선진화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주요 인력으로 육성하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펼 계획이다.

우선 후계농 지원사업, 농업인턴제, 창업농 후견인제, 대학생 창업연수제 등의 후계인력 육성사업 시행 시 20% 범위 내에서 여성농업인을 우선 선정토록 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여성농업인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쌀 전업농 선정 시에도 일정요건을 갖춘 여성농업인에게 부여한 우선순위를 상향하는 방안(11위 → 3위)을 검토할 것이며, 부부가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 신청 시 주 사업 품목이 다를 경우 각각 지원 가능토록 사업시행 지침을 개선하고, 부부창업농·부부후계농 우선 선발 및 우대지원제도에 대하여도 검토할 계획이다.

### (3) 여성농업인 노동생산성 향상과 노동부담의 완화

최근 영농형태가 벼농사 위주에서 원예·화훼 등 밭작물의 비중이 커지면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참여도가 점차 증가되고 있으나, 현재 보급되고 있는 농기계는 대부분 남성의 체형에 맞춰 개발되어 여성이 운전·조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여성농업인의 참여도가 높은 농작업에 대한 기계장치 개발을 강화하고, 여성농업인이 취급하기 쉬운 작고 가벼운 농기계를 개발함

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을 경감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 생산지원 사업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을 위한 현장 수요조사를 연구용역으로 실시하여 여성농업인에게 활용도가 높은 농기계의 개발 및 보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4) 농촌개발 리더로서의 여성농업인 전문화

농촌지역개발 및 농촌관광 분야는 여성의 참여 없이는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농촌지역개발 리더 교육과정에 여성인력 참가 희망자를 우선 선발하고 농업연수원에 '농촌 지역개발 여성리더' 과정을 운영하여 여성농촌체험교사를 양성하여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 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 (1) 출산농가 도우미제도 확대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제도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을 방지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산모의 모성보호를 위해 2000년 처음으로 도입한 생산적인 복지제도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결정으로 2005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이양되었지만 해당 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단가 현실화 및 지원기간 연장 등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2)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확충 및 내실화 유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2005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대하여도 해당 지역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내용 측면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하여 내실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3) 여성농업인의 육아부담 경감 추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촌의 고령화·과소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촌거주 유도 및 지역사회 활력유지를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자격(조건)확인 후 농업인 계좌에 직접 지급하는 일종의 직불형태의 지원사업이다.

2007년도에는 지원대상에 만 6세 취학유예아동 및 준농어촌지역 거주 농업인 자녀도 신규로 포함하여 지원하게 된다. 지방비를 포함하여 536억원의 예산으로 아동별로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70%(5세 100%) 수준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어촌지역에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06년부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를 둔 농업인에게도 육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농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농지소유 5ha 미만 농가의 보육시설 등 미이용 아동에 대하여 2007년에는 법정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정부보육료 지원액의 35%(5세 50%) 수준을 지원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지원액을 인상하여 농업인의 육아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나가고자 한다.

그 밖에 농어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 등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라. 여성농업인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1) 여성농업인정책 2007년 시행계획 수립

여성농업인육성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에 2006년도에 수립한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여성농업인정책 2007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중에 있다.

'여성농업인정책 2007년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에 따른 첫 시행년도인 2006년도의 추진계획을 총괄적으로 평가하였고 2007년 여성농업인정책의 로드맵을 담아 추진하고 있다.

### (2)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실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정책의 수립·시행과정에서 여성의 권익과 사회 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는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2004년 농업인력육성정책, 2005년 농업종합자금지원제도에 대하여 평가를 완료한데 이어 2006년부터는 모든 농림사업을 잠정적인 평가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주요 관심영역, 정책의 사회적 파급효과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2006년은 농업정보서비스 지원사업을 포함한 13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였고, 2007년에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포함한 5개의 사업을 자체평가 사업으로 지정하여 평가할 계획이고 농기계 생산지원사업을 자체 심층평가로 선정하여 연구용역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의 평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해당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농림사업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3) 여성농업인 정책과제 연구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성인지적 농업정책을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성농업인 정책 연구기반을 확충코자 여성농업인 정책과제 연구사업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농기계 지원사업의 성별영향평가와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보급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여성정책과 사무관 신우식)

### 마.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도입

농림어업종사자의 국제결혼 증가로<sup>1)</sup> 농촌 이주여성이 2006년말 기준 20천명 수준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30대 남자중 51.3%가 미혼인 것을 감안하면,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은 당분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촌 이주여성들은 결혼생활 중 한국문화 및 예절(24.3%), 친족관계(16.4%), 한국생활(12.5%), 자녀양육(11.8%)순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sup>2)</sup>

농촌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여성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2006 ~ 2010)'에 농촌 이주여성 지원계획을 포함하고, 2006년 7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농촌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우수 여성농업인력으로 육성을 위하여 단계별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1단계는 결혼 초기 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생활상담 등 초기 생활적응을 지원하고, 다음 단계로 초기 적응을 마친 이주여성에 대하여 영농컨설팅, 전문 영농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여 우수 여성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농촌 이주여성에게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이주여성 농가, 지자체 및 현지 민간교육 기관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수요를 조사하였다.

---

1) 연도별 농림어업종사자의 외국여성과의 혼인현황 (통계청, 혼인통계조사 결과)

: (2004) 농림어업종사자 결혼 6,629건 중 국제결혼 1,814건(27.4%)

: (2005) 8,027건 중 2,885건(35.9%), (2005) 8,596건 중 3,525건(35.9%)

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정착지원방안 연구(2006년 12월, 서울대학교 이순형 교수 외)



현장 방문결과 농촌의 이주여성은 교통 접근성, 농사일, 자녀양육 등의 형편으로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림부 연구용역 결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결과 농촌 이주여성의 43% 정도가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2007년 사업규모는 총 예산 2,597백만원(국비 1,923, 지방비 674)으로 전국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sup>4)</sup>

한편, 한국어 교육 등 초기 생활적응 교육을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농림부 여성정책과장을 단장으로 농림부와 여성가족부 관련 공무원 및 민간위원 등 5명으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농림부를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농업연수원 등 농업관련 기관 및 여성농업인단체 등과 '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2007년에 추진하는 주요 사업내용은 방문교육도우미를 통한 한국어 교육 및 생활상담과 소그룹으로 문화·예절교육, 영농교육, 정보화 교육 등을 지원한다. 방문교육도우미는 30개 시군에 10명씩 300명의 도우미가 1,80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교육과 생활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주여성가구에게 주3회 방문 또는 소그룹 교육을 5개월 동안 실시하며, 방문교육도우미에게는 1일 5만원(3가구 방문, 5시간 활동기준)의 수당을 지급한다.

방문교육도우미의 선발은 전국 30개 시군에서 공개모집하여, 민간심사위원들이 직접 해당 시군을 방문하여 면접을 거쳐 선발하였다. 방문교육도우미 공개모집 결과 330명(예비후보 30명 포함)모집에 1,194명이 응모하여 3.6: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경상남도는 44명 모집에 237명이 응모하

3) 2005 충청북도 실태조사결과 방문교육희망이 45%, 2006 농림부 연구용역결과 방문 및 소그룹 교육 희망이 42.3%로 나타남

4) 경기도(이천시,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강원도(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충청북도(영동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서산시, 논산시, 부여군, 당진군), 전라북도(정읍시, 완주군, 순창군, 고창군), 전라남도(광양시, 고흥군, 장흥군, 함평군), 경상북도(상주시, 문경시, 청도군, 봉화군), 경상남도(합안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여 5.4: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충남 부여군의 경우 11명 모집에 100명이 응모하여 9.1:1의 경쟁률로 지역사회에서 본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농림부는 농촌 이주여성의 한국어 방문교육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촌 생활을 소재로 하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 ‘우리 엄마의 한국어’를 한·베트남, 한·영, 한·중국어, 한·타갈로그어 등 4종으로 발간하여 보급하였다.(2007년 5월, 4천부)

또한, 농촌 이주여성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하여 선배 이주여성의 정착 사례를 모은 ‘특별한 며느리의 행복찾는 농촌살이’를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발간하여 보급하였다.(2007년 7월, 5천부)

방문교육도우미 지원사업 이외에도 농촌 이주여성의 가족으로 원만한 통합을 위하여 부부교실(320가구), 가족캠프(160가구)를 각 도 단위로 실시하고, 한국정착에 모범적인 가구를 선발하여 모국방문 항공료 등을 지원하고(11가구) 국내 선진지 견학(18가구)을 실시한다.

한편, 방문교육도우미를 통한 한국어 교육 등 농림부의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이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과 중복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sup>5)</sup>, 기획예산처의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 개편방안(2007년 7월)’에 따라 2008년 정부 예산안 편성단계에서 농림부의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이 여성가족부로 통합·조정되었다.

농림부는 한국어 방문교육이 여성가족부에 이관되어 실시되더라도 영농컨설팅, 농사일 지도 등 농촌 이주여성을 우수한 여성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은 농림부에서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008년부터 선도적인 여성농업인을 이주여성의 후견인으로 선발하여 농사일 함께하기, 영농기술 지도, 농촌 생활 안내 등을 지원하고, 다음 단계로 초보과정을 이수한 이주여성농업인을 정예화하기 위한 전문 영농교육 실시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정책과 행정사무관 이상목)

5)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실태조사 결과(2007년 3월)

## 제3절 소비자 지향의 고품질·안전농산물 공급

### 1. 농산물 안전성 제고

#### 가. 우수농산물관리(GAP)제도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조기 정착유도

선진적인 안전성 관리제도로 도입 추진 중인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의 조기정착을 위해 금년도에는 GAP참여농가를 10천명까지, GAP인증품 생산량을 과실·채소 생산량 대비 1.0%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GAP민간전문인증기관으로 25개 기관을 지정하고, 사후관리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 운영비로 3억원을 지원하며, 인증업무 전담요원 교육(300명)을 추진하고, GAP참여농가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토양·수질·잔류농약검사비로 9.8억원을 지원한다.

수확 후 농산물 처리를 위생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미비시설에 대한 시설보강사업비 지원(10개소, 8억원)을 하고, 상반기에 수확후 관리시설 222개소를 지정하였다.

쌀·사과·배 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1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된다.

농업인에게 GAP 및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새기술실용화 교육과정”에 GAP·이력추적관리제도를 필수교과목으로 편성하여 교육(435천명)을 실시하고, GAP참여 예정자를 대상으로 GAP전문교육을 10천명에게 실시한다.

GAP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인증품 판촉행사, 신문 등 언론매체, 지하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소비안전과 농업사무관 조동근)

#### 나.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로 부적합품 시장유통 방지

부적합품의 시장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지속·추진한다. 안전성 조사 건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68천건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 9개 지원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정밀분석실을 거점 지역 출장소까지 확대해 나가, 늘어나는 분석수요에 대비한다.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10개 출장소에 설치하였고 2007년에도 5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추진중에 있다.

안전성 조사 범위를 농산물 중 농약, 중금속 중심에서 병원성 미생물, 생산환경(토양·수질·자재)으로 확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한다. 2006년도에는 병원성미생물 100건, 생산환경 250건을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는 향후 기준설정 및 관리기준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비안전과 농업사무관 고경봉)

#### 다. 안전농산물 우대 및 농산물 표시 관리 강화

친환경인증 등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은 시장에서 가격 면에서 우대받도록 홍보를 대폭 확대하고 도매시장에서도 우대 분위기가 조성된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전국 250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실시간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분석하여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생산된 지역 또는 국가가 다른 동일품목의 원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표시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체계적인 단속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한 정기적인 공동단속을 2007년 6월 27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GMO표시대상 품목은 콩·콩나물·옥수수·감자등 4개 품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등을 포함)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GMO의 부정유통신고자 포상금제도(최고 200만원)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안전과 사무관 김일상)

#### **라.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소비자 정책참여 기회 확대**

소비자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채널로 장관자문기구인 농식품안전자문단을 운영하고 소비자가 직접 농산물 안전성 실태를 점검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식품안전 관련 법률, 모니터링실적, 리콜실적 등의 안전성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소비안전과 농업사무관 조동근)

## **2. 축산물 위생·안전성 관리 강화**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7년도에도 가축 사육단계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 위생·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육단계에서는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이 축산물에 잔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산농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육단계 HACCP 제도 적용을 위해 돼지에 이어 소와 닭에 적용할 사육단계 HACCP 적용 지침 및 모델을 개발하고 평가기준도 제정하여 사육단계 HACCP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축단계에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HACCP 적용 의무화에 따라 시·도간 교차점검 등을 통해 도축장의 HACCP 운용여부를 점검하여 그 운용이 미흡하거나 운용하지 않는 도축장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 단체가 주관하는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축장 운영자금의 차등지원을 실시하는 등

도축장의 HACCP 제도 정착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가공단계에서도 HACCP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 등에게 HACCP 적용 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잔류물질 검사는 식육을 위주로 검사하고 있는 것을 신장 등 내장과 근육으로 확대 적용하고 위반가능성이 높은 검사인 규제검사 비율을 증가시키는 등 잔류물질 검사를 한층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식육중 미생물검사는 도축장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나 유통단계에도 권장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함으로써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의 위생수준을 한단계 상승시켜 나갈 계획이다.

유통단계에서는 축산물 유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HACCP을 도입해 나가고 위생감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07년은 보관·운반·집유단계에 적용될 HACCP 지침을 제정하고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되, 과거에 위반한 이력이 있는 작업장, 어린이 기호 축산물, 위생관리 취약지역 등을 집중감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절기, 설·추석 등 성수기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위생감시를 실시하는 한편,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7,500건 이상 실시하여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막고자 할 것이다. 또한, 닭·오리고기의 유통과정중 재오염을 막고 수입산과 구별을 위해 포장유통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축산물위생과 수의사무관 이기중)

### 3.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유럽에 이어 일본, 미국의 광우병 발생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고조되었고, 소비자단체와 축산단체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사육농가의 영세성, 기록문화 미정착, 추가 인건비 등 관리비 증가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국민건강이 가장 중요하므로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의 지시에 따라 한우산업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 제도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이력정보를 DB화하여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며, 소비자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함은 물론, 둔갑판매 방지 등으로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확대와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하여 정부는 전문가 중심으로 T/F를 구성(2004년 1월)하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조사하여 벤치마킹하였다. 2004년 5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사업시행기관을 맡도록 하였다. 같은 해 7월 23개 브랜드를 시·도로부터 추천받아 그 중 9개 브랜드를 참여 브랜드로 선정하였고 30개 연계 사업장(도축장·가공장·판매장 각각 10개씩)을 지정하였다. 아울러 전산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www.mtrace.net)를 개설하고 10월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하였다.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행기관 운영비, 전산시스템 구축, 귀표, 라벨프린터, 바코드 리더기, DNA동일성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예산 : 2004년 14억원 → 2005년 4억원 → 2006년 10억원 → 2007년 42억원)하고, 참여업체 운영비 및 판매장 홍보용 터치스크린 등은 자부담으로 충당토록 하였다.

이러한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2005년 8월에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사육단계부터 도축·가공·판매단계까지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소 및 쇠고기 관련 위생·안전상 문제발생시 추적 및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고, 소비자와 유통업체의 제도 도입 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지정판매장과 판매량이 증가하였으며, 판매가격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이 높아진 점을 들 수 있다.

미흡한 면으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브랜드경영체가 제한적이어서 미참여업체를 중심으로 불만 표출이 적지 않으며, 우수 브랜드경영체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면 실시시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에 한계가 있었

다. 또한, 개체식별번호(귀표)에 의한 각종 정책사업이 연계되지 않아 자료의 중복 입력으로 인한 일선의 업무부담이 우려되고, 국내에 사육하고 있는 소의 유전자(DNA) 정보에 대한 DB가 구축되지 않고 검사방법이 표준화되지 않는 점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시범사업에 브랜드경영체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까지 참여케 하고, 한우중심에서 육우까지 참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축종을 다양화함으로써 시범사업 규모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일선에서의 중복입력을 방지토록 소 관련 정책사업간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소 귀표 탈락율 감소를 위해 한쪽 부착에서 양쪽 2조 부착으로 변경하고, 장래 확장성, 국제표준화 등을 고려 기존 9자리에서 12자리로 확대하였으며, 귀표의 규격, 도안, 재질 등은 ICAR(국제가축기록위원회) 규정을 고려하여 단일화 하는 등 소 귀표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2007년 10월 현재 1개도(경기도) 전체, 22개 브랜드, 25개 시·군이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78개 브랜드경영체·시·군에서 국내 한육우 총 사육두수(2007년 6월기준 218만두)의 35% 수준인 69만두가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 전산등록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 등 쇠고기 이력추적제 연계 사업장의 참여 규모도 2006년 138개(도축·가공·판매장)에서 2007년 10월 기준 235개로 대폭 확대하여 유통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원산지 확인 등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2007년은 2008년도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중요한 시기로서 사업규모 확대 및 사업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각종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지난 3년여 기간동안 실시한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반에 대한 정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8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본사업 시행을 위해 2007년 7~12월 기간중 정부, 축산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운영중이며, 동 TF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근거 법령 시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기관별 역할분담 및 사육·가공·판



매단계별 세부추진방안 마련, DB관리 등 전산운영체계와 사육단계 DNA검사 추진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하여 정보관리의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7년 말까지 이력제 DB를 농림부 Agrix로 통합·운영할 예정이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소 귀표 전산관리시스템과 DNA검사결과 DB관리 시스템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사육→도축→가공→판매단계별 순차 입력 및 검색에서 가공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매과정으로 정보가 입력되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쇠고기 이력추적제 정보입력 및 검색 프로그램을 실제 쇠고기 유통 상황에 맞추어 전산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는 등 사업추진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축산물위생과 서기관 이학주)

#### 4. 우수 축산물브랜드 육성추진

DDA협상과 FTA 등 개방확대에 대응하고 우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6년 2월 수립한 “축산물브랜드 장기발전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2013년까지 80개 내외의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집중 육성하고 브랜드 사육비중을 한우는 2006년 32%에서 2013년 50%까지, 돼지는 51%에서 70%까지 확대를 목표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브랜드 사업을 지원받은 73개 경영체를 대상으로 집중지원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에는 37개 경영체에 947억원을 지원하였고, 품질 고급화 및 균일화, 규모화, 마케팅 등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는데 사용되어 경영체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04~2006년 기 지원 경영체(73개)의 연간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경영체에게는 브랜드 경진대회 수상 경영체와 함께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을 추가로 지원(2007 : 200억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사양·경영·브랜드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한 민간 브랜드컨설팅 전문업체 7개소를 지정하고, 8개의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컨설팅을 위한 경쟁

입찰(5~6월)을 실시하여 생산·경영·재무와 마케팅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할 수 있도록 경영체별로 1억원(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을 지원하였다. 세 번째로는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시민의모임(소시모) 주관으로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을 추진하였다. 금년 4월부터 인증기준 마련, 신청, 서류심사, 현지실사 등을 실시하였고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48개 브랜드를 인증(12월 5일)하고 2007년 인증 브랜드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유통업체에서 소비자들이 추천하는 우수축산물 브랜드를 찾아 판매토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차별화와 함께 유통업체와의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네 번째로는 차별화된 “우수 축산물 브랜드전시회”를 8월 30일~9월 1일간 코엑스에서 개최하여 우수 브랜드의 판로 개척과 소비자 인식제고 등의 다각적인 홍보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2007년도에는 전시회 입장을 유료화 하고 우수 브랜드 경영체 위주로 참가를 제한함으로써 전시회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보다 쾌적하고 의미있는 행사로 추진하였다. 총 95개의 국내 우수 축산물 브랜드가 총집합한 전시회에는 경영체 부스별로 다양한 시식 및 이벤트 행사와 함께, 우리 축산물로 만든 요리 솜씨대회, 우리 축산물 잘 고르고 잘 먹는법 소개, 우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정보 체험 등을 실시하고, 브랜드 축산물 할인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먹을거리·즐길거리·배울거리 등을 제공하여 5만여명 이상의 많은 관람객이 참여함으로써 소비자와 만남의 장, 판매촉진, 생산자의 축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12월 6일~12월 7일에는 정부지원 대상 브랜드경영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기발전을 위한 마케팅행사, 우수업체 사업 벤치마킹 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하였다. 브랜드 육성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브랜드 사업을 통하여 브랜드 주체가 위생·안전성·품질·방역·환경 등 축산현안에 대해 모든 것을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위생과 서기관 신대식)

## 5. 가축개량 추진

우리 축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FTA 체결과 DDA 타결 후 시장개방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축산업은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식품을 생산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내 사육 환경에 적합한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가축의 생산능력이 높아 질때, 사육 마리수와 분뇨 발생량이 줄어 환경 친화적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축개량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저비용·고효율의 가축개량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증장기 가축개량 목표를 보완하고 혈통등록과 능력검정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가축의 유전 평가 신뢰도를 높여 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 계획 교배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가. 한우개량

한우개량은 고급육을 선호하는 추세에 맞추어 육질 중심의 개량체계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인공수정용 보증씨수소 선발과정에서 수소 위주로만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암소 유전능력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왔으나 앞으로는 암소의 유전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단계 브랜드 발전대책과 연계하여 브랜드경영체 중심의 고능력 암소 보급 및 확보와 브랜드경영체에 맞는 보증종모우 공급체계가 구축 될 수 있도록 한우개량 사업을 보완할 계획이다.

### 나. 젓소개량

젓소개량은 산유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유우군 능력검정 참여율을 2010년까지 연차계획에 의하여 60%로 높여 나가되, 검정비용의 보조

율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종축산업발전대책(2007년 1월)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규모화된 우수 검정농가를 육종농가로 선정하여 암소와 수소의 동시 검정을 통해 유전형질이 우수한 보증씨소를 선발 보급할 계획이다.

#### 다. 돼지개량

효율적인 검정 및 가축방역을 위해 농후환원 종돈검정소(경기 이천)의 검정시설이 노후화되어 현대화시설로 신축(지원액 13억원, 완공일 2007년 6월) 하였다. 우량 종돈을 선발·이용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돼지개량 Network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돈 수출을 위해 국제 박람회 참가, 현지 세미나 개최 및 바이어 초청등 해외시장 개척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라. 닭 개량 등

종계는 대부분 외국의 대규모 종계회사로부터 수입하여 생산하므로 국산 종계 개발과 능력검정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닭의 경제능력검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양계농가에서 우량 종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며, 2008년부터 4년간 25억원을 지원하여 첨단시설의 닭 경제능력검정소를 신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종축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종돈, 종계, 종오리업을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종축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밖에 국내·외 축산 관련 기자재와 우수 종축의 비교 전시 등을 통해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2007년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대전 무역전시관에서 제5회 국제축산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축산정책과 사무관 서재호)



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2004년 1월부터 태국·베트남 및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현재까지 아시아·북미·아프리카, 유럽 등 52개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말과 2006년말에 발생이 있었으며, 발생원인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철새를 통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매년 유입 가능성이 높은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여 전국 방역기관별 상황실을 운영하였고, 중국·태국산 열처리 가금육 정밀검사, 공항·항만 휴대품 검색 및 여행객 소독, 해외 여행국 등에 대한 홍보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과거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집중관리대상 지역”에 대한 임상관찰 강화, 오리 혈청검사(20,000건) 및 철새 분변검사(3,280점)를 실시하는 등 특별방역을 추진하여 동 질병을 예방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수입 가금육 검사 및 공항·항만에 대한 검색·소독을 강화해 나가고, 집중관리지역의 닭·오리 임상관찰 및 철새·털새·오리에 대한 예찰을 확대 실시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주의보 발령 등 농가에 경각심을 고취하는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② 광우병 예방을 위하여 BSE 발생국(25)과 위험국(9) 등 34개국산 BSE 관련제품 수입금지와 함께 BSE 관련제품(HS code 680개)을 세관장 확인품목으로 지정하고 발생국가산 제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1996년부터 국내산 소에 대하여 BSE 검사를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BSE 검사물량을 증가시켰다. OIE에 우리나라의 BSE지위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 신청서작성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007년부터는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라 BSE 위험소별 점수제로 바꾸고 7년 이내에 300천점(2007년 43천점)을 달성할 계획이다.

<표 3-2-4>

**BSE 검사현황**

년도별	1996~2002	2003	2004	2005	2006
검사두수	5,324두	1,038	2,323	4,154	6,016

사료에도 2001년부터 반추가축에 육골분 사용을 금지하였고,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반추 동물사료와 비반추 동물사료의 생산라인을 분리하였으며 사료내 육골분 혼입여부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동물성사료 원료의 반추가축 사료사용금지 규정 이행실태 지속점검, 동물성사료 혼입여부검사 강화 및 제조라인이 1개인 사료공장의 라인구분을 위한 시설 개보수 지원(30개소, 개소당 30억원),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 도입(2005)으로 교차오염을 방지할 계획이다.

BSE발생에 대비하여 도축장에서 신경증상 소를 진단하고 BSE 검사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검사보조원 100명을 배치하였고(2005), 특정위험물질(SRM)처리를 목적으로 2007년까지 LPC 등 10개 도축장에 SRM 제거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③ 소 브루셀라병의 경우 2003년부터 감염농장 색출검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2006년까지 발생이 증가하였으나, 그동안 감염농장 색출검사 및 농가 예방노력 확립 등 다양한 방역대책을 추진한 결과 금년들어 브루셀라병 발생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등 방역추진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5> 연도별 발생동향

년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건수	110	172	711	2,590	4,498	1,726
	두수	845	1,088	5,383	17,690	25,454	9,055
젖소(건/두)		105/662	110/498	116/1,282	141/2,166	177/2,314	61/835
한우(건/두)		5/183	62/590	595/4,101	2,449/1,5524	4,321/23,140	1,665/8,220

④ 또한 정부는 밀집사육으로 인해 가축이 질병에 취약해지고 있다는 인식하에 건강한 가축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5년 말까지 가축사육업의

등록 완료, 친환경축산 직불제사업 활성화 등을 통하여 단위면적당 사육밀도를 완화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 가축방역에 취약하거나 밀집사육으로 환경부하가 큰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밀도 완화, 축사 신·증축 억제 의무부여 등을 특별관리 해 나갈 예정이다.

⑤ 동북아 등 가축방역 여건이 열악한 국가들과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경검역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위험국가(중국·몽골 등) 중심으로 병원체 유입경로 차단을 위하여 건초소독, 실험실 검사(64건)후 반입, 남은음식물 처리업체 주기적 점검(138개소, 월1회)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육류 신고·반입자제 등 교육·홍보를 실시, 발생지역 여행자를 대상으로 검역탐지견(19두)을 집중투입하고 신발소독(232개소 394개) 실시, 외국인 연수생(26천명) 및 해외 축산행사 참석자(322명)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검역탐지견 투입을 늘려 공·항만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고, 외국 방문시 축산농가 출입자제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며, 각국의 언론보도 내용을 수시로 검색, 신속하게 발생정보를 입수하여 복지부·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입위험분석 실시로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면서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악성가축질병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수입 위험분석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⑥ 최근 동·축산물 교역 증가 등으로 해외 악성 가축질병 유입 가능성이 증대되는 등 가축방역대책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나 현장 방역인력이 현격히 부족함에 따라 금년부터 공익수의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익수의사제도는 수의학 과정을 졸업한 수의사가 3년간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경우 병역의무를 대체해주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2006년 3월 24일) 및 하위법령



(2006년 8월 29일)이 제정되었으며, 금년도 123명의 공익수의사를 선발, 군사교육 및 직무교육 후 일선 방역기관에 배치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앞으로 매년 150명의 공익수의사를 배치하여 연간 450명의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가축방역과 수의서기관 김태웅)

## 7. 우유 수급안정 대책

소비자 기호 변화, 미국·EU 등 낙농 선진국과의 FTA 추진으로 인한 개방화의 가속화 등 대내외적인 우유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원유 생산·공급체제 구축, 원유 유통비용의 절감, 자급사료 기반 확충, 낙농경영의 체질 강화, 위생·안전성 확보 등 낙농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우유수급관리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골자는 시장 수요에 맞는 계획생산으로 전국적인 우유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인 전국쿼터관리제 시행, 전국적인 우유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관리기구(낙농위원회) 설치, 우유의 특성상 계절적 수급편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잉여원유에 대하여 가공원료유 지원방안 도입, 낙농진흥회 직결전환에 따른 유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비자 기호변화에 부응하는 우유가격산정체제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유수급관리제도 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유업체 등 각 이해주체가 서로 공감하고 동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책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나갈 것이다.

낙농산업의 안정 성장을 위해서는 우유 소비기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2006년도부터 의무화된 낙농자조금을 활용하여 우유 소비·홍보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와 함께 자조금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분석 및 대 농가 홍보를 강화하여 낙농자조금사업의 조기 정

작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우유 급식사업 대상과 급식인원 확대, 우유의 우수성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활용 등을 통해 우유소비 저변이 확대 될 것이다.

한편 생산자 자율에 의한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토록 하고, 집유장·유가공공장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등을 통해 원유의 품질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산원유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젖소 산유능력 검정 참여율 확대 등 젖소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경영과 행정사무관 이성주)

## 8. 친환경 농업 육성

환경보전 및 농업생산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농산물 안전을 중시하는 소비자 경향과 DDA, FTA 등 개방확대의 국제무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더욱 지원·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2006~2010년)」 및 「농업·농촌 종합대책(2004~2013년)」에 따라 2013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을 10%(저농약제외)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2007년: 7%(2006년 : 6.2%)수준으로 확대). 또한, 화학비료·합성농약 사용량을 1999~2003년 평균사용량 대비 40% 절감토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먼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군단위의 1,000ha규모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2007년에 6개소(양구, 옥천, 익산, 장흥, 성주, 산청)를 신규 지정하고 개소당 100억원(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을 지원하여 단지를 조성중에 있다. 마을단위의 10ha이상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2007년에 신규로 59개소를 조성(누계 879개소)하고, 2008년에는 69개소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토양의 지력증진과 화학비료·합성농약 절감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2007년에 547천톤(401억원)을 공급하고, 2008년부터는 공급주기를 현행 4년 1회 공급에서 3년 1회 공급으로 단축하는 한편 공급방식을 현행 일괄지급방식에서 농경지의 산성도를 반영한 농가신청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의 살포편의를 위해 단계적으로 입상(알갱이)화 공급율을 높여 2013년까지 100% 입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겨울철 유희농경지에 녹비작물(자운영, 호밀 등)을 재배하는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2007년에 140천ha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녹비작물 종자(호밀)의 국산보리 대체연구(2007~2009년, 농촌진흥청)를 통해 국산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2007년에 135만톤(472억원)을 공급하고, 2008년부터는 예산집행체제를 농협중앙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원예작물 천적방제」 지원사업은 2007년에 1,107ha (38억원)을 지원하고, 2008년부터는 대상작목을 수박과 참외로 확대하고(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오이, 메론, 포도 등 9개 작목대상), 대상면적을 2,000ha(45억원)로 확대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2007년에 43천ha에 대해 175억원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논밭의 지원단가를 통일하고 지급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혼란방지를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도를 간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3월에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2007년 3월 28일 시행)하여 전환기유기인증을 폐지하고 인증단계를 유기·무농약·저농약인증의 3단계로 간소화한데 이어, 2010년에는 저농약인증을 폐지하여 2단계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인증기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8년도에는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인증수수료를 시범적으로 지원(2008년도 예산안 5억원)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정책과 서기관 조백희)

## 제4절 선진국형 농산물 유통혁신

### 1. 마케팅지향형 산지유통 혁신

#### 가. 공동마케팅조직 등 산지유통 주체 육성

안정된 판로, 규모화된 출하조직, 전문경영인 책임경영 등 혁신요소를 고루 갖춘 기업형 공동마케팅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2005년 9개, 2006년 6개 조직에 2,184억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4개 신규조직을 포함하여 총 1,3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08년도 사업자는 2007년 11월중에 공모 후 접수, 평가, 심사과정을 거쳐 신규 5개조직을 포함하여 2005년도 선정 후 지원이 완료되는 9개조직의 3개년간의 사업성과(매출액, 영업이익률, 공동계산율)를 평가, 2008년 1~2월중에 2차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광역화·전문화를 유도하여 브랜드경영체로 육성하고 농가조직화, D/B구축, 생산지도(생산이력관리)부터 마케팅까지 일괄 관리하는 명실상부한 차세대 기업형 마케팅조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표 3-2-6> 공동마케팅조직 시범사업 조직

선정연도	합계	거점산지조직형(3)	사업연합형(7)	전문마케팅법인형(5)
2005	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천농협(합병조합)</li> <li>▪대관령원예농협(전문조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성(지역조합주도)</li> <li>▪나주·합천(시군연합)</li> <li>▪햇사래(도간연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맛젤영농조합법인</li> <li>▪(주)논산수출물류센터</li> <li>▪(주)농산무역</li> </ul>
2006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주원예농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도연합)</li> <li>▪부여·여주(시군연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회사법인 통통</li> <li>▪풀빛 영농조합법인</li> </ul>
2007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감귤농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주연합(시군연합)</li> <li>▪고창연합(시군연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후레쉬영농법인</li> </ul>

2007년 공동마케팅 4개 조직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유통정책자금(703억원), 무이자인센티브자금(120억원), 마케팅·홍보비용(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동마케팅 및 전문조직 품질관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136억원)를 지원하여 인력육성 및 사기진작을 유도할 계획이다.

2005년부터 산지유통종합평가제도를 도입하여 2006년 1월부터 평가결과에 따라 매년 조직별 1~3%의 차등금리를 적용중이다. 2007년에도 산지조직과 시설에 대한 경영평가를 위한 연구용역 및 종합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산지유통조직과 시설이 공동적으로 추구할 목표(규모화·부가가치·공공성)인 3개 핵심분야를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운영금리와 규모를 차등하고 무이자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책과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해 1992년부터 산지유통센터지원, 2000년부터 산지유통전문조직 육성, 1995년·2001년부터 각각 채소·과실수급안정사업 지원을 통해 산지유통시설 기반조성, 생산자 조직의 규모화, 수급조절 등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산지유통지원사업이 각각의 정책목표를 추구함에 따라 각종 유통지원자금이 조합단위로 유사한 목표를 갖고 통합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업으로 분산되어 정책자금의 효율성, 정책간의 연계성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산지에 지원되는 유사사업에 대한 통합을 통한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그동안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통합방안을 도출하였다.

2007년부터 산지에 분산되어 지원하던 산지유통자금을 유통종합자금지원 방식으로 개편하였고 시설채소, 과실수급안정사업, 산지유통활성화 자금을 통합하여 대상조직을 선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산지조직들의 연착륙을 위해 단계적으로 사업통합을 유도할 계획이며 2007년 1단계(산지유통활성화+ 시설채소+ 과실수급 통합)이후 2단계(산지유통활성화+ 시설채소+ 과실수급+ 노지채소)통합도 2009년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산지유통자금을 종합지원방식으로 전환·일원화함으로써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시스템 도입과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및 경쟁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유통효율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산지유통의 핵심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 나.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한 우수브랜드 육성

DDA,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농산물 수입이 증가되고, 기반시설 현대화로 국내 농산물 공급능력이 확대되면서 판매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농산물에도 브랜드화가 시작되었다.

2005년 말 현재 농축산물 브랜드수는 6,328여개가 될 정도로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질적수준은 미흡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브랜드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DDA등 시장개방에 대응해서 우리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브랜드육성을 위해 2006년 6월 농산물우수브랜드육성대책을 마련·정책브리핑을 통해 발표하였다.

아울러, 대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농업·농촌 119조원 투융자 계획 및 중기재정계획에 원예브랜드육성,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 과실류 전국 및 광역브랜드육성, 공동마케팅조직 지원 등에 총 7조원규모를 반영하였다.

농산물브랜드육성대책은 쌀, 원예, 축산분야 우수 브랜드 경영체의 농산물 취급비중을 2013년까지 50% 수준으로 대폭 확대(현행 20%수준)하여 소비자가 만족하고, 농업인도 제값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품목별로 쌀은 시·군단위 이상 규모화된 브랜드 경영체인 통합 RPC(미곡종합처리장)중심으로 원료확보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집중지원하고, 10년까지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시·군 단위 대표브랜드 100개를 육성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족한 건조·저장시설을 2010년까지 1,130개소로 늘리고 2007년부터 노후시설의 현대화, 개별 생산농가의 조직화를 위한 교육·홍보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예농산물은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종통일, 재배방법 등 품질관리, 마케팅을 전담할 수 있는 고추, 마늘, 양파, 화훼·특작 등 50여개의 주산지를 생

산·유통계열화 사업을 통해 브랜드경영체로 육성 할 예정이며 규모화·전문화된 기업형 공동마케팅조직 및 시·군 지역단위 공동브랜드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그 간 추진해 온 브랜드 육성대책을 바탕으로 브랜드 난립 방지를 위해 2006년까지만 브랜드사업 대상 경영체를 선정하여 총 80개(한우, 돼지에 한함) 내외의 우수브랜드를 집중육성하고, 브랜드 참여농가의 실익증진을 위한 정책자금 금리 인하, 경영 컨설팅 확대, 우수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등을 통한 판로개척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노력을 가속화 할 예정이다.

브랜드육성대책 발표이후 후속대책으로 쌀, 사과, 감귤, 고추 등 주요 11개 품목에 대한 브랜드경영지침서를 제작하여 2006년 12월에 농업인(단체)등에 보급하였으며 2007년 브랜드육성 신규예산으로 원예작물 브랜드(82억원), 과실류 공동 및 광역브랜드 지원(22억원), 쌀 시설현대화 및 교육홍보 지원(72억원)예산을 확보하였다.

우선 2007년도 지원계획으로 쌀은 쌀 재배단계에서 수확 후 관리단계까지 종합적 관리를 통해 고품질 쌀 우수브랜드 육성을 위해 금년도에 8개소 브랜드 경영체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농가벼 매입을 위해 일선 RPC 운영자금 9,184억원, RPC 건조·저장시설 110개소(통합RPC 10개소, 증설 90개소, 저온창고 1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과실은 전국대표브랜드 및 광역브랜드 경영체 21개소 육성을 위해 우선 2007년도에 과실전국브랜드 1개소, 광역브랜드 7개소를 선정하여 농가기술지도, 홍보 및 소비촉진 등에 2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원예작물의 생산·유통계열화 및 브랜드화 촉진을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해 2개소에 82억원을 투자하여 산지조직화, 교육·컨설팅, 생산기반조성, 종합처리시설 등을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브랜드개발·통합, 브랜드 마케팅·홍보, 브랜드 파워 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공동브랜드를 평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파워브랜드대전(2007년 10월), 수확후 관리기술 매뉴얼 보급(2007년 4품목) 및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검토할 계획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물 우수브랜드경영체(2007년 73개소)중심으로 축산물 품질고급화 및 균일화, 규모화, 마케팅 등 브랜드 파워를 위해 금년도에 900억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2007년 9월중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축산물의 우수브랜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통정책과 농업사무관 이광하)

## 2. 소비자 물류혁신 및 도매시장 운영효율화

정부에서는 농수산물 산지의 생산자들이 조직화되고 대형유통업체가 등장하는 등 유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의 환경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매시장 법인간 또는 시장도매인간 인수·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수탁거부금지 규정을 완화하며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2007년 1월에 개정 공포하였으며 2007년 7월에는 동법 시행령·시행 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또한 개정된 농안법에 대한 도매시장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중도매인 소속 관련담당자 1,300여명을 대상으로 농안법령 교육·홍보를 추진한다.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해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생산자 등에게 포장재비를 지원하고, 산지에서 농산물의 균질화·규모화를 통한 물류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공동마케팅 조직의 표준규격으로 농산물을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물량에 대한 공동선별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06년도에 수도권 8개시장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배추 포장유통 사업을 2007년 1월부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으로 확대하여 배추·무의 상품성 향상, 투명한 거래 정착, 도매시장 환경개선에 크게 기



여하고 있으며, 생산자·출하자의 포장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8년까지 포장재비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농산물 물류효율화를 위해 지게차,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컨베이어, 광폭차량 등의 물류기기를 지원하며, 특히 2007년부터 농산물 물류의 규모화를 위해서 파렛트 2열 적재가 가능한 광폭차량(냉장·동, 원바디, 탑차량 포함)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저비용으로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료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농산물 상품성 유지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22개 농산물에 대해 대학교수, 연구기관·산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수확후 관리기술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산지유통시설을 운영하는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주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표준매뉴얼 집필전문가가 주산지를 직접 방문하여 사과·배·마늘·고추 등 14개 품목에 대해 집합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2007년도에는 저온유통 효과가 큰 원예농산물에 대한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2008년부터 산지·운송·소비까지 저온유통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산지 저온시설 및 냉장 수송차량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공영도매시장의 물류개선 및 유통효율화를 위해 시장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영도매시장별 시설현대화 계획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시설 현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통정책과 농업사무관 변상문, 행정사무관 임채록)

### 3. 농식품 수출확대

2006년은 환율하락, 유가인상 폭우피해 등으로 수출환경이 매우 열악한 시기였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수출업체, 수출농가 등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2006년 수출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2,304백만불을 달성하였다.

2007년에는 지속되는 중동정세 불안과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국의 원유

수요 증대로 국제유가가 더욱 상승할 전망이고,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엔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업체 채산성 악화로 대일 수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진행중인 한·미 FTA, 한·EU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수출농업 육성을 통해 우리 농업의 신 성장동력의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7년도 수출목표를 24.5억불로 책정하고 농식품 생산-유통-해외마케팅 등 일련의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수출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수출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대책을 살펴보면, 첫째, 수출경영체 체질개선을 통한 성장역량 강화이다. 정부는 영세 수출업체 난립으로 인한 과잉경쟁구조 개선을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 등 제도개편 및 우수 수출경영체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등을 통해 품목별 최우수 경영체 중심으로 규모화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단지 지정 확대, 선·후발 단지간의 기술교류 등 연계강화를 통해 수출전문 원예생산단지의 조직화와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품목별로 조직화된 단체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그 단체를 중심으로 수출업체와의 수직계열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둘째,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 창출이다. 신시장 및 수출 잠재력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해외aT 인력 보강, 예산 투입비중 확대 등을 통해 수출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신규시장 박람회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 유망품목 육성사업이 전략적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신시장 개척 및 수출 유망품목 육성을 위한 정보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전자무역 사이트인 Agro-Trade를 활용하여 틈새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해나갈 계획이다.

셋째, 해외 판촉·홍보 활동의 효율적 추진이다. 소규모로 개최되던 해외 대형유통업체 판촉전을 규모화하고 산발적으로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 특산품 판촉전 등과 연계·통합 추진하여 홍보 시너지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일본은 안전·안심 이미지 메이킹, 중국은 고급농식품으로 포지셔닝 등 해외 시장별 특성에 맞는 현지화·고급화 홍보전략을 추진하며, 박람회 참가 효과 극대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박람회와 연계한 현지 수출상담회 개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박람회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농식품 세계화를 위한 지원강화이다. 해외 한식당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주요 권역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뉴욕, 동경, 북경 등 세계 주요도시에서 주재국 공관과 연계한 식문화 홍보행사를 개최하는 등 ‘韓 브랜드, 한식 세계화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고, 전통식품 표준조리법 개발·홍보, 뉴욕 UN본부 내 한국 식문화 홍보행사 개최 등 우리 음식의 해외전파 및 현지화를 위한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한편, ‘2007 한중교류의 해’를 활용한 식문화 홍보행사와 해외 관광박람회, 해외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식문화행사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수출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정부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이다. 수출컨설팅 사업은 수출농가, 수출업체의 자율적 컨설팅 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 후 지원하는 바우처 방식을 도입하고, 바이어초청 사업은 집합식 초청방식에서 수출업체 사전 수요조사에 따른 수시초청 방식으로 전환하며, DDA협상에 따른 수출물류비 감축 또는 철폐에 대비하여 고품질·브랜드화,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환변동보험 가입비 지원, 농수산물무역정보망(www.kati.net)을 통한 환율 예측정보 제공 등 수출기업 환율관리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산업과 행정사무관 이경일, 장동욱)

#### 4.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신뢰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16억원을 조성하여 대중매체 홍보, 관측행사 및 학교급식확대 등을 추진하고, 서울 등 대도시 초등학생 14만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교육을 실시한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확대를 위

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지자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103개 시·군에서 5,310여 학교에 638억원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가공제품 개발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분기별 1회이상 유통실태 및 품질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유기재배농가의 생산 단계 이력추적관리제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연중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유통자금 250억원을 지원하고, 도시 소비자의 친환경농업 인식전환을 위해 농소정협력사업을 9개 단체(37천명)에 4억원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정책과 기술서기관 성신상)

## 제5절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장치 강화

### 1. 직접지불제 확충

#### 가. 직접지불제 확충 방향

직접지불제는 WTO체제 출범이후 가격지지정책보다 소득보전효과가 크고 시장왜곡효과가 작은 것으로 평가되어 전 세계적으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 경영이양 직불제를 도입한 이후 1999년 친환경농업직불제, 2003년 쌀 생산조정제(시범사업), 2004년 폐업지원FTA 피해보전 직불제, 친환경축산 직불제(시범사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005년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연차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농가유형별 특성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직불제 신규 도입 및 기존사업 개편을 통해 2013년까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의 소득 중 10% 수준을 직불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직불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피해보전 직불제 등 WTO 규정상 감축대상 직불제

는 지원대상 농가수를 줄여(취미농 배제, 구조개선 촉진 등)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고 DDA 협상에 의한 보조금 한도 축소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구조개선 지원, 특정 품목의 과잉생산 등 품목별 가격차 보전 방식의 직불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밭농업, 과수, 축산을 포괄하는 농가단위 소득차 보전 방식의 직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WTO 허용보조 유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 및 농업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직불제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바람직한 농업구조 실현을 뒷받침하고 은퇴 고령농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영이양직불제 개편안(2007년 6월 28일 한·미 FTA 대책으로 발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경관보전 직불제와 조건불리 직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농업정책과 농업사무관 김영수)

#### 나.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정부는 쌀값 하락시에도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80kg 가마당 목표가격을 170,083원으로 설정하고 3년마다 변경하되, 변경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2007년도에는 2008년산부터 2010년까지 적용될 새 목표가격을 설정해야 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목표가격변경 동의 요청서를 국무회의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정직불금은 쌀값 하락에 관계없이 ha당 평균 70만원(80kg 가마당 11,475원)을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2007년 10월에 고정직불금(진흥지역안 746천원, 진흥지역밖 597천원)을, 2008년 3월에는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정책과 사무관 하종수)

#### 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일부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의 지급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써 친환경농업 실천기준을 이행하여야 하며, 농가당 0.1ha~5.0ha까지의 지원한도 내에서 3년간만 지원한다.

지급단가는 인증종류와 논·밭으로 구분하여 각각 달리 지원되며, 논인 경우 ha당 유기 392천원, 무농약 307천원, 저농약 217천원이며, 밭의 경우 ha당 유기 794천원, 무농약 674천원, 저농약 524천원을 지원한다.

2007년도에는 175억원(국고 100%)을 투입하여 전국에 걸쳐 43,000ha를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친환경정책과 농업사무관 안형덕)

#### 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금년도는 2006년까지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지역만을 지원하던 것을 제주도를 포함한 전 도서의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경지율 및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읍·면의 법정리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 하였다.

그러나, 부적격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 지침을 강화하였다. 즉, 관리가 미흡한 하급초지와 임산유실수 등을 식재하는 임야는 형질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부정지급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마을대표확인서는 불인정하고, 임대차는 공식적인 계약서만을 인정하였으며, 1996년 이후 취득농지 중 임대차가 불가한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의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임대차 규정을 강화하였다.

한편, 2007년도 예산은 지원대상 지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실제

지원 신청 실적을 감안, 2006년도와 동일하게 52,307백만원을 반영하여 조 건블리지역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농지과 사무관 이영식)

#### 마. 경관보전직불제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농업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각종 직불 제도를 시행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 변화와 더불어 우리 농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05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제고하여 농촌지역사회를 활성화 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서는 해당지역의 농촌경관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작물(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등)을 대상으로 2006년까지 940ha에 대하여 1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급단가는 ha당 170만원으로 국고 70%, 지방비 30%이다.

시범사업(2005~2007) 추진결과, 경관작물 재배에 따른 외지인들의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농 교류에 기여하고, 농촌의 경관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은 효석문화제 기간 중 57만명 방문으로 총 23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은 메밀축제 기간 중 20만명 방문, 부안면은 국화꽃축제 기간 중 15만명 방문으로 총 35억원의 지역소득효과를 올렸다.

2007년도에는 경관작물 범위를 확대, 연과 자운영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고 있으며, 경관보전직불제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구선정을 녹색농촌체험, 농촌마을종합개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에 활용 가능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800ha에 10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사업성과 등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동계경관작물과 하계경관작물

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조건, 대상작물 범위, 경관작물재배관리 기준 등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정주지원과 시설사무관 김현수)

## 2. 농외소득 기반 확대

### 가. 농공단지 조성사업

2007년에는 28개소에 314억원(국고)을 투자하여 6개소를 완료할 계획이며, 농촌지역 향토자원, 특산물 가공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의 입주 촉진 등 농공단지 조성활성화를 위해 시·군별 지정면적 확대, 지역특화단지 조성단가 상향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표 3-2-7>

### 농공단지조성 추진현황

구 분	추진목표	2006까지	2007계획	2008이후
사업량(개소)	400	322	6	72
사업비(국고, 억원)	7,572	6,620	314	638

주 : 사업량은 완공지구 기준임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최호종)

## 3. 재난대비 경영안정장치 강화

### 가.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

#### (1)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의 지속개선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은 자연재해시 농업인의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품 개선을 해오고 있다. 2007년도에도 2006년 사업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 및 농업인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보장수준을 확대할 계획이다.



\* 2007년 주요 개선사항

- 집중호우 인정기준 완화 : (2006) 12시간 누적강수량이 80mm이상일 때 재해인정 → (2007)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한 경우에도 인정
- 감귤 낙엽률 인정기간 확대 : (2006) 기준착과수 ~ 수확기 전 → (2007) 기준 착과수 ~ 수확기
- 기 타
  - 태풍피해시 보상확대를 위해 낙과감수량 보상기준 개선 및 보상확대 (감수량 = 낙과수량 × 105%로 통일)
  - 우박피해시 감수량 보상기준 확대(봄동상해 피해과수원에 대한 우박피해 인정) 등

아울러, 2006년까지 사과·배 품목에만 적용되었던 집중호우, 과수보상 특약을 포도·복숭아 등 7개 품목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2007년 7월까지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8년 보험 상품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 50%(특별지원 5.6% 별도), 운영비의 100%를 지속 지원하고, 보험요율을 2006년 대비 1.64%P 낮은 6.57%로 인하하여 보험가입률을 2006년 대비 2.0%P 증가한 26.5%로 높일 계획에 있다.

(2)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 확대

근래 이상기후 현상으로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가 경영안정장치로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보험품목 확대에 대한 농업인 등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부는 2006년 4월부터 농림부, 농업인, 품목별전문가, 보험전문가, 보험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품목개발추진단”을 구성하여 농작물의 보험화 가능성 및 연차별 보험품목 확대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2007년에는 지난 2006년 연구를 바탕으로 농업인의 보험수요 및 전업화 정도, 생산액 수준 등에서 다른 품목에 비해 보험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밤·참다래·자두”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농업인의 실질적인 보상확대를 위해 2007년부터 도입하는 작물의 경우 가능한 모든 자연재해가 보장범위에 포함되도록 보험상품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2006년 7월부터 철원, 평택 등 전국 논벼 주산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상연습 중인 논벼(수도)의 경우 특정위험방식으로 실시해 온 것을 대폭 개선하여 2007년부터는 모든 자연재해 위험을 종합위험방식(A11-risks)으로 변경하고, 밤·참다래·자두의 경우에도 종합위험방식의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과수 품목에 치우친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을 식량작물·채소작물·특용작물 등 대다수 농작물로 확대하기 위해 품목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해 2011년까지 30여개 주요 농작물로 대상품목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

### (3) 농업관련 재해보험제도 일원화

농업관련 정책보험(공제)으로는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 풍수해보험(소방방재청) 등이 있으나, 이들 정책보험들은 각 소관부처별·소관과별로 분산 운용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가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우리부는 2006년부터 자연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T/F, 연구용역 등을 통해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작물·가축·농업시설 관련 재해보험의 관리 일원화를 지속 검토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농업재해보험으로 확대 개편하여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등 농업 전반의 자연재해 위험을 관리하는 종합적 위험관리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협동조합과 사무관 서준한)

### 나. 재해농가 지원확충

2007년도에는 농업분야 재해지원 확충 및 재해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재해피해조사요령」(농림부예규)을 개정하여 시행(2007년 5월 7일)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하천부지에 경작하는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은 폭설, 지진, 가뭄, 서리, 우박 피해에 대하여만 지원 가능하였으나, 강풍피해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2007년도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를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경지 유실·매몰, 농작물 농약대 등 19개 종목을 1.9~100% 까지 인상하고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8개 종목을 신설하였으며, 앞으로도 재해농가 지원확충을 위해 제도개선 및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인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산경영과 사무관 장영국)

### 다. 가축공제 운영 내실화

가축공제는 안정적인 양축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점차적으로 최근 태풍, 화재, 호우 등의 피해를 보는 농가를 중심으로 공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입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편이다. 정부는 축산농가의 가축공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2007년 2월부터 농협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사도 가축공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소브루셀라병 근절 및 사육기반 유지를 위해 소브루셀라병 가축공제를 2007년 4월부터 도입·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7년 예산을 당초 244억원에서 346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공제가입 대상축종을 2006년 소, 돼지, 닭, 말, 오리, 꿩, 메추리, 사슴, 칠면조 9개 축종에서 2007년 거위, 타조까지 11개 축종으로 확대하였으며, 2008년에는 산양, 면양을 추가할 계획이다.

<표 3-2-8>

**가축공제 가입률**

(단위 :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P)
소	7.2	7.3	7.1	11.9
돼 지	49.9	57.6	66.7	61.0
말	1.9	4.7	6.7	8.0
닭	22.3	32.8	39.3	37.0

자료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축산사무관 서재호)

**라. 농업인 안전공제 추진**

(1) 도입배경

농업은 광업, 건축업 등과 함께 작업상 사고나 질병의 위험이 높은 산업으로 농업인은 항상 농작업 과정에서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농업인의 사고와 질병은 농가의 생활불안정 및 빈곤층 전락을 유발하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농업인 안전공제의 농업인 부담 공제료 50%를 국고보조하고 있다.

(2) 추진경과

- 1996년부터 농협 공제상품인 농작업상해공제 및 농기계종합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납입공제료의 50% 국고보조 시작
- 2000년 및 2004년에 보장내용 확대 개편에 따른 상품명 변경 : 농작업상해공제 → 농업인안전공제I → 농업인안전공제II
- 2006년 농업인안전공제의 농작업 중 사망공제금을 15백만원(2005)에서 25백만원으로 강화
- 2007년 농업인안전공제의 농작업 중 사망공제금을 35백만원으로 강화, 입원비 공제금을 (2006)18천원에서 (2007)20천원으로 상향, 4일이상 입원 시 하루 30천원이 지급되는 입원비 확장특약 신설

(3) 추진실적

2006년 현재 농림업 경제활동인구 174만명의 37.5% 수준인 65만명이 가입했으며, 1996년 이후 2006년까지 681만명이 공제료의 50%를 경감받았다.

<표 3-2-9>

**농업인 안전공제 추진실적**

(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합 계	2001까지	2002	2003	2004	2005	2006
사업량 (계약건수)	6,805	3,458	636	703	653	702	653
사고시 지급공제금	1,546	765	115	133	165	167	201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정아름)

**4. 경영희생지원시스템 구축**

**가. 농가부채 경감대책**

2006부채경감대책 주요 특징은 2001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의 원금 10% 이상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할 경우 5년 분할상환(3%), 그 외는 3년 분할상환(5%) 조건으로 연장되며, 부채 상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상·조기상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병행하여 제공하고 있다. 다만, 예금 등 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부채경감법 및 시행지침에 명문화하여 그 동안 부채경감대책은 무분별한 지원이라는 비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부는 부채경감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초기에 농가부채경감대책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 대상농가에 개별안내장 발송 및 전화안내, 조합별 프랑카드(4,050개) 게시, 리후렛 및 소책자 제작 배포(100만부), 포스타(20,000부) 부착, SMS(문자메세지)송신 등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부채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월

초 일선지역 현지점검을 통해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인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한편 2006년 부채대책 추진유공자를 엄격히 선발하여 장관표창을 수여하는 등 부채대책추진에 진력한 결과 2006년 12월 31일 현재 순지원대상 37,808억원중 37,031억원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98%가 5년 분할상환 조건을 선택하였다.

또한 2007년에 상환일이 도래할 것으로 예정되는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3,389억원)에 대해서도 추가연장조치(1~6월 신청 접수, 12월말까지 대출 실시)를 시행하였다.

이렇게 부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2007년 8월 31일 현재 순지원대상 38,418억원중 37,464억원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85%가 5년 분할상환 조건을 선택했다.

(협동조합과 서기관 이용섭)

#### 나.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질병, 농산물가격 급락 및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도에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예산을 1,100억원 반영하여 3년거치 7년분할상환(금리 3%)조건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영농규모가 준전업농이상 또는 농업용부채가 2,500만원 이상인 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다. 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부채 1,200만원이상 농업인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에게 지원토록 하였다.

지원율을 확대시키기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해 시행지침을 개정하였으며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회생가능성에 바탕을 둔 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원대상 확대를, 경영평가위원회 시스템 개선 및 대출취급기관의 평가기준 단순화 등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지원신청의 원활화를 추구하였다.

기존의 경영회생자금은 열거된 외부충격에 의해 일시적 경영위기가 초래

된 경우만 지원대상으로 인정하였던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특정사유와 상관없이 회생가능한 일시적 경영위기라면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농가에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원대상자 심사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경영평가시스템을 개선하였다.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선조합에 설치 운영하는 평가위원회를 농협중앙회중앙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에 설치하였으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선조합의 실무심의회를 폐지하고 경영평가위원회는 경영평가단의 정밀경영평가를 기초로 자금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평가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복잡한 경영평가 항목을 폐지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을 중심으로 농업인의 회생가능성을 평가하여 농업인의 대출신청을 간소화하고 대출취급기관의 적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대출취급기관의 자금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창 또는 회원조합 지원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후관리를 현실화하였다.

비농업용 부동산 소유자는 지원제외하여 부채대책자금 지원과 관련된 농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였다.

(협동조합과 서기관 이용섭)

#### **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추진**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연체로 농지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혀있어 경매 등을 통하지 않는 한 매각이 어렵고, 담보농지 경매시 유찰, 저가 낙찰되어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한 농가에게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채, 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써, 매입 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하고, 임대기간중 환매권을 보장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재해(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50백만원 이상)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기관인

한국농촌공사 지사 및 도본부에서 경영위기정도, 회생가능성, 영농규모 등을 종합평가하고,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여 매매·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매입대상은 논, 밭, 과수원 등 농지로 매입가격 및 환매가격은 감정가격으로 정하며, 매입농지의 임대기간은 5년(3년 연장가능)이며,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이내에서 매입단가에 따라 차등 요율을 적용한다.

또한, 지원농가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경영회생능력 제고를 위해 지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리금 상환유예 및 금리인하 등 현행 금융위주의 지원방식으로는 연체농가의 실질적인 회생에 한계가 있어 농지은행제도의 일환으로서 2006년부터 시행하였으며, 2006년은 신청자 378농가(942억원)중 183농가를 선정, 422억원(311ha)을 지원하여 파산위기 농가들의 재기에 도움을 제공하였다.

2007년에는 연체(50백만원 이상) 기준을 부채(50백만원 이상) 기준으로 변경하여 성실한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신청 접수 결과 당초 566억원 예산보다 3배 규모인 1,714억원(915ha, 671농가)이 신청되는 등 호응도가 높아 추가로 387억원을 확보하여 953억원을 지원하였다.

경매시 정상가액의 60~70% 수준 낙찰에 따른 농가자산 감소 방지, 높은 연체이자(16%) 대신 낮은 임차료(1%) 지급으로 농가부담이 감소되는 등 경영위기 농가의 경영회생에 기여하고 있다.

(농지과 사무관 이영식)

## 5. 농업정책금융 지원제도 개선

### 가. 추진현황

농촌금융시장은 상업금융기관이 진출을 꺼리고 농업부문의 낮은 수익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농업정책금융도 이제는 시장기능과 경쟁의 원리



를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서 농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주로 지원하여 오던 농업정책자금의 공급방식을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정책자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8월부터 축발기금으로 지원되는 일부 사업자금의 취급은행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한 데 이어, 2006년 1월부터 축발기금의 모든 융자사업과 미곡종합처리장운영자금, 농기계구입자금으로 시중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자금을 확대하였고, 시중은행도 농업정책자금에 한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004년 5월에는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신설하여 농특회계융자금에 대한 상시 검사체계를 확립하는 등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해 왔다.

또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기존의 26개 개별사업을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하여 농업경영체 사업계획의 타당성·경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대출하도록 하였고, 자금운용방식에서는 이전과 달리 지역별·품목별·용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하나의 자금 풀(pool)로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여 지원규모도 1999년 145억원에서 2006년 9,567억원으로 점차적으로 증대 지원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농업정책자금 중 대표적으로 농업종합자금과 농축산자금 지원대상을 농업종합자금은 전업규모 이상, 농축산경영자금은 중소농 위주로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지원함으로써 두 자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농축산경영자금의 신규 대출한도를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여 운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원활한 생산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971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정을 통해 운영중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확대하고 건전운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림수산업

자신용보증기금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출연을 확대(2005년 4,000억원→2006년 5,780억원)하는 한편, 농·수협중앙회의 출연요율 인상(0.2%→0.3%) 및 일선조합의 신규출연, 위탁보증수수료 인하(15%→10%), 부분보증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 나. 추진계획

앞으로 농업정책자금의 독점적 공급방식을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등 시장 지향적 개편을 통해 농업인의 대출편익과 금융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창업농지원자금 등 5개 사업자금을 시중은행도 취급할 수 있도록 추가 개방하고, 2010년 이후에는 기금을 제외한 모든 용자사업을 시중은행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 및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종합자금으로의 통합 및 자금 지원규모 증대 등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한편 1999년 종합자금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후 10년이 되는 시기인 2008년에는 그간의 농업종합자금 성과를 평가하고, 통합규모, 운용규모 및 향후 운영방향 등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한편,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시 영농규모에 상응한 적정규모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 신청할 경우 소요경영비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한 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소요경영비 심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동 자금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사업타당성 있는 우수 농업경영체의 신용대출 기회 확대, 농축산경영자금 건전성 강화, 금융컨설팅 지원 강화 등의 과제를 발굴하여 2007년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해서 2007년에는 일선조합이 심사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위탁보증 비율을 축소하였으며, 농·수협중앙회의 출연요율을 조정(0.3%→0.38%)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하였고, 정부출연금도 전년(5,780억원)보다 27%가 증가한 7,357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8까지 법정 보증배수(20배) 이내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부 출연소요가 반영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정책자금(융자금)의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설립 및 검사업무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검사범위를 이차보전자금까지 확대하는 한편, 검사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등 농업정책자금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협동조합과 행정사무관 이낙휘, 농업사무관 박정훈)

## 제6절 농촌 복지 및 지역개발 본격 추진

### 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추진

DDA 및 FTA 확대 등 농업 개방의 가속화로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가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에는 올해 3년차로 접어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계획 추진에 따른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책자를 제작하였다.

삶의 질 대책 추진 전 상황과 현재 시점의 추진 목표를 비교·분석하여 도 표화함으로써 농림어업인, 일반국민 등이 점차 향상되어 가는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을 알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또한, 홍보책자에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삶의 질 향상대책의 주요사업, 농촌의 비전, 투융자 계획 등을 소개하였으며 시·도, 시·군, 농업인 단체등에 6,000부 정도 제작·배포하여 정부 정책을 알려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둘째, 매년 추진되고 있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금년 삶의 질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2006년 보다 1개월 정도 단축하고 그 결과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실무위원회」(2007년 4월 19일)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2007년 4월 26일) 및 국회에 보고(2007년 5월 28일) 하여 향후 삶의 질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였고, 각 부처에 통보함으로써 2008년 시행계획 및 예산편성 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삶의 질 향상대책의 추진효과와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을 비롯한 관계부처 차관 및 삶의 질 위원들이 함께 충북 영동군을 방문(2007년 5월 18일 ~ 19일)하여 삶의 질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과제인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을 점검함으로써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셋째, 2007년에는 삶의 질 시행계획을 직접 점검·평가하는 「삶의 질 시행계획 점검·평가단」이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직접 경북봉화군(6.27 ~ 6.28), 충남서천군(7.12 ~ 13)을 방문하였다. 점검·평가단이 삶의 질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을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함으로써 향후 삶의 질 계획의 실효성 거양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넷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2007년 10월에는 지자체 및 관계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 내실화 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1박 2일로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은 시·군의 삶의 질 기본계획이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시·군에 실질적인 시행계획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매년 평가되는 삶의 질 시행계획의 점검·평가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기존에 모든 사업을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바꿔 일반사업, 소규모 사업, 투융자 사업, R&D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 유형별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우수·부진사업 상대평가(20%) 방식을 변경하여

상위·하위사업(10~20%)로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농촌정책과 행정사무관 엄기훈)

## 2. 농촌지역개발사업 체계화

### 가. 도입 배경 및 의의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사업 등은 농림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에서 다양하게 추진하여 왔으나, 범정부적이고 유기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즉,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업이 상호연계성을 결여한 채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어 비효율과 중복투자에 따른 낭비 등의 문제가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었다.

농어촌공간조성사업 추진 체계화 방안 보고(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2005년 7월 21일), 유사·중복 균형발전사업 통폐합, 체계화 방안(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5년 7월 21일) 보고 등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지역개발정책의 추진체계 일원화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부처간 이해가 엇갈려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지 못하였다.

또한, 농림어업인 삶의질 점검·평가단에 의한 2005년 삶의질 시행계획 평가에서도 지역개발 분야에서의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지적하고, 사업 통합 등 추진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 바 있었다.

### 나. 정책입안 과정 및 평가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개발·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체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공동으로 농어촌정책공동 T/F를 구성·추진(2006년 3월~7월)하였다.

농어촌정책 공동 T/F는 농림부, 기획예산처의 관계 국장 및 담당 과장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참여하여 다양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농림부는 기획예산처와 공동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책임연구기관(책임연구원 이동필 박사)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추진(2006년

4월~11월)하고, 실무협의회와 전문가 협의회 등을 개최하였다. 전문가 협의회에서 윤원근 교수(협성대) 등은 사업간 유사·중복 문제를 지적하고 마을단위 사업, 오지·도서면-정주면 기반확충 등의 사업을 농림부로 통합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송미령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의 유사·중복은 별 문제가 없으며, 지방에서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조정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사중복사업의 체계화 필요성 인식 등을 위해 충북 단양군 한드리 마을 등 현지조사도 실시(2006년 4월 10일~11일)하였다. 아울러, 국가재원배분회의(2006년 4월 22일), 행정자치부 업무보고(6월 1일), 균형발전정책성과점검 보고회의(6월 13일)시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체계화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부처간 업무조정 회의를 개최하였다(6월 30일, 7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처간 사업을 연계·조정하는 과정에서 부처의 사업을 이해하고 범부처적으로 협력함으로써 향후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다. 정책의 주요내용

부처간 업무조정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장관회의(2006년 8월 29일)에서 행정자치부의 오지종합개발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신활력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의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농림부로, 마을하수도사업은 환경부로 이관하는 등 부처간 업무조정을 실시기로 합의를 하였다.

#### <농촌지역개발·복지 관련 농림부 사업조정·이관 현황>

- ◇ 오지종합개발사업 : 행정자치부 → 농림부
-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 행정자치부 → 농림부
- ◇ 신활력지원사업 : 행정자치부 → 농림부
-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보건복지부 → 농림부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국가재원배분회의(2006.4.22)에서 이관 결정

오지종합개발사업 등 부처간 이관 사업에 대해 농림부는 기존사업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사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촌지역개발사업 체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라. 정책추진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농림부는 이관된 사업과 추진중인 유사사업과의 조정과 통합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농촌지역개발 체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2007년 1월)

첫째, 기존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통합 지침 제정·운영하고 지역개발사업은 생활여건 개선을, 산업진흥 사업은 소득개선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며, 유사사업간 국고보조율, 사업비 등 지원기준을 단일화한다.

둘째, 기본수요(National minimum) 충족 지원을 위해 모든 농촌을 대상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본 수요를 연차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촌지역의 기본수요 수준을 조사, D/B로 구축한다.

셋째, 농촌정주체계에 따른 선도거점(Leading force) 형성 지원을 위해 농촌정주체계는 균형발전 및 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 시책에서 제시된 국토공간체계의 틀내에서 「소도읍·중심면 소재지-소권역-마을」로 구분한다. 그리고, 농촌정주체계에 따라 선도거점 지역을 지정하고, 선도거점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고품질 교육·의료·복지·문화서비스 이외의 기본수요 및 핵심서비스를 자족토록 한다.

넷째, 새로운 콘텐츠 발굴·추진을 위해 농촌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농촌주거향상을 위한 대책 추진 및 새로운 공동체 활성화하고, 농촌경관 보전·관리와 농촌 산업진흥 분야에서는 향토 자원 발굴·권리화 및 D/B를 구축한다.

다섯째, 농촌 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시·군 기본수요 수준 조사, 지역개발 사업평가 및 사업 대상지 선정 등 농촌 지역개발 및 산업진흥 관련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며, 시·군의 지역개발·산업진흥에 관한 중장기 농촌종합개발계획을 삶의질 및 지역개발특별법에 의한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이관받은 사업은 지자체의 행정혼란 등을 고려하여 2007년도에는 기존방식으로 추진하고 농촌지역개발사업 체계화 방안에 따라 2008년부터 농림부의 기존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즉, 신활력지원사업과 지역특화사업은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촌주택정비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종합마을개발사업, 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산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통합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오지개발촉진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등의 폐지와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위원회 사무국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여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연계·조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7년 2월 2일 관계부처(기획예산처, 재경부, 농림부), KDI, KREI 관계자 등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중기 재정운용 방안 및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연구하였다.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농촌지역개발사업을 개발하고 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체계화 하여 나갈 계획이다.

(농촌정책과 기술서기관 김종구)

### 3.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시책 추진

#### 가. 도 입

도시화·산업화·개방화의 진전과 불균형 성장정책의 결과 최근에는 도시화율이 90%선에 도달한 반면, 농촌은 정주여건의 상대적 악화로 인해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되고 있다. 1980년 42.7%이던 농촌인구는 1990년 25.6%, 2000년 20.3%, 2005년에는 18.5%로 감소되었고, 젊은 층의 이촌향도형 인구유출이 주도한 농촌인구 감소는 고령화와의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1,208개 면(面)중 82%인 991개 면(面)이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현상은 지역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지역사회 유지를 어렵게 함은 물론 우리 농촌이 지니고 있는 귀중한 전통문화가 사라지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룬 결과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농촌의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이 중시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도시민의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도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도시민 중 56.1%가 농촌에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10년 내에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10.9%에 이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준비중인 도시민도 30~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민의 농촌이주 수요가 현실화된다면, 도시의 과밀문제와 농촌의 인구과소화 문제가 완화되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도시민의 농촌유치를 통해 농촌의 활력을 높이고자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지원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2005년 12월 21일)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시책사업으로 전원마을조성사업,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농촌경관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주지원과 농업사무관 이재식)

#### **나. 전원마을조성사업**

2007년도에는 총 289억원(국고 231억원, 지방비 58억원)의 예산으로 2007년도 신규착수 15지구를 포함하여 70지구에 대한 전원마을조성사업을 하였다.

2007년도에는 전원마을조성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2006년도 말에 마련한 전원마을조성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였다. 보조금 지원 규모를 현행 10~20억원을 10~30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을 마을기반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경관

형성 및 마을공동체 형성 등 지역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택건축을 담보하고 부동산 투기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은 마을기반시설부터 주택건축까지 일괄하여 수립하고, 50호 이상 규모의 마을조성시에는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추진토록 의무화 하였다. 또한 사업신청 시 일정수준 이상의 토지확보 및 입주자 모집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신청요건을 강화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는 등 사업준비를 강화하고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에 있음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와 민간의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다. 또한 전원마을조성 신축주택은 농촌주택 보유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기준 충족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농촌주택 구입시 가격 70백만원을 150백만원으로 상향조정토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한편, 예산이 계획수립단계인 1·2년차에 소요액 이상으로 편성되어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08년도부터는 사업추진 진도를 감안한 실 소요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주지원과 시설사무관 박종민)

#### 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은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시민이 농촌에 이주·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농촌 정주지원 토털서비스 사업과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에서 적극적인 도시민 유치 활동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자체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 (1) 농촌 정주지원 토털서비스사업

농촌 정주지원 토털서비스 사업은 농촌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이주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www.nongchon.or.kr)과 오프라인을 통

해 제공한다.

농어촌종합정보포탈(www.nongchon.or.kr)은 한국농촌공사에서 2005년부터 제공해 온 기존의 농지은행 포털서비스를 2006년 5월 확대·개편한 것으로 전원생활·농지은행·그린투어·주택정보·지역투자정보·경영도우미·지식정보 등 7개 분야 40개 콘텐츠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며 전화상담을 위한 「농어촌정보상담실(1577-1417)」을 한국농촌공사에 개설하였다.

정부는 농어촌종합정보포탈을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맞춤형서비스, 서비스 맵 등을 도입하여 기능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프라인 사업으로 아름다운 농촌경관사진 콘테스트 개최, 전원마을 현장체험단 운영 등을 통해 농촌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도시민에게 홍보하여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이주 동기를 일으켜 농촌이주 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2) 지자체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자체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정부가 인구감소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 도시민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시범적으로 10개 시·군을 선정하여 2009년까지 3년간 개소당 10억원(국고 5, 지방비 5)씩 지원하며,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2009년 이후 본 사업화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된다. 사업지원범위는 도시민 유치를 위한 홍보, 컨설팅, 교육, 행사, 일자리 알선, 출향인사 파악·관리, 빈집 등 주거정보 제공, 이주예정 도시민과의 교류·초청행사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한정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용역, 해외사례 조사, 워크숍,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2009년 이후 본사업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정주지원과 행정사무관 이우곤)

### 라. 경관보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을 통하여 외지인의 방문 증가에 의한 지역경제 활

성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농경지의 이용을 제고 및 농촌지역 주민의 추가 농업소득 기회의 제공, 휴경지 상태로 방치되어 농촌의 미관을 저해하는 농지의 기능 회복 및 아름다운 마을경관 형성과 공동체 의식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이 시행된 기간(2005~2006) 동안에는 한정된 경관작물 식재에 의한 경관형성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농촌의 체계적인 경관형성 및 관리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다. 앞으로는 경관작물범위를 확대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촌경관형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신청을 위한 최소면적기준을 완화하여 마을주변의 소규모 농지를 활용한 경관작물 식재로 마을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관작물의 재배관리기준을 강화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방문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를 배가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농업인들의 신청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경관작물 식재 이외에 마을내 다양한 경관자원을 활용한 경관형성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형성·관리를 통한 도농교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주지원과 시설사무관 김현수)

#### 4. 농촌형 복지대책 확충

##### 가. 사회안전망 확충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농촌특성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연금·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및 농작업 재해지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농어민 건강보험료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50%를 경감지원하고 있다. 다만, 고소득자에 대한 일률적인 50% 경감지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감사원 및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경감지원율을

차등 및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2007년 1월 1일부터는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부로 이관되어 표준소득월액 14등급(520,000원) 소득 이하는 보험료의 50%를, 14등급 소득 초과는 14등급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1인당 최대 연간 280,8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08년도에는 지원기준 등급을 16등급(620,000원)으로 상향하여 1인당 최대 연간 334,8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기계 사고 등 농작업 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이 가입하는 농업인 안전공제의 경우에도 2008년 사망공제금의 보상수준을 4,5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07년 하반기에는 그동안 농협 안전공제의 가입대상이 아니었던 임업인에 대해서도 안전공제를 신설하여 판매하였다.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정아름)

#### 나. 보건·의료기반 확충

농촌의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보건소 등의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응급의료 인프라 및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응급의료 취약 39개군 지역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응급전담인력 배치 및 시설 장비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노후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노후 의료장비를 대폭 개선하고, 의료체계, 이용상황 및 노후정도를 감안하여 보건소 등의 신·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여성화·고령화되고 있는 농업인들의 피로해소를 위하여 피로해소 시설이 없는 마을 위주로 건강관리실을 확대 설치하고 있다.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김낙신)

#### 다.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지원

농촌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인보호체계 구축 및 건강·장수마을

조성 등 노인복지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현재 농어촌 노인에게 적합한 일거리나 건강관리, 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 등 기회를 제공하는 건강·장수마을을 2007년도에는 350곳에 조성할 계획이다.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도 2007년도에 14개소를 설치하고 2009년까지 농어촌 종합재가노인 복지센터(주간, 단기, 가파시설이 복합된 다기능 시설)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김낙신)

#### 라. 교육비 부담경감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지방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2005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007년도에는 그 지원대상을 경지소유규모 1.5ha에서 전 농가로 확대하였다. 2007년도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용자 지원사업은 26천명에게 747억원을 1·2학기로 나누어 지원하였다.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김낙신)

#### 마. 취약농가 인력지원

2006년에는 전국 8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을 2007에 실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사고농가에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지원대상을 경지소유규모 5ha미만 농가의 69세이하 농업인으로 확대하였다.<sup>6)</sup> 지원단가도 2006년에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지급하였으나, 2007년부터 남녀 평균 농촌임요금으로 동일하게 지급한다.<sup>7)</sup>

65세이상 고령단독농가에 지원하는 가사도우미 지원대상을 2007년부터 확대하였다. 2006년에는 정상적인 가사활동이 어려운 65세이상 고령단독

6) 2006년 영농도우미 지원대상 : 경지규모 3ha미만농가의 65세미만 농업인

7) 2006년 지원단가 : 남자 39,900원(남자 농촌 임요금 57천원의 70%), 여자 26,600원(여자 농촌임요금 38천원의 70%)

2007년 지원단가 : 35천원(남자 농촌 임요금 60천원, 여자 임요금 40천원의 평균임요금의 70%)

농가(18세미만의 손자녀와 함께 사는 편조손 농가 포함)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농가뿐만 아니라 농촌에 거주하는 65세이상 고령가구로 확대하였다. 또한, 단독가구 뿐만 아니라 부부가구 중에도 노환 등으로 정상적인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에는 가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도 일괄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007년부터 타기관의 가사서비스를 지원받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요건도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의 사업규모는 사고농가 8천명과 농촌 고령가구 15천명에게 총 5,514백만원(국고지원 3,860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농도우미 지원은 총 예산 4,000백만원 중 국고로 70%를 지원하고, 영농도우미를 이용하는 농업인이 30%를 부담한다. 가사도우미 지원은 총 예산 1,514백만원 중 국고로 70%를 지원하고, 농협에서 30%를 부담한다. 2008년부터는 질병발생 농가에도 영농도우미를 지원해 줄 계획이며, 현행 10일까지 지원하는 지원일수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정책과 행정사무관 이상목)

## 5.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농촌체험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가소득 증대 등 농촌지역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농촌체험·휴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인력육성대책에 따라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며,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도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농촌체험 휴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2006년 67개 마을(총 190)에서 2007년에는 84개 마

을(총 274)로 확대 조성하고 있다.

또한, 농산어촌체험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도시민의 방문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농촌체험관광 우수마을을 발굴·홍보하기 위한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상향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 실시(2007년 3,400명 계획)하는 한편, 관련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상향식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식 확산을 위한 관련 교재를 개발하여 농촌마을 등에 보급하였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촉진을 위해 마을에서 농촌체험관광 사업추진과정에서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1인1촌 전문가 지원시스템’ 운영과 농촌체험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마을사무장 운영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하였다.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사1촌운동, 도농교류페스티벌, 농산어촌고향에서 휴가보내기 캠페인 전개, 농산어촌체험여행 책자 및 지도 제작·배포, 농촌문화체험기 공모, 도농교류 정부포상 시상 등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다.

도시민에게 농업·농촌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알리고, 농촌마을간·지역간 정보교환과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위한 ‘2007 도농교류페스티벌’(2007년 5월 3일~5월 6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을 개최하였다. 이 페스티벌에는 농산어촌체험마을 68개, 지자체 10개, 유관기관 및 업체 18개소가 참가하였으며 83천명이 관람하고 7,455건 여름휴가 예약을 접수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주5일 근무제 정착 등으로 늘어나는 도시민들의 여가생활을 농산어촌으로 적극 유도하기 위해 6~8월 동안 농림어업 관련기관 및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과 함께 ‘농산어촌고향에서 휴가보내기’ 캠페인을 범정부차원에서 전개하였으며, 농산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자를 제작·



배포하였다.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관광 정보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4회 지자체장이 주도하는 그린포럼 개최(2007년 5월 3일, SETEC)하여 55개 지자체가 참가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회를 가졌다.

중·고·대학생,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농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이끌어 내고 농촌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제4회 나의 농촌문화체험기'를 공모하였다.

2004년부터 농협과 기업·단체 등 민간주도로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1사1촌운동의 성과 창출을 위해 관리시스템 구축과 교류실태 전수조사, 1사1촌 우수마을 육성과 소득자원 발굴을 통해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의 마을지도자 등 5개 과정(2007년 11천명)으로 확대하고 자매결연 단계에 따라 연수과정별 차별화된 콘텐츠 적용을 통한 인적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사1촌 운동 등 도농교류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등 농업·농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도농교류 정부포상을 시상하였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도농교류 촉진법'을 제정하였다.

(농촌지역개발과 행정사무관 이영길, 사무관 전영미)

## 6. 쾌적한 친환경적 농촌개발

### 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4년 신규사업으로 지역주민, 지자체 및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상향식 추진 등 새로운 방식의 지역개발모형을 창출하기 위하여 관계자간 능동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계획수립시 다양한 형태의 농촌지역 활성화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지역

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잠재자원을 최대한 살려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하고, 사업권역별 지자체와 전문가,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방향 점검 등을 통해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개발을 이끌어 나갈 리더 등 주체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마을지도자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007년에는 총 898억원(국고 731, 지방비 167)을 투자하여 56개 권역의 계속시행과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한 40개 권역에 대한 세부설계를 수립한 후 착공하고 2008년 사업착수를 위하여 40개 권역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인 면소재지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서비스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 도시 및 소도읍과 농어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 거점공간으로서의 면소재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까지 200개면을 개발할 계획이며, 우선 2008년부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4개 권역을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2005년에 착공하여 1단계(1~3년차) 사업이 마무리되는 36개 권역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권역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였다.

(농촌지역개발과 시설사무관 한준희)

#### 나. 오지종합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종합개발을 통하여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1990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각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및 구조개편 방안을 검토한 결과,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림부에서 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으로 결론지었으며, 2006년도 8월 행정자치부장관이 업무이관에 합의함에 따라 2007년부터는 농림부에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오지개발촉진법에 따라 361개 오지면을 선정하고 동 지역에 9,240억원을 투자하여 3,382건의 사업을 추진하는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2005~2009)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다. 농림부에서는 사업이관으로 인한 계획변경 및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조하여 동 계획에 따라 2007년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88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220개면에서 추진중에 있다.

<표 3-2-10>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 및 추진현황

구 분	계 획	2005	2006	2007계획	2008~2009
사업량(건)	3,382	1,154	486	488	1,254
사업비(억원)	9,204	1,571	1,547	1,620	4,466

(농촌지역개발과 시설사무관 이행우)

#### 다.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추진

주5일근무제 정착, 소득증대 등 생활수준의 향상 등의 영향으로 국내관광총량이 2002년도 405백만명에서 2011년도에는 606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국내관광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관광패턴도 보고 듣는 수동형 관광에서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능동형 관광으로 변화해가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 도시와 차별화된 농업·농촌 특유의 자연·문화·향토·사회자원을 토대로 휴식·레저·체험이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에게는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 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2007년도부터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을 계획·추진하게 되었다.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도시에서는 보고, 먹고, 즐길 수 없는 지역만의 특유의 테마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는 것이 사업성공의 관건으로 일

선 시·군에서 마련한 예비계획서를 관련 분야 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사업타당성이 있는 지역에만 지원할 계획이며, 2013년도까지 도별 2~3개 수준씩 총 24개 지구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의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지구에는 테마공원조성에 필요한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과 지역 특유의 체험시설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평균 4년에 걸쳐 50억원(국고 25, 지방비 25)까지 지원하게 되며, 2007년도에는 사업 첫해로 경종&축산 산업을 주요 테마로 한 경기 안성,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저수지 주변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충북 음성, 충남 서천, 전남 영광의 수변개발 등 4개 지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농촌지역개발과 시설사무관 이행우)

#### 라.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2004년까지 50호 이상의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제1단계(1994~2004)사업으로 4,751개소를 추진한 바 있으며, 2005년부터는 1단계 사업에서 소외된 20호 이상의 소규모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2014년까지 3,000개소를 추가로 개발하는 제2단계(2005~2014) 사업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 자연마을 총 7,751개소의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427억원을 투자하여 252개소를 개발하였다.

<표 3-2-11>

####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계획

구 분	추진목표	2005까지	2006실적	2007계획	2007이후
사업량(개소)	7,751	5,097	267	252	2,135
사업비(억원)	12,951	8,440	441	427	3,643

(정주지원과 농업사무관 이재식)

## 7. 농촌자원의 산업화

### 가. 농촌산업육성 방향

정부는 FTA 등으로 인한 농업위축 → 일자리축소 → 농촌활력 저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농촌자원의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의 농외소득 증대 차원을 넘어 다양한 농촌산업 진흥정책 추진으로 농업분야 구조조정에 따른 손실을 보완하는데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현재 농촌지역에는 유사한 농촌진흥 관련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간에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지역의 혁신역량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접근도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농촌산업정책을 분리, 연차적으로 유사한 관련사업을 정비해 나가되, 산업지원정책(신활력사업, 향토산업육성, 특화품목육성사업 등)은 시행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지자체가 사업목표를 명확히 제시토록 하고,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농촌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7년도에는 신활력사업, 향토산업육성, 지역특화품목사업에 대해 3개년(2008~2010) 동안 달성할 계량화된 사업목표,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혁신체계 구축,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계획과 재정투자계획을 포함한 「시군 농촌활력증진계획」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시군의 농촌활력증진계획의 실질적 성과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계획수립 및 추진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이장의)

### 나. 신활력사업 추진

신활력사업은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0여년동안 근대화·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을 생동감 넘치는 활력지역으로 변모시켜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2005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처음 시작하였다. 2006년 8월 29일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업무조정 관련 관계부처회의 결과, 신활력사업의 농림부 이관이 결정됨에 따라, 농림부와 행정자치부는 사업 이관과 관련하여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2006년 9월 22일 강원도 정선에서 신활력시군 단체장 및 신활력사업 관계자를 모시고,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농림부 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신활력사업 성과에 대한 현장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2006년 10월 26~27일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신활력사업 추진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신활력사업 추진지침 교육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12월 21일 균형위원장 주재로 균형위, 농림부, 행자부 담당국장 및 담당자 공동으로 신활력사업 업무이관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 토의하는 등 사업이관에 따른 업무공백을 막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였다.

신활력사업의 이관에 따라 2007년 사업계획의 심사, 지도점검 등을 균형위와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제1기 신활력지역 평가 및 사업계획 제한 공모를 통해 제2기 신활력지역 70개 시군을 선정하였고, 제2기 신활력사업은 성과지표 및 목표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업추진의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김병준)

#### 다. 향토산업육성 추진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을 발굴하여 1·2·3차 산업이 융·복합화된 지역전략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도 시범사업 대상 19개 향토자원에 43억원(국고)을 투자하고, 2008년도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30개 향토자원에 대한 지자체별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소요액을 예산안에 편성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추진되는 신규사업임을 감안 “향토자원개발”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향토산업육성 사업설명회」를 개최(2007년 2월)하여, 지자체 담당공무원, 연구기관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중앙·지자체간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개협의회, 전문가 특강 등을 실시하였다.

2009년도 사업대상 향토자원 선정을 위한 제3차 향토자원발굴조사를 2007년 7월~9월 기간중 실시하였으며 동 조사에서 발굴된 자원에 대해서는 향토자원 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와 학계,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향토산업육성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 자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앞으로 향토산업육성사업, 특화품목육성사업, 신활력지역지원사업 등 농촌산업분야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사업목표를 명확히 하는 목표지향적 사업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인구증가, 소득제고, 일자리창출 등 구체적인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재원, 인력 등 관련 자원들을 동 목표달성을 위해 집중하도록 하는 “시군 농촌활력증진계획”제도를 2008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이의 추진을 위해 2007년 7월 지자체(시·도, 시·군) 향토산업·특화품목육성사업, 신활력지역지원사업 담당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향후, 농촌의 경제적 활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현행 지역특화사업을 향토산업육성사업 위주로 전환하여 사업규모 확대, 지원대상 선정 방식 효율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관 최호종)

## 8. 농업·농촌정보화의 확대 추진

### 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AgriX 3차사업은 농촌 및 원예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 본격 시행되는 농가유형별 맞춤형농정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업경영체등록제시스템을 동시에 구축중에 있다.

또한 단계적으로 AgriX 적용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신청단계부터 집행·사후관리까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AgriX의 구축이 완료되면 반복·중복처리에 따른 비효율제거 등을 통해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약 28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농가기본DB를 활용하여 과거 자금집행실적 파악등으로 농정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화기획팀 전산사무관 문광규)

#### 나. 농업·농촌 정보컨텐츠 확충

도·농간 교류 활성화, 농산물 소비촉진, 건전한 여가생활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정보망(www.affis.net), 그린 다음넷(green.daum.net),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를 통해 농림정보, 신지식, 건강, 농촌체험관광, 친환경농산물, 음식마당 등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제공하고 있다.

농업·농촌정보화 촉진과 농업인의 정보격차해소 등을 위해 콘텐츠 생산 건수를 2006년 9,900건에서 2007년에는 12,000건으로 늘리고 농업기술, 농촌어메니티, 지역정보 등을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기반 콘텐츠를 TV윈도우 기반에 맞추어 변환 또는 재구성하거나 신규 제작하여 제공하고 농촌의 자연·문화적 자원의 동영상 등도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30개 농림관련기관 137개 홈페이지의 농림지식정보를 농림지식검색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추가 발굴하여 40개 기관(150개 홈페이지)까지 확대·연계하고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홈페이지 농가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고객관리와 마케팅 등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상품성 있는 우수자료 보유농가에는 콘텐츠 개선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에서 입상된 우수 경영체 및 농가에 대해서는 많은 농업인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농업경영체 정보화촉진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보화기획팀 행정사무관 강신복)



#### 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화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정보 활용수준과 인터넷 이용목적에 따라 교육대상자별 정보활용 모델을 발굴하여 실생활·영농현장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과정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보화교육 내실화를 위한 종합지원 체계 마련으로 교육생의 이력·콘텐츠·강사·장비 등의 공유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스스로 판단에 따라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종합제공-정보화수준 자가진단(ICT)-교육수강 추천의 사이클을 고도화·지능화 할 계획이다.

또한, 과정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개발 등 종합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교육기관간 정보교류 및 교육의 연계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정보화교육 성과를 높일 것이다.

온라인교육을 단계별 집합교육에 상응하도록 기존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국제 e러닝표준(scorm2004)에 맞게 수정·보완으로 온·오프라인 통합교육(Blended Learning)을 연계 강화하고,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교육시행기관, 농민단체, 농업인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보화선도자와 농업정보119 방문교육 서비스에만 실시한 만족도 조사를 전 교육기관으로 확대 운영하여 부실교육 예방과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교육교재를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북(Book)으로 전환하여 제공하고, 교육홍보 동영상CD 및 온라인이벤트 등을 활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표 3-2-12>

**농업인 정보화교육 계획**

(단위 : 명)

구 분	계	1998~2004	2005	2006	2007(P)
총 계	567,369	397,017	61,229	56,882	56,850
기초교육 (컴퓨터·인터넷활용)	154,866	138,167	7,144	7,047	5,055
중급교육 (농업정보활용)	68,647	54,537	6,607	4,008	3,495
경영·회계 S/W(중기)	6,041	-	1,766	2,139	2,625
분야별 전문교육	18,757	16,111	1,056	359	375
농업정보 119서비스	101,462	69,388	12,074	10,044	10,000
이동버스 정보화교육	10,278	8,708	570	512	500
정보화선도자	116,706	27,563	23,943	29,858	34,800
자체교육 (농협, 기술센터)	46,666	38,597	8,069	2,915	-
생산자단체(농협)교육	11,186	11,186	-	-	-
정보화공공근로사업 (농가방문교육)	32,760	32,760	-	-	-

자료 : 농림부 투융자평가통계관실

(정보화기획팀 행정사무관 강신복)

**9. 농업생산기반 확충**

**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개발목표 164천ha중, 2006년까지 101천ha를 마무리하였고, 2007년에는 과거에 소규모로 농기계 작업이 어렵게 경지정리된 지역을 대상으로 국고 857억원과 지방비 210억원 등 1,067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 가을에 착수한 3.9천ha를 영농기 이전 완료하고 새로이 4.6천ha를 착수하였다. 앞으로도 대형농기계를 이용한 영농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3-2-13> 연차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ha)

구 분	목 표	2006까지	2007계획	2008이후
사 업 량	164	101	4	59

주 : 봄마무리 기준임. 2003년에 목표면적 조정 : 200천ha → 164천ha  
 자료 : 농림부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 시설사무관 박재수)

**나. 밭기반정비사업**

밭작물 상습가뭄지역을 해소하고 기계화영농기반을 구축하며,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전체 밭면적 716천ha중 채소류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 110천ha(15%)를 1단계 정비목표(총목표 180천ha)로 용수개발, 농로정비 등 밭기반정비사업을 1994년부터 추진중에 있다.

1994 ~ 2006년까지 16,903억원(국고 13,315억원, 지방비 3,588억원)을 투입하여 73천ha를 정비하였으며, 이는 전체 밭면적 716천ha의 10%, 1단계 목표면적의 66%수준이다. 2007년에는 1,094억원(국고 879억원, 지방비 215억원)을 투자하여 5천ha를 정비하였다.

<표 3-2-14>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천ha, 억원)

구 분	목 표	2006까지	2007계획	2008이후
사 업 량	110	73	5	32
사 업 비	25,794	16,903	1,094	7,797

자료 : 농림부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 기술서기관 전경구)

**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영농작업은 농기계 확대 보급으로 첨단화·대형화되어 가는 반면, 영농작업의 근간인 경작로는 비포장 상태이기 때문에 쌀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까지 경지정리 시행지구안에 있는 주요 농로 35,000km를 확·포장할 계획이다.

이미 1995~2006년에 17,500km의 확·포장을 추진한 결과, 영농시간 단축, 농산물 운반용이, 생활환경개선, 영농작업 기계화 촉진 등 사업효과가 높아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2007년도에는 1,405억원을 투자하여 1,330km를 확·포장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사업량과 사업비를 지속 지원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표 3-2-15>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km, 억원)

구 분	총 계 획	2006까지	2007계획	2008이후
사 업 량	35	17.5	1.3	16.2
사 업 비	37,071	17,933	1,405	17,733

자료 : 농림부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 시설사무관 박재수)

**라. 배수개선 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은 농경지 침수방지로 안정영농을 도모하고, 농지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영농기계화를 촉진하여 노동력 절감, 단위 생산량 증가로 인한 소득증대 등에서 효과가 크다. 앞으로 2011년까지 188천ha에 대한 방재시설을 완비할 계획이며, 2007년에는 국고 2,103억원을 지원하여 119지구(31천ha)에 대한 배수개선을 추진하였고 이중 20지구(4천ha)를 준공할 계획이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재해예방과 안전영농 지원을 위하여 한국농촌공사

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등의 노후시설 개보수와 흠수로 현대화 등 총 8,769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국고 3,800억원을 지원하여 수리시설개보수 422지구, 저수지준설 50개소에 대해 사업을 실시하였다.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은 농경지의 용수공급 및 배수를 위하여 유지관리인 또는 수로감시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수리시설물을 조작하던 것을 용수절약, 유지관리비 절감, 재해 등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중앙관리소에서 광대한 지역에 산재된 다수의 수리시설물상태 및 용수수급상황 등을 실시간 측정·감시·분석할 수 있도록 시설자동화 및 원격조정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7년에는 국고 66억원을 투입하여 10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1지구를 완료하였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국가관리방조제 206개소, 지방관리방조제 3,284개소 등 전국 3,490개소의 방조제·배수갑문 등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한 투자로 많은 노후시설을 개량하여 재해에 대비하고 있으나 오래된 시설은 외측보호 사석의 유실, 배수갑문 콘크리트 구체 및 철재 문짝의 부식 등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일 발생시 시설붕괴 및 해수유입에 의한 농작물의 염해피해 등 재해예방을 위한 개보수 사업의 확대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었으며 2007년에 904억원을 투입하여 188개소를 시행, 그중 92개소의 방조제에 대한 개보수를 완료하였다.

(시설관리과 시설사무관 김동권, 기술서기관 전경구)

#### 마. 농업용수 개발사업

농업용수개발은 영농에 기본이 되는 물을 확보·공급하는 사업으로서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농업인의 열망도 높은 사업이다. 그러나 연간 예산지원규모가 실제 소요보다 크게 부족하여 준공이 지연되고 사업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시행중인 지구의 준공을 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예산규모를 확대하는 등 동사업의 효율

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2005년 대규모 용수개발의 사업준공(경북 성주, 전북 동화 7,380ha)에 이어, 2006년에는 중규모 용수개발사업 101개 지구에 2,436억원을 투입하여 15개 지구 3,966ha를 준공하고, 지표수보강사업으로 1,508ha,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224ha를 준공하여 물부족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중규모용수개발사업 89개 지구에 2,370억원을 투입, 5,263ha를 준공하는 등 지표보강개발사업으로 1,540ha,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389ha를 준공함으로써,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였다.

<표 3-2-16>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ha)

구 분	총 계 획	2006까지	2007계획	2007이후
대·중규모	118.8	60.5	5.3	53.0
소 규 모	11.0	0.5	0.4	10.1
지표수 보강	31.8	22.5	1.5	7.8

자료 : 농림부 농촌정책국

(기반정비과 기술서기관 이성홍)

#### 바.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하천등 대규모 수계를 중심으로 농업용수 공급,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 등 각종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2007년에 금강Ⅱ지구 등 7지구 12만2천ha에 대해 국고(농특회계) 1,100억원, 농지관리기금 2,450억원 등 총 3,550억원을 투입하였다.

정부는 새만금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3년여의 연구와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시한 최적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2007년 4월 3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은 2003년 11월부터 자체분석과 전문가 자문, 지역공청회 등을 거쳐, 「농업용지 위주조성, 일부 제조업·관광·물류기능 도입, 충분한 환경

용지 확보, 순차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내부개발 최적안을 2006년 12월 정부에 제안하였고,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새만금 내부토지 개발 기본구상」을 마련하였으며, 이 기본구상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2008년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후속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지역의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 2007년 3월 13일 김원기의원 등 국회의원 173명의 서명을 받아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4월 1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어, 4월 26일 공청회와 4~5월 기간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의 관계부처 이견 조정을 거쳐 5월 30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정부차원의 수정법안이 최종 마련되었다. 국회 농해수위는 당초 입법 원안은 폐기하고, 정부가 마련한 수정법안을 대안으로 채택하였으며, 법안은 11월 22일 국회를 최종 통과하였다. 주요내용으로써 지난 4월 정부가 마련한 내부토지 기본구상에 따라 토지용도별로 관계부처장관이 계획 수립·승인토록 사업시행체계를 정립하고, 공유수면매립법 특례 신설 및 32개 법령의 인허가 의제처리 등을 통해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며, 새만금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재원마련 근거, 경제자유구역 지정, 새만금위원회 및 사업관리단을 설치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사업은 2001년 새만금 친환경순차개발을 위한 정부방침 결정 이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새만금환경대책을 마련, 상류 오염원 저감대책은 전라북도·환경부가, 새만금 호수내 대책은 농림부가, 해양오염대책은 해양수산부가 업무를 분장하여 차질 없이 환경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2011년까지 1조 4,568억원을 투자하여 만경강·동진강 유역에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하고, 침전지·습지 등 새만금 담수호내 수질 개선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태숲, 철새도래지 등 다양한 친환경생태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01년 국무조정실에 민관공동으로 구성된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는 연 2회씩 환경보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연속으로 환경대책을 「정상추진」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2007년 상반기도

환경대책이 「정상추진」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새만금사업은 2006년 4월 21일 방조제 최종 연결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이후 현재는 2009년 완공을 목표로 흙쌓기, 돌붙임 등 방조제 단면완성을 위한 보강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부개발은 2008년까지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되는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의 후속 세부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표 3-2-17>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추진계획**

(단위 : ha, 억원)

구 분	지구명	개발면적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규모			사업기간
				2006까지	2007계획	2008이후	
계	22지구	283,227	73,055	51,903	3,550	17,602	
준 공	15지구	161,667	13,767	13,767	-	-	
시행중	7지구	121,560	59,288	38,136	3,550	17,602	
시행중	금 강Ⅱ	43,000	7,259	4,259	520	2,480	1989~2008
	미호천Ⅱ	4,430	2,916	2,370	120	426	1989~2010
	홍 보	8,100	3,762	2,785	250	727	1991~2010
	영산강Ⅲ-1	13,160	7,124	4,099	251	2,774	1985~2009
	영산강Ⅲ-2	7,840	4,452	2,417	300	1,735	1989~2012
	영산강Ⅳ	16,730	7,204	820	210	6,174	2001~2008
	새 만 금 (외곽시설)	28,300	26,571	21,386	1,899	3,286	1991~2009 (외곽시설)

자료 : 농림부 농촌정책국

(기반정비과 사무관 박종훈)



## 제7절 농정제도 개혁

### 1. 농지제도 개선

정부는 농업시장 개방 확대, 농산물 소비감소, 농가인구 감소 등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인이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 농지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우선, 임차 등을 통한 영농규모화 등 농업구조조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지역개발 등 농촌활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농지이용도를 제고하며, 쌀값하락 등 향후 예상되는 농지시장의 불안요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관련 전문가 및 농업인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한 개선방안(2004년 7월)을 토대로 개정된 농지법을 2006년 1월 22일부터 시행(농지 임대허용범위 확대 관련사항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2006년도에는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2007년도에는 농지의 정의 변경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4일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축사부지를 농지의 범주에 포함시켜 농지의 전용 또는 신고 없이 농지에 축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축사의 불법 용도변경 방지 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에서 허용된 행위와 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을 농업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농업경영상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었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시·도지사가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와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 단 1제곱미터의 농지가 포함되더라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시·도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농지법」 운영상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여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농지과 행정사무관 송태복)

## 2. 농지은행 활성화 추진

금년도는 농지은행 활성화를 위해 고객 중심으로 기능을 개선·보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농지유동화 정보제공은 농지은행포털의 임차회망 농지 등록, 임대농지 관리실태 사진게재, 농지관련 제도 등록, 마이페이지 개설, 질의응답 등 콘텐츠를 보강하여 고객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였다.

농지임대수탁은 지적도 제출 생략, 제증명 서류 사본 대체, 공고기간 단축 등 행정 간소화로 이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였으며, 신규 취득후 1년이 경과하지 않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막도록 하였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은 지원대상을 연체액 50백만원 이상에서 부채액 50백만원 이상으로 변경하여 경영위기 상태에서도 연체를 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농가의 참여 기회 제공 등 실질적 경영위기 농가의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지원대상자 선정기간 단축을 위해 대상자 선정을 농촌공사 본사에서 도본부로 이관하였다. 또한 지원신청자가 당초 계획보다 많아 추가 예산 387억원을 확보하여 총 953억원을 지원함으로써 파산 직전에 있는 농가들이 회생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제공하였다.

(농지과 사무관 이영식)

### 3. 협동조합 개혁

#### 가.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 추진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 요구는 중앙회가 그 동안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보다는 수익에 의존해야 하는 사업체로서의 역할을 중점 부각시키면서 농업계의 공감을 얻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할 것이나, 열악한 경제사업 부분의 지속적인 적자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판매 확대로 농업인들의 실익증대라는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을 뒤 흐드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농협이 진정 농업인들의 실익을 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으로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이 분리 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농림부에 구성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위원회에서 중점 논의해온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 방안에 대하여 위원회안이 정부에 건의되면 일선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회 건의안에는 농협법 부칙 제12조에 따라 2002년 국회에 보고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용역결과에서 제시한 경제사업 독자적 발전방안 강구, 자기자본 확충 등의 전제조건과 경제사업 활성화, 신용사업 건전성 유지 등을 고려한 건의안이 마련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경분리위원회의 정부안이 마련되면 전남북(광주), 경남북(대구), 강원·충청(청주) 등 3개 지역토론회와 중앙토론회(수원) 등 총 4회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여 일선 농민조합원, 농민단체, 조합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지역 농업계 대학교수진을 좌장으로 농민단체, 일선농협조합장, 연구원, 정부, 중앙회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토론자로 선정하여 위원회 건의안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일선농업계의 전반적인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3월까지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에 대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협동조합과 기술서기관 박순연)

## 나. 일선조합 구조조정 추진

일선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2005년도 일선조합의 구조개선 추진목표를 조합의 부실정리 및 경영건전성 제고를 통한 조합원·예금자 보호역량 강화로 정하고, 경영부실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개선 관련 고시와 훈령을 개정하여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은 순자본비율 -7% 미만에서 0% 미만으로, 경영개선명령 대상조합은 순자본비율 -20%미만에서 -7%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순자본비율 산정시 경제사업부문의 대손충당금과 부실채권을 포함되도록 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순자본비율 4%로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적기시정조치 대상조합이 편법으로 우선출자금을 조성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농협구조개선업무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앞으로도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엄격하게 운용하고, 경영진단을 통해 조합의 경영상태를 실사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부실확대 등으로 퇴출이 불가피한 경우 부실이 건전조합에 전가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계약이전·파산을 통해 정리하되, 합병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기회를 부여하는 등 경영상황을 감안한 구조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경영약체조합에 대해 사전부실예방조치를 강화하고, 경영정상화 가능조합에 대하여는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하되,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한 조합에 대하여는 임직원 징계요구, 임원 직무정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부실을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미 구조조정을 완료했거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의 부실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실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조속히 부실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의 구조개선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부실조사 대상조합에 대하여 대부분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결과 부실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채권보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고 조합 임원의 경

영책임을 강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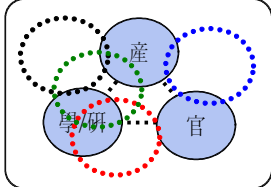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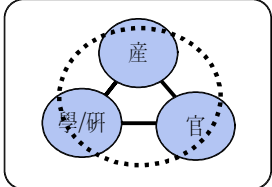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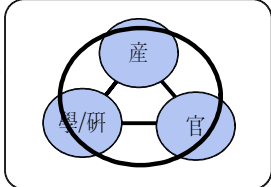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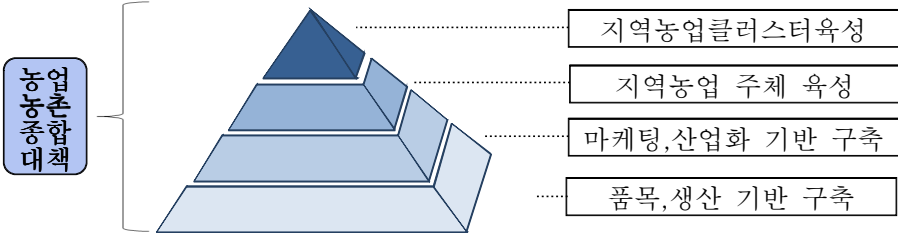
2007년 6월 30일 현재 구조개선자금이 지원된 부실조사 대상 153개 전 조합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고, 조사가 완료된 조합 중 79개 조합의 임직원 등 부실관련자 532명에 대하여 3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또한 소송이 완료된 127억원 중 82억원을 승소하였으며, 부실관련자의 책임재산 73억원에 대하여 가압류 하는 등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다.

(협동조합과 행정사무관 이정길)

#### 4.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마무리 및 본사업 추진방안 수립

시범사업 3년차인 2007년도에는 활발한 사업추진 및 마무리를 독려하고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발굴·보완하여 본사업 추진방안 수립에 활용하고자 상반기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의 사업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사업추진 지속여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표 3-2-18>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 3단계 모델

	<1단계> 클러스터前단계	<2단계> 클러스터구축단계	<3단계> 클러스터산업화 단계
<b>발전 단계</b>	지역농업 가치발견 	클러스터 구축 	클러스터 發顯 
<b>발전 목표</b>	지역농업자원 발굴과 차별화 요소의 극대화	지역농업 주체간 네트워크 및 지역협력체계 구축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산업화 달성과 시장 성과 도출
<b>핵심 활동</b>	-특성화 전략 선택 -생산,특화품목,마케팅,농촌 관광 등 농산업전반에서 특화요소의 전략적 선택	-주체간 역할분담 -지역농업 코어(Core)구축, 핵주체 구축 -핵심 인재(人才)육성	-농산업 확장 (1차+ 2차+ 3차+ @) -본격적인 지역농업 마케팅 실천 -신사업(新事業)도입
<b>지원 사업</b>	-품목육성 정책 -마케팅조직육성 정책 -생산유통기반 구축	-클러스터 구축지원 -지역특성화교육 -브랜드육성	-R&D추가 지원 -패키지(Package)지원 (생산→마케팅)
<b>지원 체계</b>			

(농업정책과 사무관 이연숙)

## 5. 농가등록제 시범사업

정부는 농가를 농업에 주업으로 종사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각 유형에 꼭 맞는 맞춤형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예컨대, 다른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면서 농업을 취미로 하는 사람은 농업정책 자금 지원을 제한한다. 여기서 절약된 돈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에게 집중 지원하여 경쟁력 제고와 소득 안정을 돕는다. 고령농에게는 농업에서 은퇴하는 경우에도 농사를 짓는 정도의 수입을 일정 기간동안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

맞춤형 지원은 농업정책의 고객인 농가의 농업경영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만 가능한 일이다. 농가등록제는 농업경영정보 등을 모아서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미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가의 경영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알맞은 맞춤식 지원을 우리보다 한발 앞서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농가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을 위해 농가등록제 도입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2007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9개 읍·면, 7,700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다양한 농가 형태에 적용가능 하도록 평야지(3), 중산간지(3), 도시근교(3)를 선정하였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6월 농가의 경영정보를 등록·관리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등록방법, 등록내용 등 농가등록제 도입방안도 7월에 마련하였다. 농가등록은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임의등록의 방식으로 추진되며, 등록 및 정보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한다.

시범사업 지역 농업인 대상 설명회를 7, 8월에 실시하여 도입의 필요성 등 홍보와 신청서 작성지도를 통해 10월까지 등록을 신청 받는다. 이후 시행결과를 연말에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책조정과 행정사무관 안창근)

## 6. 농림정책 리모델링 추진

정부는 수요자 관점에서 농정 전반을 재검토하여 문제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농업·농촌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 내역과 추진 체계를 개선할 목적에서 2007년 2월 농림정책 리모델링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심의·의결 기구로 농림부, 농업인·소비자 단체, 학계 대표로 농림정책 리모델링 위원회를 구성(13명, 위원장 정책홍보관리실장) 하였으며, 개선안 마련 및 위원회 운영 등 실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농림부에 전담 T/F(맞춤형농정팀 주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2007년 리모델링 추진을 통해 영농규모화 사업 대상을 논에서 밭까지 확대하는 등 농림사업을 중장기 농정방향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및 경영회생자금의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지역특화사업의 대상을 지역의 유통·가공업체로 확대하는 등 농림사업 지원조건을 농업·농촌의 현실에 맞게 개선하였다.

2007년 9월부터는 시·군 농관원 등 전국의 농촌 현장에 농업인 신문고 119개소를 설치하고, 접수된 내용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리모델링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리모델링 추진 방식을 개편하는 등 농림 사업이나 제도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정책조정과 행정사무관 이시혜)

## 제8절 DDA · FTA 농업협상 대책

### 1. WTO/DDA 농업협상분야

#### 가. 세부원칙 협상 등에 적극 대응

WTO 주요국은 2007년 1월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을 본격 재



개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미국, EU, 인도, 브라질 주요 4개국은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장관급 회동을 통해 합의도출을 시도하였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4개국 회동 결렬의 주요 원인은 농업분야 보다 비농산물 분야의 관세감축 문제였던 것으로 관측된다. 2007년 7월 17일 DDA 농업협상 의장인 크로포드 팔코너 대사는 그간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관한 세부원칙 초안을 회원국에게 배포하고 각국의 적극적인 협상 참여를 촉구하였다. 7월 배포된 세부원칙 초안은 그간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타결가능한 합의점(landing zone)을 최대한 좁혀서 제시하고 있다. 미국, EU, 인도, 브라질, 한국을 포함함 G10 국가 등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세부원칙 초안이 협상 진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세부원칙 초안을 중심으로 9월부터 다자차원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연내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DDA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 농업에 주는 부정적인 외부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변함없는 협상 목표를 늘 상기하면서, 쟁점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협상 전략을 모색하고 유사입장국들과의 공조를 적극 활용하는 등 협상 국면마다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부원칙 협상 단계뿐만 아니라 세부원칙 타결 이후 이행계획서 검증까지도 염두에 둔 장기적인 안목과 전략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 **나.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 확보 추진**

우리 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관세와 보조금을 적게 감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정부는 동 지위 유지를 최선의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비록 고도화된 경제구조, 첨단제품의 공격적인 수출 등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결과로 개도국 지위 유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호의적이지는 않은 형편이지만, 개도국 지위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어떤 구체적

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각국의 자기선정(Self-declaration)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UR협상때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본입장이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개도국 지위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이 객관적 기준에 의한 개도국 분류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농산물 수출국에 대한 개도국 지위 적용에 대해 비판하고 적용제외를 주장하는 등 국제여건상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물론 개도국 분류 시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선진국들의 지속적인 제기가 예상되는 바, 개도국 그룹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이를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개도국 지위는 현재 진행중인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이나 세부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세부원칙이 마련된 후 각국이 C/S(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검증받는 최종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현 상황에서는 세부원칙 협상에서 최대한 개도국 우대를 확보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향후 세부원칙이 타결된 후 C/S 검증을 위한 양자협의과정에서 개도국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유사한 개도국들과의 공조를 통하여 일부 선진국들의 개도국 분류기준 객관화 시도를 저지하고 한국농업의 영세성, 개방이후 악화된 여건 등 개도국 지위 유지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 보강 및 핵심 이해관계국을 대상으로 실무급·고위급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농업협상과 사무관 최봉순)

## 2. FTA 농업협상 대책

### 가. 한·미 FTA 협상분야

#### (1) 개 요

2006년에 시작된 한·미 FTA 협상은 2007년 4월 2일 정부간 협상을 종료되었고 6월 30일 공식 서명되었다. 2006년에는 5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4월 2일까지 3차례의 공식협상(제6차 ~ 제8차 협상) 및 2차례의 농업분야 고위급협상이 있었으며 협상타결을 위한 최종 장관급협상이 개최되었다.

한·미 FTA 협상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국익차원의 결단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분야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동시에 국내 보완대책도 충실히 마련한다는 정부 전체의 공감대 하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농업협상 주요 목표는 “민감 품목에 대한 예외적 취급” 확보였다. 그러나 미국은 농업협상에서의 성과를 최대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여 강도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였고 협상 마지막까지 “예외없는 관세 철폐” 원칙을 견지하였다. 이렇게 양측이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협상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입장 차이는 크게 좁혀지지 않았고 협상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었다.

농업분야의 경우 한·미 FTA 협상은 이전에 우리가 체결한 여타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체결되었으나, 세번 분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수입쿼타(TRQ) 등 다양한 양허방안을 도입함으로써 민감품목에 대해 예외적 취급방안을 마련하였다.

#### (2) 2007년 협상

제6차 협상(서울, 2007년 1월 15일 ~ 19일) 및 제7차 협상(미국 워싱턴, 2007년 2월 11일 ~ 14일)에서는 농산물 양허에 있어 품목별로 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측이 예외없는 관세철폐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컸으나,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상당수준 의견접근을 이룸으로써 향후 민감품목에 협상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오렌지, 사과, 포도 등 약 300여개 세번에 대해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었다. 농산물 셰이프가드 및 수입쿼타(TRQ) 관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세부 사항에 대해 입장차가 큰 상태임을 확인하였을 뿐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SPS 분과는 의제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제6차 협상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제7차 협상에서 협의채널에 대해 양측 입장을 절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상당 수준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제8차 협상(서울, 2007년 3월 8일 ~ 12일)도 6, 7차 협상과 마찬가지로 농업분야는 양측간 이견의 폭이 상당히 크고 타결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민감품목에 수입쿼타, 계절관세, 세번 분리 등 대안을 마련하는 대신 관세는 현행수준을 유지해야 함을 주장하였으나, 미측은 “예외 없는 관세철폐”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였다.

이에 따라 고위급 협의 채널을 최대한 가동하여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8차 협상 전후로 2차례의 농업분과 고위급 협의(2007년 3월 5일, 3월 19일 ~ 22일)를 개최하였다. 제1차 고위급 협의는 기존 실무급 협의와 비슷한 기조 하에서 큰 진전이 없었으나, 최종단계 협상을 앞두고 개최된 제2차 고위급 협의에서는 미측이 우리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예외 없는 관세철폐” 입장에서 다소 신축성을 내비침에 따라 일부 과일류 및 곡물에 대해 상당히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시켰다. 그러나 핵심품목은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태로 협의를 종료한 채, 최종 협상만을 남겨놓게 되었다.

최종 협상(서울, 2007년 3월 26일 ~ 4월 2일)은 우리측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Karan Bhatia) 미 USTR 부대표 및 고위급을 포함한 양측 대표단이 참여하여 진행되었고,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였다. 농업분야는 8차까지의 공식협상 및 두차례 고위급 협의

에서 논의한 대안을 바탕으로 주요 핵심 품목의 양허방향 및 협정문을 확정하였다. SPS 분야도 협의채널, 투명성 규정 삭제 등 핵심이슈에 대해 절충점을 찾음으로써 협정문을 마무리하였다. 결국 중요한 협상 쟁점은 모두 최종 협상에서 타결된 것인데, 이는 그 전까지 양측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고 상호 수용가능한 방안을 폭넓게 탐색해 왔기에 가능하였다.

한·미 FTA 협상은 농업계의 깊은 우려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협상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수준도 상당히 높았다. 따라서 주요 협상 전략의 보안 유지와 협상 진행의 투명성 확보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정부는 매 협상 직전 광범위한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민·관·학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부의 협상 대응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워크숍을 비공개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협상 진행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우리 협상전략의 대외 보안유지가 가능하였다.

### (3) 주요 협상 결과

#### <농산물 양허>

농산물 양허수준은 우리가 체결한 여타 FTA에 비해서는 높으나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수입쿼타(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세번 분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안 및 15년 이상의 관세철폐기간을 확보하였다. 다만,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즉시에서 10년까지 철폐기간을 차별화하고, 국내 영향이 없거나 이미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국내 수입수요가 거의 없는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다.

예외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였다. 식용 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 등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대신 일정물량의 수입쿼타 제공하는 방식으로 양허하였다. 포도, 오렌지, 칩용 감자 등 국내 수확·유통 기간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품목은 계절관세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수확·유통 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하였다. 사과, 배 등 양국의 주력 품종이나 용도가 구분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세번을 분리하여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호하였다. 한편,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등 주요 민감품목에 농산물 셰이프가드를 도입하여 수입량이 일정물량 이상으로 급증하면 추가관세를 부과하여 예측치 못한 수입증가로 부터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2-19> 한미 FTA 우리나라 농산물 양허안 개요

양허 유형	품목수	비중	수입액 (천불)	비중 (%)	주요 품목
양허제외	16	1.0%	25,555	0.9%	쌀
현행+ TRQ	15	1.0%	209,334	7.0%	오렌지(성출하기), 식용대두, 식용감자, 탈지전지분유, 연유, 천연꿀
17, 계절관세	1	0.1%	4,099	0.1%	포도
15, 계절관세	0(1)	0.1%	0	0.0%	칩용 감자
18+ TRQ	4	0.3%	1	0.0%	인삼(수삼, 백삼의 분삼·미삼·잡삼)
15+ TRQ	10	0.6%	93,504	3.1%	치즈, 사료용 근채류, 맥주맥, 보리, 옥수수 전분
12+ TRQ	6	0.4%	8,370	0.3%	보조사료, 변성전분
10+ TRQ	11(1)	0.8%	3,233	0.1%	버터, 조제분유(유아용), 유장(식용), 체다치즈
20	0(2)	0.1%	0	0.0%	사과(후지), 배(동양배)
18	3	0.2%	0	0.0%	홍삼(분삼·미삼·잡삼)
16	2	0.1%	1,057	0.0%	설탕
15	98(2)	6.5%	353,259	11.8%	육우, 쇠고기, 계란, 녹용, 녹각, 고추, 마늘, 양파, 생강, 표고버섯, 키위, 호두(미탈각), 감귤, 녹차, 밤, 잣, 참깨, 참기름, 주정, 전분, 혼합조미료 등
12	34	2.2%	13,504	0.5%	젓소, 닭고기(냉동가슴살, 냉동날개), 난황(건조, 기타), 냉동양파, 수박, 멜론 등
10	332	21.4%	121,840	4.1%	삼 돼지, 복숭아, 감, 단감, 감귤주스, 사과주스(브릭스 20 이내), 잎담배, 자두, 로얄젤리, 인조꿀, 닭다리(냉동), 돼지고기(냉장 삼겹살·목살·갈비 등), 고구마, 사과(후지 제외), 배(동양배 제외), 찌쌀, 쌀의 배아 등
9	1	0.1%	0	0.0%	신선딸기
7	41	2.6%	59,293	2.0%	맥주, 아이스크림, 살구, 팝콘용 옥수수, 옥수수(가공용), 포도(조제저장처리), 사과(조제저장처리), 사과주스(브릭스 20 초과) 등
2014.1.1까지	21	1.4%	57,689	1.9%	돼지고기(냉장 도체 및 이분도체, 냉장 전·후지, 냉동육, 설육, 가공품)
6	2	0.1%	13,070	0.4%	옥수수유(기타), 호두(탈각)
5	317(2)	20.6%	347,007	11.6%	오렌지주스(냉장), 토마토주스, 크렌베리 주스, 자두주스, 완두콩, 감자(냉동), 위스키, 스파케티, 국수, 당면, 냉면, 인스턴트 커피, 간장, 고추장 등
3	33	2.1%	66	0.0%	해조류 등
2	6	0.4%	6,921	0.2%	아보카도, 레몬, 프룬(건조자두), 콜라베이스 등
즉시 철폐	578(9)	37.9%	1,665,517	55.8%	오렌지주스(냉동), 포도주스, 산동물, 종축, 원피, 면화·마,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 옥수수, 대두(채유용, 장류제조용), 사료용 완두, 사료용 유장 등
계	1,531(17)	100%	2,983,317	100%	

\* ( )안 품목은 세번 분리된 품목, 수입액은 2003 ~ 2005년 평균 기준

우리측과는 달리 미측은 자국의 모든 농산물 관세를 15년 이내에 완전히 철폐하기로 하였다. 또한 라면, 배, 음료, 주류, 장류, 김치, 삼계탕 등 우리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표 3-2-20> 한미 FTA 미국측 농산물 양허안 개요

양허유형	품목수	비중 (%)	수입액 (백만불)	비중 (%)	주요 품목
10년 철폐, 수입쿼타	26	1.4%	0.32	0.1%	낙농품 (300MT)
15	65	3.6%	0.03	0.0%	맵쌀, 쇠고기, 치즈
10	154	8.5%	4.33	1.9%	설탕, 면화
7	91	5.0%	30.92	13.8%	담배, 대두유(조유), 채소(조제저장)
6	1	0.1%	0.00	0.0%	호두(탈각)
5	401	22.1%	4.56	2.0%	아이스크림, 버섯
2	10	0.6%	0.20	0.1%	자두(조제저장), 단백질계 물질
즉시철폐	1,065	58.7%	184.33	82.0%	라면, 배, 조제식료품, 음료, 주류, 간장, 된장, 고추장, 삼계탕, 김치, 포도주스, 오렌지주스(냉동)
합계	1,813	100%	224.70	100%	

\* 수입액은 2003 ~ 2005년 평균 기준

<농업 협정문>

농업분야 협정문은 총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정문 적용 대상 및 범위, 수입쿼타(TRQ) 관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농업위원회, 정의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 핵심은 수입쿼타 관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농업위원회 등 세가지라고 볼 수 있다.

수입쿼타 관리에 대해서는 한미 FTA에서 신설된 수입쿼타 품목을 대상으로 상세한 규범을 마련하였다. 당초 미측은 선착순 방식만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으나, 우리 입장을 반영하여 선착순, 수입권 공매, 수입허가(실수



요자 배정) 방식 도입에 합의하였다. 또한 쿼타 수입을 인위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요소에 대해 WTO 협정의 수입쿼타 관리규범과 유사한 형태의 규범을 도입하였다.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총 30개 품목(HS 10단위 기준 75 세번)에 대해 수입물량이 발동기준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도입하였다. 협정문의 부속서에 각 품목의 연도별 발동기준물량 및 이를 초과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추가관세율을 명시하였다. 발동기준물량은 과거 최대 수입물량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였고, 추가관세율은 여타 WTO 회원국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동일 품목에 대해 여타 세이프가드 조치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였으며, WTO 농업협정상의 특별긴급관세는 양국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관세철폐시까지이나,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 주요 품목은 관세가 철폐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업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분야 협정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양국간 번갈아가며 매년 1회 개최하고, 의사결정은 합의(consensus) 방식으로 하기로 하였다.

#### <농업 이외의 분과>

SPS(위생 및 검역) 조치 관련 양국간 관련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SPS 위원회를 설치하되, 동 기구가 통상압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명문규정<sup>8)</sup>을 마련하였다. SPS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양국의 규제 당국간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SPS 기술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아울러 검역조치에 관한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 양국간 검역문제는 과학적 위험평가와 전문기관간 기술협의를 통해 다루고, 동 위험평가는 양국의 해당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함.

원산지 협상은 FTA 체결 당사국 간에 적용되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협상이다. 신선 농산물은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화훼, 채소, 과실, 곡물류는 당사국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농산물에 대해서만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등 제3국에서 재배하거나 수확한 작물을 수입한 후 우리나라에 재수출하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닭고기를 제외한 육류는 제3국산 생축을 수입해 도축한 경우도 원산지를 인정(도축국 기준)받아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FTA 원산지기준은 수입가능성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협정문에 명시함으로써 위생·검역 조건을 우회한 수입 우려를 해소하였다.<sup>9)</sup> 가공 농산물은 민감한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라면, 소주, 청주 등 대미 수출이 많거나 우리나라산 선호가 높은 품목은 제3국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서비스는 ‘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호 필요성이 높은 민감한 분야만 유보하고, 유보안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업은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협상을 하였다. 유보안은 현재유보(부속서 I)와 미래유보(부속서 II)로 구분 작성되었다. 현재유보는 현재 외국인에 대한 차별·제한이 있는 분야에 대해 이러한 차별·제한을 한·미 FTA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데, 농업분야에서는 벼·보리재배업·육우사육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지 및 지분제한, 수의서비스, 유통서비스(육류도매, 가축시장, 공영도매 시장, 공판장) 등이 포함되었다. 미래유보는 현재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제한이 없으나 향후 규제 도입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미리 밝히는 것인데, 농업분야는 농지, 쌀·인삼·홍삼 유통서비스, 농촌관광, 인증·검사·등급판정업, 쌀 저장업, 농림업부수서비스(쌀·보리 도정업, RPC 포함) 등이 포함되었다.

(자유무역협정2과 서기관 박수진)

9) 쇠고기는 도축국 기준을 적용해도 위생·검역조건에 의해 캐나다산 생우를 미국에서 도축한 경우 수입이 금지되고, 멕시코산 생우는 미국 내에서 100일 이상 사육 후 도축해야 수입이 가능함.

## 나. 한-EU FTA 협상분야

한-EU FTA는 지금까지 5차례 협상을 개최하였다. 제1차 협상(5.7~11, 서울)은 협상일정, 협정문 작성방안, 양허방식 등 협상의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제2차 협상(7.16~20, 브뤼셀)부터 양허안, 원산지, 지식재산권, 위생·검역(SPS)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였다. 1, 2차 협상은 양측이 서로 상대방 입장을 탐색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제3차 협상(9.17~21, 브뤼셀)에서는 우리측이 수정양허안을 제시하고 EU측과의 품목별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EU측은 우리 양허수준이 전반적으로 한-미 FTA보다 불리하다고 불만을 표시하여 품목별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 농산물 양허협상에서는 우리 민감 농산물의 예외적 취급과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을 주장했으나 EU측은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제4차 협상(10.15~19, 서울)에서는 민감품목에 대한 품목별 기술협의를 우리측이 국내적으로 민감하게 다루는 이유를 EU측에게 자세히 설명하였다. 우리측은 국내 농업에서 생산 비중이 크고 민감성이 큰 채소, 과일, 곡물에 대해서 현행관세유지, 계절관세 등 다양한 방식의 예외적 취급을 주장하였으며, 돼지고기, 낙농품 등 일부 축산물은 국내 업계의 어려움과 민감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EU측 수출보조 지급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제5차 협상(11.19~23, 브뤼셀)에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상품 양허협상에서 돌파구를 모색하는데 주력하였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였다. 자동차 표준과 공산품 원산지 문제도 양국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다. 농산물 수정양허안은 전체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과 당초 전망보다 다소 지연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조건부 일괄타결안(package)으로 작성하여 EU측에 제시하였다.

즉, 우리측이 수정양허안을 제시하되, EU측도 우리가 요구하는 몇 가지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할 것을 제시하였다. EU측에게 요구한 내용은 우선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곡물, 채소, 과일 분야 민감품목은 현행관세유지, 계절관세, 관세부분감축 등 예외적 조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입증가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관세철폐 기간을 다소 장기화하거나 농산물 세이프가드, 수입쿼타 같은 보호 장치를 도입하자고 요구했다. 대신 EU측에 상업적 이익이 크고 제3국과 경쟁하는 품목은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차별화하여 양허안을 개선하였다.

EU측은 자국에게 상업적인 이익이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한-미 FTA 수준의 양허개선이 있어야 우리측이 요구하는 민감품목에 대해 예외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적 조치를 수용할 수는 있지만 먼저 우리측이 상업적인 이익이 있는 품목은 양허안을 좀더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측은 모든 품목의 양허안을 한-미 FTA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EU측이 먼저 신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우리측은 협상타결 자체보다 협상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EU측이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는 품목에 한해서 구체적인 양허요구안을 제출할 것을 주장하여 EU측의 동의를 이끌어내었다.

5차 협상에서는 민감품목 예외적 조치와 농산물 세이프가드, 수입쿼타 등에 대해서는 EU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것으로 판단된다. 민감품목 중 일부 품목은 EU측이 상업적인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이 사실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고, 농산물 세이프가드와 수입쿼타도 세부적으로 논의할 기술적 사항들이 남아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 민감품목을 어떤 식으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모양새가 잡힌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6차 협상은 1월 하순 서울에서 개최되는데 양허협상은 EU측이 제출하기로 한 양허요구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위생·검역(SPS) 분야에서는 양측이 통합협정문 총 12개 조문 중 문구에 대한 입장 차이만 있던 9개 조문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진전이 있었다. 남은 쟁점은 지역화 인정 절차와 육류 수출작업장 승인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측은 수입국이 위험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주권적 권리라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EU측은 이러한 점을 반영해 문안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지리적표시(GI) 분야에서는 양측의 제도를 비교하면서 서로 상대방 제

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 농산물품질관리법 상의 지리적 표시 보호 대상 품목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원산지 분야에서는 양측 모두 자국에서 기르거나 재배한 농산물에 대해서만 특혜관세를 인정하는 원칙(완전생산기준)에 의견이 접근되어 있다. 다만, 가공농산물은 품목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2과 행정사무관 임영조)

#### 다. 한-아세안 FTA 협상분야

2005년 2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현재 20차까지 진행된 한-아세안 FTA는 2006년 4월 11차 협상에서 FTA의 가장 핵심이 되는 상품부문 협정을 타결하였다. 본 상품협정문은 2007년 4월 국회비준을 통과하였고 2007년 6월부터 발효되었다. 아세안 회원국은 10개국(싱가폴,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협정서명 당시 태국은 국내사정으로 서명에 참여하지 못하나, 현재 태국의 추가적 참여를 위한 한-태 양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아세안 상품협상의 관세철폐방식(Modality)은 다음과 같다. 상품은 본 방식에 따라 양허안이 작성되며, 당해 스케줄에 따라 관세가 인하된다.

<표 3-2-21> 한-아세안 관세철폐방식(Modality)

카테고리 구분	관세철폐방식의 내용
초민감품목 (HS6단위 : 200개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관세유지(양허제외)</li> <li>◦ 2016년부터 20% 감축</li> <li>◦ 2016년부터 50% 감축</li> <li>◦ 저율관세할당물량제공(TRQ)</li> </ul>
민감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까지 5%p로 감축</li> </ul>
일반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즉시철폐, 2008년까지 철폐, 2010년까지 철폐</li> </ul>

<표 3-2-22>

**초민감품목 주요 농산물**

구분	내 용	품목수 (6단위)	주 요 농 산 물
A	2016년까지 50%p이하로 감축	5	치즈, 사과, 배, 오렌지(실질 현행관세유지)
B	2015년까지 양허제외 2016년 1/5 감축	117	쇠고기(기타), 돼지고기(기타), 닭고기, 오리 고기, 낙농품, 달걀, 녹용, 감자, 단옥수수, 녹두, 팥, 고구마, 호도, 밤, 잣, 대추야자, 구아버, 망고, 포도, 복숭아, 두리안, 단감, 대추, 생강, 메밀, 전분, 땅콩, 참깨, 인삼, 참기름, 들기름, 소시지, 분유, 설탕, 혼합조 미료, 기타 가공식품
C	2015년까지 양허제외 2016년 1/2 감축	23	맥주보리, 겉보리, 쌀보리, 옥수수, 맥아, 가 공곡물, 오렌지 주스
D	TRQ제공 현행관세유지	3	강낭콩, 메니옥, 메니옥전분
E	현행관세유지	35	쌀, 고추, 마늘, 양파, 녹차, 쇠고기, 돼지고 기(삼겹살), 닭고기, 파인애플, 바나나, 감귤, 유장기타 조제식료품 등

서비스분야는 양측이 개방 분야의 목록화(positive system) 방식을 채택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는 개방할 부분에 대해서만 양허안에 표시함으로써, 양허안에 미표시된 부분은 자동적으로 개방되지 않는 방식이다. 농업 서비스 보호의 측면에서는 본 개방방식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서비스 분야는 2007년 10월 20차 협상에서 타결되어 양측은 한-아세안 정상회의(2007년 11월 21일)시 서비스 협정문에 서명하였다.

한편 투자분야에 관하여는 개방의 형태에 대해 아직 아세안 내부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농림투자분야의 경우에는 개방할 분야와 그렇지 않을 분야를 구분하여 목록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분과의 경우 아세안 내부의견 조율 및 우리측과의 최종 합의 단계가 필요하므로 2008년 말 타결로 협상 시한을 조정하였다.

(자유무역협정과 행정사무관 피계림)

## 라. 한-캐나다 FTA 협상분야

한-캐나다 FTA협상은 2007년 들어 한-미 FTA협상 타결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1월 9차 협상이후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양국간 협상은 개최되지 않았지만, 4월 제11차 협상이후 상품분야만 특정한 실무협상을 6월과 9월 두차례나 개최하였다. 이는 한-캐나다 FTA협상자체가 2년 가까이 지속되었고 1년이나 늦게 시작한 한-미 FTA협상도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협상까지 단 2차례만 상품 양허안을 교환하였을 뿐 상호 관심품목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거의 없었던 사실에 기인한다. 그래서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온 양허안 협상을 진전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두 차례의 실무협상에서 FTA 협상 타결의 주요 열쇠가 될 상품 양허안을 집중 논의하게 되었다.

상품 양허안 협상에서 어려운 점은 캐나다측이 한-미 FTA 협상결과를 기준으로 삼아 한-미안보다 덜주고 더받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최종 타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측은 우리측 최대관심품목인 승용차 관세가 6.2%로 단기 관세철폐시 승용차 관세가 2.5%인 미국과 대비하여 한국이 향유할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주장하는 등 최소 한-미안과 동일한 이익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측은 한-미 FTA 협상타결이후 악화된 국내 여론을 감안하여 한-미 FTA협상결과와 지나치게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양국간 교역현황 등을 감안하여 최종 양허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상품분야 양허협상의 진행은 비농산물 양허안은 상품분과, 농산물 양허안은 농업소분과에서 이루어졌다. 농산물 양허협상의 경우 양측은 쇠고기, 돼지고기, 보리류 등 민감품목은 나중으로 미루고 입장 차이가 적거나 합의가 가능한 품목을 우선 협의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 주류, 커피, 유채유, 혼합조미료, 초코렛, 과일조제품 등 가공농산물 등은 대부분 합의를 하였다.

현재 농산물 중 미합의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보리류, 대두, 천연꿀 등으로 우리측 주요민감품목이다. 캐나다측이 이들 품목에 대해서 한-미안과 유사한 양허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간 입장 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지가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한편, 쌀,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대부분의 낙농품 및 가금육 등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현행관세유지를 확보하였다.

우리측은 협상목표로서 양허이득의 분야별 상호 균형을 강조함과 동시에 농산물의 민감성을 계속 주지시키는 한편 양허안 작성시 예외품목의 확보, 양허수준의 다양화, 농산물에 관한 특별세이프가드의 도입 등 다각적 접근과 전략으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과 행정사무관 이용직)

#### 마. 한·인도 CEPA협상분야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서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기술 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한·인도 CEPA 협상은 2006년 3월부터 회기간 회의(정례회의 중간에 협상의 진전을 위해 개최)를 포함하여 2007년 11월까지 총 9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2007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정문 협상에 있어서는 양측 모두 신축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상품, 서비스, 투자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협정문 작성에 진전을 이루었다. 특히 상품분야 협정문안에 있어서는 위생·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항에서 합의 문안을 마련하였다.

상품양허에 있어서는 양측 모두 민감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되 전체적으로 일정한 수준이상의 개방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2007년 1월 개최된 제5차 협상에서 품목수 기준으로 우리는 93%, 인도측은 85%의 상품에 대해 관세철폐 또는 감축을 하기로 하는 상품양허 세부 원칙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인도측이 상품양허에 있어 농산물을 비롯하여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공산품에 대한 양허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양측 상품양허안은 2007년 7월 개최된 7차협상 계기에야 교환되었다. 양국 모두 농산



물에 대하여는 보수적인 양허안을 제시하였으며, 특정 구체품목에 관한 논의보다는 양허안 전반에 대한 논의만이 진행되었다.

양국 모두 2007년말 타결이라는 목표가 중요하기는 하나 상품양허의 수준에 따라 내년도에도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또한 양국 모두 상대방의 상품양허안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2007년내 협상타결은 양측이 상품양허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추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도측은 우리의 농산물 양허안에 대해 2007년 8월 쌀, 육류, 사과, 배, 감귤 등 주요 민감품목을 포함하여 약 700여 품목의 농산물에 대해 양허개선을 희망하는 1차 양허개선요구안을 우리측에 보내왔다.

우리측은 2007년 9월에 개최된 회기간 회의 및 2007년 10월에 개최된 제 8차협상 등 두차례의 협상을 통해 인도측의 양허개선 요구가 우리나라가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농산물에 집중되어 있어 양허개선이 용이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양허개선 요구안을 제시토록 요구하였다.

인도측이 상품분야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분야가 농산물 등 1차산업 관련품목 외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농산물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협상 타결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유관단체, 품목담당 관계관, 아울러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과 기술서기관 전종민)

### 3. OECD 활동계획

2006년 12월 1일자로 농업위담당 사무국이 개편되어 기존의 식량·농업·수산국이 무역국과 통합되어 무역농업국(Directorate for Trade and Agriculture)이 되었으며, 농업관련 조직은 농업정책·무역 및 조정과, 농업정책 및 환경과, 농업무역 및 시장과, 비회원국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관련

협력 연구프로그램, 농업관련표준과 scheme, 수산 관련 1개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계획은 향후 2년간의 OECD 분석활동의 청사진으로 각 회원국은 자국의 농정추진과 관련 시사점이 큰 분야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확정 과정에서 수출입국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우리의 관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준비로 수입국공조모임, 의장단 활용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수출국들은 주로 OECD 논의가 WTO의 무역자유화를 선도하는 방향의 분석작업(무역자유화이점, 국내정책의 무역왜곡 등)을 유도하고, 수입국들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지속가능성, 식품 안전, 농촌 개발 등 농업의 사회환경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작업분야는 2005/2006사업계획과 2007/2008 사업계획에서 확정한 내용위주로 분석·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석작업은 크게 농업위원회 차원의 농업정책개혁, 농업무역쟁점, 농업의 환경지속가능성과 농촌지역개발 작업으로 대별하여 논의되고 있다.

2006년 6월 제145차 농업위원회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농업위원회가 담당하는 농업정책개혁, 농업무역, 농업환경 등 3개 작업분야에 관한 2007~2008년간 사업예산계획 초안에 대해 수차례 논의하고 10개 단위사업, 33개 세부작업으로 구성된 사업예산계획에 합의하였다. 2007~2008년 OECD 농업위원회의 사업예산계획은 농업정책개혁 분야에서 ①회원국 농업정책 점검·평가, ② 비회원국 검토와 정책평가, ③농식품 경제에 관한 종합보고서, ④농업정책이 농촌지역 복지에 미치는 영향, ⑤효율적 식품·농업정책 방안, 농업무역 분야에서, ⑥시장 및 정책에 대한 중기 전망, ⑦WTO 농업협상 평가, ⑧농업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 분석, 농업환경 분야에서 ⑨데이터베이스와 모델 개발, ⑩효율적 농업환경 정책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수입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농촌개발, 식품경제, 농가위험관리, 바이오경제에 관한 작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2007년도에는 한국농정평가가 1998년 이후 10년만에 실시되었으며, 우리나라 농정이 시장지향적인 상당한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 농업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한국 농업의 추가적인 개혁을 위한

OECD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한국농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다.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이선복)

#### 4. FAO 활동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효율적인 국제기구로 거듭나기 위하여 본부의 조직을 축소하고 지역사무소의 기능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혁안을 2005년 11월 제33차 총회에서 결정하고 2006~2007에 걸쳐 본부의 조직개편과 함께 기존의 지역사무소에 하부지역사무소를 추가(아프리카 2, 중앙아시아 1, 걸프 1, 중미 1개) 및 유럽에 서비스 공유센터(SSC)를 설치를 추진하는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다.

2007년 11월 17일~24일 기간중에는 190개 회원국, 관련국제기구, NGO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34차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농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동 회의에 참가하여 총회기조연설을 통해 빈곤퇴치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무총장과의 면담시 한국인의 FAO 진출확대에 대한 의견교환과 함께 2010년 개최예정인 제30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의 우리나라유치에 대한 사무총장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금번 총회에서는 2004년도 제127차 이사회에서 동 기구의 한정된 재원의 배분경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6~2007년 기간중 추진한 독립외부평가(IEE)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독립외부평가 보고서의 핵심적 결론은 “성장을 동반한 개혁(reform with growth)”이며 이를 위해 109개 권고사항과 300여개의 구체적인 조치들이 제안되었으며 동 권고안 이행을 위해 2008년도 하반기에 특별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독립외부평가의 권고를 반영한 사무국의 2008~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G77, EU 등의 지지로 제로명목성장(ZRG, 2006~2007년도 대비 21.4%증액)안이 채

택이 되었으며, 동 예산규모의 상승과 우리나라의 분담비율 증가 (2008 ~ 2009 : 2.18%, 2006 ~ 2007 : 1.82%)에 따라 우리나라의 분담액은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금번 총회에서 안도라 공화국 및 몬테네그로 공화국이 신규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총 192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고, 러시아어를 공식어로 채택하기로 결정하여 아랍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와 함께 FAO는 6개 공식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아울러 2007년도 각 위원회, 총회 활동에 있어서는 눈에 띄이는 것은 농업·산림·수산분야의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관한 이슈로서, 다수의 회원국들이 바이오에너지개발에 따른 사회·경제·환경 및 식량안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지구촌의 환경문제를 반영한 물부족, 생물다양성, 농업·산림·수산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동 이슈는 향후 수년간 FAO의 중요관심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협력과 주무관 강승규)

## 5. ASEAN+3 농림장관회의

제7차 ASEAN+3 농림장관회의는 2007년 11월 2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다. 기존 회의와 마찬가지로 제7차 회의에서도 그간 협력사업에 대한 현황 점검 및 신규협력사업 제안이 있을 것이다.

제7차 회의에서 농림장관들은 동아시아비상쌀비축제(EAERR)의 시범사업기간 연장과 아세안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 제2기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그리고 한·중·일 3국의 협력사업 추진상황을 검토하고, 신규협력사업에 대하여 승인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박해상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ASEAN+3 농업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농정추진 방향과 신규협력사업을 소개한다. 우리나라가 제6차 회의에서 제안하고 2007년에 실시한 4개 연수에 대한 아세안회원국의 참석은 매우 뜨거웠다. 2007년 5월 2주간 한국

농촌공사에서 실시하였던 ‘아세안 지하수개발 및 관리’에는 7개국 13명이 참석하였고, 같은 달 1주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실시하였던 ‘조류인플루엔자 진단기술 연수’에는 9개국 19명이 참석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 진단기술 연수’는 당초 2006년 12월 중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2006년 겨울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병으로 일정을 늦추어 2007년 5월에 실시하였다. 연수일정의 변경 등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의 관심과 연수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으며, 참석했던 9개국에는 우리나라 기술진이 개발한 ‘조류인플루엔자 신속진단키트’를 국가별로 각 600여 개씩 제공되었다. 2007년 6월 초 2주간 국립식물검역소에서 실시하였던 ‘제2차 아세안 식물검역전문가 초청 연수’에는 2006년과 마찬가지로 10개국 20명이 참석, 100% 참여율을 보였다. 8월 말~9월 초 10일간 실시하였던 ‘제3차 아세안 식량안보정보시스템 훈련과정’에도 9개국 24명이 참석, 제1차 및 제2차 연수와 마찬가지로 높은 참석률을 보였고, 농업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등에 관한 유용한 훈련을 받았다.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발효 등을 배경으로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국가간의 관계가 이와 같이 긴밀해짐에 따라 농업분야 협력 필요성이 높아졌다. 제7차 회의에서는 이러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작년에 이어 3개의 연수사업- ①조류인플루엔자 진단, ②식물검역, ③식량안보정보시스템 - 을 지속하고, 2개의 신규사업- ①신선농산물 수확후관리기술 향상지원, ②농촌지도체제 개선을 위한 협력 - 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7차 회의에서 제안한 신규사업은 아세안회원국이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회의”에서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적극 수용하여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한편, “무역촉진과 시장접근성 제고” 및 “바이오매스 자원 활용” 등에 관한 동남아시아 지역 내 협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향후 한·중·일 협력사업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박경희)

## 6. 기타 농업관련 국제기구

### 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은 2007년 2월 14일 ~ 15일 기간중 이태리소재 본부에서 165개 회원국, 관련국제기구, NGO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30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농업통상정책관을 수석대표로 동 총회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IFAD에 대한 지원규모 향상, 새마을운동을 바탕으로 한 국제협력 강화 노력 등을 소개하였으며, 금번 총회의 원탁토론 주제인 “농촌의 고용과 삶”에 대하여 이농과 농촌고용, 청소년의 소득안전향상방안 등 회원국의 농촌개발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제29차 총회시 IFAD의 제7차(2007~2009) 기금조성에 3백만불의 납부서약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 연간 1백만불의 분담금을 기여하고 있으며, 2007년 3월중에는 농협중앙회와 IFAD공동으로 아시아지역농촌개발정책 관련 국제워크숍을 개최하여 아시아지역내 개도국의 농촌개발 정책발전에 기여한 바 있으며, 2008년에는 IFAD의 교체이사국으로서 동 기구 운영전반에 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 나.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fro-Asia Rural Development Organization)는 2007년 1월 8일 ~ 12일기간중 회원국에게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의 빈곤타파를 위한 새로운 농촌개발정책수립과 농촌개발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농촌개발 연찬회 및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농촌개발에 관한 뉴델리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그 골자는 빈곤타파를 위한 적절한 자원배분, 여성의 권익보호, 빈곤타파를 위한 공동협력활동 약속 등이며, 우리나라는 농촌개발 연찬회에 참가하여 “한국의 농촌개발전망 : 교훈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농촌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을 소개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가속되는

세계농업시장개방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설명하였다.

2007년 8월 20일~22일 요르단 암만에서 개최된 제56차 집행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13개 집행위원국이 참가하여 사무총장 임기연장안, 동 기구 직원규정 및 재정규정 개정, 건전재정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한편, AARDO극동지역사무소(우리나라) 주관으로 12. 6 대만에서 동 기구 사무총장, 인도, 대만, 말레이시아 등 회원국 대표들을 소집하여 제2차 지역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7.26~8.10 기간중에는 한국농촌공사에서 동 기구 12개국 17명을 대상으로 농촌개발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회원국의 인적자원개발 및 능력형성을 지원한 바 있다.

(국제협력과 주무관 강승규)

## 7. 양자 농업협력약정 체결

국제화시대에 농산물 교역·투자가 증가됨에 따라 우리 농업도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로 외연을 확대할 필요성이 점차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우리 농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농업분야 인력 및 기술 교류를 통해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대륙별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농업협력약정 체결하여 해외 각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 농업협력약정 체결국가로는 일본(1968년 한·일 각료회의 후속조치), 중국(1996), 이스라엘(1997), 몽골(2003), 브라질(2004), 알제리(2006) 등 6개국이 있으며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및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긴밀한 교류·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에는 뉴질랜드(2007년 4월 26일), 프랑스(2007년 11월 21일)와 신규로 농업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뉴질랜드와의 농업협력약정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체결하는 최초의 농업협력약정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보조금 철폐 등 농업인 주도의 농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뉴질랜드와 본격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개방화 시대 우리 농업이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생산의 20%를 생산하는 전통적인 농업강국으로 EU의 공동농업정책 수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축산, 와인 및 증류주, 식품안전 및 농촌개발 정책 등이 발달하여, 금번 프랑스와의 농업협력약정체결로 선진 농업국가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여 우리 농업정책의 발전 및 민간 농업분야 기술발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최근에는 새로운 투자유망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에 진출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제르바이잔과 협력약정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통상협력과 기술서기관 김 철)

## 8. 남북농업 협력 활성화

### 가.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

북한농업은 생산체계의 비효율성, 에너지 및 비료, 농약, 종자, 비닐 등 필수농자재의 부족과 자연재해 등이 맞물려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어 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정부의 식량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비료 지원과 민간단체의 농업지원으로 2000년 이후 식량 생산이 차츰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도 지속되고 있어 국가 수준의 식량 사정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연간 100만톤 이상의 식량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식량 소요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간 200만톤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북한의 식량생산이 증가한 것은 기상호조, 병해충 발생의 감소, 비료 등 농자재의 안정 공급, 수리시설 개선에 의한 농업용수의 안정 공급, 이모작 확대에 의한 곡물 재배면적의 증가에 기인하며 부분적으로는 생산주체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로 생산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국가 수준의 식량안보는 호전되었으나 계층간에는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아직도 650만명은 긴급식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2-23>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

(단위: 천톤)

구 분	1995/1996	1997/1998	1999/2000	2001/2002	2003/2004	2005/2006
국내생산량	3,451	3,489	4,222	3,946	4,252	4,540
최소소요량	5,145	5,206	5,261	5,307	5,388	5,496
부족량	1,694	1,717	1,039	1,361	1,136	956

- 주: 1) 국내생산량 : 농촌진흥청 발표자료  
 2) 최소소요량 : 식용은 1인 1일 평균 500g기준, 기타 소요량은 식용의 30% 기준  
 3) 인구규모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6년

**나. 남북 농업교류 및 지원현황**

(1) 정부차원의 지원현황

북한의 식량난 완화를 위하여 정부는 1995년 쌀 15만 톤을 북한에 직접 지원하기 시작하여 1999년 비료 15.5만톤, 2000년 비료 30만톤 이외 차관형식으로 쌀 30만톤과 옥수수 20만톤, 2001년 비료 20만톤, 2002년 비료 30만톤 이외 차관형식으로 쌀 40만톤, 2003년 비료 30만톤, 차관형식으로 쌀 40만톤을 지원하였다.

2004년 우리나라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30만톤의 비료를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차관형식으로 쌀 40만톤을 제공하였다. 2005년에는 비료 35만톤을 무상지원하였고 쌀 50만톤을 지원하였다.

2006년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쌀·추가비료 지원 논의가 유보된 상태에서 7월 중 북한에 큰 수해가 발생하였다. 북한은 남한측 민간단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지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조속한 대북 지원을 요청하는 정치권 및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정부는 순수 인도적 차원에서 한적 및 민간의 긴급구호 및 수해복구 지원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정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쌀 10만톤(국내산), 자재장비, 긴급구호물품 등 763억원 상당의 구호물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는데,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적을 통한 대북 수해복구 물자지원은 잠정 유보되어 쌀은 89,500톤만 북측에 전달되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하여 북한이 제기한 쌀 50만톤 제공문제에 대한 논의는 유보되었다.

<표 3-2-24>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내역**

연 도	지 원 내 용	비 고
1995	◦ 쌀 15만톤(무상지원)	
1996	◦ 혼합곡물 3,409톤(WFP) ◦ 분유(UNICEF, 100만달러) 등	
1997	◦ 옥수수 5만톤, 분유 300톤, 혼합곡물 9,852톤 (WFP) ◦ UNICEF 등 UN기구 경유 980만달러 등	
1998	◦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WFP)	
1999	◦ 비료 11.5만톤	
2000	◦ 쌀 30만톤, 옥수수 20만톤(식량차관) ◦ 비료 30만톤	
2001	◦ 비료 20만톤 ◦ 옥수수 10만톤(WFP) ◦ 말라리아 방제지원(WHO, 46만달러) ◦ 아동용 내의 150만벌	
2002	◦ 쌀 40만톤(식량차관) ◦ 옥수수 10만톤(WFP) ◦ 비료 30만톤 ◦ 말라리아 방역지원(WHO, 59만달러)	
2003	◦ 쌀 40만톤(식량차관) ◦ 비료 30만톤 ◦ 옥수수 10만톤(WFP) ◦ 말라리아 방역지원(WHO, 66만달러) ◦ 취약계층 기초의약품 지원(UNICEF, 50만달러)	
2004	◦ 쌀 40만톤(식량차관) ◦ 비료 30만톤 ◦ 옥수수 10만톤(WFP) ◦ 말라리아 치료제 지원(WHO, 67만달러) ◦ 취약계층 지원(UNICEF, 100만달러) ◦ 용천재해 지원(WHO, 20만달러)	
2005	◦ 쌀 50만톤(식량차관) ◦ 비료 35만톤 ◦ 말라리아 치료제 지원(WHO, 81만달러) ◦ 취약계층 지원(UNICEF, 100만달러) ◦ 수해 복구지원(19만달러)	
2006	◦ 쌀 10만톤(무상지원) ◦ 비료 35만톤 ◦ 말라리아 방제지원(WHO, 101만달러) ◦ 취약계층 지원(UNICEF, 230만달러) ◦ 수해복구지원(5,202만달러) ◦ 민간에 대한 정부기금 지원(1,338만달러)	

자료출처 : 통일부

## (2) 민간차원의 지원현황

민간차원을 통해서는 1995년부터 2006년 말까지 북한에 총 5억 1,343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창구별 지원액 비중은 국제적십자사 0.8%, 대한적십자사 29.3%, 독자창구 69.9%로 독자창구의 비중이 가장 높다. 대북지원 초기 민간단체는 독자적인 지원창구를 갖지 못하고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물품을 기탁하면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하여 북한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에 따라 1999년 2월 10일부터 민간단체는 독자적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창구가 다양해졌다.

정부는 민간의 대북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7개 단체(7개 사업)에 대해 33.8억원의 기금을 지원받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48개 대북지원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50개 개별사업에 116억원, 북한의 사회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3개 이상의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합동사업에 5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이후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지원 유보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지원은 수해복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긴급구호 품목 위주로 계속되었다.

농업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에는 국제옥수수재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남북농발협, 평화의 숲, 월드비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에는 한국JTS, 한국복지재단, 굿네이버스, 남북나눔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은 대규모사업 추진에 한계를 나타내지만 민간차원의 지원이 점차 전문화·조직화되고 있으며 북한도 민간단체의 지원 활동에 점차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정부차원의 지원과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한다면 남북한 화해협력의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3-2-25>

민간차원 대복지원 내역

연 도	지 원 내 용	비 고
1995	25만달러 ◦ 담요 8천매(국적경유)	
1996	155만달러 ◦ 밀가루, 분유, 식용유(국적경유)	
1997	2,056만달러 ◦ 옥수수, 밀가루, 감자, 라면 등 (국적/남북적십자 경유)	
1998	2,085만달러 ◦ 감귤 100톤, 밀가루, 옥수수, 식용유, 비료, 한우, 젖소, 비닐, 설탕 등	
1999	1,863만달러 ◦ 감귤 4,436톤, 비료 4만톤 등	
2000	3,513만달러 ◦ 감귤 3,031톤, 당근 2,000톤, 옥수수 등	
2001	6,494만달러 ◦ 배 3,150톤, 사과 4,000톤, 감자 5,000톤 (우리농산물나누어먹기운동) ◦ 감귤 10,000톤, 당근 4,000톤 ◦ 옥수수, 감귤, 의류, 설탕, 분유 등	
2002	5,117만달러 ◦ 농업복구 - 농기계수리공장, 국수공장 등(우리민족) - 수경재배 시설지원(월드비전) ◦ 보건의료, 일반구호 등	
2003	7,061만달러 ◦ 잣나무 묘목 등 35만주(대한적십자사) ◦ 남북농발협의 씨감자, 농자재 등 ◦ 기초의약품, 의료기기, 병원보수 등 ◦ 종자, 비료, 농기계 등	
2004	14,108만달러 ◦ 밀가루, 분유, 발효기, 운동화, 학용품, 연탄 등 ◦ 경운기, 온실비닐 등 농자재 ◦ 보일러, 타일 등 건축자재 ◦ 결핵약, 항생제, 의료설비 등	
2005	8,866만달러 ◦ 농업용 비닐 등 농자재 ◦ 밀가루, 분유, 두유기계 ◦ 결핵약, 항생제, 의약품, 의약설비 등 ◦ 생활용품, 자전거, 화물트럭, 시멘트 등 건축자재 등	
2006	8,048만달러 ◦ 농업용 비닐 등 농자재 ◦ 밀가루, 분유, 두유기계 ◦ 결핵약, 항생제, 의약품, 의약설비 등 ◦ 생활용품, 자전거, 화물트럭, 건축자재, 수해복구 자재 등	
계	59,391만달러	

자료출처 : 통일부

#### 다.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 방안

북한의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적·물적 상호교류를 수반한 개발협력 방식으로 전환하여 북한 농업의 근본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 8월 19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성에서 개최하였다. 남북농업협력위원회 1차회의에서 남북은 시범농장의 조성·운영, 종자정선시설 지원협력, 농업과학 기술분야 협력, 특용작물 분야 협력 등의 추진과 임업분야에서 양묘장의 조성 등 산림녹화 협력사업의 추진에 합의하였으나, 북측의 소극적 태도로 실질적 진전은 없다.

북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난을 완화하고, 북한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남북농업협력의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농업협력을 통해 전반적인 남북경협 활성화에 긍정적 여건을 조성하면서 상호이익의 경협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협력사업에는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사기업, 공기업, 정부 등 다양한 협력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고 실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농업협력의 형태를 상업적 협력, 농자재지원 및 기술교류, 농업복구 및 개발지원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 중 민간부문은 다양성과 시범성이라는 장점을 지니며, 상업적 협력, 농자재 지원이나 기술교류 등 소규모의 협력은 가능하지만 농업복구나 개발을 담당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남북한의 농업개발협력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와 민간차원의 역할분담과 상호보완체계를 구축하여, 남북농업 협력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각 주체별 강점을 살려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구조정책과 농업사무관 이연숙)

## 제9절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마련

2007년 4월 3일,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라 정부는 주요협상결과발표와 함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수립방향을 발표했다.

4월까지 영향분석을 마무리하고 6월까지 전문가·농업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미 FTA 영향분석 결과(4.30발표)를 토대로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7년 6월 28일에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대책수립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우, 감귤, 파프리카 농장을 방문하여 우리농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김제 파프리카 농장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한우, 돼지, 과수 등 주요품목별 단체장, 관계부처장관, 농업CEO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내보완대책의 주요내용을 협의하였으며, 농업인들이 한·미 FTA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외에도, 농업인단체·전문가 토론회 개최(4차례), 국회보고 등을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국내보완대책에 반영하였다.

국내보완대책에서는 한국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입급증으로 인한 단기적 피해보전장치를 마련하고 둘째, 품목별 특성에 따라 생산·가공·유통 단계별 취약부분을 보완하는 경쟁력 향상을 추진하며 셋째, 농업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체질을 강화하고, 넷째 농촌을 농업 외 다양한 산업공간과 국민 생활공간으로 조성하여 농촌 활력을 증진한다. 또한 국내보완대책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2008~2017)의 재정지원방안을 별도 마련키로 하였다.

<표 3-2-26> **한미 FTA 보완대책 수립 추진일지**

4.2	한미 FTA 협상 타결 및 대응방향 발표
4.3	대책방향 확정(경제정책조정회의), 국무위원 워크숍(1차)
4.4	‘한미 FTA 농업부문 협상결과 및 대책방향’ 농해위 보고
4.6	‘한미 FTA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대응방안’ 시도농정국장 설명
4.12	국무위원 2차 워크숍
4.26	‘한미 FTA 협상결과 및 국내보완대책 추진 방향’ 예결위 보고
4.27	대통령 한우농가 방문 의견수렴(강원 평창)
4.30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FTA 특위보고 및 발표
5.2	국회 농해수위 청문회
5.22	국회 FTA특위 공청회
5.23	대통령 감귤농가 방문 의견수렴(제주)
5.29	「한미 FTA 농업부문 품목별 국내보완대책 토론회」
6.14	양계분야 국내대책 토론회
6.15	국회 농해수위 ‘주요농정 현안보고’시 한미 FTA 대책 추진상황 보고
6.18	「개방대비 축산부문 국내대책 토론회」
6.19	「개방대비 과수·원예부분 국내대책 토론회」
6.20	「양돈분야 국내대책 토론회」
6.21	대통령 김제방문, 「농업인 단체장 및 농업 CEO 간담회」
6.25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
6.28	보완대책 발표(경제정책조정회의) 및 기자설명회
10.29	재정지원계획을 포함하는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의결(경제정책조정회의)
11.6	국무회의 보고 및 발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등 농업인단체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국내보완대책이 미흡하다며 추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추가 요구사항 중에는 새롭게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으나, 대부분 6월 28일에 발표한 국내보완대책에 포함된 내용 중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추가 요구사항의 주요내용은, 한우 소비홍보 확대, 쇠고기 이력추적업무 대행기관 지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확대, 채소·인삼 전업농가 육성지원, 농업회의소 설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이었다. 한농연의 요구사항들의 대부분은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영하였다.

재정지원방안을 포함하는 한미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을 정부안으로 확정하여 2007년 11월 16일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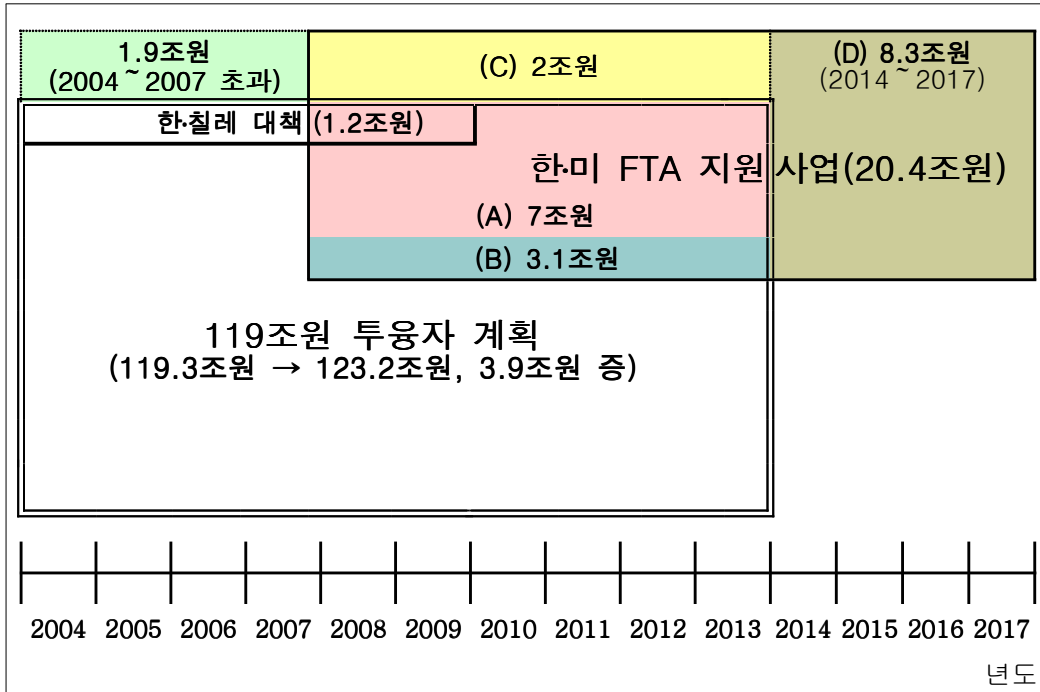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6월 28일에 발표한 국내보완대책으로 중점 추진할 61개 사업을 선정하여, 2008년부터 10년(2008~2017)간 투융자 소요를 산출하였으며, 61개 사업의 투융자 규모를 총 20조 3,607억 원으로 확정하였다. 투융자 지원방향은 경쟁력 강화와 소득기반 확충에 집중하면서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보전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4조원 중 경쟁력 강화 분야에 19.2조원(94%) 지원한다.

아울러, 농업·농촌분야의 중장기 투융자 계획(2004~2013)인 「119조원 투융자 계획」은 당초 119.3조원에서 123.2조원으로 조정(3.9조원 증액)한다. 123.2조원은 그 동안 투융자 실적분석 결과와 이번 한·미 FTA 대책사업 소요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이다.

119조원 투융자 계획의 증액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증액된 3.9조원은 119조원 투융자 계획 초기 4년(2004~2007)에 1.9조원 초과 반영하였으며, 한미FTA 투융자 계획과 겹치는 6년간(2008~2013)에 2조원 증액하게 된다. 한미FTA 대책추진을 위한 61개 사업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투융자 규모는 12.1조원이며, 119조원 투융자 계획 조정규모(123.2조원)에 반영되어 있다.



<그림 3-2-1> 한·미 FTA 대책사업과 119조원 투융자 조정과의 관계



- \* (A) 7조원 : 2008 ~ 2013간 119조원 계획에 기 포함된 한미FTA 대책 사업 규모
- \* (B) 3.1조원 : 2008 ~ 2013간 기존 119조원 사업 중 투융자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감액하고 한미FTA 대책사업을 증액한 규모
- \* (C) 2조원 : 2008 ~ 2013간 119조원 계획 증액
- \* (D) 8.3조원 : 119조원 계획 종료 이후 한미FTA 투융자 지원 규모
- \* (A)+(B)+(C)+(D) : 20.4조원(한미FTA 투융자사업 규모)

앞으로,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과 재정지원계획은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이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송남근)